

2002
남북관계동향

2003.1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 제29호(2001.12.22~2002.1.2) / 1 page

-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4
-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5
- 북한,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8
-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발표 11
- 한국조폐공사, 남북협력기금 출연 12

☐ 제30호(2002.1.3~1.14) / 15 page

- 정부, 금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19
- 북한의 2002년도 경제시책방향 22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기본통계」 발표 25
- 2001년도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27

☐ 제31호(2002.1.15~1.28) / 33 page

- 정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37
- 북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 42
- 2001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46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 50

☐ 제32호(2002.1.29~2.5) / 55 page

- 정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대출조건변경안 의결 59

- 한적,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제의 대북전통문 61
- 북한, 부시 美대통령 年頭教書 관련 규탄성명 발표 62
- 통일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개편 66
- 2001년도 남북간 교역현황 67

☐ 제33호(2002.2.6~2.23) / 73 page

- 韓·美 정상회담 개최 77
-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81
- 북한, 부시 美대통령 「동북아 3국 巡訪」 관련 담화 발표 84
- 김정일 위원장 「60회 생일 행사」 동향 86
- 정부, 평화자동차에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 89
-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선전 91

☐ 제34호(2002.2.24~3.4) / 97 page

- 북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개최 拒否 101
- 부시 美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以後 북한 반응 104
- 통일부,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수송계획 발표 107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109
- 국방부,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한 韓·美 공동연구 결과 발표 111

☐ 제35호(2002.3.5~3.11) / 115 page

- 북한, 북미대화 거부입장 재확인 및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119
- EU, 「대북 기술지원 전략보고서」 채택 121
- 美 국무부, 「2001년도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123

☐ 제36호(2002.3.12~3.27) / 133 page

- 남북한, 「임동원特使 북한방문」 同時發表 137
- 정부, 금강산관광 경비지원방안 議決 139
- 북한 외무성 대변인, 美 국방성 핵태세 검토(NPR) 관련담화 144
- UN 인도지원조정국,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발표 150

☐ 제37호(2002.3.28~4.9) / 155 page

- 남북한, 임동원特使 訪北관련 「공동보도문」 채택 159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 결과 166
- 최근 북한의 對美 주요동향 170

☐ 제38호(2002.4.10~4.22) / 175 page

- 남북화해협력 중점추진계획 179
- 정부, 대북비료지원 및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議決 187
- 북한, 김일성 90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189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미회담 재개 관련 KCNA 회견 191
- 특사방북 이후 북한의 對美·對日動向 193
- 남북한 민간단체, 「남북단체 공동성명」 발표 195
- 1/4분기 남북간 교역현황 197
- 1/4분기 남북간 선박운항 및 물동량 현황 200

☐ 제39호(2002.4.23~5.7) / 205 page

-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결과 210
- 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거부 213
- 북한, 금강산댐 관련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 발표 216

- 최근 북미대화 재개 관련동향 218
- 北·日 적십자회담 개최 결과 221

☐ 제40호(2002.5.8~6.5) / 225 page

- 정부,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우리측 대표단 명단 통보 229
- 북한,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사전 통보 230
-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방북 관련동향 232
-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연방제 주장 推移 235
- 美 국무부 「2001년도 年例 테러보고서」 주요내용 238

☐ 제41호(2002.6.6~7.2) / 245 page

- 서해교전 관련동향(1) 249
-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관련
대북서한 발송 255
- 남북한 민간단체,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257
- 금강산관광 남북당국회담 남측대표단, 회담무산 관련 성명 261
-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262
- IAEA 이사회 개최결과 264

☐ 제42호(2002.7.3~7.18) / 269 page

- 서해교전 관련동향(2) 273
- 북한,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 관련 「조평통 성명」 발표 276
- 상반기 대북지원 현황 278
- 상반기 남북교역 현황 280

☐ 제43호(2002.7.19~7.25) / 285 page

- 북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제의 288
- 북한, 정전협정체결 50주년 관련 「외무성 대변인담화」 발표 289
- 남북한 민간단체,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합의 290
- 상반기 북한의 외교활동 평가 292

☐ 제44호(2002.7.26~8.5) / 295 page

-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개최 299
- 북한, NLL 관련 「조평통 서기국 백서」 발표 304
- 북·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국교정상화 관련 공동보도문 채택 306
- FAO/WFP, 「2001/02 북한 곡물작황 평가보고서」 발표 308

☐ 제45호(2002.8.6~8.31) / 315 page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321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325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관련 실무접촉 결과 329
- 김정일 방러 및 「북러정상회담」 개최 동향 334
- 美 국무부 「존 볼튼」 차관 訪韓 발언내용 337
-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 결과 339
-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 개최 결과 341

☐ 제46호(2002.9.1~9.30) / 347 page

- 제2차 「경추위」 이후 9월중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 현황 353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政令 발표 356
- 「북·일 정상회담」 개최 결과 359
- IAEA 대북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관련동향 361

☐ 제47호(2002.10.1~10.15) / 367 page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개최 372
-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 5주년 및 노동당 창건 57주년 관련동향 375
- 「제임스 켈리」美 대통령특사 방북 관련동향 378
- 美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 발표 381

☐ 제48호(2002.10.16~10.29) / 387 page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392
- 남북청년학생·여성통일대회 관련동향 396
- 「북한의 핵개발계획 是認」 관련동향 399
- 북한 철도성대변인, 「남·북·러 3자회담」 관련 담화 409

☐ 제49호(2002.10.30~11.15) / 415 page

- 「제3차 경추위」 등 최근 남북회담 개최 결과 419
- 북한의 핵개발 시인 관련, KEDO 집행이사회/Bush 미 대통령
대북성명 429
-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개최 결과 433
- FAO/WFP, 「2003년도 북한 식량수급전망」 발표 436

☐ 제50호(2002.11.16~12.3) / 439 page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 및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446
-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개성공업지구법」 채택 450
- 북한 외무성대변인, KEDO 대북중유공급 중단 관련 담화 456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핵문제 관련 「쫄민족 호소문」 발표 458

- 북한 핵문제 관련, 제57차 UN총회 동향 459
- UNOCHA, 「2003년도 UN 합동지원계획」 발표 461

☐ 제51호(2002.12.4~12.31) / 465 page

- 2002년 12월중 남북회담 개최 현황 473
- 최근 북한 핵문제 관련, 국제사회 주요동향 486
- 한·미 국방장관, 「제34차 SCM 공동성명」 발표 499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29호>

2001.12.22~2002.1.2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III. 기 타 동 향

- 북한,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발표
- 한국조폐공사, 남북협력기금 출연

IV. 분 야 별 일 지

이 자료는 지난 12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12.21 언론회견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옥수수) 10만톤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지원할 방침임을 설명
- 통일부는 12.21 「금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와 전망」을 발표하고, 2001년도 북한경제는 전부문이 '소폭의 플러스성장'을 실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
 - 2002년도 경제시책과 관련, 대내적으로는 「라남의 봉화」 기치 아래 집단적 생산문화(계획경제)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외자유치를 위해 상황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이원적 경제시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

◀ 북 한 동 향 ▶

- 1.1 「2002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자주 및 민족공조 실현을 주장
-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2.27 중방을 통해 김일성 주석 생일 90돌 즈음 「대사(면) 실시」에 대한 정령(12.13)을 발표
- 외무성 대변인은 12.27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괴선박 추격 격침(12.22)과 관련한 최근 일본측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본이 동 사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측과 결부시키고 있다며 “금후 일본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 주 변 국 동 향 ▶

- 일본 해상보안청은 12.22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 서북 약 240km 해상)에 출현한 怪船舶을 추격,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기관포 공격을 가해 격침시킨 사실을 발표
 - * 이와관련 일본 해상보안청은 ▲12.23 괴선박 침몰 후 바다에 떠어든 선박승무원 15명중 3구의 시체를 발견, 그 중 2구를 인양했음과 ▲시신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글문자 표시 및 한글이 표기된 과자봉지가 발견되었음을 발표
- 미국 상원은 12.20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채택, 이와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강신권 집행위원장은 북한측과 재미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구체적 협의(12.20)를 마치고 조만간 협약을 체결 '02년 2월부터 상봉이 실현될 수 있음을 언급(12.21 연합뉴스 회견)

II. 주 요 동 향

1.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 개 요

-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12. 21 언론회견(기자간담회)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키로 한 정부방침을 설명

□ 주 요 내 용

- 정부의 대북지원 결정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시급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대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 동시에 국제기구의 식량지원 요청에 동참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한데 기인
- 금번 지원은 WFP의 대북 식량지원 Appeal에 참여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지원품목 및 규모는 외국산 옥수수 10만톤(약230억원 상당)으로 결정
 - 지원시기는 WFP의 식량조달 상황 등을 고려, 가급적 조기에 추진할 계획
- 기타 물품인도·인수, 물품포장, 분배 모니터링, 행정비 지급 등 수송 및 대북전달에 따르는 구체적 세부절차는 WFP와 추가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2.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개 요

- 북한은 1.1 오전 9시 라디오·TV 등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을 발표
- 금년도에는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 제시를 통해 체제결속 강조에 역점을 두면서 ▲대남부문에서는 남북대화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 없이 원칙적 입장 및 관망적 자세를 표명

□ 주 요 내 용

< 2001년도 성과 >

- 2001년도를 김정일의 위대성이 과시되고 선군혁명노선이 결실을 거둔 해로 평가
 - 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력사의 해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보루를 굳건히 다진 투쟁의 해” 등으로 평가

< 2002년도 과제 >

- 2002년도를 ▲총진격의 해,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설정하고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실천목표로 제시

- 「우리 수령 제일주의」 정신 발양을 통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과
- 「우리 사상 제일주의」를 통한 주체사상으로서의 무장
- 「우리 군대 제일주의」를 통한 「선군정치」 당위성
 - * 최고사령관에 절대복종,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확립, 혈연적 군민관계 강화 등 강조
-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통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 등을 강조
 - * 전력·석탄 등 선행부문의 계속적 추진, 인민생활 향상,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제관리의 개선, 과학기술 및 교육 사업 발전을 통한 공업의 기술 개진·현대화 등 촉구
-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자주 및 민족공조 실현 등을 주장
 - * 우리측에 대해서는 주적론 및 보안법 철폐, 외세결탁 반역행위 금지, 침략군(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
-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대외관계 기본이념(자주, 평화, 친선)을 생략
 - * 지난해에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언급

□ 평 가

- 금번 공동사설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정세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 대내적으로는 당면과제로서 김일성 90회 생일 및 군창건 70돌 행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4대 제일주의」 제시 등으로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 대외적으로는 미·일에 대해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당분간 정세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평가
- 남북관계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 강조 등 기본적으로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 북미관계 등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실리획득 차원에서 남북대화 재개 등 선별적 대응이 예상되며
 - 대남 비난 및 요구사항 등의 수준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두면서 정세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

Ⅲ. 기 타 동 향

1. 북한,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 개 요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괴선박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찰함의 사격을 받고 침몰(12.22)한 사건과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12.27)을 통해 일본 당국을 비난

□ 주 요 내 용

- 며칠 전 일본 당국은 「정체불명의 배」를 추적한다는 구실 밑에 술한 함선과 비행기를 동원하여 남의 나라 수역까지 들어가 배를 침몰시키는 무력행사를 감행하였음.
- 전말은 어떻든 간에 일본이 자기 영해 밖에서 실전행동을 공공연히 벌려놓은 것은 그들의 재무장화와 해외팽창야망이 매우 위험천만한 계선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임.
- 더욱이 일본 당국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는 여론을 제멋대로 내돌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모독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 최근 연이어 우리를 절고 들면서 모략을 꾸미려 하고 있는 일본 당국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금후 일본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참고 사항(일본 해상보안청 발표 상황일지)

<12. 22>

- 06:20 해상보안청 중형비행기(MA861), 아마미 오시마 서북 약 240Km 해상에서 괴선박 확인
- 12:48 해상보안청 순시선, 아마미 오시만 서북서 약 324Km 해상에서 괴선박 확인
- 13:12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형비행기(MA833)가 괴선박에 대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불응 및 도주
*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20척을 해당수역으로 급파
- 14:36 해상보안청 순시선, 괴선박에 대해 20미터 기관총으로 최초 위협사격 실시
- 14:37~15:17 해상보안청 순시선, 4차례 위협사격 실시
- 16:16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선박의 船尾에 기관포 발사 및 명중
- 16:58 선체사격 실시
- 17:23 기관포로 선체사격 실시, 全彈 명중
- 17:24 괴선박에서 화재발생
- 17:26 괴선박 정선(아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 383Km 해상)
- 17:51 괴선박, 화재진압
- 17:53 괴선박, 남남서 방향으로 11노트로 운항개시
- 17:56 괴선박, 15노트로 증속
- 18:18 괴선박, 정선후 4노트로 운항재개(18:20)
- 18:30 괴선박, 아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 400Km 해상에서 정선
- 18:32 괴선박, 속력 2.5 노트로 운항 재개
- 18:52 해상보안청 순시선, 괴선박에 강제 접현 시도
- 18:53 아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 400Km 해상에서 동선박 정선, 해상보안청 순시선 나포 시도
- 21:22 괴선박, 서향으로 6노트 속도로 운항 재개
- 21:53 해상보안청 순시선, 동선박 선체에 기관포 발사 및 全彈 명중, 괴선박 정선

- 22:09 괴선박의 사격으로 해상보안관 2명(항해장 및 항해사)부상 발생
순시선도 대응사격 실시
- 22:13 동 선박 완전침몰(수몰위치 수심은 약 90m)
- 22:17 동 선박 승조원 15명이 바다에 표류중이나 공격 가능성으로
인해 접근 곤란
- 23:45 해상보안청(순시선 5척 및 항공기 1기), 현장해역에서 조명탄을
사용해 수색 및 구조활동 개시

<12. 23>

- 00:00 자정 이후 순시선 15척, 항공기 13기를 증파, 수색구조활동 강화
- 08:49 시체1구 인양(자색 스웨터, 흑색방한복에 적색 구멍조끼 착용
남자)
- 08:53 시체1구 추가 인양(오렌지색 잠바, 주머니에 한글글자가 적힌
과자봉지, 감색 스웨터, 적색 구멍조끼 착용 남자)
- 09:08 해상보안청 항공기, 오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392Km 해상에서
표류중인 2구의 사체 발견 및 이중 1구 인양
- 11:40 사체 3구 발견, 구멍조끼에 한글문자 표기

<12. 24>

- 행방불명자 수색을 위해 순시선 12척, 항공기 16척 현장 파견
- * 일본 言論들은 괴선박이 △99년 3월 일본수역을 침범한 북한 공작선과 유사한 형태 △순시선에 대한 정확한 대응사격 △인양한 승무원의 구멍조끼에 한글이 새겨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정보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본 當局의 공식적 확인 발표는 없는 상황

2.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발표

□ 개 요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2.25 성탄절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

□ 주 요 내 용

- 성탄절을 맞으며 남북의 교회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오고 온 세상에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
- 남북의 그리스도교인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자주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 남북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세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조선반도에 대한 무력행위에는 세계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단호히 반대
- ※ 동 「공동보도문」은 12월 11일 평양에서 남한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김동완 총무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이 협의 작성하였으며, 12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전문 보도

3. 한국조폐공사, 남북협력기금 출연

□ 개 요

- 한국조폐공사는 12.28(목)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새천년 통일기원 메달'을 판매해 조성된 수익금 1억1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

*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출연 총액은 21억 6,688만원

□ 주 요 내 용

- 한국조폐공사(유인학 사장)는 12.28 서울 그린파크 웨미리 랜드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어린이 교류를 위한 「2001 사랑의 카드 보내기 대축제」를 개최
- 동 행사는 「민족통일운동본부」·「시민운동연합신문」 등과 공동으로
 - 연말연시를 맞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과 함께 「구호물품」을 전달함으로써
 - 통일한국의 주역인 남북어린이 교류를 통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목적
- 또한 동 행사에선 한국조폐공사가 새 천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새 천년 통일기원 메달」 판매를 통하여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1억 1,769만원의 전달식도 병행

IV. 분야별 일지

◀ 국내 동향 ▶

- 12.21 홍순영 통일부장관,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 12.22 韓赤의 '01년도 제19차 지원물자 전달계획(남북적십자간 제3차 지원의 추가지원물량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2개 단체 기탁 물품) 관련 북측의 「인도요원 신변안전보장각서」 접수
- 12.26 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 강조(軍 주요지휘관 오찬)
- 12.2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 방향 논의

◀ 북한 동향 ▶

- 12.25 평양방송,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전문 보도
- 12.26 평방,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 12.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김일성 생일 90돌 즈음 「대사(면) 실시」에 대한 정령(12.13) 발표
- 12.27 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중앙통신 회견
- 1.1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주변국 동향 ▶

- 12.22 일본 해상보안청,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괴선박 추격 격침
- 12.24 고이즈미 일본총리, 괴선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12.25 뉴욕 타임스, “괴선박 사건은 북일관계에 추가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논평
- 12.27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괴선박 관련 북한 외무성의 대일비난에 대해 유감 표명
- 12.28 아프간 평화유지군 본진 현지 배치(UN 안보리 12.20 파병안 승인)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0호>

2002.1.3~1.14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정부, 금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III. 기 타 동 향

- 북한의 2002년도 경제시책방향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기본통계」 발표
- 2001년도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2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I. 개 황

◀ 국내 동향 ▶

- 김대중 대통령은 1.14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금년도 국정추진방향 4대과제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설정하고, 여타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
 - 향후 남북간 실천과제로 기합의한 경의선 복원·개성공단 건설·금강산 육로관광·이산가족상봉·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개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임과 ▲특히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은 “한반도 시대를 열어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일대 융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임을 강조
- 정부는 1.10 대통령 주재 금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01년도 안보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및 ▲「남북화해와 협력증진」을 금년도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 실질협력관계 증진·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전방위 안보태세 유지를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설정
- 韓赤 서영훈 총재는 1.12 北赤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금년도 한적의 제1차 지원물자(남북적십자간 제3차 지원의 추가지원분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등 3개 단체 기탁 의류 등 1억 8,490만원 상당) 전달계획을 통보

◀ 북한 동향 ▶

- 김정일 위원장은 1.5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및 1.6 駐북한 러시아대사관 방문으로 금년도 첫 공식활동을 시작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1.3 인민무력부 궐기대회, 1.4 평양시 군중대회 등)를 집중 개최하는 가운데, 남측에 대해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강조(1.3 평방,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강령”) 등 6.15 공동선언 이행과 철저한 민족자주의 원칙 견지 및 북남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
- 미국에 대해서는 1.8 평방(노동신문 논설, “대조선 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한다”), 1.10 평방(노동신문 논평, “강도적 논리를 버려라”), 1.10 중방(노동신문 논설, “왜 우리를 계속 걸고드는가”) 등을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기존 대미비난 논조를 지속
- 1.4 12:15경 북한 경비정(1척)이 서해 연평도 서방 7.5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3마일 가량 30여분 동안 월선하여 기동(1.4 합참 발표)

◀ 주변국 동향 ▶

- 일본 해상보안청은 1.6 가나가와縣 후지사와市 에노시마 앞 해상에서 북한 선적 화물선 「소나무호」에 대해 강제 수색을 실시
- 미국은 1.10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북한의 박길연 駐UN 북한대표부 대사간 「북·미 실무접촉」을 7개월만에 재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1.8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은 현재 북미관계와 관련하여 「긍정적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북미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언
- 미국 CIA는 1.10 상원 정보위원회 제출 보고서(“2015년 미국에 대한 외국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를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한 사거리 1만km의 다단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가능성이 있음과 ▲현재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설계를 개선중인 것으로 추정함을 보고
- IAEA 펠리사 플레밍 대변인은 1.7 IAEA의 3개 사찰팀이 1.15-1.19간 방북하여 영변 핵관련 시설을 방문할 예정임을 발표,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1.4 도리스 헤르트람프 駐북한 독일대사(女, 53세)의 공식부임 사실을 발표

II. 주 요 동 향

1. 정부, 금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개 요

- 정부는 1.10 청와대에서 금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안보정책 관련 ▲2001년도 3대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2002년도 안보정책 목표 및 분야별 4대 추진 방향을 설정

□ 주 요 내 용

< 2001년도 안보정책 추진실적 평가 >

- 2001년도에는 ▲남북 화해협력 증진·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등 「3대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노력
- 그 결과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 재검토, 9.11 테러 사태와 대테러전쟁,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적 연기로 인한 남북 대화 소강상태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맹국과 주변국,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책임을 증명
- 아울러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하에서, 국제 대테러연대 동참 및 한·미 군사공조, 아프간 및 주변국에 대한 지원 등 적시에 적절한 조치

- 국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위협이 등장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에 잘 대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제적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한 결과

< 2002년도 안보정책 추진방향 >

- 금년도 안보정책 목표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간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① 전방위 안보태세 유지

-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과 같은 국제행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예방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및 태세 유지
- 아울러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간 현안을 원만히 해결토록 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경주

② 남북간 실질협력 증진

-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 특히 5대 핵심사업의 실현을 통해 남북간 실질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상호이익 및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정착

- 또한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발전될 수 있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초당적 합의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③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하고,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조속한 시일내 미북대화가 재개·진전되고 일·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
-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
- 아울러 대테러전쟁 등으로 새로이 조성된 외부환경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

Ⅲ. 기 타 동 향

1. 북한의 2002년도 경제시책방향

□ 개 요

- 통일부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도제일주의」 구현을 위한 경제부분의 시책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 1.4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 제하 평가자료를 통해
 - 금년도 북한경제 성과는 자본 및 과학기술 기반의 취약으로 자력노력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첨단기술 도입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주 요 내 용

< 금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 >

- 기존 경제 선행부문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채취공업 및 전력·금속·철도운수 부문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
 -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진 및 황해남도 토지정리,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 등 박차
- 주민생활 향상에 최우선적 역량 집중
 - 새로 건설된 주민생활 향상 관련 생산기지들의 생산 정상화
 - 수립화·원립화 등을 통해 도·농지역의 환경개선

- 경제관리의 혁명적 개선 · 완성
 -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가장 큰 실리를 얻도록 경제관리를 개선 · 완성
 - 올바른 사회주의 원칙 구현을 위해 올바른 「사회적 시책」 실시
- 과학기술 향상 및 인재육성사업 적극 추진
 - 공업부문 기술개선, 현대화, 정보산업의 집중육성, 첨단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에 역량 집중
- 정치사상을 기본으로 한 「라남의 봉화」 기치 하에 중점과업 추진
 - 타성적 · 소극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탈피, 「혁신적 안목」으로 사업 전개

< 평가 및 전망 >

- 금년도 경제시책 방향은 지난 해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체로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설정된 것으로 평가
 - 지난 해는 ▲농업 및 전력 · 석탄 등 선행부문 역량 집중 ▲경제관리 체계의 개선 ▲현존 경제토대 정비(기술개선 · 현대화) 등을 경제시책으로 제시
- 금년에는 「라남의 봉화」 기치 아래 경제선동 강화를 통한 내부결속을 도모하면서 지난 해 보다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위를 높임으로써

- 김일성 생일 90돌 및 군창건 70돌에 즈음,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
- 따라서 북한의 금년도 경제시책은 지난 해에 추진하여 왔던 경제 건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 과학기술 향상과 함께 올바른 「경제적 시책」 등 경제관리의 개선을 통해
 - 경공업·농업·축산 등 주민생활 관련부문의 생산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기본통계」 발표

□ 개 요

- 통일부는 1.9 「남북교류협력 기본통계」 자료를 통해, '89부터 '01.12 현재까지 북한방문 27,152명, 남한방문 1,534명, 주민 접촉 15,312명 등 「남북한 인적왕래 및 접촉현황」을 발표

□ 주 요 내 용

① 북한방문('89-'01) : 총 27,152명

- 2001년 방북인원은 8,551명으로 전년의 7,280명 대비 17.5% 증가
- 이중 경수로 사업차 방북한 인원이 3,541명으로 전체의 41.1% 점유
- 대북지원 9.4%(803명), 사회문화 8.2%(701명), 경제 7.8%(668명), 관광사업 5.8%(494명), 이산가족 1.8%(156명) 기타 25.9%(2,251명) 등
- * '99년 5,599명, '98년 3,317명

② 남한방문('89-'01) : 총 1,534명

- '01년도 방남인원은 191명으로 '00년도 706명의 27%에 불과
- 이중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남인원이 73.3%(140명) 차지

- 남북회담 14.1%(27명), 경제 9.9%(19명), 체육 0.5%(1명), 기타 2.2%(4명) 등

* 1999년 62명, 1998년 0명

③ 주민접촉 ('89-'01) : 총 15,312명

- 2001년도 주민접촉 건수는 총 1,877명으로 전년도의 2,468명 대비 23.9% 감소
- 이중 이산가족 접촉인원이 1,012명으로 전체의 53.9% 차지
- 경제 22.5%(422명), 사회문화 16.9%(317명), 대북지원 4.1%(77명), 관광사업 1.0%(19명) 등

* 1999년 62명, 1998년 0명

④ 기타현황

- 2001년도 관광인원은 57,285명으로 총 관광객 429,516명의 ('01.12.31 기준) 13.3%
- 2001년도 남북교역액은 4억 296만불로 전년도 교역액 4억 2,515만불 대비 5.2% 감소
- 2001년도 협력사업 승인은 총 10건(경제 5, 사회문화 5)

3. 2001년도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 개 요

- 통일부는 1.3 「2001년도 남북이산가족 교류동향」 자료를 통해 '01년도 이산가족교류가 생사확인 952건, 서신교환 1,202건 제3국상봉 165건, 방북·방남상봉 205건 성사되었음을 발표
- 전년대비 생사확인과 상봉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서신교환은 다소 증가, 기간 중 이산가족에게 지원한 교류경비는 279건 총 3억 4,905만원으로 금액면에서 전년보다 125% 증가

□ 주 요 내 용

- 2001년도 이산가족교류는 생사확인 952건, 서신교환 1,202건 제3국상봉 165건, 방북·방남상봉 205건 성사
 - * 전년대비 생사확인은 77%, 상봉(제3국상봉, 방북·방남상봉 포함)은 66% 수준으로 다소 감소, 서신교환은 1.2배로 증가
- 당국차원은 생사확인 744건, 서신교환 623건, 방북·방남상봉 200건 성사
 - * 전년대비 생사확인은 94%, 상봉은 49% 수준으로 감소, 서신교환은 16배로 대폭 증가
- 민간차원은 생사확인 208건, 서신교환 579건, 제3국상봉 65건 방북상봉 5건 성사
 - * 전년대비 생사확인은 47%, 서신교환은 59% 수준으로 감소, 상봉은 1.1배로 증가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당국차원의 교류는 방문단 교환(8,635명) 및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사업(2,267명) 등을 통해 총 10,902명이 생사·주소 확인
 - 3차례의 방문단 교환으로 남북 총 3,600여명이 상봉
 - 3차례의 방문단 교환과정(62건) 및 3.15 서신교환 실시(남북 각기 300명)을 통해 총 662명이 서신교환 실현
 -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생사확인 3,025건, 서신교환 3,246건, 상봉 1,229건(제3국상봉 608건, 방북상봉 320명, 방남상봉 301명) 실현(과거 연평균 대비 각각 6.6배, 1.7배, 12.8배 수준)
- 2001년도 이산가족들에게 지원한 교류경비는 총 279건 3억 4,905만원으로서 금액면에서 전년(총 314건/2억 7,885만원) 대비 125% 증가
 - 상봉 120건 2억 4,000만원, 생사확인 83건 7,645만원, 교류지속 76건 3,260만원

□ 평 가

- 당국간 차원의 생사확인 및 상봉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4월 이후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무산 등 이산가족 교류의 소강상태에 기인
- 그러나 당국차원의 교류가 담보상태를 보인 가운데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상봉의 경우 165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 방북상봉도 5건이 성사
- 제3국 상봉은 주로 해외동포(50.9%), 교류주선단체(20.0%), 기타(29.1%) 등을 통해 성사되고 있으며, 상봉지역은 대부분 중국 지역
- 한편 금년 5월 이후에는 재북가족이 재남가족을 찾는 「북→남 이산가족찾기」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
- 금년 중 36명의 재북가족이 재남가족의 생사를 확인, 24명이 재남가족과 상봉

r-

□ 참고자료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① 2001년 이산가족 교류현황

< 총 관 >

(단위 : 건)

구 분	집족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 상봉	방북/방남 상봉
2000년도	1,850	1,239	1,023	148	410
2001년도	427	952	1,202	165	205
대비(%)	23	77	117	111	50

< 월별 교류현황 >

(단위 : 건)

구분	접촉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 상봉			방북·방남 상봉		
	'00	'01	대비 (%)	'00	'01	대비 (%)	'00	'01	대비 (%)	'00	'01	대비 (%)	'00	'01	대비 (%)
1월	29	9	31	18	99	550	33	48	145	10	11	110	0	0	-
2월	65	21	32	19	547	2,879	48	38	79	9	11	122	0	201	-
3월	244	19	8	95	20	22	200	661	331	19	9	47	1	0	
4월	211	31	15	29	13	45	109	38	35	15	8	53	0	1	
5월	513	24	5	35	18	51	107	79	74	14	12	86	0	1	
6월	101	58	57	80	20	25	124	44	35	15	15	100	3	1	
7월	455	57	13	433	19	4	84	59	70	18	15	83	0	0	
8월	130	34	26	21	17	81	101	61	60	8	13	163	204	0	
9월	53	44	83	18	22	122	50	58	116	9	17	189	0	0	
10월	26	44	169	110	145	132	60	27	45	10	15	150	1	1	
11월	9	47	522	368	15	4	29	34	117	12	24	200	201	0	
12월	14	39	279	13	17	131	77	55	71	9	15	166	0	0	
계	1,850	427	23	1,239	952	77	1,023	1,202	117	148	165	111	410	205	50

② 연도별 교류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소계 (평균)	'98 3-12	'99	'00	'01 1-12	소계 (평균)	총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24	1,038 (127)	353	481	447	208	1,489 (388)	2,52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85	4,132 (506)	384	637	984	579	2,584 (674)	6,716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8	163 (20)	100	195	148	165	608 (159)	771	
	방북상봉											-	1	5	4	5	15	15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65										65			792	744	1,536	1,601	
	서신교환														39	623	662	662	
	방남상봉	30										30			201	100	301	331	
	방북상봉	35										35			205	100	305	340	

③ 연도별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생사확인	41	1,720	89	4,030	119	7,490	83	7,645	332/20,885
상 봉	55	5,024	142	12,240	91	15,740	120	24,000	408/57,004
교류지속					104	4,655	76	3,260	180/7,915
합 계	96	6,744	231	16,270	314	27,885	279	34,905	920/85,804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1.8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북측 민족화해위원회에 제2차 실무접촉(1.12 또는 1.15, 평양) 개최 제의
- 1.10 정부, 2002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 2002년도 안보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1.12 한적, 2002년도 제1차 대북지원 계획 대북통보
- 1.14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 금년도 국정 추진방향의 4대과제로 「남북관계 개선」 등 제시

북한 동향

- 1.3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들 궐기대회 개최
- 1.4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1.4 북한 경비정(1척),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 * 12:15경 연평도 서방 7.5마일 해상에서 NLL 이남 3마일 지점까지 30분간 월선
- 1.5 김정일 위원장, 금년도 첫 공식활동으로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 방문

주변국 동향

- 1.4 독일 외무부 대변인, 헤르트랴프 駐북한 독일대사(여, 53세) 부임 발표
 - * 독일은 2001.3.1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6 일본 해상보안청, 가나가와縣 후지사와市 에노시마 해상에서 북한 선적 「소나무호」 강제 수색
- 1.7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 1.15-19간 IAEA 3개 사찰팀의 방북 및 영변 핵시설 방문계획 발표
- 1.10 미 CIA, 상원 정보위원회에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보고(“2015년 미국에 대한 외국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
- 1.10 미국,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駐UN 북한대표부 박길연 대사간 「북·미 실무접촉」 개최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1호>

2002.1.15~1.28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정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 북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

III. 기 타 동 향

- 2001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

IV. 분 야 별 일 지

이 자료는 지난 14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1.24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년도 통일부 업무계획(1.9 대통령보고)의 내용과 관련 ▲남북대화의 적극 추진 ▲이산가족문제 해결 제도화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며,
 - 가능한 빠른 시기에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접촉 제의」를 검토하는 등 주도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공개
- 정부는 1.23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학생·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지원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향」을 발표
- 통일부 대변인은 1.24 논평을 통해, 북측이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1.22)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당국간 대화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언제라도 조건 없이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대화를 해 나갈 것임을 발표
-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1.21 언론회견을 통해,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대북협의를 위한 방북(1.18-20)시 북측의 「아리랑축전」 관계자가 남측 금강산 관광객에게 아리랑공연을 개방하겠다고 제의하고 조만간 숙박·비용·이동경로 등 구체적 연계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사실을 공개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1.22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남측에 대해 「3대호소」와 「3대제의」를 제시하고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보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
- 박길연 UN주재 대사는 1.17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주한미군 관련 서한 전달을 통해, “UN은 주한미군이 UN의 깃발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루 빨리 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 1.14 「내각전원회의」를 개최하고 ▲'01년도 경제계획 이행실태 결과와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 및 군 창건 70돌을 맞아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 1.18 「농근맹」 제7기 41차 전원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를 통해 ▲김일성 주석의 논문 “농근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과업의 집행방안과 ▲금년도 신년공동사설 제시 과업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

- 1.16 평방보도(“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노린 생트집”)를 통해서 2000년 클린턴 행정부와 테러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지난 해 테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협약에의 서명과 인질반대 국제협약에 가입한 사실 등을 강조하고
- 이와함께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다음 반테러전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반테러전쟁의 북한으로의 확산을 경계

◀ 주변국 동향 ▶

- UN 인도지원조정국(OCHA)은 1.19 대북 긴급구호보고서(Emergency Report) 발표를 통해 ▲주민 1일 배급량이 2000년 200g에서 지난 해 250g으로 증가했으며 ▲총 405만명의 주민이 WFP의 지원을 받았으나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여전히 열악함과 ▲북한이 10만5천톤의 식량지원으로 금년 초의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4-6월 춘궁기에 식량부족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
- 미국(Jennings 국방부 부차관보, 포로 및 실종자 담당)은 1.23-26 태국 방콕에서 북한측(판문점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과 한국전사망 미군 유해 공동발굴작업 추진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개최하고 관련 세부일정 및 보상금액 확정 등을 논의
- 미국 UC 버클리大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1.22 연합뉴스 회견을 통해 자신을 포함하여 스티븐 보스워스 등 전 주한미국대사 4명(총 5명)의 북한 방문계획(2.19-22)이 駐UN 북한대표부 이근 차석대표를 통해 추진중임을 언급
- 독일 헤르트람프 駐북한 초대대사는 1.15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信任狀을 제정, IAEA 사찰전문가 3명은 1.15-18간 영변지역의 핵시설을 방문하고 영변 핵시설 내의 「동위원소 실험실」을 최초로 조사
-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6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4대 제일주의」는 “미국의 반테러전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으로,
- 4대 제일주의는 “김정일 총비서의 영도에 따라 軍隊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내부결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도

II. 주 요 동 향

1. 정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 개 요

- 정부는 1.23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학생·교사에 대한 관광경비 지원 ▲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등의 방안을 발표

□ 주 요 내 용

(1) 관 련 상 황

- 현대이산의 자금난 심화와 관광객 감소, 북측과의 관광활성화 협상 지연 등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현재 월 4천명 미만의 관광객으로는 관광선 운항, 현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에 매월 20-30억원 정도가 부족
 - 관광공사도 관광 활성화가 지연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광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
 - 관광특구 지정, 육로 개설 등은 북측의 내부사정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지켜나가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이 없이는 관광 지속이 어려운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 관광지속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
 - 정부가 정치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강산 관광은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
 - 정부는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운영방식 개선, 북측의 상응한 조치 확보 노력 등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

(2) 정부지원 검토배경

- 금강산관광은 「평화사업」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광 지속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 금강산 관광을 통해 42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북한땅을 직접 밟고 그곳에서 남북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금강산 지역은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남북화해협력의 장으로 정착
 - 금강산 관광은 IMF 위기시 외국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 및 서해 교전시 우리 사회의 안정 유지에는 물론, 북한의 장전향과 해금강 등 군사작전지역 개방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
 - 올해 우리는 월드컵, 대선 등 중요한 국제행사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지속되도록 지원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금강산관광이 가진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관광중단시 남북 관계 개선에는 물론 우리의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관광특구 지정, 육로개설 등이 무위로 돌아가고, 재개 협상도 관광대가 보장문제, 상호 불신감 등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
- 한편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관광대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광활성화 시까지 관광객수에 따른 지불방식으로 바뀌어, 북측에 대한 무리한 지불없이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관광 지속이 가능한 상황
-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측면을 계속 활용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사업운영방식 개선,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북협상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3) 정부지원 방향

< 기본 방침 >

-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 그 혜택이 가급적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지원
- 관광공사와 현대간 협의를 존중하면서, 관광공사가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 북한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개최도 고려

< 지원 방향 >

①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

- 금강산관광을 통해 분단 현실과 통일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남북협력기금법에 규정된 「남북간 왕래경비 지원」에 따라 관광경비 보조 추진
- 경비보조 범위는 대상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정해 보조하게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금강산관광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
- 향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국회 사전보고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해 나갈 계획

②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01.6.29 승인) 상환조건 완화

- 관광공사는 관광 활성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 정부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사업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 이러한 입장에서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관광공사에 대한 기금 대출조건 완화 문제를 심의할 예정
- 한편, 관광공사의 자금투입은 금강산 현지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추가투자 여부와 규모는 관광공사와 현대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될 예정

③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 금강산관광의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과 관광객에 대한 편의 도모 차원에서 금강산에 외국상품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
-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은 협력사업 변경승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일반 해외여행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입 절차 등 관련규정도 정비해 나갈 예정

< 향후 추진절차 >

- 정부는 우선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 관광경비보조는 준비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시행
- 정부는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국회,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 협의회 의결 등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구체적 내용도 소상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

2. 북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

□ 개 요

○ 북한은 1.22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의 보고를 통해 남측에 대한 「3대 호소와 3대 제의」 및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 3대 호소 : 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
②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
③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의 장애요인을 제거

- 3대 제의 : ① 금년을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② 6.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
③ 5월~8월간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 등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

□ 주 요 내 용

(1) 첫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

-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
-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와도 6.15 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

(2) 둘째,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

- 당국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회담 및 접촉을 모색
- 통일운동 활성화는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해 나가는 추동력

(3) 셋째,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을 제거

- 미군철수, 외세와 합동군사연습 반대 배격
- 외세와 공조는 불용, 민족공조로 전환
- 주적론 철회, 보안법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 철폐

⇒ 이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3대 제의」를 제기

□ 평 가

- 이번 합동회의 개최는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당면대책 토의형식으로 대남정책 방향을 구체화시킨 점에서 의의
 -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금년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갈 것”을 촉구
-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 재강조와 계속성 보장을 표명하면서
 - 「당국대화」를 모색·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 * 차기에 “어떤 정권이 나온다고 해도 남북공동선언이 변함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참고사항

(1) 국민의 정부 이후 「연석회의」 방식 제의 현황

일자	회의형태 (명칭)	제의형식	주요요지
1998. 2.18	정당·단체 연합회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정당·단체 연합회의 소집 제의 • 조국통일 3대원칙과 3대헌장을 지침으로 자주와 단합 • 국가보안법 철폐
1998. 6.10	정부·단체 대표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절 맞아 판문점서 통일대축전 개최 제의
1999. 2. 3	정부·정당· 단체 연합회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제의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대책 논의 • 이산가족 등 당면문제 논의 • 의세공조파기 및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2000. 8.15	정부·정당· 단체 연합회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원칙 관철 • 연방·연합에 따른 통일국가 지향 실천적 조치 마련 • 남북간 여러분야 협력·교류 확대 • 공동선언 지지 모든 정당·단체·인사와 대화·접촉 강조
2000. 9.29	정부·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10.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공동선언 지지 • 당창건 55돌 당·정·단체 인사 초청 • 연방제 통일 실현 강조 • 각 분야 교류·협력 추진

일자	회의형태 (명칭)	제의형식	주요요지
2001. 1.10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호소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야 불문 정치인간 왕래 · 접촉 제의 • 연방 · 연합 방식의 통일 실현 강조 • 이산가족 문제 조속 해결 • 주적개념 철회 • 비전향장기수 추가 송환 • 다방면의 교류 · 협력 추진
2001. 5.28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정당 · 단체 합동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제안 • 남북, 해외에서 각기 실정에 맞게 행사 개최 •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 결성

(2) 1.24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북측이 1월 22일 「정부 · 정당 · 단체 합동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당국간 대화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정부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언제라도 조건 없이 남북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 남북대화는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함.
- 남과 북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그동안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화해협력과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Ⅲ. 기 타 동 향

1. 2001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 개 요

- 통일부는 1.17 「2001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발표를 통해, 작년도 국내 대북지원은 1억 3,539만불(1,757억원)로서 '96년 이후 꾸준한 증가('00년 1억 1,376만불 대비 19% 증가) 추세임을 발표
 - 정부 차원 7,045만불(전년도 7,863만불 대비 10.4% 감소), 민간 차원 6,494만불(전년도 3,513만불 대비 85% 증가)
 - 일반구호 6,067만불, 농업복구 5,476만불, 보건의료 1,996만불

□ 주 요 내 용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7,045만불(913억원)로서 규모면에서 '00년 7,863만불(944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내용면에서는 다양화
 - 비료 20만톤, 아동용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WFP) 말라리아 방제 (WHO) 등 총 7,045만불
- 주로 식량, 비료 등 지원을 통해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분야 등으로 지원범위 확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 '01년 민간의 대북지원은 6,494만불(844억)로서, '00년 3,513만불(421억원)에 비해 85% 증가하였으며, 지원분야에서도 다양화·전문화
 - 개별단체 지원 4,292만불(66%), 한적창구를 통한 지원 2,202만불(34%)
 - * 한민족복지재단 819만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693만불, 기독교 북한동포돕기후원연합회 643만불, 한국이웃사랑회 617만불 등
 - 농업복구 지원(우리민족·월드비전), 보건의료(유진벨·한민족), 취약계층 지원(어린이어깨동무, 불교종단협) 등
- 사과·배·감자(3월), 감귤·당근(12월) 등 농산물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농가 경제에도 기여
- '01년 분배결과 확인 등을 위해 방북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총 38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
 - * '98년 34명→'99년 33명→'00년 144명→'01년 384명

□ 평 가

-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비료지원('99년 11.5만톤, 2000년 30만톤 2001년 20만톤)으로 북한 수확량 증대에 기여
 - 2001년 북한의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38%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기 적절한 비료의 공급과 양호한 기후조건이 수확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WFP 곡물작황 평가)

- 대북 직접지원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WFP·WHO 등의 사업에도 참여, 다양한 대북지원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지원 분야 확대 및 지원 효과 도모
- 민간차원에서도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보다 전문화·조직화되는 추세로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 수행
 - 농자재 지원·영농기술 전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지원, 취약계층(지역)지원 등 분야별로 전문화·특화하여 지속적 사업 추진 .
 -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조직(2001.2.14), 『대북협력 국제NGO회의』 서울 개최(2001.6)

'95년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단위:만불)

구분	'95.6	'96	'97	'98	'99	'00	'01	계
정 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45,005
민 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16,191
합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61,196
국제사회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25,849	151,893

□ 참 고 사 항(국제사회 대북지원 동향)

- '01년 국제사회 대북지원 규모는 2억 5,849만불로서 지난해 지원규모 18,177만불 대비 42% 증가(한국제외)
- UN 합동지원 2억 1,389만불, 개별국 1,753만불, 국제 NGO 2,707만불(UNOCHA 자료기준)

- FAO/WFP 2001년 곡물작황평가 결과 발표(2001.10)
 - 북한의 '01년 예상수확량은 총 354만톤으로 지난해 수확량 257만톤 대비 38% 증가
 - 예상수요량 501만톤 고려시, 예상부족량 147만톤

- WFP, 2002년 대북지원계획 발표
 - 북한 주민 640만명을 대상으로 총 61만톤(약 2억불)의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해 목표인 81만톤(약 3억불)에 비해 25% 감소된 규모
 - 곡물(52만톤), 기름(2만톤), 콩류(2.6만톤), 가공식품(2.4만톤), 설탕(1만톤), 분유 등

2.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

□ 개 요

- 통일부는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주민 왕래 지원 2억5,300만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1억200만원 등 총 5,544억2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

□ 주 요 내 용

- 주민왕래 지원 및 사회문화협력 지원은 △6.15 남북정상 회담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지원 2억5,300만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남북공동사진전 지원 1억200만원
- 교역 및 경험자금 대출 경우 △한국관광공사 대출 450억원 △인천·남포간 선박운항 피해업체 대출 4억7,900만원 △제일 모직 반출자금 3억8,800만원 △SK글로벌 반출자금 2억500만원 등
-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의 경우는, ①유상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으로 △대북경수로 본공사비 3,002억8,400만원 △대북식량차관 50만톤 189억5,500만원을 지원
 - ②무상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으로 △대북비료 20만톤 638억6,300만원 △옥수수 지원 10만톤 222억9,600만원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지원 499억9,500만원 △국도1호선 연결사업 398억5,500만원 등을 지원

□ 참고 사항(2001.12.31 현재 남북협력기금 운용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 원 결정액	집행액		집행누계	
		2000년 누 계	2001		
주민왕래 지원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지원	253	-	253	253
사회문화협력 지원	6.15남북공동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 지원	102	-	102	102
교역 및 경협자금대출	대방기업 반출자금 대출	3,420	-	-	-
	제일모직 반출자금 대출	395	-	388	388
	SK글로벌 반출자금 대출	205	-	205	205
	인천-남포간선박운항 피해업체 대출	828	-	479	479
	한국관광공사 대출	90,000	-	45,000	45,000
	소 계	94,848	-	46,072	46,072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무상)	대북비료 20만톤 지원	70,000	-	63,863	63,863
	옥수수 10만톤(WFP)지원	23,700	-	22,296	22,296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100	228	358	586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8,339	3,379	3,843	7,22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지원	840	153	25	178
	제2차이산가족방문단 지원	952	455	169	624
	제3차이산가족방문단 지원	698	-	646	646
	제4차이산가족방문단 지원	691	-	100	100
	경의선철도 건설 사업 지원	180,361	8,518	49,995	58,513
	국도1호선연결사업 지원		6,060	39,855	45,915
	북한 전염병퇴치사업 지원	650	-	600	600
	아동용 동내의 지원	4,800	-	4,594	4,594
	농산물 수송비 지원	3,450	-	2,419	2,419
	소 계	293,131	18,793	188,763	207,556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유상)	대북경수로 본공사비 대출	3,542,000	325,936	300,284	626,220
	대북식량차관(50만톤) 대출	110,000	86,741	18,955	105,696
	소 계	3,652,000	412,677	319,239	731,916
계	4,042,877	431,470	554,429	985,899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1.15 韓赤, 동해상 표류 북한 민간인 3명 대북송환(1.9 청진항 동남방 32 마일 지점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 러시아 상선에 의해 구조)
- 1.21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북측의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아리랑축전 개방 방침” 공개(금강산관광 관련 대북협약의 결과 언론회견)
- 1.23 정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 1.24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의 개최 관련 환영 논평 발표

북한 동향

- 1.14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2001년도 인민경제계획 수행내용 검토 및 신년공동사설 제시사업 관철을 위한 대책 토의)
- 1.17 박길연 駐UN 북한대표부 대사,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주한미군 관련 서한 전달
- 1.18 농근맹, 제7기 41차 전원회의 개최(신년공동사설 제시 실천방안 논의 및 「결정서」 채택)
- 1.22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대남 「3대 호소 및 3대 제의」 채택)
- 1.24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제10차 총회 개최

주변국 동향

- 1.15 독일 헤르트람프 駐북한 초대대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에게 신임장 제정

- 1.15 IAEA 대표단(3명), 1.15-18간 북한의 영변지역 핵시설 방문 및 「동위원소 실험실」 최초 조사
- 1.19 UN 인도지원조정국, 「대북한 긴급구호보고서」(Emergency Report) 발표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 대북지원 호소
- 1.22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前 주한 미국대사(4명)등 미측 인사 5명의 방북계획(2.19-22) 추진 사실 공개(연합뉴스 회견)
- 1.23 미국, 북한과 한국전사망 미군유해송환 실무협상 개최(1.23-26, 방콕)

<끝>

주간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2호>

2002.1.29~2.5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정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대출조건변경안 의결
- 한적,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제의 대북전통문
- 북한, 부시 美대통령 年頭教書 관련 규탄성명 발표

III. 기 타 동 향

- 통일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개편
- 2001년도 남북간 교역 현황

IV. 분 야 별 일 지

이 자료는 지난 8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30 취임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각종 남북대화를 재가동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 경의선 연결 등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간 평화의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임을 지적
- 정부는 1.31 제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방안(1.23)의 후속조치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조건 변경안을 심의·의결
- 한적 서영훈 총재는 1.29 북적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설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시할 것과 이와관련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방문단 교환 관련 구체적 사항을 협의할 것을 제의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1.31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 미대통령의 年頭教誨(1.29)와 관련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덮쳐 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며 부시대통령을 강력히 비난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 「통일연대·민화협·7대종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대표들은 1.30-2.2 평양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 동 행사를 2.20-21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합의(2.5, 중방)
- 사민당 대변인 성명(2.4), 노동신문 논평(2.3), 평방 보도(2.3), 조평통 대변인 담화(2.1) 등을 통해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訪美 發言을 집중 비난
 - * 이회창 총재는 1.22-28 방미기간 중 美側 고위인사들과 면담 및 연설을 통해 북한체제 不變 및 핵개발 대비 필요, 戰略的 包容 및 한·미 공조 강화, 비무장지대 병력 후방 배치, 재래식무기 감축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정치적 목적에 의한 김정일 答訪 반대, 통일 후 주한미군 계속 유지 등을 언급

◀ 주변국 동향 ▶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9 年頭教書(上·下院 합동회의 연설)를 통해 3대 정책목표로 ▲對테러전 승리 ▲테러로부터 美 본토 방어 ▲경기부양 등을 제시하면서
 - 북한에 대해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북한·이란·이라크는 그들의 테러동맹들과 악의 축(an 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평화를 위협하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고 발언
- 美 CIA는 1.30 「세계 각 국의 대량살상무기와 최신 재래식무기 기술 획득에 대한 對의회 보고서」를 웹사이트(www.cia.gov)에 공개하고, 북한이 광범위한 종류의 화학요소 및 생물학요소들을 생산, 미사일 탄두 또는 기타 탄약을 이용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 * 동 보고서는 ▲북한이 2001년 하반기에도 자체 핵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노력을 전세계적으로 계속하였음과 ▲북한이 탄도미사일 장비와 기술, 구성요소 재료 등을 중동·남아시아·북아프리카 국가들에 계속 수출했으며 ▲탄도미사일 관련기술의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원임과 동시에 이를 미사일 개발 및 생산에 재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II. 주 요 동 향

1. 정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대출조건변경안 의결

□ 개 요

- 정부는 1.31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관련 「91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안을 심의·의결

□ 주 요 내 용(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

- 정부는 1. 31 오후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대출조건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원리금상환은 관광특구, 육로관광 실시 2년후부터 개시하되, 상환 방법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 이자는 당초 약정된 연 4%로 하되, 원금상환 개시전 거치기간 중 이자는 연 1%로 조정하고자 함.
-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이 관광객 감소, 북한과의 관광활성화 협상지연 등으로 그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 이에 대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요성과 지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임.
- 정부의 금번 조치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평화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 관광공사의 능동적인 사업참여로 금강산관광의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개설 등 북한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

2. 韓赤,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제의 대북전통문

□ 개 요

- 韓赤 서영훈 총재는 1.29 北赤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민속명절인 설을 계기로 그간 지연 되어온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실시를 제의

□ 주 요 내 용

- 남북이 합의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아직까지 성사 되지 못하여 만날 날만 고대하였던 이산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져 가고 있음.
-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임.
- 이미 남북은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해 두었던 만큼 당장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
- 이같은 견지에서 민속명절인 설을 계기로 지난 해 교환한 방식에 따라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시할 것을 제의함.
-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하면 될 것임.

3. 북한, 부시 美대통령 年頭教書 관련 규탄성명 발표

□ 개 요

- 북한은 1.31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 미대통령이 연두교서(1.29)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n axis of evil)을 이루는 나라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비난

□ 주 요 내 용

- 부시는 우리나라가 대량살육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 대해 미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등 갖은 악담을 다 쏟아 놓았음.
- 더욱이 엄중한 것은 부시가 이번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쳐 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임. 근래의 조미관계의 역사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이 없음.
-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음.
- 부시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대화 재개 제안의 속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현 미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때 만들어 놓았던 대화를 통한 핵·미사일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버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할 기도를 공개표명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취해온 입장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그릇하게 갖추어 놓은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정책이었는가를 절감하게 하고 있음.

-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
- 미국이 주제넘게 좋아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님.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임.

□ 참 고 사 항(부시 및 주요 參謀들의 관련발언)

< 부시대통령의 관련발언 >

- 부시대통령 연두교서(1.29 美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WMD)로 무장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북한·이란·이라크)들과 그들의 테러동맹들은 「惡의 軸」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장을 하고 있음.
 -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이러한 정권들은 중대하고 검증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증오에 상응하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
- * 부시는 연두교서에서 「3대 정책목표」로 ▲對테러전 승리 ▲테러로부터 美 본토 방어 ▲경기부양을 제시

- 부시대통령 노스캐롤라이나주 연설(1.30 윈스턴-살렘)
 - 우리의 임무는 세계를 테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테러전의 목표는 결코 어느 한 사람이나 알카에다 세력 등이 아님. 테러를 지원하거나 비호하는 것은 테러세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같은 기조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 부시대통령 플로리다·조지아주 연설(1.31)
 - 이 국가들(북한, 이란, 이라크)이 정교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음. 그들은 우리의 의도가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음.
 - 무고한 미국 시민을 겨냥해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색출해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테러전은 결코 보복차원이 아닌 정의의 전쟁임.

- 부시대통령 요르단 국왕 면담(2.1 백악관)
 -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귀기울일 것을 진정 희망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적 의사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뒤로 물리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아야 함.

< 주요 參謀들의 관련발언 >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1.30 국방대학 연설)
 - 미국은 테러범들의 사이버 테러, 해외주둔 미군기지 공격, 도시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 국방부의 임무는 이러한 잠재공격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며 내년 국방예산 480억 달러 증액은 당연함.

○ 에리 플라이서 백악관 대변인(1.30 기자회견)

- 부시 대통령이 사용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수사적인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추축국과의 역사적 연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님.

○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1.30 기자회견)

- 미국은 북한과 논의할 중대현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으며, 장소와 시점을 불문하고 이 문제들을 놓고 북한과 마주 앉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허바드 駐韓 美 대사(1.30 기자회견)

- 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테러전쟁이라는 환경 아래 북한의 위협이 특히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언급한 것으로 미국은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음.

○ 곤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1.31 全美보수동맹회의)

- 북한은 세계 제일의 탄도미사일 장사꾼으로서 구매자의 의도가 아무리 惡하더라도 누구든지 거래하고 있음. 미국은 북한에게 더 나은 길을 택할 수 있게 해 줄 호혜적인 load map을 제시했으나 평양으로부터 진지한 응답이 없음.

○ 콜린 파월 국무장관(2.1 韓·美 외무장관회담)

- 이번 국정연설은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와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며, 미국은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음.

Ⅲ. 기 타 동 향

1. 통일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개편

□ 개 요

- 통일부는 2.1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온라인을 통한 원격 통일교육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의 접근 및 검색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편

□ 주 요 내 용

-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원격 통일교육시스템」 구축
 - 13개 과목 「원격강좌」 개발
- 이용자의 접근·검색 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 page loading 속도를 향상시켜 검색시간 단축
-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과 객관적인 북한이해 도모를 위해 통일게임·통일만화·가상북한여행 등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요소를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 제공
 - 교사·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토록 「학교토론방」 마련
 - *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Education + Entertainment
- 통일교육자료의 체계적 검색·이용을 위해 자료실 기능 보완
 - 통일교육자료를 도서자료·동영상 자료 등 「형태별」, 학생·교사 등 「대상별」로 분류 검색 가능

2. 2001년도 남북간 교역 현황

□ 개 요

- 통일부는 「2001년도 남북교역동향」을 통해 ▲2001년도 남북간 총 교역액은 전년동기 5.2% 감소 ▲위탁가공 교역액은 3.3% 감소했음을 밝히고
- 남북교역의 감소추세가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 제도적 장치 미비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키는 국내외적 상황 때문인 것으로 평가

□ 주 요 내 용

< 교 역 전 반 >

- 2001년도 전체 남북교역액은 402,957천달러로 전년동기 425,148천달러 대비 5.2% 감소
- 거래성교역은 236,313천달러로 전년동기 239,719천달러 대비 1.4%, 비거래성교역은 166,645천달러로 전년동기 185,430천달러 대비 10.1% 각각 감소
- 거래성교역 중 위탁가공교역은 124,924천달러로 전년동기 185,430천달러 대비 3.3% 감소
- 반입액은 176,170천달러로 전년동기 152,373천달러 대비 15.6% 증가한 반면, 반출액은 226,787천달러로 전년동기 272,775천달러 대비 16.9% 감소
- *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379개(위탁가공업체 125개)이며, 품목수는 603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80개)

< 거래성 교역 >

- 2001년도 거래성교역은 236,313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 이중 반입은 173,476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2%, 반출은 62,837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9.5% 각각 감소
- 위탁가공교역
 - 위탁가공교역은 124,92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30% 거래성교역액의 52.9%를 차지함
 - 반입은 72,579천달러로 전년동기 71,966천달러 대비 0.8% 증가하고 반출은 52,345천달러로 전년동기 57,224천달러 대비 8.5% 감소
- 상업적 매매거래
 - 상업적 매매거래는 111,389천달러로 전년동기 110,529천달러 대비 0.8%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27.6%, 거래성 교역액의 47.1%를 차지
 - 반입은 100,897천달러로 전년동기 78,551천달러 대비 28.4% 증가하고, 반출은 10,492달러로 전년동기 31,978천달러 대비 67.1% 감소

< 비거래성 교역 >

- 2001년도 비거래성교역은 166,645천달러로 전년동기 185,430천달러 대비 10.1%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41.4%를 차지
- 반입은 2,694천달러로 전년동기 1,856천달러 대비 45.1% 증가하고, 반출은 163,950천달러로 전년동기 183,573천달러 대비 10.6% 감소

○ 협력사업용 물자교역

- 협력사업용 물자교역은 52,604천달러로 전년동기 69,240천달러 대비 24.0%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13.1%, 비거래성 교역액의 31.6% 점유
- 경수로사업 물자는 33,748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2%, 금강산관광사업 물자는 7,982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0.8%, 기타 협력사업 물자는 10,87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5% 각각 감소

○ 대북지원 물품

-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은 114,041천달러로 전년동기 116,190천달러 대비 1.8% 감소함. 이는 전체교역액의 28.3%, 비거래성 교역액의 68.4% 차지
- 주요 지원품목은 비료·의약품 등 화학공업제품이 60,557천달러, 과일·곡류 등 농산물이 21,449천달러, 내의·의류 등 섬유류 17,579천달러, 기계류·운반용 기계 6,011천달러, 잡제품이 1,080천달러, 의료용 기기 등 전자제품 2,657천달러 등

□ 평가 및 전망

- 남북교역이 다소 감소한 사유는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투자 및 수요 위축, 남북간 운송여건 및 제도적 장치 미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미국의 對 테러전쟁 등 국내외적 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2001년도 남북교역액이 4억3백만 달러에 이르고, 9월 이후 전년 대비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2002년도 교역에서도 전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1.29 韓赤 서영훈 총재,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제의 관련 北赤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
 - * 설을 계기로 제4차 방문단 교환 및 적십자연락관 접촉을 통한 구체적 사항 협의 제의
- 1.30 정세현 통일부장관, “빠른 시일내 남북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침 언급(就任辭)
- 1.30 현대아산, 금강산 면세점 관련 「협력사업 변경신청서」 통일부 제출
- 1.31 정부, 제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및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안 심의·의결

북한 동향

- 1.30 민족화해협의회, 남측 「통일연대·민화협·7대종단·환경운동연합」 단체 대표와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행사 관련 실무접촉 개최 (1.30-2.2) 및 새해맞이 행사의 2.20-21 금강산 개최 합의
- 1.30 「범청학련」 북측 본부 중앙위, 제12차 회의 개최(평양)
- 1.30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범태), 홈페이지 「조선인포뱅크」에 한글판 「아리랑 사이트」 개설 및 서비스 개시
- 1.31 외무성 대변인, 부시 美대통령 「연두교서」 관련 규탄성명 발표
- 2.1 국가품질관리국, 「북·러 2002-2003년 규격제량 및 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조인

- 2.4 사민당 대변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訪美 발언(1.22-28, 북한체제 불변 및 핵개발 대비, 전략적 포용 및 한미공조 강화, 비무장지대 병력 후방배치, 재래식무기 감축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통일 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등) 발언 관련 규탄성명 발표

주변국 동향

- 1.28 미국 래리 그래어 「전쟁포로 및 실종군인 사무처」 대변인, 한국전 실종 미군유해송환 관련 북미협상(1.23, 방콕) 결렬 발표
- 1.29 부시 미대통령, “북한·이란·이라크 등 3국은 테러동맹들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an 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난(年頭教書)
- 1.30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부시 연두교서 관련 “국제관계에서 이같은 용어(惡의 軸)의 사용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부정적 입장 표명(주요 언론회견)
- 1.30 美 CIA, 「세계각국의 대량살상무기와 최신 재래식무기 기술획득에 대한 對의회 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공개
- 2.4 독일 도리스 헤르트람프 駐북한 대사, 북한 큰물피해대책위 이용석 副위원장 등과 2차분 쇠고기 6,000톤(인도적 지원물자) 인도인수증 교환(남포항)

* 독일 정부는 2001.11.13 1차분 쇠고기 6,000톤을 북한에 既전달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3호>

2002.2.6~2.23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韓·美 정상회담 개최
-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북한, 부시 美대통령 「동북아 3국 巡訪」 관련 담화 발표

III. 기 타 동 향

- 김정일 위원장 「60회 생일 행사」 동향
- 정부, 평화자동차에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
-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담」 선전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김대중 대통령은 2.6 재외공관장회의(청와대)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관계이며, 이는 대북 안보차원만이 아니라 통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반도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2.18 남북기본합의서 발효('92.2.19) 10주년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음과 특히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현 정부가 실천해 가고 있음을 지적
 - 이와 함께 ▲금년은 무엇보다도 남북간 평화유지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과 ▲앞으로 북측과 새로운 합의보다는 기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에 주력할 것임과 ▲특히 경의선 복원, 이산가족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실천과제」 실현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

◀ 북 한 동 향 ▶

- 2.22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대통령의 동북아 3국 방문(2.17-22) 및 북미대화 재개 용의 표명과 관련하여 “미국이 우리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침공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제창하고 있는 그런 대화(북미대화)는 필요없다”고 주장
 - * 박길연 駐UN 북한대사는 2.7 「AP통신 회견」을 통해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속개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과 ▲북미대화 및 적대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음을 강조
- 2.11/2.13/2.15 노동신문 논평(그 어떤 압력도 통할 수 없다 / 위험한 군사적 공모결탁 / 상대가 누구인가 똑바로 보라), 2.15 평방(부시는 남조선 행각에서 무엇을 노리는가)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부시의 연두교서 발언을 집중 비난하면서도 ▲연방제 통일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
 - * 특히, 최근(2.1 부시대통령 요르단 국왕 면담, 2.16 부시대통령 한·중·일 3국 순방 언론회견 등) 미측의 ‘북한의 전진배치 재래식 군사력 후방재배치 언급’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국제민주단체 평양함동회의」(2.17, 양각도호텔) 개최, 2.13 박길연 駐UN대사의 「UN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집중 홍보

- 김정일 위원장 60회 생일(2.16) 관련 21세기 태양맞이 모임(2.13 백두산 밀영, 양형섭·문재철 등 참석), 경축중앙보고대회(2.15, 김영남 보고) 등 각종 대내외 축하집회·예술공연·체육행사·토론회·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충성결의대회」 등을 통해 내부체제 기반을 강화

* 이와관련, 2.16 노동신문 사설(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先軍領導에 따라 強盛大國 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2.17 중방 「정론」(천만년 빛나라 先軍時代여)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김정일의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 실현을 집중 강조

◀ 주변국 동향 ▶

- 미국 부시 대통령은 2.17-22 동북아 3국(일본 2.17-19, 한국 2.19-21, 중국 2.21-22)을 순방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對테러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

* 부시 대통령은 방한시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동반자관계」로의 발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수출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과 이를 억제키 위한 「법세계적 노력의 필요성」 및 對話를 통한 문제 해결 ▲조건 없는 북미대화 재개 제의(2001.6)의 유효함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대화의 조속 재개」 등을 강조

- 러시아 「원동 연방구 대통령전권대표」 콘스탄틴 보리포비치 풀리콥스키는 2.11-12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2.13, 중방)

- 일본 외무성은 2.12 북한 억류 신문기자 「스기시마 다카시」(1999.12 간첩혐의로 억류)의 일본 송환(2.12) 사실을 발표

* 2.13 후쿠다 관방장관은 “동 사안이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로 연결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 것이며, 납치의혹문제도 이같은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언급

II. 주 요 동 향

1. 韓·美 정상회담 개최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美대통령은 2.20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對테러 협력,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그리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및 동북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 주 요 내 용(청와대 박선숙 대변인 공식발표)

① 韓·美 동맹관계

- 김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가 우리 외교와 안보의 기반이며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맹방임을 강조함.
- 부시 대통령은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며, 한미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기대했음.

② 韓·美 對테러 협력

- 김 대통령은 대테러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대테러 조치에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함.
-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 이후 대테러 전쟁의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힘.

③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문제

- 김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 해결을 위해 6.15 남북정상 회담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설명, 이러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이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함.
-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수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④ 北·美 대화 재개

- 김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서방국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등 변화와 개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대화 의지가 북측에 충분히 전달되어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 되기를 기대함.
-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며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이 이러한 대화제의를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함.

⑤ 대북포용정책 평가

- 김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설명 하였으며 우리 국민들도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히고 김 대통령의 그와 같은 노력은 고귀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언급함

□ 참 고 사 항(공동 기자회견)

① 김대중 대통령 冒頭發言

- 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대테러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가능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임.
- 부시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함.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간에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② 부시 대통령 冒頭發言

-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그리고 북한이 아직까지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실망했음.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높이 치하 드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북한쪽이 하루빨리 답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제기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북한측에 이러한 대화제의를 했으나 여기에 대해 아직 대답이 없는 상태임.

-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는 그런 정권, 또 투명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정권, 그리고 이러한 정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정권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한 것이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음.

2.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개 요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92.2.19) 10주년 기념행사가 2.18 강영훈 전 총리를 비롯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최된 분야별 회담수석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 월드컵,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금년은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평화유지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 정부는 새로운 합의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경의선 복원·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 개발·이산가족문제 해결·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실천과제 실현에 역점을 둘 것임을 설명

□ 주 요 내 용(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경과 및 의의)

① 추진경과

- 강영훈 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88.12.28)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개최 합의('89.1.16)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제8차 예비회담, '90.7.26)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명칭 합의(제4차 회담, '91.10.24)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서명(제5차 회담, '91.12.13)
 - * 정원식 국무총리(남)·연형묵 정무원 총리(북) 서명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제6차 회담, '92.2.19)

② 남북기본합의서의 意義

-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공존공영을 열어나갈 것을 약속한 민족의 장전
 -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
- 남북기본합의서는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 없이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채택·발효된 최초의 공식적 합의라는 점에 의의가 큼.
 - 타의에 의해 강요된 분단사를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청산해 나간다는 민족 주체적 노력의 결실
 -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 있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합의하였다는 점에 의의
- 기본합의서는 단계적 통일과정과 점진적 접근방법에 대한 약속을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우리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통일개념과 과정이 대폭 반영
 - 남북이 당장에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 상대방 체제의 상호 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의 기반위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아갈 것을 합의

③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역대 정부는 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입장의 일관성을 견지
- 국민의 정부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를 추진
-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기본합의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6.15 남북공동선언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실천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하여 채택
 -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군사, 경제, 적십자 등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어 화해·협력의 조치들을 추진 중
- 따라서 현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실천해 나가는 단계로 평가 가능

3. 북한, 부시 美대통령 「동북아 3국 巡訪」 관련 담화 발표

□ 개 요

- 외무성 대변인은 2.22 부시 美대통령의 동북아 3국 순방 (2.17-22) 및 「북미대화 재개 용의 표명」과 관련, “우리 체제에 대한 부시의 발언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모독으로 대화부정선언이나 같으며, 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화(북미대화)는 필요 없다”고 주장

□ 주 요 내 용

-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말한 것이 그 어떤 무기 문제나 테러와의 연관성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 우리 최고수뇌부와 우리 제도에 대한 부시의 체질적인 거부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음.
-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함부로 건드리고 우리 제도를 헐뜯은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음. 더욱이 부시의 이번 망동에는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인민대중을 갈라 놓아 보려는 타산이 엿 보이고 있음.
- 우리의 제도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임.
- 우리 체제에 대한 부시의 망발은 그 체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와의 대화 부정선언이나 같음.
- 대량살육무기요 기아요 하는 문제들도 다름 아닌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며 반세기 이상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해 온 결과로 산생된 문제들임.

-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 보려는 부시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우리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침공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제창하고 있는 그런 대화는 필요 없음.
-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하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자들은 바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고귀한 인민적 제도를 힘과 강권으로 어찌 해 보려는 자들임.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울타리 안에 끌어 넣으려는 자들과는 우리식 대로 끝까지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

Ⅲ. 기 타 동 향

1. 김정일 위원장 「60회 생일 행사」 동향

□ 개 요

-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60회 생일(2.16)을 맞아 경축중앙보고대회(2.15) 등 각종 대내외 축하집회, 예술공연, 체육행사, 토론회·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 김정일의 업적과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충성결의대회 등을 통해 내부체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

□ 주 요 내 용

① 대내 행사

- 행사규모면에서 작년동기 대비 대폭증가(61건→90건) 하였으며 형식도 다양하게 개최
 - 영화·예술공연(20건), 체육행사(9건), 답사행군(9건) 집회·토론회(26건), 전시회(18건), 기타행사(8건) 등 개최
- 행사내용면에서는 김정일의 위대성 찬양 및 충성심 고취에 초점
 - 조선작가동맹 소속 문인들을 내세워 김정일의 강성대국·선군 정치의 영도 및 불멸의 업적, 품모 등을 찬양하는 창작시를 발표

- 2.13 「백두산 밀영」에서 진행된 「21세기 태양맞이모임」 개막식에서 이른바 “백두선언”을 채택
 - * 매년 2월부터 4월까지를 「21세기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 주기로 「백두산밀영」(태양의 성지) 방문 정례화
- 또한 군·정권기관 고위간부들의 충성결의대회 및 축포발사, 농근맹·직맹·청년학생들의 김정일의 위대성·업적 발표 모임과 충성 맹세모임 등 진행

연도별 행사 건수

연도	'97	'98	'99	'00	'01	'02
건수	50건	48건	50건	61건	61건	90건

② 해외 행사

-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경축분위기를 해외로부터 대대적으로 조성키 위해 이미 1년 전부터 해외친북단체들로 구성된 「생일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
 - 경축집회, 토론회, 사진·영화감상회, 도서출판 등을 개최
 - * 현재까지 타지키스탄·베냉·폴란드(2001.2.16 결성)등 58개국에서 결성(작년 47개국)

연도별 경축준비위 결성 국가수

연도	'97	'98	'99	'00	'01	'02
참가국	40개국	35개국	39개국	41개국	47개국	58개국

□ 평 가

- 금년 김정일 생일행사는 김일성 90회 생일(4.15)·군창건 70돌(4.25)등과 겹치는 것을 계기로 형식과 규모면에서 예년에 비해 다양하고 대규모로 개최
 - 「평양미술축전」 및 「제13차 청소년충성축전」 등은 2월 초순부터 4월 하순(김일성 생일)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 「평양미술축전」에 남한미술가도 초청(1.29, 중방)하는 등 종전과 형식을 달리한 것이 특징
- 또한 「백두산밀영」을 무대로 김정일 위대성 칭송 및 충성결의대회·맹세모임 등 다양하게 개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김정일 업적 부각 및 체제결속에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
 - 세계 40여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한 「21세기 태양맞이모임」 및 군부·정권기관 고위간부들·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과 충성결의대회 등

2. 정부, 평화자동차에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

□ 개 요

- 통일부는 2.20 북한에 자동차 전시장 및 주유소 설치·운영을 위해 평화자동차가 제출한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 주 요 내 용

① 목 적 및 금 액

- 금번 정부의 평화자동차에 대한 투자금액 추가 승인조치는 同社의 평양·남포지역에 대한 자동차 전시장 및 주유소 설치·운영을 위한 조치
- 총 승인금액은 이중 자동차 전시장 설치·운영에 100만 달러 주유소 설치·운영에 33만 달러 등 총 133만 달러
 - 이로써 평화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협력사업 관련 총 투자 승인 규모액은 5,403만 달러에서 5,536만 달러로 증액

② 설 치 지 역 및 운 영 방 식

- 설치지역은 평양시 중구지역 1,500㎡(자동차 전시장), 평양시 2개지역 각 1,000㎡ 및 남포시 1개지역 1,000㎡(주유소) 등임.
- 자동차 전시장은 북한상주 외국기업체 및 북한관공서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전시 장소용으로, 평양시 등 3곳에 설치·운영되는 주유소는 유류공급 시설용으로 운영됨.

□ 평 가

- 금번 평화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은 기존 1·2단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차원의 조치
- 향후 평화자동차는 2002. 3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2006년까지 15,000여대를 생산·판매할 계획

3.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선전

□ 개 요

-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2.1자)을 통해 지난 해 8월 광복절을 기해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건립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 대한 의미를 선전

□ 주 요 내 용

- 기념탑의 무게는 7천t이며, 높이는 30m, 너비 61.5m, 4개 석실의 돌문 무게는 각각 3t
- 기념탑의 무게 7,000t은 7천만 겨례를 상징하며, 이 기념탑의 무게에는 조국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주장
- 기념탑의 높이를 30m로 한 것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틀어 쥐고 나가려는 겨례의 지향이 하늘을 찌를 듯 높다”는 뜻
 - *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7.4 남북공동성명)과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93.4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80.10 제6차 노동당대회) 등 세 가지를 지칭
- 기념탑의 너비가 61.5m로 제작된 것은 2000년 6월의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을 기념
- 판석이 전시된 석실의 돌문무게 3t은 남북한과 해외의 「3자 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통일은 남과 북, 해외의 3자가 힘을 합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전

IV. 분야별 일지

국내 등향

- 2. 6 정부,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민간단체 참여 허용 결정
- 2. 8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여관·온천장(462억원) 인수
- 2. 9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2.19-21 금강산) 남측준비위원회, 북측 「민화협」에 행사연기 제의
- 2.12 정세현 통일부장관,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촉구
 - * 망향정모제(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 망배단)
- 2.18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
- 2.20 한·미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부시 대통령) 개최
- 2.20 정부,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를 위한 현대아산의 「남북협력사업 변경 신청」 승인
- 2.21 한·미 정상회담 후속 실무협의회 개최
 - * 김성환 북미국장(韓), 잭 프리처드 국무부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美) 참석

북한 등향

- 2. 7 박길연 駐UN 북한대사,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북미대화 재개」 용의 표명(AP통신 회견)
- 2. 9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의장단 회의, 6.15 공동선언 지지 및 주한미군 철수 서명운동 관련, 각 국 정부·정당·단체·국제기구 앞 호소문 채택
 - * 동 단체는 북한이 유럽·아프리카·아시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 群小政黨과 社會團體를 모아 결성한 대표적인 해외 친북단체
- 2.10 김정일, 駐북한 신임 중국대사(武東和) 접견

- 2.12 북한 억류 日本經濟新聞 기자(스기시마 다카시) 일본 송환
 - * 스기시마 다카시는 1999. 12 간첩혐의로 구금
- 2.13 박길연 駐UN 북한대사,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UN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 2.15 「김정일 60회 생일(2.16)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 문화회관)
 - * 김영남(보고)·조명록(축하문)·정하철(개회사)·허종만(연설) 등 참가. 김정일에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의 공동축하문 전달
- 2.17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양각도호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 주한미군철수 공동투쟁 등 「3개항 결의」 및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편지」 채택
 - * 3개항 결의문 : ①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 추진, ②6.15 공동선언 말살기도 분열주의세력에 대한 국제적 압력 강화 ③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위협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
- 2.20 「범민련」 임시 의장단회의 개최
 - * 북·남·해외에서 模寫(FAX)로 진행, 「2002년 운동방향 및 공동결의문」 채택
- 2.21 평양방송, 남북한 최고위급대화 등 남북대화 필요성 강조
 - “북남최고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어야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음.”
- 2.22 외무성 대변인, 부시 美대통령 「동북아 3국 순방」 관련 담화 발표

주변국 동향

- 2. 5 파월 美 국무장관, 북한의 미사일개발 중단시 대화 용의 표명(上院 외교위원회 보고)
 -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修辭가 아니며, 테러행동과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을 것임.”
- 2. 6 조지 테넷 美 CIA국장, 북한의 미사일 수출 계속 주장(上院 정보위원회 보고)

- 2.11 러시아 「원동 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 콘스탄틴 보리포비치 폴리콥스키, 김정일 면담
 - *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지재룡, 김계관 등 배석
 - *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지재룡 등 배석(2.12, 2차 면담)
- 2.12 파월 美 국무장관, “북한과의 전쟁가능성 배제” 발언(上院 예산위원회 보고)
 - “북한과 이란은 이라크와 다소 다른 범주에 속하며 이들과 전쟁을 시작할 계획이 없음.”
- 2.13 美 議員 3명(공화당 크리스토퍼 콕스 下院 정책위원장, 민주당 벤자민 길먼 의원,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 대북경수로 건설 취소 요구(주요 언론회견)
 - “2.5 경수로 건설 지원 약속의 재고를 촉구하는 帑翰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음. 대량살상무기가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정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핵기술 수출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를 부과해야 할 것임.”
- 2.13 콜린 파월 美 국무장관, 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 경고(하원 세출소위원회 공청회 보고)
 - “(북한의 과거 핵 규명문제와 관련) 투명성과 사찰면에서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며, 경수로 건설에 따른 북한측 의무사항인 핵사찰을 북한이 거부한다면 경수로 건설계획 전체를 중단할 수 있음.”
- 2.14 피터 브룩스 美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副차관보, 북한의 通常 戰力 증강시 주한미군 병력 구성 재검토 언급(日本經濟新聞 회견)
 -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군사력을 증강·현대화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병력의 구성 및 투입무기를 수시로 재검토 할 것임.”
- 2.14 콘돌리자 라이스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 不願” 언급(부시 대통령 「동북아 3국 순방」 관련 배경설명)

- “우리는 북한에 대한 수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원하나 평양당국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임. 특히 북한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관련기술을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체제를 정확히 비밀스럽고 압제적인 체제라고 칭하는데 全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없음.”
- 2.15 WFP, 2002 긴급구호활동 보고서 제6호(WFP Emergency Report No. 07 of 2002) 발표 및 세계각국의 대북 식량지원 참여 촉구
- 2.16 부시 美대통령, 대북포용정책 전폭지지 및 WMD 보유국에 대한 상응조치 강조(「동북아 3국 순방」 관련 KBS 회견)
 -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김대통령의 확고한 統一觀에도 동의하나 幻想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大量殺傷武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2.16 부시 美대통령, 동북아 3국 순방(일본 2.17-19, 한국 2.19-21, 중국 2.21-22) 발표
 - * 언론회견시 「북한의 재래식무기 후방 재배치」(“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을 후퇴시키는 것이 북·미간 대화에 도움이 될 것임.”) 지적
- 2.19 부시 美대통령, 「악의 축 국가에 모든 수단 강구」 再確認(미·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 공동언론회견)
 -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 그들은 오만하지 말아야 함.”
- 2.21 부시 美대통령, 대북대화 재개 관련 중국 지원 요청(미·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 공동언론회견)
 - “북한 정권과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江澤民主석에게 지원을 요청했음.”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4호>

2002.2.24~3.4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북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개최 拒否
- 부시 美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以後 북한 반응

III. 기 타 동 향

- 통일부,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수송계획 발표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 국방부,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한 韓·美 공동연구 결과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정부는 2.25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 공동모임」(2.26-28, 금강산) 행사관련, 남측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신청한 북한방문을 승인키로 결정
 - * 「대북 민간교류 승인 기준」에 따라, 민화협·7대종단·통일연대 등 총 377명의 방북승인 신청자 중 「대표 100명, 참관단·기자단 202명」 등 총 302명에 대해 방북 승인(신청철회 29명, 불허 46명)
- 통일부 대변인은 2.28 정부의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옥수수 10만톤) 관련, 향후 수송일정 및 2.28 제1항차 수송선박의 출항 사실(중국 진황도항 ⇒ 북한 남포항)을 발표
- 국방부 대변인은 2.27 국방부와 UN군사령부·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연구해 온 「초보적인 남북간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2.26 국방부장관에게 公式報告했음을 발표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민간행사와 관련하여 「통일연대」 대표단의 불참을 이유로 행사개최를 거부하고, 2.27 북측대표단 명의 성명을 통해 무산책임이 “美國과 한나라당 등 남조선 極右保守勢力에 있으며 (통일연대 등 일부 통일운동단체의 방북을 불허한) 統一部에도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전가
- 2.26 노동신문 사설(라남의 결사관철 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등을 통해 先軍政治 및 强盛大國 건설을 위한 모든 부문에서의 투쟁을 강조
 - 2.27/2.28 노동신문 논평(우리는 미제와 결판을 내고야 말 것이다 / 전쟁 미치광이들의 광증), 3.1 평방보도(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압살책동) 등을 통해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대결·전쟁·반평화·반통일 행각」으로 규정하면서 ▲對美 대화 불필요성 및 강경대응 방침을 지속 강조

- 한편, 2.26 평방보도(민족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담보) 등을 통해서 “미국의 반통일 책동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계속함과 동시에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자주통일 실현” 등 「민족자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既存論調 지속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28-3.5 태국과 말레이시아(태국 2.28-3.1, 말레이시아 3.1-3.5)를 巡訪,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2.26-3.6 러시아와 이태리 등을 순방하고 「우호협력증진 방안」 등을 협의
- * 김영남의 동남아 2개국 순방에는 백남순(외무상), 이광근(무역상), 이광호(과학원장) 문재철(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등이 수행

◀ 주변국 동향 ▶

- 美 국무부는 3.4 「年例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남북한 등 각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
 - * 동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을 「열악한 상대」로 규정 ▲주민들의 평화적 정권교체 권리 不在 ▲식량의 자급자족 곤란 등을 지적하고 ▲북한을 미얀마·중국·이란·이라크·수단 등과 「종교탄압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목
- 한·미·일 3국 外務·國防當局은 2.28-3.1 샌디에고에서 「3국 정책기획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북정책 공조문제」를 협의
- EU 인권문제협의회(COHOM)는 2.28 “향후 「UN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결의문 채택문제”를 협의(브뤼셀, EU본부)
- 韓·美 양국(한미연합사)은 2.28 「ROSI/FE'02연습」을 한국에서 3.21-27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
 - * 「ROSI/FE'02연습」은 ▲한미연합사가 '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수용·대기·통합연습인 ROSI'02연습(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해외기지로부터 증원되는 미군 수용 지휘능력에 대한 훈련 및 평가)과 ▲한미 양국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對침투훈련(야외기동훈련)인 Foal Eagle연습(독수리연습)을 지칭

II. 주 요 동 향

1. 북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개최 拒否

□ 개 요

- 북한은 2.27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북측대표단」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의 무산책임은 미국의 파괴음모 책동과 한나라당 등 남조선 극우세력에게 있으며, 이들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統一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 북측이 무산시킨 책임을 美國과 우리측 當局에 전가

* 북측은 동 행사에 「통일연대 대표단」의 不參을 이유로 개최를 拒否

□ 주 요 내 용

-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는 남조선의 극우 보수세력들의 책동에 의하여 행사를 하루 앞둔 시각에 행사발기 단체인 통일연대 대표들의 행사 참가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전면 불허 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 전국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전농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 90여명이 이번 금강산 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동모임이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음.
-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임.
- 지금까지 북남 통일행사 때 남측의 몇몇 인사들의 참가가 불허된 사실들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남조선의 모든 통일운동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막아 나선 예는 일찍이 없었음.

-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의 계획적인 파괴음모 책동에 기인하고 있음.
- 미국은 6.15 북남공동선언 자체를 무시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통일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이번에 부시의 남조선 행각 직후에 서울에 이어서 금강산에서까지 反부시, 反美목소리가 나올 것이 두려워 남조선의 극우 보수세력들을 부추겨 통일운동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행사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불순한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음.
-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남조선의 「통일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함.
- 북남 대결을 조장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엄중해지고 있으나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절대로 꺾을 수 없음.
- 이번에 금강산 통일행사는 비록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남조선의 민화협과 7대 종단이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함.

□ 참 고 사 항(북한의 霧散措置에 대한 정부입장)

- 정부는 우리측 대표단 216명이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목적으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강산 현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북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를 무산시킨 이유가 우리 정부가 통일연대 대표단의 방북을 전면 불허한데 있으며, 이는 미국의 계획적인 책동과 이에 추종하는 국내 보수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방북승인을 심사하면서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 측면과 이번 행사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8.15 행사 이후 개선된 「대북 민간교류 승인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음.
 - 그 결과 통일연대 소속 60명을 포함한 302명에 대해 방북을 승인하였으며, 승인된 통일연대 인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임.
- 정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7대종단과 민화협 등 우리측 대표단이 성숙한 자세로 남북관계 측면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대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과 함께
 - 북한도 남북간 합의된 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일이 다시 없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함.

2. 부시 美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以後 북한 반응

□ 개 요

-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의 하나로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은 4가지 범주로 大別
 - 첫째, 강력한 반발과 함께 강경대응 의지 표명
 - 둘째, 「악의 축」 지칭 관련 논리적 반박 제시
 - 셋째, 테러 및 WMD 관련 결백 주장 및 대미 역공세 전개
 - 넷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용의 시사

□ 주 요 내 용(북한의 구체적 반응 내용)

① 강력 반발·대응

-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해 ‘사실상의 선전포고’(1.31 외무성 대변인 성명) 라고 규정
 -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 호언(2.1 중앙통신)
 - “미제가 제2 조선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다”(2.11 노동신문 논평)

② 「악의 축」論에 대한 논리적 반박

- 북한은 「악의 축」論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적 반박을 시도 (2.14 노동신문, 2.18 평방)
 - 「악의 축」論은 이론적 근거와 자료적 증거도 없는 독설로 부시가 우리를 악으로 규정한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황당 무제한 궤변임.
 - 조선과 이라크, 이란은 어떤 동맹적 성격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이념상으로도 제도상으로도 상이한 국가들인 바, 축을 구성하고 있지 않음.
 - 부시의 논리는 군비 확장정책을 강행하고 합리화하며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는 방편일 뿐임.

③ 테러 및 WMD 관련 결백 주장

- 우리는 테러를 반대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백히 밝혔고 반테러 협약들에도 서명·가입하였음.(2.4 중방)
-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정책이 평화애호적인 이념으로부터 추구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조·미 기본합의문 이후 일체의 핵 활동이 없었고 미사일 시험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하고 있음.(2.11 중방)
- 미제는 우리의 미사일 때문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미사일 문제요 핵문제요 하는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 있는 것임.(2.15 중방)

④ 對話 용의 시사

-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 없는 입장임.(2.2 중방)
- 미국이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제조건없이 대화를 속개할 의향이 있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2.7 박길연 駐 UN 북한대표부 대사 AP통신 회견)
- 부시팀은 클린턴 정권시기 우리와 한 모든 합의와 대화를 하늘로 날려보냈음.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설사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승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2.14 노동신문)

Ⅲ. 기 타 동 향

1. 통일부,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수송계획 발표

□ 개 요

- 통일부 대변인은 2.28 우리 정부의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 10만톤 지원관련, 향후 수송일정 및 제1항차 수송선박의 출항(2.28 중국 진황도항⇒ 3.1 북한 남포항) 사실을 발표

□ 주 요 내 용

-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키로 한 옥수수 10만톤 중 1차 선적분 23,500톤이 2.28 中國 하북성 진황도항을 출발하여 3.1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임.
- 지원될 옥수수는 총 10만톤으로 금번 1차 선적분을 시작으로 총 5항차에 걸쳐 북한의 남포항, 청진항, 홍남항 등을 통해 WFP측에 수송·전달되며, 4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임.
- 이번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WFP 등 UN 원조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
- 최근 訪韓했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대화를 하건 안 하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음.

- * 미국은 既 발표한 10만 5천톤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98부터 올해 까지 정부차원에서 총 154만톤(약 5억 3,000만불) 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 일본도 같은 기간 중 총 60만톤(약 2억불) 규모의 식량을 지원
- * 이번 옥수수 10만톤을 포함할 경우, '98년 이후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약 2억 700만불 상당을 지원
- 북한은 금년에도 100~15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WFP는 최근 긴급구호보고서(2.15)를 통해 2월 현재 올해 대북 식량지원 목표량 61만톤 중 25%만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음.
-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옥수수 10만톤이 春窮期에 전달되어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덜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 개 요

- 통일부는 3.4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01.10.31)과 관련 ▲수시방북신고서 신설 등에 따른 사항 등과 ▲방북안내교육 ▲남북교역 관련사항 등을 보완한 「남북교류협력 시행규칙」을 개정·시행

* 이는 현재 운용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집행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 주 요 내 용

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 수시방문증명서 신설에 따른 보완
 - 방문신청서 서식에 방문계획을 추가하고, 「수시방문신청」의 경우 방문사유를 소명토록 조치
 - 수시방북신청의 경우 시행령 제12조2항에서 북한방문신고를 하도록 규정, 이에 따른 서식을 규정
- 결과보고 서식과 관련, 종전에는 우발접촉의 경우만을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식을 추가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및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서식 신설

② 북한방문안내교육

- 북한방문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요청
- 방북자의 편의와 수시방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문 목적·방문기간 및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남북교역 관련사항

- 교류협력법 제15조제2항은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서식 등이 미비
 - 이에 따라 교역보고서 서식을 신설하여 법령 근거를 명확화
- 종전 시행규칙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관련서식은 운용중인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삭제
 - 현재까지는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에서 6개 서식으로 세분화하여 운용
 - * 선박 및 기타 수송장비운행신청서, 변경신청서, 선박 정기·부정기 운행승인서 등을 삭제하고 서식을 단일화

3. 국방부,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한 韓·美 공동연구 결과 발표

□ 개 요

- 국방부 대변인은 2.27 한미 양국 軍事當局間에 2001.6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에 대한 「공동연구팀」을 구성, 그간의 연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公式 보고했음을 발표

*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한반도 긴장완화 4단계 조치」인 ▲1단계 초보적 군사신뢰조치 ▲2단계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감소 기반조성 ▲검증 가능한 군축 토의 ▲한반도 평화체제 제도화 中 제1단계 조치를 의미

□ 주 요 내 용(국방부 대변인 발표내용)

- 국방부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그 연구결과를 2.26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음.
- 국방부 군비통제관과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책임하에 연구를 추진하여 온 공동연구팀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추진함에 있어
 - 한국의 안보와 정전협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또한 한·미 양측은 북한과의 초보적인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공동연구팀은 분야별로 다양한 신뢰구축조치들을 개발하고 그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였음.

- 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의 증진 조치
 - ② 군사분야의 교류 및 접촉 확대 관련사항
 - ③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조치
 - ④ 정전체제 준수에 관한 문제
 - ⑤ 우발적 충돌 및 오해방지 조치 등
- 공동연구팀은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남북 쌍방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북한측에게 전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과 ▲초보적 조치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음.
 - 공동연구팀은 금번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한 정책건의를 토대로 향후 한반도에서의 실질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 연구해 나갈 것임.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2.25 정세현 통일부장관, 「도라산역 관광명소 개발 방침」 언급(統一分野 黨政協議)
- 2.25 정부,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관련 남측대표단 방북승인
- 2.27 국방부,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CBM)」 공동연구 추진 발표
- 2.28 통일부,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옥수수 10만톤) 수송계획 발표
- 2.28 한미연합사령부, 「ROSI/FE'02연습」 실시(3.21-27) 발표
- 3. 1 정세현 통일부장관, “북한의 요청시 인도적 차원의 비료지원 가능” 언급(KBS 제1라디오 인터뷰)
- 3. 2 통일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2차 대출금 집행
 - * 관광공사가 2.27 금강산관광사업 시설 및 사업권 인수자금으로 신청한 62억원
- 3. 4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시행규칙」 개정·시행

북한 동향

- 2.25 중앙통신, 팔만대장경(전17권) 번역 및 출판 보도
- 2.26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러시아·이태리 등 순방(2.26-3.6)
- 2.27 김정일 위원장, 조총련 책임부의장(허종만) 면담
- 2.27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북측대표단, 행사무산 관련 성명
- 2.27 국가관광총국 訪日대표단(단장 : 황봉혁 국가관광총국 처장), 도쿄 始發 「아리랑 축전」 설명회 시작
- 2.2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태국·말레이시아 순방(태국 2.28-3.1, 말레이시아 3.1-3.5)

- 3. 3 조평통 대변인,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무산관련 담화

주변국 동향

- 2.26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불고려” 언급(정례브리핑)
- 2.27 마웅윈 미얀마 외교부차관, 「대북 수교재개 검토」 언급(태국언론회견)
- 2.28 韓美연합사령부, 「ROSI/FE'02연습」 실시(3.21-27) 발표
- 2.28 EU 인권문제협의회(COHOM), UN 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결의문 채택문제 협의(브뤼셀, EU본부)
- 2.28 한·미·일(外交·軍事當局), 「3국 정책기획협의회」 개최(미국 샌디에고)
- 3. 4 美 국무부, 「年例 인권보고서」 발표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5호>

2002.3.4~3.11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북한, 북미대화 거부입장 재확인 및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III. 기 타 동 향

- EU, 「대북 기술지원 전략보고서」 채택
- 美 국무부, 「2001년도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3.8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를 통해 「금강산관광 경비보조방침」과 관련하여, 이산가족·학생·교사를 비롯하여 독립 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3월말 시행할 예정임을 언급
 - *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섬과 외딴 지역 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동반, 소규모 현장 학습 등의 방식으로 기존 수학여행과는 差別化하여 추진할 계획
- 통일부는 3.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에 대해 대북 경수로 건설 관련 「핵안전 및 규제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승인
 - * 사업대상자는 북한 국가핵안전감독위원회(State Nuclear Safety Regulatory Commission), 사업기간은 경수로 2호기 인도증 발급 후 12개월 까지며,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경수로 안전성 심사·품질보증검사·사용전 검사와 북한 규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북한 원자력안전체제구축지원의 보다 적극적 추진이 가능
- 韓赤 서영훈 총재는 3.6 北赤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2002년도 제2차 대북지원물자 전달계획(南北赤間 제3차 지원의 추가지원물자로, 한적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모집한 의류·학용품 등 6억2,000만원 상당의 「우정의 선물」)을 북측에 통보

◀ 북 한 동 향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소집(3.27)에 대한 정령」과 「최고인민회의 소집 및 대의원 등록(3.25-26, 만수대의사당)에 대한 공시」를 발표
- 3.6 외무성대변인 KCNA 회견, 3.7 평방 및 3.8 중방보도(인권지옥에서 흘러 나오는 인권타령 / 미국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나라) 등을 통해, 美 국무성의 「2001년도 연례 인권보고서」(3.4)에 대해 “미국이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려는 책동”이라며 강력히 비난
- 3.5 KCNA 논평(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을 통해서, 파월 美 국무장관의 「북미대화 및 협상의 지속 추진」 발언(2.5)과 관련, 북한의 북미대화 거부입장(부시 대통령 동북아 3국 순방관련 2.22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 “결코 벼랑끝 전술도 아니며 대화를 위한 전주곡도 아님”을 강조하고

- 미국의 對話論은 ▲소위 채적론의 위장물이며 북한에 대한 「트로이목마 전술」에 불과함과 ▲북한이 “미국과 한번은 결판을 보아야 하는 것만큼 만단의 전투준비를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 ▲對美 대화 불필요성 및 강경대응 방침을 再確認
- 또한, 3.5 KCNA 논평(조미기본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를 통해서, 최근 美 下院 일부 의원들의 제네바 핵합의 전면재검토 및 대북 경수로 건설 중지 주장과 관련하여
 - 미국의 ▲“일방적·적대적인 태도와 입장으로 인해 제네바합의문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고 있다”며 ▲“미국이 합의문을 전면백지화 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식 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임”을 강조,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를 위협
 - * 2.13 美 下院 議員 3명(공화당 크리스토퍼 록스 下院 정책위원장, 민주당 벤자민 길먼 의원,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경수로 건설 지원 약속의 재고를 촉구하는 書翰을 부시대통령에게 전달, 同日 靑瓦 閣무장관은 「하원 세출소위원회 공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핵사찰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 계획의 전면중단 가능성을 언급

◀ 주변국 동향 ▶

- 허바드 駐韓 美 대사는 3.8 “북한은 부시대통령의 대화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하며, 공은 이미 북측에 넘어갔으며,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한국무역대리점협회 간담회)
- 토마스 슈워츠 駐韓 미군사령관은 현재까지 ▲북한의 테러가담 증거不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履行, 로켓엔진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시험 등 미사일 개발 持續 및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의 강력한 외교·정치적 수단으로의 活用 ▲핵개발 중지 확인 및 2개 핵무기 제조분의 플루토늄 既추출 推定 ▲향후 총41개 주한미군기지의 20개 시설로의 통합·축소 예정사실 등을 보고(3.5 上院 군사위원회 청문회)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4 「대북기술지원 전략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2004년까지 EU의 대북 기술협력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02-2004년간 매년 500만 유로, 총 1,500만 유로(1,300만 달러)의 지원계획을 승인
- 美 국무부는 3.1 議會에 제출한 「2001년도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당국의 마약사업 개입 가능성을 지적·우려를 표명하고 1,000ha 이상의 아편재배 및 對美 파급영향이 확인될 경우 「주요 마약 생산·유통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발표

II. 주 요 동 향

1. 북한, 북미대화 거부입장 재확인 및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 개 요

- 북한은 3.5 KCNA 논평(2건)을 통해 ▲기존 북미대화 거부 입장(부시대통령 동북아 3국 순방관련 2.22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재확인하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
- * 북한은 3.5 「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 및 「조미기본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題下 북미간 현안문제에 대한 2건의 「조선중앙통신(KCNA) 논평」을 발표

□ 주 요 내 용

① 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3.6 Internet 게재)

- 우리는 부시행정부가 이전 행정부 시기 조미사이에 이룩된 합의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대화를 재개해 나가자는 입장임.
-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미 이룩된 조미합의를 존중하기는 커녕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 제도 자체까지 거부하는 망발을 함부로 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서는 부득불 부시행정부와 대화탁자에 마주 앉을 명분도 신뢰감도 없어졌음.
- 우리가 대화를 하자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우리 제도를 존중받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무장을 해제 당하고 제도까지 내놓기 위해서는 아님.

- 특별히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시가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 인민의 운명인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변경까지 강박하려 든 것임.
-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악의 축」론을 내들고 선제타격의 전쟁폭언까지 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고, 다른 편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진의를 간파하기는 어렵지 않음.
- 미국의 대화타령이 북침전쟁 폭음으로 변저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음. 우리는 미국과 한번은 결판을 보아야 하는 것만큼 만단의 전투준비를 취해 나갈 것임.

② 조미기본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3.7 Internet 게재)

- 최근 미국외교당국자와 미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핵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며 경수로건설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미국의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의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고 있음.
-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로 되는 것만은 사실이나, 미국이 그것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빈 종이장을 놓고 그 의의만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임.

※ 북한은 과거 이와 유사한 논조의 보도를 통해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핵활동 재개를 경고한 사례」가 있음.(① 2000.7.1 외무성대변인 KCNA 회견 ②2001.5.16 KCNA 상보 ③2001.6.5 KCNA 논평 등)

Ⅲ. 기 타 동 향

1. EU, 「대북 기술지원 전략보고서」 채택

□ 개 요

- EU 집행위는 최근 향후 대북기술지원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Report)를 채택하고
 - 향후 ▲2004년까지 EU의 대북 기술협력 및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02-2004년간 매년 500만 유로, 총 1,500만 유로(1,300만 달러)의 지원계획을 승인

□ 주 요 내 용(보고서 요지)

- EU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인권·핵 비확산·남북화해 진전 등에 대한 북한의 대응여하에 따라 기술지원 등 점진적인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중점 지원분야는 국제사회의 적응을 위한 인력연수, 에너지 체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기술자문, 농촌개발, 교통분야 등이며, 특히 외교·통상·재무 분야에 대한 기초연수가 시급
- 기존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지원 등을 지속하면서 실질적인 기술지원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원프로그램 예산 중 연간 500만유로를 할당, 2002-2004년간 총 1,500만 유로(1,300만 \$)를 지원할 계획

□ 평 가

- 이번 EU의 대북기술지원 전략보고서 채택은 향후 대북지원 방향을 종래의 인도적 지원방식에서 에너지 분야·농업기반 재건·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전환할 것임을 의미
- 이는 경제·사회적 개발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제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려는 의도로 평가됨.
- * EU는 KEDO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96-2000년간 총 7,500만유로(매년 1,500만유로)의 KEDO 기여금을 지원한데 이어, 2001-2005년간 총 1만유로(매년 2,000만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시행 중

2. 美 국무부, 「2001년도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 개 요

- 美 국무부는 3.4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하여 총 195개국의 민주주의·인권실태에 대한 인권상황을 발표
 - 남북한 관련 ▲한국의 경우 人權委·女性部 설치, 인신매매 단속 등으로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
- * 美 국무부는 대외원조법 116조 및 502조 B항에 따라 77년 이후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유엔회원국 및 원조국가들의 인권상황을 발표

□ 주 요 내 용(북한 관련사항)

(1) 전반적 평가

- 수십만명에서 2백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국제원조와 제한된 한국의 투자로 인해 2000년도 GNP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1993년 부터 1999년까지는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GNP가 1/2로 감소된 것으로 평가됨.
- 북한 정부의 인권보장상황은 열악하며, 다수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었음.
 - 2001년 중 북한은 EU와 2회에 걸쳐 인권대화를 가졌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음.

-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권리가 없고, 처형과 실종보고가 있었음.
- 시민들의 자의적 구금 및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감옥의 상황은 가혹함.
- 독립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북한 지도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특히 개인의 권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와 당의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분야별 인권침해 실태

가. 인권 존중

① 정치적·非사법적인 사형집행

-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정치범, 정권에 반대하는 자, 송환된 탈북자 및 기타 인사(간첩혐의 또는 김정일에 대한 모반혐의를 가진 軍 간부)를 처형함.
- 형법은 “조국해방 투쟁을 억압하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자와 손잡은” 행위에 대해 사형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처형이 공공장소에서 근로자, 학생 또는 동료 수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짐.
 - 확인되지 않은 일본 및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7. 9 수명의 당 간부가 공개처형됨.

② 납치 (disappearance)

-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범 혐의자들은 안전당국에 의해 밤에 집으로부터 정치범 수감소로 보내짐.
- 또한 한국인, 일본인 및 외국인들의 납치에 과거 북한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 김동식 목사, 일본인 등의 사례
 - '99. 12 북·일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정부는 실종된 일본인문제에 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12. 17 조사를 중단

③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 및 처벌

- 최근의 상황에 관한 정보는 없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기본적 인권에 기초한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하며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수가 사망함.
 - NGO(국경없는 인권)는 정치수용소에서 신생아가 살해되고, 간수들에 의한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 착취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
 - 1998년 폴란드 신부(수용소에 10년간 수감·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 온 여성)의 증언
- 감옥의 상황은 가혹함. NGO에 따르면, 어린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수감된다고 함.

④ 자의적인 체포·구금·강제 국외추방

- 북한정부는 사람을 구금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키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형사제도 및 실제 관례에 관한 정보가 없음.

- 탈북자들은 북한이 15만명 내지 20만명을 정치적 이유로 강제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만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교화소(Education Centers)가 있다고 인정함.
- 북한정부는 주민을 국외로 강제 추방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평양에서 교외로 강제 이주시킴.

⑤ 공정한 재판

- 헌법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든 재판은 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실행되지 않고 있음.
- 헌법에는 모든 법적 절차가 보호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변호할 수 있고, 재판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변호사를 고용·임명하는 것도 정부이며 변호인이 하는 일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도와 주는 일임.
- 정부를 비평하는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과 그림을 훼손하는 사람도 정치범으로 간주됨.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말의 발표를 통해 2002년 1월에 1차로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이는 20여년 만에 처음이며,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면 대상자나 대상범죄는 알려지지 않음.

⑥ 사생활·가정·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 헌법에는 개인과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북한정부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북한정부는 모든 시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가족·친족·친구들과 통화내용을 감시함.
- 시민들은 핵심·동요·적대계층으로 분류되며, 탈북자의 가족들은 적대계층으로 간주되는 바, 통상 적대계층에는 25~30%의 주민들이 포함됨.
 - 지난 9월 수십만명의 주민이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환영을 위해 동원됨.

나.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① 표현 및 언론의 자유

- 헌법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정부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목적을 지지하는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음.
- 헌법조항은 시민들이 「사회주의 생활규범」을 따를 것과 개인의 정치 및 시민적 자유에 앞서 「집단적 정신」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북한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고 있으며 관련당국은 정부 비판자를 「감금 또는 교화노역」으로 처벌할 수 있음.

- 북한정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는 바, 서방기자들의 방문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허용하고 있음.
 - 7월 러시아 통신의 김정일 인터뷰
 - 5월 대규모 외국기자단이 EU 대표단 수행
 - 최근 북한의 식량실태 조사를 위한 외국 기자단 방북 허용
 - 1997년 KEDO 경수로 착공식 취재 차 외국기자단 방북 허용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10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시 철저한 정부감시하에 취재단 방북 허용
 - 2000년 8월 한국 문화관광장관이 이끄는 남한 신문사 및 방송사 대표 46명이 방북(김정일과 면담)
- 외국기자단들이 북한에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까지 이들에 대한 동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
- 정치엘리트를 제외하고 외국 언론·방송청취는 금지 (CNN 방송은 평양소재 외국인 전용 호텔에서 시청가능, 개인적 국제전화 금지)되고 있음.
- 국제NGO와 합동으로 대학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최초의 반사립 교육기관이 될 것임.

②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헌법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공공집회도 금지되고 있음.

③ 종교의 자유

-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정부가 인가하는 단체 이외의 조직적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는 없음.

- 종교인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개신교도 1만명, 불교도 1만명, 카톨릭교도 4천명을 비롯, 지하교인도 있는 것으로 추산됨.

④ 이동의 자유

- 최근에는 주민들의 여행이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대대적 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해외여행은 정부관리·공인예술가·운동선수·학자·종교지도자 등에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이민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중국·홍콩·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국가에 입국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음.
- 탈북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처벌, 중국국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비병들이 총살지령을 받고 있음.
- 중국정부는 수백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중이라고 밝혔으나 또다른 통계에 따르면 수만명으로 추산됨.

다. 정치적 권리

- 여성의 정치참여는 미약한 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20%가 여성인데 반해 노동당 중앙위는 4%에 불과함.

라. 인권침해 주장 관련 NGO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 북한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인권상황에 관해 조사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WFP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접근이 허용되었으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

- 기간 중 EU-북한간 인권대화를 개최하였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음. 북한측은 고문협약 및 인종차별 협약을 제외한 기타 인권협약을 비준하였음을 언급함.

마. 종교 · 성별 · 사회적 지위 · 인종에 근거한 차별

- ① 여성 : 여성노동력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정부의 고위직에 도달한 여성은 적음.
- ② 아동 : 15세 이하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아동들은 충성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집단적 처벌을 받음.
- ③ 장애인 : 평양 시내에서는 장애인을 볼 수 없음.

바. 근로자의 권리

- ① 결사의 자유 : 비정부노조는 존재하지 않음.
- ② 단체협상의 권리 : 단체협상의 자유는 없으며, 정부가 임금을 정함.
- ③ 강제노동금지 : 강제노동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나 북한정부는 공사현장에 주민을 동원함.
- ④ 근로조건 : 국영기업의 최저임금에 관한 정보는 없음.
- ⑤ 인신매매 : 인신매매를 다루는 특정법은 없음. 여성 및 어린이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

□ 평 가

- 동 보고서의 북한관련 평가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주민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정권의 독재성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평가
 - 다만, 북한에 대해 예년과 같이 인권상황을 상세히 열거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최근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 대북 강경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할만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특징
 - 앞으로 UN人權委(3.18~4.26), 美 下院聽聞會(4월),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정책권고(5월말)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인권문제가 계속 부각될 것으로 전망
- ※ 3.4 Carner 國務部 人權次官補는 ▲북한이 이라크·리비아 등과 함께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종교자유침해국」으로 지정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정보부족 등으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3.5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 *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재개 방안 검토
- 3.5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 납북자 8만명 명단 발견 발표
- 3.7 정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 대북경수로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

북한 동향

- 3.6 외무성 대변인, 미 국무부 「2001년도 연례 인권보고서」 관련 대미 비난 중통 기자회견
- 3.6 중앙통신,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 파기 가능성 경고 논평
- 3.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소집 (3.27) 정령 발표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 공시
- 3.8 중방, 두만강驛 「북·러 친선각」 건립 보도
- 3.8 미국,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발사대 관련시설 위성사진 공개

주변국 동향

- 3.4 EU 집행위원회, 「대북 기술지원 전략보고서」 채택
- 3.4 북한 경제시찰단, 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영국 巡訪(3.4-15)
- 3.8 中美統合體制(SICA) 7개 회원국, 대북포용정책 지지 표명
 - * 제4차 韓·中美 대화협의체 회의(3.7-8, 서울)시 공동발표문 채택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6호>

2002.3.12~3.27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남북한, 「特使 북한방문」 同時發表
- 정부, 금강산관광 경비지원방안 議決
- 북한 외무성 대변인, 美 국방성 핵태세 검토(NPR) 관련 담화 발표

III. 기 타 동 향

- UN 인도지원조정국,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내 동향 ▶

- 정부(청와대 대변인)는 3.25 “現 정체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轉機를 마련키 위해 4월 첫째 주 卄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대북 특사파견」 사실을 발표(南北韓 同時發表)
 - *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공동선언 준수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현안에 대한 남북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관련한 사항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해외체류탈북자」 관련 ▲탈북자들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체류국과 협조하여 ▲原則적으로 전원 수용한다는 정부방침을 재확인
- 정부는 3.21 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1.23 발표한 금강산관광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방침의 후속조치로 이산가족·학생·교사 등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안」을 심의·의결
- 이만섭 국회의장은 「모로코 IPI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당국이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에 적극 호응할 것과 ▲남북한 議會 차원의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

◀ 북한 동향 ▶

- 북한은 3.13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LA타임즈紙를 통해 공개된 美국방성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와 관련, “우리는 현 사태에 대처하여 미국과 한 모든 합의를 전면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핵공격계획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그 어떤 조미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 부시행정부를 강력히 비난
- 3.14 조평통 대변인 성명, 3.17 농군맹중양위 성명, 3.18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RSOI/FE '02연습(韓美聯合 戰時增援 및 독수리연습)과 관련하여 ▲주한 미군철수 ▲북미대화 거부입장 및 ▲북미합의 전면재검토 등 對美非難 및 宣傳을 집중 강화
- 3.22 北赤 중앙위 대변인담화를 통해서는 최근 「1983년 일본인 여성 납치 증언」과 관련하여 「북일적십자회담」 개최 용의를 표명하는 한편, 3.18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을 통해서는 최근 美 민간단체의 이산가족 상봉 주선 제의를 거부

◀ 주변국 동향 ▶

- 플라이셔 美 백악관 대변인은 3.20 ▲대북 경수로 부품 제공 및 공사진척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 경수로 건설 前 제네바 합의에 규정한 핵사찰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정례브리핑)
 - * 바우처 美 국무부 대변인은 同日(3.20) 미국이 “이미 한국과 북한에 제네바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음”을 공개(정례브리핑)
 - *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3.18 ▲북한이 핵사찰을 미북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과 연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핵사찰 수용을 촉구(IAEA 정기이사회 보고)
- 英國 제프 훈 국방장관은 3.21 下院 국방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과 이라크·이란·레바논 등 불량국가들이 자국군에 대해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
 - * 3.19 포드 美 국무차관보는, 上院 외교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한 후에도 생화학무기를 계속 보유·개발하고 있음과 ▲신경·수포·혈액작용제 등의 생산시설과 상당규모의 화학제 및 생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을 증언
- 조지 테넷 美 CIA 국장은 3.19 上院 군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근본적 경제개혁과 대규모 국제적 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궁핍의 심화로 기근에 직면하게 될 것임과 ▲경제실패가 장기화될 경우 國家破産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고
- WFP는 3.19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보고서 2002-11」을 통해, ▲현재 WFP가 지원한 대북식량제고가 사실상 고갈되었음과 ▲최근 북한 서해안 지역(구체적 지역 불명시)에 대한 북한 정부의 「학교급식 지급」이 일시 중단되었음을 공개하고 ▲북한의 대부분 지역의 관리들이 향후 수개월 내로 전년도 추수분 주곡재고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지적
- 제58차 UN인권위원회가 개최(3.18-4.26, 제네바)되어, 「주요 인권침해국가 및 분쟁지역의 인권상황」 등 총 21개 의제에 대한 토의를 시작
 - * 이와관련, 美 국무부는 3.4 「2001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 EU 인권문제협의회(COHOM)는 2.28 同 58차 UN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결의문 채택문제」를 既 협의

II. 주 요 동 향

1. 남북한, 「特使 북한방문」 同時發表

□ 개 요

- 남북한은 3.25 최고당국자간에 현 남북간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林東源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대통령특사」로 4월 첫째주 中 평양을 방문함을 발표
- * 남측은 청와대 대변인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은 「평방」 및 「중방 보도」를 통해 同時發表

□ 주 요 내 용

(1) 청와대 박선숙 대변인 발표 내용

-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하였음.
- 이번 특사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특사파견을 제의했었음.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로 4월 첫째주 중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임.
- 이번 특사방문이 정체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2) 북측 발표내용

- 남측 특사가 평양을 방문함.
-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함.
-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됨.

2. 정부, 금강산관광 경비지원방안 議決

□ 개 요

- 정부는 3.21 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산가족·학생·교사 등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안」을 심의·의결
 - 동 조치는 지난 1.23 발표한 금강산관광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방침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경비지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지속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경비지원은 형평성·투명성·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되, 관광활성화까지 限時的으로 지원할 방침

□ 주 요 내 용(통일부 대변인 발표)

(1) 경과 및 배경

- 정부는 지난 1.23 금강산관광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 후속조치의 하나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의 금강산관광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금번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경비지원 조치는 분단 고통 완화와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 이들의 금강산 관광이 각별한 의미와 교육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가의 경비부담으로 인해 쉽게 금강산 관광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 이와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특별고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였음.
- 경비지원 조치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왕래지원자금」 항목을 근거로 하여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 통일부고시로 발령, 시행할 예정임.
- 정부는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 나간다는 취지와 함께 우리 사회 내부의 형평성 문제에도 유의하였으며
 - 금번 조치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계층의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져, 금강산지역이 명실상부한 남북화합과 통일교육의 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2) 경비지원 방안

가. 기 본 방 침

- 금번 경비지원을 통해 금강산관광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금강산 지역을 남북화합과 통일교육의 장으로 육성
- 경비지원은 형평성, 투명성, 실효성 등을 감안하는 가운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되, 관광활성화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육로관광, 관광특구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측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나. 경비지원 방안

① 지원대상자

- 이산가족, 학생, 교사와 통일교육강사,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다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통일교육 지원이라는 측면과 현 금강산 관광시설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여
 - 도서·벽지 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 동반, 소규모 현장학습 등을 위주로 지원해 나가면서
 - 학년 단위의 수학여행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 수학여행과 차별화해 나갈 것임.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대상자>

- △ 이산가족: 65세 이상 이산가족
 -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통일경모회 소속 단체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이산가족
- △ 학생·교사: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대학생(대학원생 이상은 제외)
- △ 통일교육 강사: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 교육훈련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강사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 단체·법인의 통일교육강사 등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1-2급 중상이자인 국가유공자, 2급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1인에 한해 보호자도 지원
- △ 기타 통일부장관이 경비지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 현재 학생수는 초등학교 약 400만명, 중학생 약 200만명, 고등학생 약 200만명이며, 이중 수학여행 대상자는 年 200만명으로 추정

② 지원금액

- 경비지원은 필수경비(관광요금·현지 식대)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함.
 - 따라서, 출발지와 속초항간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택적 관광경비인 온천장 이용료와 공연 관람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중 생활곤란 등으로 개인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수경비를 전액 지원하게 됨.
- 본인부담액은 지원대상자의 경비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는 바
 - 학생은 필수경비의 30%인 10만원대, 대학생과 여타 지원대상자는 40%인 20만원 수준의 경비를 부담하게 될 것임.

③ 지원절차

- 관광객 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을 고려, 일괄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됨.
 -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관광을 하게 되며
 - 보조금은 사후 정산과정을 거쳐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수출입은행이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게 됨.

(3) 향후 추진계획

- 경비지원 체계 구축 등 시행준비를 거쳐 4월초 출항시부터 동 지침을 적용·시행할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 이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 금번 지원이 그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 사업자로 하여금 분단현실 체험과 통일 현장학습을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편의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임.

 - 또한, 국회, 관계전문가, 국민 여론 등에 유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북측에 대해서도 관광특구, 육로관광 등 이에 상응하는 관광활성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임.

3. 북한 외무성 대변인, 美 국방성 핵태세 검토(NPR)관련 담화 발표

□ 개 요

- 북한은 3.14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3.9자 미국 「LA 타임즈」 紙를 통해 공개된 미 국방성의 핵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와 관련, 미국을 강력히 비난

□ 주 요 내 용(담화요지)

- 최근 미국 보도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는 우리나라와 시리아 등 7개 국가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 핵공격을 위한 소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함.
- 미국은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회의 총회에서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 소유국과 연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 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 특히 미국은 1993년 「조·미 공동성명」과 1994년 「조-미 기본 합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담보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그동안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
- 부시행정부의 핵공격 계획은 힘에 의한 세계제패를 위해 그 어떤 국제적 합의도 쌍무적 합의도 다 뒤집어 엮고 핵공격을 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우리는 그 어떤 조·미 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 평 가

-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비핵 국가에 대한 핵 불사용(NSA) 및 북·미 기본합의서상의 약속 등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이들 약속에 위반된다고 비판 하면서도
 -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등 가정법을 사용, 향후 대응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점이 특징
- 이와함께,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 등 핵위기의 원천을 미국에 전가하는 동시에 북한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 미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압박 ▲조기 핵 사찰 거부 명분을 축적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완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내재된 것으로 평가

□ 참 고 사 항

(1) 美 國 방 성 핵 태 세 검 토 (NPR) 주 요 내 용

- 정책방향 : 기존의 파괴력이 큰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술적이고 유연한 핵능력을 보유
- 新삼각전략체제(New Triad) 구축 : ▲핵·재래식전력을 강화한 「공세적 타격능력」 ▲MD 배치를 통한 능동적 방어체제 ▲핵무기 개발·핵실험 재개를 위한 「대응적 방어 기반」 확충
- 핵무기 사용 원칙 : ▲재래식 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는 목표 ▲핵·생화학 공격에 대한 보복 ▲긴급 돌발사태 時
- 핵무기 사용대상 : 위협형태에 따라 ▲즉각적 위협 ▲잠재적 위협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시로 분류
 - 북한·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는 장기간 미국에 적대감을 유지해 왔고 테러지원 및 대량파괴무기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 상기 3가지 위협에 모두 해당
 - 중국은 즉각적·잠재적 위협에 해당되며 러시아는 미국과 이념적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협에 포함
 - * 핵무기사용 가능 시나리오로 ▲북한의 남침 ▲이라크의 이스라엘·인접국 공격 ▲중·대만간 분쟁을 예시
- 향후 미국의 핵전력 : 현재 8,000기의 핵탄두를 2007년 3,800기, 2012년까지 3,000기로 축소

- 2012년까지 트라이던트 SSBN 14척, 미니트맨-Ⅲ 500기, B-52 H기 76대, B-2기 21대 보유
- 재래식 군사력과 사이버 군사력·핵무기를 통합한 새로운 무기·지원시스템을 추진
- * 지하병커 파괴용 미니 핵폭탄 개발, 차세대 전투기(JSF)에 핵능력 부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등

※ 美 국방부는 1.8 동 보고서를 議會에 제출하고 개략적 내용을 언론에 公開, LA타임즈紙는 3.9 동보고서의 原本을 상세히 보도함.

(2) 토마스 슈워츠 駐韓美軍사령관 上院 군사위원회 보고(3.5)

① 보고사항

- 2003년 한반도 정치·군사 환경에 영향을 미칠 3가지 사안은
 - 대선 등 한국내 선거에 따른 정치적 변화
 - 경수로건설 관련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문제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문제 등임.

- 세계 5위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북한은 약 70%의 재래식 군사력을 평양 이남에 배치하고 있어 위협적이나
 - 북한은 그 어떤 공격도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파괴로 귀결될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바, 현재 '북한군의 공격' 시나리오 오는 가능성이 없어(unlikely) 보임.

- 북한은 지난 2년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지켜왔으나 정치·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최우선 순위를 유지
 - 특히 시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 중동 및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및 기술수출에 대해 우려

- 북한은 1-2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의 핵기술 이전 가능성은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
 - 또한 10만 이상의 특수군 및 대량의 생화학무기 보유는 비대칭적 군사위협임.

② 질의 · 응답내용

-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의 디딤돌 역할을 했으며 향후 북·미대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어기지 않고 있음.
-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은 조용한 편이며, 미국은 북한이 국제테러에 관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증거는 없음.
- 북한은 제1의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확산국이며 이를 통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음.
 - 무기수출은 지난 2개월간 증가추세였으나 현재는 안정상태 (steady state)인 바, 무기수출이 없다면 북한은 유지되지 못할 것임.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미사일 및 관련 기술, 야포, 탱크, 잠수함 등임.
- <질문> : 북한의 무기확산이 이념이 아닌 경제적 이유에서라면 정치대화의 길이 있을 것인데 대화 제기에 대한 견해는?
 -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바, 공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는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중임.
- 제네바합의 및 후속조치 등에 따라 2003년이 오면 주요결정 등을 내려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한국과 협의 중인 로드맵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은 옳은 방향이라고 봄.

Ⅲ. 기 타 동 향

1. UN 인도지원조정국,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발표

□ 개 요

- UN 인도지원조정국은 유엔기구 및 NGO들의 농업복구·산림 복구·보건/영양·식수/위생/환경 등 최근 분야별 대북지원 현황을 발표(以下 '01.12월~'02.1월 및 '02.2월 보고서 주요내용)

□ 주 요 내 용

① 농업복구

- EU는 금년도 북한 농업지원에 1,900만 유로 상당의 비료 10만톤과 100만 유로 상당의 기술지원을 결정(총 2천만유로, 약 1,780만불)
- Concern은 식량안보 사업으로 평안남도 지역 36개 협동농장에 비닐, 제초제, 분무기, 채소종자 등 농자재 지원
-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에서는 지난해 12월 평안남도의 8개 협동농장에 비료, 비닐, 기타 농자재 등을 지원
 - 사업대상 농장의 생산량 증대는 33-102%로서, 평안남도 기타 협동농장의 5-18%에 비해 크게 개선
 - 또한 50개 퇴비공장을 건설, 연간 1만톤의 유기비료 생산
- Cariatias는 강원도·함경남도 지역 5개 협동농장에 필수 농업 자재 지원

- 요소 비료, 비닐, 분무기, 보호장비, 농자재, 트럭 등 총 44만불 상당
- 또한 2백만 평방미터의 못자리용 비닐(12.5만불)을 함경 남북도 23개 협동농장에 지원
- CAD(Children's Aid Direct)는 함경남도 3개 지역에 500개의 채소온실을 건설(108만불 규모), 채소섭취가 부족한 인근지역 어린이들에게 공급
- CESVI는 강원도 고산지역에 트랙터 연료 210톤, 복합비료 950톤, 요소비료 450톤, 탈곡기 7대 등 지원

② 산림 복구

- WFP에서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수피해지역에 취로사업 등을 통한 산림복구 사업을 지원
 - * '95-'96년 심각한 홍수피해로 인해 90개의 양묘장중 30개의 양묘장이 손상된 상태
- Concern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하여 산림 황폐화 및 토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복구사업 추진
 - 평안남도 안주, 덕천, 북창 외 7개 시·군과 7개 양묘장, 순안구역 양묘장 등을 대상
- 동북아산림포럼(한국)은 UNDP AREP(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사업)에 총 75만불 지원 약속(현물지원 20만불 포함)

③ 보건·영양

-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GFATM)은 북한에 3-5년 단위의 장기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아태지역 워크숍이 3.5-3.7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북한 대표와 WHO 북한 사무소 관계자들도 참석
- WHO가 지원하는 결핵약 2차 지원분이 2.23 평양에 도착 (1차 지원분은 지난해 11월 WHO 사무소 개설과 함께 전달)
 - 2003년도 까지 매년 3만2천명의 환자치료에 사용될 예정
- UNICEF는 1월 북한 보건당국에 4대의 구급차를 지원하고 2월에는 저온유통 시설 및 분만실 장비 등을 전달
 - 로터리 재단은 저온유통 시설 마련에 35만불 지원을 약속
- EU는 기초보건분야에 대한 189만유로 상당 지원을 결정 (1,700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기 공급 예정)
- IFRC는 북적에 600개의 항생제 세트를 지원하고, 2월중 39개의 보건기구 및 6개의 응급치료소를 방문
 - 북한 보건성은 수인성 질병·말라리아·살균소독·에이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FRC의 금년도 사업을 승인

④ 식수·위생 및 환경

- 금년도 UN합동보고서는 북한의 식수·위생분야가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

* 1일 1인당 물 생산량 : '94년 304리터→'98년 289리터

- 유럽연합인도지원국(ECHO)은 북한의 식수·위생분야에 555만 유로(약490만불)의 지원계획을 발표(2002.3.15)

⑤ 기타 지원

- UNICEF는 식수공급이 원활치 않은 어린이 시설과 병원 등에서 시추작업을 위해 천공장비를 지원('99년 이후 200개 이상, 2001년중 150개의 작업 완료)
- EU는 최근 향후 대북기술지원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전략 보고서」(Country Strategy Report)를 채택하고
 - 향후 ▲2004년까지 EU의 대북 기술협력 및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02-2004년간 매년 500만 유로, 총 1,500만 유로(1,300만 달러)의 지원계획을 승인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3.18 북한이탈주민 25명 필리핀 경유 입국
- 3.18 정세현 통일부장관, 「입국 희망 탈북자 原則的 전원 수용」 방침 재확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0기 해외지역회의)
- 3.18 이만섭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개최 촉구(모로코 IPI 총회 연설)
- 3.19 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 대두 가능성 제기(서울대 동문초청 특별강연)
 - * 2003년 한반도 安保危機 발생원인으로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 유예 時限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 ▲북한의 과거책 규명을 위한 사찰문제 등이 2003년에 집중된 사실 등을 지적
- 3.21 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금강산관광 경비지원방안 의결
- 3.22 한·일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 - 고이즈미 총리) 개최
- 3.25 청와대 대변인, 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의 「대북특사 파견」 발표(남북한 동시발표)

북한 동향

- 3.13 외무성 대변인, 미국방부 핵태세 검토(NPR)관련 규탄담화
- 3.14 조평통 대변인, 한미연합 RSOI/FE '02연습 규탄성명
- 3.18 외무성 대변인, 한미연합 RSOI/FE '02연습 규탄성명
- 3.25 평방·중방, 林東源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 보도

주변국 동향

- 3.13 북미 뉴욕실무접촉(프리처드-박길연) 개최
- 3.18 제58차 UN인권위원회 개최(3.18-4.24, 제네바)
- 3.21 韓日頂上會談 개최(3.21-23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 고이즈미 총리)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7호>

2002.3.28~4.9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남북한, 特使訪北 관련 「공동보도문」 채택

III. 기 타 동 향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결과
- 최근 북한의 對美 주요동향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4.6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4.3-6)과 관련하여 쌍방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각종 남북회담 재개와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그간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키로 합의하였음을 발표
-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3.30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앞 FAX를 통해 「남북민간급접촉」 개최(4.11-12, 금강산)를 수용
 -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25 남측 준비위원회 앞 FAX를 통해 「6.15, 8.15 기념행사 및 아리랑공연 참관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민간급접촉(4.7-9, 금강산)을 제의
- 韓赤 서영훈 총재는 3.28 北赤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북고성군 농업협력단」 등 2개단체 기탁 대북지원 물자(농자재·전지분유 등 총 8,600만원 상당, 南北赤間 3차분 지원의 추가지원으로 2002년도 제3차 지원 물자)의 전달계획을 통보

◀ 북 한 동 향 ▶

- 외무성대변인은 4.3 KCNA 회견을 통해, 최근 북미접촉(3.13, 3.20 뉴욕)과 관련하여 ▲미측의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검토 시작 및 ▲KEDO와의 협상을 재개키로 결정하였음을 발표(4.5, 평방)
- 한편, 4.4 외무성대변인 KCNA 회견을 통해서는, 최근 미행정부의 「북한의 제네바합의문 이행 보증 보류」와 관련하여 “경수로 제공 및 중유납입 지연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조치가 있게 될 것임”을 주장(4.5, 평방)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4.4 담화를 통해, 최근 美 의회조사국(CRS)의 韓美關係報告書(금강산관광비 군사비 전용 및 現代의 대북 비밀자금 제공 등)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강산관광 방해책동 중지」를 주장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를 3.27 개최하고, 「2002년도 국가예산안」, 「국토계획법 채택」 등 4개 議案을 토의·결정
 - * 이와관련, 최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의정보고(홍성남 총리)의 후속조치로,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경제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토의(3.31, 민주조선)

◀ 주변국 동향 ▶

-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은 3.28-3.30 북한을 방북, 3.2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29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 * 메가와티 대통령은 3.30 한국을 국빈방문, 김대중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자신의 訪北結果를 설명
- 韓·美·日 3국은 4.8-9 日本 東京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개최하고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결과에 따른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협의
- 美 의회조사국(CRS)은 최근(3.5) 議會에 제출한 「한미관계보고서」를 통해 CIA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이 '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의 대가로 받은 현금 4억 달러를 군사비로 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보고
 - * 이와함께 ▲美政府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중 남북철도연결, 이산가족상봉 등은 지지하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4자회담을 재개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협상기회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임과 ▲출범 전부터 在來式戰力을 대북외교의 주요이슈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 온 부시행정부는 이를 꺼려하는 한국측 입장 때문에 「在來式戰力 協商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II. 주 요 동 향

1. 남북한, 特使訪北 관련 「공동보도문」 채택

□ 개 요

- 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은 4.3-6 大統領特使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親書를 전달하고, 김용순 비서와 회담을 가진 후 북측과 남북 관계 복원 등에 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4.6 남북 동시발표)

□ 주 요 내 용

(1) 공동보도문 全文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음.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음.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음.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음.
3. 쌍방은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음.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음.
 -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음.
 -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음.
 -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음.
 -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음.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2002년 4월 5일 평양

(2) 추진경과 및 성과

① 목 표

- 남북최고당국자간 의견교환(親書傳達)
 -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솔직하게 전달,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직접 촉구
- 한반도 위기상황 도래방지
 -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제고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대화 촉구
 - *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2003년도에는 '94년 보다 더한 위기 도래 가능성
 - * 북한도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로 표현, 위기를 인식

<특사파견 경위>

- 3.25 대통령 특사 방북 발표(서울·평양 동시 발표)
- 4.3~6 임동원 대통령의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로서 평양을 방북(수행원 : 6명)
 - 방북길은 서해우회직항로를 이용 대통령전용기로, 귀환길은 판문점을 통한 육로로 귀환
 - * 원래 합의된 일정에서 1일 더 늦어지게 된 것은 공동보도문 문안 협의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
- 특사일정
 - 4.3 김용순과 회담
 - 4.4 김정일 위원장 면담, 대통령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만찬
 - 4.5 김용순 주최 오찬 및 회담
 - 4.6 종결회의 및 공동보도문 합의
 - * 북한은 의전면에서 상당한 배려, 신속보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② 對北說得 內容

- 안보위기를 예방하여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명
 - 현 정세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
 - 한반도 안보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북간의 대화가 핵심
- 미국의 안보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있음을 설명, 이에 맞게 나와야 함을 강조
 - 부시 행정부의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위한 군사조치 불사 등 강경한 입장
 - 유일초강대국인 미국과 협조가 불가피(중·러도 협조)
-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
 -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자제, 대화에 의한 현안해결, 인도적 지원 계속 등 부시대통령의 약속 설명
 - 북한이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제의에 호응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화를 해야함을 강조
 - * 프리차드 대사 방북,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추진 권고
 - 일본과도 과거문제를 털어 버리고 대화할 것을 촉구
- 남북관계에서도 안보위기 방지를 위해 관계개선해야 함을 강조
 - 이미 합의된 5대과제 이행 필요성
 - 특히,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의지 과시 필요(군사적 신뢰구축, DMZ의 평화적 이용)

- 북한의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
 - 북한은 그 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고 금년에도 비료, 식량지원 요청
 - 특사는 정부에 보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대응
 - * 북한이 「외세공조」 등을 거론하였으나, 합의를 가로막는 「근본 문제」가 되지는 않음.

③ 特使訪北의 成果

- 남북 양 정상의 확고한 평화 및 관계개선 의지를 재확인
 - 이번 특사파견을 통해 남북의 최고지도자간에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
 - * 특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유례없는 5시간의 장시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
 - 특히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의 정세인식과 권고에 공감을 표시, 북미대화 추진입장을 밝히고 북일대화 재개에도 관심을 표시
 - * 또한 남북관계 타개에도 공감,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
 -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완전복원」 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평이 확대
- 정체상태에 있던 남북관계를 완전 복원,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른 지속적인 관계진전에 합의

-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이 이미 합의한
각급 회담의 재개와 협력사업의 조속한 실천에 합의
 - * 금강산관광 활성화 당국회담, 경추위, 장관급회담, 군사당국자
회담 등 각급 대화 재개
 - *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사업, 정의선 철도·도로 조기 연결, 북측
경제시찰단 남한방문 등 남북협력 추진

- 특히 동해안 철도연결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동해안 도로
연결에 대한 당국간 합의 도출은 커다란 實質成果

- 5대 핵심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토대 마련
 - 정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연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핵심과제와 기존 합의
사항의 협의·추진 일정에 합의
 - 이를 통해, 금년도에 예정된 4대행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기여

-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
 - 김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과 미국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북측에 전달
 - * 김정일 위원장은 이에 동의,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
KEDO와의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
방북제의를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수용했으며, 미국과 민간차원의
교류도 재개할 것임을 시사

- 또한 김 대통령이 행방불명자 문제 등 과거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여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북일 적십자회담을 언급하는 등 일본과의 대화재개에 관심을 표명
- 한편,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재개에도 합의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협의·추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
- 이같은 진전은 테러와 WMD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Ⅲ. 기 타 동 향

1.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결과

□ 개 요

- 북한은 3.27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일을 비롯한 黨·政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 예산안 등 4개 議案을 토의하고 하루만에 폐막

* 議案 : ▲내각의 2001년 사업성과 및 2002년 과업 ▲2002년 국가 예산 승인 ▲국토계획법 채택 ▲조직문제(내용 未發表)

□ 주 요 내 용

① 내각의 2001년 사업성과 및 2002년 과업(홍성남 총리보고)

- 남북 및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대부분 내용을 경제성과 및 금년도 과업을 제시하는데 할애하였으나 획기적인 비전제시는 없었음.
- 금년도 경제과업으로는
 - 「전력20%, 석탄 10%, 철도운수 40%의 성장」 목표를 제시, 에너지와 수송부문을 집중 육성
 -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감자농사·축산장려, 토지정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 「생필품 증산」에 역점
 -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업구조 개선」을 강조, IT 산업 발전과 경제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

- 「수출품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외국과의 합영·합작도 널리 해야 한다」고 강조, 서방권과의 수출 및 경험을 적극 확대
-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획·재정 사업체제를 개선하고 독립채산제를 올바로 실시할 것」을 주장, 부분적 경제정책 조정을 지속
- 한편 「강성대국 건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하나 우리의 전진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

② 2002년 예산안 내역 (문일봉 재정상 보고)

- 예산 총규모는 221억 7,379만원(100.3억불)으로 지난해 216억 7,865만원(98.1억불)에 비해 2.3%가 증가
 - 98년 이래 예산규모가 5년 연속 증가추세(연평균 2.2%)에 있어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 특히 교육(6.3%증)·보건(5.1%증) 등에 대한 지출이 대폭 증가, 인민생활 향상에 비중
 - 지난해까지 국가세입으로 납부하던 감가상각비(예산수입의 10% 정도)를 「기업 생산확대 자금」으로 운용토록 조치,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
- 군사비는 31.9억원(14.4억불)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예산의 14.4% 수준이나 총액면에서 2.3% 증가
 - 실제 군사비는 상당부분을 인민경제비(경제개발비)에 은닉하고 있어 예산의 30% 수준인 66.5억원(30.1억불, 우리는 124.1억불) 정도로 추정
 - * 연도별 군사비 비중: 98년 14.6%, 99년 14.6%, 2000년 14.3%, 2001년 14.4%

③ 「국토계획법」(5장 41조) 채택

- 토지법(77.4)을 주축으로 건설법(93.4)·도시경영법(99.4)을 통합하여 법제화(우리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63.10)과 유사)
- 「국토계획에서 외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계획 작성시 안보적 측면 고려」를 명문화한 점이 특징으로 이는 향후 남북교류·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려는 의도

□ 평가 및 전망

-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회의형식과 의안토의 순서, 개최기간(1일) 등에 있어 지난해의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
- 금년도 과업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으로 경제토대 정비 및 기술개선과 현대화에 정책적 비중을 부여
 - 신년 「공동사설」의 연장선상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수준
 - * 과업의 2년 연속제시는 「장기전망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연간계획」으로 제도화하려는 경향
- 금년도 예산집행계획은 지난해의 재정운영방식을 답습
 - 주로 인민경제비, 인민적 시책비 등 기간산업 확충 및 주민 생활수준 향상관련 지출(80.4%)에 집중
 - 예산규모 발표재개(99년) 이후 경제건설 수요증대 등에 따라 4년 연속 적자재정 운용

-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운용 방법과 내용이 지난해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경제관리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도 간단히 원론적 비난에 그친 것은 우리 특사의 방북 문제 등과 관련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
-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정책변화는 없으나 경제회생을 위해 각분야에 대한 부분적 정책조정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음이 특징
- 앞으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력·석탄·식량 등 증산을 위한 자원조달을 위해 중·러 및 EU 등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

2. 최근 북한의 對美 주요동향

① 외무성 대변인, 北美接觸 관련 KCNA 회견(4.5, 평방)

- 지난 3월 13일과 20일 뉴욕에서는 유엔 주재 우리 대표와 미 국무성 대조선협상전담특사 사이에 접촉들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도 참가하였음.
- 접촉에서는 현 조-미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이 논의되었음.
- 미국측은 접촉에서 중단된 조-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현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음.
- 또한 경수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중단된 KEDO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였음.
- 우리측은 미국측의 입장을 심중(深重)히 검토하였으며, 상대방의 요청을 고려하여 KEDO와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음.
- 우리는 뉴욕 접촉들에서 우리에게 대한 무근거한 헐담이 재발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그것이 재발되는 경우 미국측의 입장을 허위기만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지금 우리는 미국의 움직임을 엄밀히 지켜보고 있음.

② 의무성 대변인, 미 행정부의 「제네바합의 이행 보증 유보」 관련 입장 발표(4.5, 평방)

-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 행정부는 우리의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올해에는 議會에 보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미 행정부는 저들은 합의를 지키고 마치도 우리가 조-미 기본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증을 하겠소, 안 하겠소 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음.
- 우리는 합의문에서 지닌 의무대로 우리의 핵시설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원들의 항시적인 감시도 허용하고 있으며, 조-미 기본합의문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임.
- 미국은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경수로 제공을 대폭 지연시키고 중유납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올해분 중유가 제때에 납입되게 하는 것은 미국측의 엄연한 의무임.
- 만약 이러한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우리의 해당 조치가 있게 될 것은 너무도 응당함.

③ 「아태평화위」 대변인,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담화(4.4, 평방)

- 미 의회조사국은 의회에 제출한 한-미 관계보고서라는 데서 우리가 금강산관광비를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느니, 現代가 우리에게 비밀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믿고 있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새로운 모략소동을 벌이고 있음.
- 그것은 북과 남 사이에 협력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파탄시켜 북남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것임. 부시정권은 출발시기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파탄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로 책동하여 왔음.
- 부시정권은 우리가 금강산관광대가를 군사적 목적에 쓴다고 하면서 관광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남조선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남조선의 야당과 우익보수세력들을 추동하여 금강산관광을 방해해 나서도록 적극 부추겨 왔음.
- 이로 하여 현대아산으로 하여금 지난해 2월부터는 우리와 합의한 관광대가를 제대로 지불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던 여러 회사들이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음.
-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처럼 저조해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권모술수와 모략책동 때문임.
-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계속 책동한다면 우리 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임.
- 미국은 이제라도 금강산 관광 방해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성을 가지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임.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3.28 韓赤, 금년도 제3차 대북지원물자 수송계획 대북통보
- 3.30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남북민간급접촉(4.11-12, 금강산) 제의 ⇒ 4.2 북측 同意
 -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25 남측 준비위원회 앞 fax를 통해, 「6.15, 8.15 기념 행사 및 아리랑공연 참관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민간급접촉(4.7-9, 금강산)을 제의
- 4.3 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북(4.3-4.6)
- 4.6 남북한, 「대통령특사 방북결과」 관련 「공동보도문」 동시발표
- 4.9 국가정보원, 2002. 3월말 현재 탈북·입국자 현황(총 214명) 발표

북한 동향

- 3.2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 개최
- 4.3 외무성대변인, 북미대화 재개 검토 및 KEDO와의 협상 재개 결정 발표(KCNA 회견)
- 4.4 외무성 대변인, 미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보증 유보」 관련 비난(KCNA 회견)
- 4.4 「아태평화위」 대변인, 美 의회조사국(CRS) 韓美關係報告書(금강산 관광비 군사비전용 의혹 등)관련 비난담화
- 4.6 남북한 합작 「평화자동차종합공장」 준공(남포항)
- 4.6 남한 歌手 김연자, 평양 공연(4.25 문화회관)

주변국 동향

- 3.28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 남북한 訪問(3.28-3.30)
- 3.28 국제엠네스티(AI), 중국정부의 탈북자 단속 중지요구 성명
- 4.2 부시 미대통령,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비용(9,500만 달러) 지출계획 발표
- 4.3 북한-러시아, 「2002-2004년 북·러 문화과학교류계획서」 조인
- 4.5 북한-러시아, 「평양-하바로프스크 국제정기항로」 재개(주 2회 운행)
- 4.6 도널드 그레그 前 주한미국대사 방북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8호>

2002.4.11~4.22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남북화해협력 중점추진계획
- 정부, 대북비료지원 및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議決
- 북한, 김일성 90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미회담 재개 관련 KCNA 회견
- 특사방북 이후 북한의 對美·對日動向

III. 기 타 동 향

- 남북한 민간단체, 「남북 단체 공동성명」 발표
- 1/4분기 남북간 교역 현황
- 1/4분기 남북간 선박운항 및 물동량 현황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4.22 김대중 대통령께 금년도 「남북화해협력 중점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금년도에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 실질협력증진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 * 특히 ▲분야별 대화체제를 정상 가동하여 특사방북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금년 초에 설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 하며 ▲이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 추진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
- 정부는 4.18 제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대북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을 심의하고 북한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키로 의결 함으로써, 特使訪北시 북측의 공식요청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
 - 이와관련, 韓赤 서영훈총재는 4.19 北赤 장재언 위원장 앞 서한을 통해 금년도 비료지원 방침 결정사실과 규모, 전달절차 등을 북측에 통보
 - * 북측은 4.22 항구별 희망물량과 우리측 선박 및 인도인원에 대한 백학립 인민보안상 명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전달
- 4.12-13 남북연락관간 직통전화를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28-5.3 북측 지역 금강산에서 실시(남북 각 100명씩 순차적으로 교환)키로 합의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김일성 90회 생일(4.15)을 맞아 휴무일을 종전 2일에서 3일 (4.15-17)로 연장한 가운데, 4.14 평양체육관에서 異例的으로 김정일 참석하의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
 - 이와함께, 동일 4.13자 「차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및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52호」를 통해 조선인민군 차수 장성우를 비롯한 총 55명의 軍將星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
- 4.14 「중방」 보도를 통해서는, 남측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등 남북 각계 민간단체가 4.11-12 금강산에서 「남북민간급 접촉」을 개최하고
 - 남북민간단체들이 ▲임동원특사 방북에 따른 남북합의(4.5, 공동보도문) 적극 지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행사, 남북여성 및 청년 학생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민간통일행사 추진 등 5개항의 「남북 단체 공동성명」 채택 사실을 발표

- 한편, 외무성대변인은 4.11 KCNA 회전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하여 ▲아직은 북미회담 재개의 조건(환경)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화재개를 가로 막는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 주변국 동향 ▶

- 美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3.5 議會에 제출한 「한미관계보고서」의 내용 중 “CIA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이 '98년부터 금강산관광대금 4억달러를 군사비로 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정, 4.3 한국정부에 수정된 보고서를 전달(4.15, 최성홍 외교부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발언)
- 美 국제종교위원회는 4.17 부시대통령 및 파월 국무장관 앞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 및 인권탄압 관련 미국의 UN결의안 발의 ▲한국과 일본정부에 북한과의 대화시 북한의 종교자유 및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 행사 ▲미국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 등 북한인권문제 관련 총 13개항의 권고를 전달
 - * 미국무부는 '01.10월에 발표한 「2001년도 국제종교자유실태보고서」(연례인권보고서) 에서 동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북한을 「종교탄압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 '02.4.13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2002 제주평화포럼」 연설을 통해 “미북대화 재개시 북한의 재대식 준비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은 자유와 인권이 존중 되지 않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발언
- 日本과 북한은 4.29-30 중국 북경에서 「북일적십자회담」을 개최,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와 북한거주 일본여성의 고향방문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4.18 후쿠다 관방장관·일본적십자사 공식발표 // 4.18 북한 중방 및 평방 보도)
- 중국 정부는 北中 친선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김일성 90회 생일에 즈음하여 5,000만 위안(약 6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결정(4.13 中國 國際放送, 4.14 북한 「중방」 보도)
 - * 중국은 2001년 9월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북시 북한에 대해 식량 20만톤과 디젤유 3만톤을 무상지원키로 약속

II. 주 요 동 향

1. 남북화해협력 중점추진계획

□ 개 요

-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4.22 김대중 대통령께 금년도 「남북화해협력 중점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금년도에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 실질협력증진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 주 요 내 용

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성과

① 한반도 평화의 증진

-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을 지속
-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 지원 등 변화여건 조성

② 남북관계 개선 및 실질협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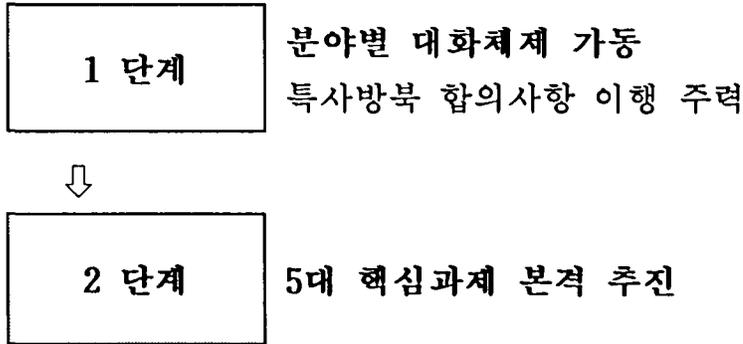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화해협력시대 개막
- 남북간 인적왕래 및 교역규모 증대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면회소 설치 원칙적 합의
- 경의선 연결 추진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기반 조성

③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 확산

- 국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지지율 유지
- 한·미·일간 긴밀한 정책공조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나.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

- ① 목표 :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 및 남북간 실질협력 증진
- ② 추진구도



- ▷ 이산가족문제 해결 :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
- ▷ 남북 철도·도로연결 : 경의선·금강산 육로 연결, 동해선 철도 건설공사 착공
- ▷ 금 강 산 관광 :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관리
- ▷ 개성공단 건설 : 1단계 공사 착수
- ▷ 군사적 신뢰구축 :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재개

⇒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추진 기반확보

다. 중점과제 추진계획

(1) 남북대화 체제 정상 가동

① 분야별 회담 지속

-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 5.7-5.10, 서울
- 이와함께 남북 철도·도로연결·개성공단건설·임진강 수해 방지 등 실무협의회 가동

-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 6.11, 금강산
-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 경의선 군사보장 합의서 조속 발효
 - 비무장지대 공사 착공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추진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 이산가족방문단 상봉행사 이후 회담을 개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제도화 방안 협의

② 남북대화의 정례화·제도화

- 상반기중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남북합의사항 이행 종합점검 및 남북관계발전방안 중점 협의
- 장관급회담 및 분야별 회담 정례화 추진

(2) 5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2)-1. 이산가족문제 해결 제도화

①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남북 각 100명씩 순차적으로 상봉(4.28~5.3, 금강산)
 - 우리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방북하고, 연이어 상봉가족 약 500명이 방북
 - 단체·개별 상봉 및 참관 실시
-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 행사준비에 만전

② 이산가족교류 확대 및 제도화 추진

-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에 역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도 타결 추진
 - * 경의선 연결지역(도라산역 등)에 면회소 설치 협의
- 제3국에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도 계속 지원
- 남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노력 경주
 - 이산가족교류시 생사확인·상봉 등 실현 추진
 - 근원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노력도 병행

(2)-2.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① 경의선 연결·운영

- 조속히 비무장지대 공사 착수, 10월 이전 연결 추진
- 「철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 준공 즉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방안 협의
 - 북측 요청시, 군사분계선-개성구간(12km) 공사 기자재 지원 검토
- 도라산역을 관광코스로 개발, 화해협력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

② 동해선 연결

- 동해선 철도연결은 북측과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금강산 관광을 위한 임시도로는 5월중 착공 합의를 적극 유도

(2)-3.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① 관광사업 활성화 대책 시행(기 조치)

-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조건 완화
- 금강산지역에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 이산가족·학생·교사 등에 관광경비 보조

②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 추진

-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6.11)을 통해 임시도로를 이용한 시범 육로관광 실시 합의 추진
 - 현대·아태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관광특구 지정 촉구

(2)-4. 개성공단 건설

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착수

- 금년내 1단계(100만평) 공단개발 착수를 목표
-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가동,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② 안정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

-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

(2)-5.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① 경협을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로 활용

-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발전

②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 우선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 중점 협의
- 점차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③ 현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원

-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진전으로 북·미 관계개선 지원
-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미·일과의 공조 강화

(3) 남북간 실질협력 여건 조성

① 대북지원 실시

- 비료지원
 - 지원규모는 예년 수준(20만톤) 지원
 - 시비적기에 맞추어 4월 하순부터 5월말까지 수송
- 식량지원
 - 향후 관련절차를 거쳐 정부입장 확정 후 추진 검토
 - 지원시는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조치 병행
 -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기지원

②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 4개 경협합의서 조속 발효 및 청산결제 방식 등 후속조치 합의·시행
 - 통행·통신·해운·원산지 확인 등 제도적 장치 확충

- 남북간 해상수송의 안정화 및 물류비 인하 노력 지속
- 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 교류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테두리내에서 추진

③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 북한과 협의, 5월 중순경 추진
- 중소기업 등 북한 경제실정에 적합한 시찰대상 선정
 - 경제전문가 등과의 면담기회도 마련

④ 임진강 수방사업 실시

- 금년내 수문자료 교환 및 공동조사 실시
- 공동조사를 토대로 예·경보시설 우선 설치
- 남북공용하천의 수자원 협력으로 발전

⑤ 대북 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 발전소 건설 기초굴착공사 완료(7월), 콘크리트 타설공사 착수(8월)
- 본격적인 인적·물적 교류 증대에 대비
 - 직항공로 개설,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 등
- 북한 운영요원의 부지내 및 국내훈련, 인도일정의정서 협상 등 추진

(4) 대북정책 추진역량 강화

①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

- 與·野·政 협의를 통한 초당적 협조 확보
 -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쟁화 방지
 - 국회에 사전·사후보고 실시 등 협조체제 구축
- 대국민 여론수렴 및 홍보강화

② 대북정책 추진체계 강화

- 북한이탈주민 입국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 개선
 - 보호·정착지원제도 보완
 -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증축 및 조직 확대
 - * 입국추세 : 148명('99)→312명('00)→583명('01)→238명('02.4.20)
- 범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수립·추진 및 일관성 유지
 -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대외공표 등 통합조정 역할 수행

2. 정부, 대북비료지원 및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議決

□ 개 요

- 정부는 4.18 제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북한에 대한 비료 20만톤 지원비용과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 관련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심의·의결

□ 주 요 내 용(통일부 발표내용)

- 정부는 4.18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고, 북한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키로 하였음.
 - 이는 특사방북시 비료지원에 대한 북측의 공식요청을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임.
- 비종은 요소 및 복합비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북한의 시비시기에 맞추어, 4월 하순경 첫 항차가 출항하여 가급적 5월말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임.
 - 또한 지원절차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르도록 하며, 대한적십자사가 제반업무를 주관함.
 - 소요경비는 660억원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하였음.

- 금번 대북 비료지원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서
 -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동포애를 전하는 한편, 남북간 신뢰 조성 및 화해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또한 오늘 회의에서 오는 4.28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소요경비(7억8천만원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키로 의결하였음.

현재까지의 대북비료지원 현황(정부·민간)

(단위 : 톤)

연 도	정 부	민 간	계
97	-	2,000	2,000
98	-	5,300	5,300
99	115,000	45,700	160,700
00	300,000	7,895	307,895
01	200,000	1,830	201,830
02(4월 현재)	-	18	18
계	615,000	62,743	677,743

* 민간차원의 99년도 비료지원중 4만톤은 한적의 비료지원 모금에 의한 것임.

3. 북한, 김일성 90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개 요

- 북한은 김일성 90회 생일을 맞아 4.14,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등 주요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를 개최(4.14, 중·평방)
 - 보고자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사회자 : 정하철 당비서
- * 평양체육관 :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2만명 수용 능력의 대규모 실내체육관

□ 주 요 내 용(김영남 보고 요지)

-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수령님의 영생과 주체위업 완성의 결정적 담보임.
- 김정일 동지는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한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놓았으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였음.
- 장군님께서 밝히신 민족자주 통일대강을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하겠음.
- 전체인민들은 미국 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기도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과 전투동원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소탕할 것임.
- 우리 공화국 정부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

□ 평 가

-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김일성의 ‘혁명위업과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을 칭송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의 先軍政治를 받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은
 -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동 「보고」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반면,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한 것은
 - 특사방북 이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향후 예상되는 대미협상에서의 입장강화라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4.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미회담 재개 관련 KCNA 회견

□ 개 요

- 외무성대변인은 4.11 KCNA 회견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 ▲아직은 북미회담재개의 조건(환경)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화재개를 가로 막는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 주 요 내 용(회견요지)

- 최근 일부나라들의 보도계에서 조미대화의 재개문제와 관련한 제 나름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음.
- 조미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 대결원점으로 돌아간 현 조미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조미회담은 필요하며 또 어느때 가서든 조건이 마련되면 진행되게 될 것임.
-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환경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조미대화의 재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이 대화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자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봄.

□ 평 가

- 이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우리 특사가 「김정일이 미국과의 대화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4.6 기자회견)한 것과 관련한 첫 공식반응이며,
 -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의 제거와 대화상대 존중」을 내세우고 있음이 특징
- 이같이 북한이 「미국의 대화재개 환경조성」을 촉구한 것은 「프리차드」 대북 교섭담당대사의 방북 등 북미대화 재개에 대비, 사전에 協商立地를 강화하는 한편,
 - 미국의 북한체제 비난 중단과 미국이 제시한 의제(핵·미사일·재래식전력)철회를 비롯한 입장변화를 유도해 보려는 의도로 평가됨.

5. 특사방북 이후 북한의 對美·對日動向

□ 개 요

- 최근 북한은 우리측 特使訪北 이후 북미 및 북일대화 재개 등을 고려하여 북한 보도매체를 통한 대미 및 대일비난을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자제하는 경향을 노정

□ 주 요 내 용

(1) 對美動向

- 우리측 특사방북 이후 북한 보도매체의 대미비난 동향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
 - 回數面에서 4.6-16간 총 7건, 1일 평균 0.64건으로 대폭 감소
 - * 북한의 대미비난은 1월 총 64건(1일 평균 206), 2월 154건(1일 평균 5.5), 3월 228건(1일 평균 7.31)으로 계속 증가추세였으며, 4.1-5간에는 총 12건 방송
 - 形式面에서도 담화나 논평보다는 대담이나 단순한 보도 형태 활용
 - 內容面에서는
 - 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포괄적 비난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하는 것으로 변화
 - * F15기 판매, 아미티지 부장관의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나포·공격가능성 발언 등
 - ②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후의 원색적이고 극렬한 비난에서 절제된 수준의 논조로 완화되고 수위도 저하

- * 4.6일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는 “부시의 「악의 축」론은 對外用이 아니라 國內用”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 절하

(2) 對日動向

- 대일비난도 4.6이후 총 3건(1일평균 0.27)으로 역시 빈도면에서 다소 감소
 - 1월 총 24건(1일 평균 0.77), 2월 14건(1일 평균 0.5), 3월에는 31건(1일 평균 1.0)이었으며 4.1-5간에는 총 2건(1일 평균 0.4)
- 內容面에서는
 - 북에 의한 일본인 납치 부인 및 일본의 과거죄행 청산 문제론 등에 집중, 향후 적십자 회담 및 국교정상화 회담 까지도 고려하면서 협상의 입지를 다지는 데 초점
 - * 1월-3월까지의 미국의 반테러전에 대한 일본의 협조조치 및 유사시법제 정비 문제를 묶어 군사대국화 기도로 맹렬히 공격
 - * 대일 비난 감소는 우리측 특사방북 성과의 영향과 함께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

Ⅲ. 기 타 동 향

1. 남북한 민간단체, 「남북 단체 공동성명」 발표

□ 개 요

- 남북 각계 민간단체는 4.11-12 금강산에서 「남북민간급접촉」을 갖고, 우리측 특사방북에 따른 남북합의(4.5 공동보도문) 및 6.15공동선언지지 등 5개항의 「남북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
- * 남측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와 북측 「민화협」은 3.30 「6.15, 8.15 기념행사 및 아리랑공연 참관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민간급접촉」 개최에 합의(동 접촉은 3.25 북측이 제의한 사안)

□ 주 요 내 용(공동성명 全文)

- 남과 북의 각계 단체 대표들의 접촉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음.
- 남과 북의 각계 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올해 통일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함.
 1. 남북 단체들은 지난 4월 5일 평양에서 쌍방 당국 사이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적극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힘있게 도와 나아갈 것임.
 2. 남북 단체들은 올해 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갈 것임.

3. 남북 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임.
4. 남북 단체들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들을 진행하며 이 통일행사들을 진행할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 확정해 나갈 것임.
5. 남북 단체들은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임.

2002년 4월 12일 금강산

2. 1/4분기 남북간 교역현황

□ 개 요

- 통일부는 4.17 「1-3월중 남북교역동향」을 통해 ▲남북교역액은 88,017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0% ▲위탁가공 교역액은 29,309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4%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

□ 주 요 내 용

① 교역 전반

- '02.1-3월중 전체 남북교역액은 88,017천달러로 전년동기 76,564천달러 대비 15.0% 증가
- 반입액은 51,262천달러로 전년동기 30,775천달러 대비 66.5% 증가한 반면, 반출액은 36,775천달러로 전년동기 45,789천달러 대비 19.7% 감소
-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166개(위탁가공업체 57개)이며, 품목수는 448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23개)

② 거래성 교역

- 거래성교역은 62,125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2.9% 증가, 이중 반입은 51,11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6.9%, 반출은 11,010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4% 증가
- 위탁가공교역은 29,309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33.3% 거래성교역액의 47.2%를 차지

- 반입은 20,015천달러로 전년동기 13,311천달러 대비 50.3% 증가하고 반출은 9,293천달러로 전년동기 11,029천달러 대비 15.7% 감소
- **상업적 매매거래**는 32,816천달러로 전년동기 19,147천달러 대비 71.4%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37.3%, 거래성 교역액의 52.8%를 차지
 - 반입은 31,099천달러로 전년동기 17,307천달러 대비 79.6% 증가하고, 반출은 1,717천달러로 전년동기 1,840천달러 대비 6.7% 감소

③ 비거래성 교역

- **비거래성교역**은 25,892천달러로 전년동기 33,077천달러 대비 21.7%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29.4%를 차지
 - 반입은 147천달러로 전년동기 157천달러 대비 6.3% 감소하고, 반출은 25,745천달러로 전년동기 32,920천달러 대비 21.8% 감소
- **협력사업용 물자교역**은 17,536천달러로 전년동기 10,475천달러 대비 67.4%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19.9%, 비거래성 교역액의 67.7% 점유
 - 경수로사업 물자는 15,886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8.4% 증가하고, 금강산관광사업 물자는 665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1% 기타 협력사업 물자는 985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3.5% 각각 감소
- **대북지원물품의 반출**은 6,315천달러로 전년동기 22,602천달러 대비 72.1% 감소, 이는 전체교역액의 7.2%, 비거래성 교역액의 24.4%에 해당

- 주요 지원품목은 비료·의약품 등 화학공업제품이 1,415천달러, 과일·곡류 등 농림수산물 989천달러, 내의·의류 등 섬유류제품이 2,510천달러, 의료기기 등 기계류 제품이 773천달러, 전기·전자제품이 288천달러, KEDO중유지원 반출 2,041천달러 등

□ 평가 및 전망

- 남북교역이 전년동기 15.0% 증가한 사유는 국내경제 여건의 호전에 따라 상업적 거래 및 위탁가공교역이 42.9% 증가함에 비롯된 것으로 평가
- 또한 남북교역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2월중 4.9% 3월중 10.9%)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증적인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 1/4분기 남북간 선박운항 및 물동량 현황

□ 개 요

- 통일부는 4.10 「1/4분기 선박운항 및 물동량 현황」을 통해, 1/4분기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 및 물동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1%, 10.4% 감소했음을 발표

□ 주 요 내 용

① 운 항 횟 수

- 1/4분기 남북한간 선박운항 총 횟수는 편도기준 348회로 전년동기 505회 대비 31.1% 감소
 -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선박 운항횟수는 149회로 전년동기 243회 대비 38.7%,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선박 운항횟수 역시 199회로 전년동기 262회 대비 각각 24.0% 감소
- 항구별 운항횟수
 - 남한 ⇒ 북한으로의 운항은 목포 48회, 속초 29회, 인천 51회, 부산 9회 등 총 149회, 북한 ⇒ 북한으로의 운항은 장전 16회, 홍남 33회, 해주 63회, 해주 63회, 남포 15회, 나진 24회 등 총 199회

② 물 동 량 현 황

- 1/4분기 남북한간 해상 총 물동량은 73,081톤으로 전년동기 81,560톤 대비 10.4% 감소

- 남한 ⇒ 북한으로의 해상물동량은 39,255톤으로 전년동기 35,169톤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북한 ⇒ 남한으로의 해상물동량은 33,827톤으로 전년동기 46,391톤 대비 27.1% 감소

○ 항구별 물동량

- 남한 ⇒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여수 16,712톤, 울산 2,298톤, 제주 4,887톤, 인천 9,768톤 등 총 39,255톤

- 북한 ⇒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나진 17,550톤, 홍남 7,406톤, 남포 2,951톤, 해주 5,022톤 등 총 33,827톤

□ 평 가

○ 1/4분기 중 남북교역액은 88,016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운항 횟수가 31.1% 감소한 것은 주로 동기기간중 금강산관광선이 106회 운항에서 32회로 감축된 데 기인

○ 물동량이 10.4% 감소한 것은 船社들이 경제성을 고려하여 1항차당 운항 평균톤수를 161톤에서 210톤으로 늘린 점과 주요 교역물품이 석유류 등 경량화·소형화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4.11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대북 비료20만톤 지원 결정 및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시 남북합의사항(4.5 공동보도문) 추진계획 협의
- 4.12 남북 각계 민간단체, 林東源 특사 방북시 남북합의사항 지지 등 5개항 「남북 단체 공동성명」 채택(4.11-12 금강산, 남북민간급접촉)
- 4.13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28-5.3(금강산) 남북 각기 100명씩 순차상봉 하기로 합의
- 4.18 제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비료20만톤 지원 및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 4.19 한적, 정부의 비료 20만톤 지원 결정 및 전달절차 대북통보
 - * 북측은 4.22 항구별 희망물량 및 우리측 인도인원·선박에 대한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보장각서를 우리측에 전달
- 4.22 통일부, 「남북화해협력 중점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북한 동향

- 4.11 의무성 대변인, 북미대화 재개관련 「회담재개 관련 환경조성 필요」(대화 상대 존중 및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입장) 강조(KCNA 회견, 4.13 평방)
- 4.13 「차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및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52호」 발표 및 차수 장성우 등 총 55명의 軍將星 승진인사 단행
- 4.14 김일성 90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평양체육관) 개최
- 4.17 조선인민과의 친선·연대성단체 및 국제기구들,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 개최(천리마문화회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참석)
 - * 부시행정부의 對北威脅 등 군사적 패권주의 비난, 일본의 군국화노선 포기 및 과거범죄행위 사죄 촉구, 6.15공동선언 및 駐韓美軍 철수 등 주장

주변국 동향

- 4.11 EU,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성과 환영 議長聲明 발표
- 4.12 존 파월 WFP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장, 한국의 WFP를 통한 대북 지원식량의 「북한 주민 직접수령 목적」 발언(訪韓 언론회견)
 - * 평안남도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지원」이라고 표기된 쌀포대를 직접 수령하는 것을 목적
- 4.13 중국, 북·중 친선협조 강화 및 김일성 90회 생일 관련 5,000만 위안(600만 달러)상당 대북지원 발표(4.13 中國 國際放送 및 4.14 북한 「중방」 보도)
- 4.15 한국 외교부, 美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보고서」(북한의 금강산관광대금 4억달러 군사비 전용의혹 관련부분) 수정 확인(최성홍 외교부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답변)
- 4.17 美 국제종교위원회, 북한 종교 및 인권탄압 관련 부시대통령 앞 13개항 권고 전달
- 4.18 일본, 북일적십자회담(4.29-30, 중국 북경) 개최 발표(후쿠다 관방장관 및 일본적십자사 공식발표)
- 4.18 美 상원, 對테러방지조치의 일환으로 「국경보안강화법」 및 「비자입국개혁법」 의결
 - * 이에따라, 앞으로 북한·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수단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된 국가의 국민은 移民이 아닌 경우에는 美國訪問 자체가 불가능해 질 전망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39호>

2002.4.23~5.7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결과
- 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거부
- 북한, 금강산댐 관련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 발표

III. 기 타 동 향

- 최근 북미대화 재개 관련동향
- 北·日 적십자회담 개최 결과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시 합의(4.5)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예정대로 4.28-5.3 북측지역 금강산에서 「남북한 순차교환 방식」으로 실시
- 통일부대변인은 5.6 논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5.7 서울) 개최를 거부한 북측대표단 성명(5.6)과 관련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를 비롯, 특사방북시 합의사항들의 조속한 이행과 ▲북측이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 건설교통부는 5.3 북측 금강산댐 관련 ▲제2차 경추위에서 홍수 방지대책 등 북한강수계 공동관리방안을 회담의제로 제시하는 것과 ▲북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평화의 댐 보장」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등의 안전대책을 발표
-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결성 준비위원회」(민화협·7대중단·통일연대 대표)는 5.3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6.15 공동선언 2주년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민간급실무회담」 개최(5.13-15, 금강산)를 제의

◀ 북 한 동 향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은 5.6 성명을 통해, 지난 4.23 최성홍 외교부장관의 訪美發言을 문제삼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5.7-10, 서울) 개최 불참을 발표
 - * 워싱턴포스트紙(4.23)는 최 장관이 “때로는 강공책이 북한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부시행정부의 강경한 자세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낸 유일한 이유”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外交通商部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장관은 미측이 대북 강경자세를 완화하여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며, 특히 특사방북 이후 조성되고 있는 대화의 모멘텀의 유지가 중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
 - * 그러나 북측은 4.28 「조평통 성명」을 비롯, 노동신문 논평·민민전 등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측에 대해 「사죄요구」 등 대남비난을 지속
- 국토환경보호성은 5.6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금강산댐(안변청년발전소 堰堤) 붕괴위험 관련 ▲금강산댐은 北韓軍이 이룩한 고귀한 위훈의 창조물로 ▲남측의 붕괴위험소동은 사실을 왜곡한 날조극으로 ▲외부세력(미국)의 의도적인 계획과 외세공조에 따른 남측 극우보수세력들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는 북한에 대한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
- 5.1 외무성대변인 KCNA회전을 통해서 「클린턴 방북 초청설」(4.29 로이터 통신 보도)과 관련, “우리는 클린턴을 평양에 초청한 바 없는 것을 명백히 한다”며 동 보도를 부인

- * 4.29 로이터통신은 “김정일이 북미간 중재역할을 맡도록 클린턴을 초청했다”고 보도, 이에 대해 同日 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정보가 없다”며 동 보도를 부인
- 4.29 KCNA 논평(미국의 오만한 인권간섭 책동)을 통해서,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발표(4.17)한 年例報告書와 관련,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누리는 북조선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미국을 비난
- * 4.17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98년 설립, 對정부 및 의회 정책자문기관)는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적 노력 강화 ▲탈북자 보호 및 인권증진 등 13개항의 對北政策 勸告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
- 한편, 4.29 평양 「5.1경기장」에서 중·일·미국 등 20여개국의 외국인 관람객과 해외동포,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아리랑 공연 개막식」을 진행, 4.25에는 인민군 창군 70주년(4.25)을 맞아 異例적으로 民間武力으로 구성된 「노동적위대 열병식」을 개최하고 美·日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력 부각을 자제하는 가운데 국방태세가 완비되었음을 내외에 과시

◀ 주변국 동향 ▶

- 미국은 4.30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 백악관대변인(애리 프라이서) 聲明을 통해 ▲북한이 유엔 상주대표부를 통해 북미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미측에 통보했음과 ▲미국은 조만간 회담재개 시기 및 기타 구체적 사항을 결정토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
- 리처드 바우처 美 국무부대변인은 5.1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미간 특사교환과 관련 프리처드 특사의 방북시기·일정 등 구체적 협의·조정을 위해 북측과 접촉중임을 확인
- 일본과 북한은 4.29-30 북경에서 「북일적십자회담」을 개최, 양측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사업 등 일련의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4개항의 합의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콘스탄틴 풀리콥스키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전권대표는 4.24 김정일을 예방하고 북한의 創軍 70주년 관련 푸틴 대통령의 인사를 전달
- * 김정일은 자신의 생일축하차 방북('02.2.10-12)한 풀리콥스키를 2차례 면담한 바 있으며, 금번 면담시는 양측간 경제협력 강화방안(TKR-TSR 연결 등), 특히 나진정유공장 근대화, 에너지·통신분야 협력, 공동별목사업 확대방안 등 논의(4.22 이타르 타스통신)
- UN인권위원회 제58차 회의(3.18-4.26, 제네바, 한국·북한·미국 등 53개 위원국 참가)가 여성·아동 권리증진문제 등 21개 의제를 논의, 80여개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

- * 북한에 대해서는 ▲美·EU·캐나다 등은 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결의안은 불상정 ▲美國은 이라크·이란에 이어 3번째 人權劣惡國으로 규정하고, 주민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大量殺傷武器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난

II. 주 요 동 향

1.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결과

□ 개 요

- 상봉 기간·장소 : 4.28-30(1회차) 및 5.1-3(2회차), 금강산
- 상봉 규모 : 총 848명
 - 1회차 : 남측가족 99명이 북측가족 183명을 상봉
 - 2회차 : 북측가족 100명이 남측가족 466명을 상봉
- * 현재까지 남북이산가족 상봉인원은 1차(1,170여명), 2차(1,220여명), 3차(1,240여명)를 포함 총 4,480여명
- 상봉횟수 및 시간 : 1·2회차 각 6회, 10시간
 - *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공동식사 2회, 공동참관 1회, 작별상봉 1회

□ 주 요 내 용

- 남북 이산가족들이 모두 북측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는 형식으로 진행
 - 1~3차 상봉은 서울·평양 교환방문 형식
- 이산가족들의 동석시간을 확대하는 등 만남 자체를 중요시하는 가족중심의 내실있는 행사로 구성
 - 과거 3~4회 실시하던 상봉을 금번에는 6회로 확대
 - 구룡연·삼일포 등 관광지를 가족들이 함께 참관하는 「열린공간」에서의 행사를 처음으로 도입

- 북측지역에서 진행된 상봉장면이 처음으로 TV에 생중계됨으로써 이산의 아픔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
 - * 각 TV 방송사는 이산가족 고통의 대표적 사례로서 정귀업 노인 부부를 집중 부각
- 이산가족들의 안전한 상봉을 위해 유관기관간 총체적 지원체제 구축
 - 고향 이산가족들이 배를 타고 금강산을 방문하는 점 등을 고려, 현지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한편, 속초에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긴급후송 체계 확립

□ 참 고 사 항(주요 행사일정)

① 1회차 행사(4.28-30)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2-15:38 방북(속초항→장전항) ○ 17:23-19:00 단체상봉(금강산여관) ○ 21:25-23:25 북측 주최 환영만찬(금강산여관) 	설봉호
2일차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5-11:50 개별상봉(금강산여관) ○ 12:05-14:00 공동중식(금강산여관) ○ 15:03-16:50 구룡연 동행참관 	우천으로 버스 동승참관
3일차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4-09:50 작별상봉(금강산여관 1층로비) ○ 14:10-17:30 귀환(장전항→속초항) 	설봉호

② 2회차 행사(5.1-3)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1:45-15:20 방북(속초항→장전항) o 17:26-19:05 단체상봉(온정각휴게소) o 19:51-21:30 우리측 주최 환영만찬(온정각휴게소) 	설봉호
2일차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09:55-12:00 개별상봉(금강산여관) o 12:30-14:00 공동중식(금강산여관) o 15:20-16:50 삼일포 동행참관 	
3일차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09:00-09:50 작별상봉(온정각휴게소 옆 운동장) o 12:10-15:20 귀환(장전항→속초항) 	설봉호

2. 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거부

□ 개 요

- 북한은 5.6 임동원 대통령특사의 방북시(4.5)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5.7-10, 서울) 관련 북측대표단 성명을 통해, 우리측 최성홍 외교부장관의 訪美發言을 문제 삼아 회의 개최를 거부

□ 주 요 내 용(성명 요지)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 외교통상부장관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 미국에 찾아가 공동보도문의 이행에 역행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대화 재개에 빗장을 꽂는 행위를 저질렀음.
- 최성홍의 이러한 행위는 북남 사이에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고 우리 민족끼리는 대화도 협력도 할 수 없게 훼방을 놓는 심히 엄중한 도발로 됨.
-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미 이 배신적인 행위가 북남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엄중성에 대해 지적하고 ▲남측 당국으로 하여금 진실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 관계를 전진시켜 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외교통상부장관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남측 당국이 도발적인 언동이 있을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책임적이며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하고 있음

-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은 이번 제2차 회의가 남측 당국자의 무분별한 망언과 그를 묵인하는 남측의 책임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 우리는 계속 남측 당국의 책임적인 조치를 지켜볼 것임.

□ 통일부 대변인 논평(전문)

- 우리측은 5월 7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우리는 남북이 상호존중의 자세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간 제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음.
- 북측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기대하며,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특사방북시 합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함.

□ 참 고 사 항

- 북한은 이번 대표단 성명 이전에 「노동신문 논평」, 「민민전 대변인 성명」, 「조평통 성명」 등을 통해
 - 최성홍 장관의 발언이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당국의 「사죄」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

4.27 : 1회(민민전)
4.29 : 4회(4.28 「조평통」의 규탄성명 등)
4.30 : 1회(노동신문 논평 「용납 못할 반민족적인 배신행위」)
5. 1 : 1회(4.29일자 「한민전」 대변인의 규탄성명)
5. 2 : 4회(노동신문 논평 「비열하고 추악한 사대굴종 행위」, 중앙TV 시사해설 등)
5. 3 : 3회(노동신문 논평 「극악한 민족반역자의 추태」 등)
5. 6 : 1회(경추위 북측 대표단 성명)
총 15회

3. 북한, 금강산댐 관련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 발표

□ 개 요

- 북한은 5.6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남북경추위 제2차 회의시 동 문제의 의제채택 제안 등 정부의 안전대책 발표 등과 관련 ▲금강산댐문제는 사실날조이며 ▲외부세력(미국)의 의도적인 계획과 ▲외세공조에 따른 남측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는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

* 동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는 금강산댐 관련 북측의 최초 공식반응

□ 주 요 내 용

- 남조선 언론들은 미국 위성으로 촬영한 것을 입수했다면서 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 언제(以下 금강산댐)가 붕괴될 수 있다느니 하고 아우성을 치며 「경추위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허튼 소리들까지 하고 있음.
- 한편,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긴급조치, 조사단 파견, 평화의 댐에 대한 증축방안 검토 등을 떠들고 있음.
- 남조선에서 떠드는 금강산댐의 붕괴위험과 같은 문제는 애당초 제기된 바도 없고 또 제기될 수도 없는 문제임.
- 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는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人民軍 軍人들이 이룩한 고귀한 위훈의 창조물임.
- 우리는 금강산댐을 「우리식의 주체적인 공법」에 기초하여 세웠으며, 수력언제 공사상 흔치 않은 언재구조물로 된 댐의 안전성은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음.
- 남이 준 위성촬영자료라는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북남 관계개선을 달거워 하지 않는 외부세력의 조종에 따라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돌려세우려는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줌.

-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안변청년발전소의 언제 건설문제를 가지고 감히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고 있는 안팎의 분열세력들의 책동을 준렬히 단죄 규탄함.
- 현재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새로운 엄청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있지도 않은 문제까지 들고 나온데는 외부세력의 의도적인 계획과 외세공조에 따른 남조선 극우보수세력들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음.
- 남이 주는 허위자료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행위로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임.
- 南朝鮮 當局은 있지도 않는 금강산 댐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6.15 북남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견어치워야 함.

Ⅲ. 기 타 동 향

1. 최근 북미대화 재개 관련동향

□ 개 요

- 최근 미국은 박길연 주유엔 대사와 Prichard 대북교섭담당대사간 뉴욕접촉(3.20)시 북측이 미측의 대화재개 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임을 미측에 통보한 이래, 4.30 「백악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북측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보해 온 사실을 공식발표하는 등 대화재개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

* 이와관련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대변인은 5.1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미간 특사교환과 관련 ▲프리처드 특사의 방북시기·일정 등 구체적 협의·조정을 위해 북측과 접촉중임을 확인하고 ▲북한측의 대화재개 수용입장을 환영한다고 발언

□ 주 요 내 용

- 2001.6.6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제의한 이래, 북한은 최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지연
 - 미국도 “공은 북한쪽으로 넘어갔다”며 대화재개는 북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입장 유지
- 2002. 3.20 박길연-Pritchard간의 뉴욕접촉에서 박길연은 본부의 훈령임을 전제로 2가지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북측 입장을 설명
 - ① 본국 정부에서도 앞으로 필요시 동 채널로 계속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입장을 알려 왔으며, 미측의 대화재개 용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

- ② 미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앞으로 또 다시 북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체제에 대해 도전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계속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 부시대통령이 방한시 대화용의가 있다고 한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
- 4.30 미측은 백악관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UN대표부가 미 국무성에,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발표
- 미국은 금번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북측의 이같은 반응은 부시대통령의 2001.6 제의에 대한 북측의 첫 공식반응임을 강조하면서
 - 현재까지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공은 북한에 있다)을 재확인 하는 한편
 -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이 포함된 폭 넓은 의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미국의 입지를 강화
- 미국은 일단 이같은 북측의 움직임에 최근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 진전과 함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혈사태 중재, 이라크 문제 등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북미 대화의 가시적 진전에 조급해 하지 않을 가능성

□ 향 후 전 망

- 미국은 기존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일정 및 방문절차와 경로 등을 협의할 것이며 협의속도에 따라 방문시기가 정해질 예정
- 북한이 실무적인 협의사항 등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본국의 지침 없이 신속히 내릴 수 있다면 보다 이른 시간에 Pritchard의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수주 내에도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북한이 뉴욕채널에서 방문절차, 일정, 의제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은 현재 대외적 역량을 북한에 집중할 수 없으며, 북한 문제는 나름대로 일정한 우선순위에 맞춰 적절히 다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 유력

2. 北·日 적십자회담 개최 결과

□ 개 요

- 일본과 북한은 4.29-30 北京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 「행방 불명자 소식 조사사업」 등 일련의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4개항의 합의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일북 적십자회담은 '90년대 들어 3회('97.9, '99.12, '00.3월) 개최되었으며, 북송일본인 처 고향방문 및 일본인 납치의혹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 정부간 수교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금번 회담은 북측이 '00.12 중단한 일본인 납치의혹 조사 재개 및 동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재개의향 표명(3.22)에 대해 일본측이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의(3.23)함으로써 실현

※ 일본측 : 히가시우라 赤十字社 국제부장, 사또 外務省 심의관
북한측 : 이효립 赤十字會 부서기장, 손철수 外務省 과장 등

□ 주 요 내 용(공동보도문 요지)

- ①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의뢰받은 1945년 이전의 조선인 행방불명 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선측에 보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키로 하였음.
- ②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본인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일본측에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③ 쌍방은 제4차 재조선 일본인 여성들의 고향방문을 올해 여름경에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 차기 회담은 6월경에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확정키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평 가

- 금번 회담은 양측 모두 대화를 지속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인 납치의혹 조사 및 북송일본인 처 고향방문 사업재개 등에 합의함으로써
 - 일측의 조총련 중앙본부 수색·괴선박 격침사건('01.12) 등으로 경색된 일북관계를 완화시킬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 금번 회담에서 양측이 4개항에 대해 합의한 것은 납치의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의지와, 일본으로부터 식량 등 지원을 유도해 보려는 북한의 의도가 합치된 결과
- 앞으로 일북관계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금번 합의가 교착상태에 있던 북일 관계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고 나아가서 수교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 일본내에서 “납치의혹 조사에 진전이 있는 후 대북식량지원 및 수교회담 재개”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6월 적십자회담시 납치의혹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조사결과 제시여부가 대북 식량지원 및 수교회담 재개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IV. 분야별 일지

국 내 동 향

- 4.24 통일부 대변인, 인천-남포간 선박운임 인하(20피트 컨테이너 당 800 \$ ⇒ 720 \$) 발표
- 4.25 제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4차 이산가족상봉 및 향후 금강산 지역 각종 남북교협력행사 관련, 「금강산지역 통신회선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2억6,000만원) 지원」 결정
- 4.25 대북비료 20만톤 지원 관련 제1항차 수송선박(M/V SUPER SUN, 15,000톤, 인천⇒남포항) 출항
- 4.28 남북한,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4.28-5.3, 금강산, 남북한 순차 교환방식) 실시
- 4.30 제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IT분야 남북경협 활성화 관련 (주)하나비즈닷컴에 남북협력기금(4.8억원) 대출 승인
- 5.3 정부(건설교통부), 금강산댐 문제 관련 안전대책 발표
- 5.3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6.15공동선언 2주년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민간급실무회담」(5.13-15, 금강산) 제의
- 5.6 통일부대변인, 북측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不參(5.6 북측대표단 성명)관련, 남북간 합의사항 조속이행 촉구 논평

북 한 동 향

- 4.23 외무성 대변인, 일본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규탄 담화
- 4.25 조선인민군 창군 70주년 기념 「노농적위대 열병식」 행사(異例적으로 정규병력이 아닌 民間武力으로 실시)
- 4.2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訪美發言 관련 비난 성명
- 4.29 아리랑공연 개막(평양 능라도 5.1경기장)
- 5.1 외무성대변인, 클린턴 평양 초청설(4.29 로이터통신 보도) 부인 KCNA 회견

- 5.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 제2차 회의(5.7-10, 서울) 불참 성명
- 5.6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금강산댐(안변청년발전소 堰堤) 붕괴위험 관련 답화(북측의 최초반응)

주변국 동향

- 4.24 러시아 콘스탄틴 폴리콥스키 극동지구 대통령전권대표, 방북(4.24-27) 및 김정일 위원장 면담(금년도 제3차 면담)
- 4.24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특별회의(4.24-25, 파리) 개최 및 제3 세계 미사일확산위협·북한미사일문제·테러방지문제 등 논의
 - * 동 회의는 ▲제3세계 미사일확산방지를 위해 국제미사일행동규약(ICOC) 체결 등 대응노력 강화 ▲테러정보 교환 등 MTCR차원의 테러방지대책 마련에 합의
 - * 북한 미사일문제 관련, 美國은 북한을 「최대 미사일 확산국」으로 지목, 핵·생화학 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 등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MTCR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
- 4.27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북한 외무상 백남순 방러(5.19-22) 발표
- 4.29 북한-일본, 북일적십자회담(4.29-30, 北京) 개최 및 4개항 합의 관련 공동보도문 발표
- 4.30 미 백악관 대변인(애리 프라이셔), 북미대화 재개관련 성명
 - * 북한이 미국측에 북미회담 재개 준비완료 통보 및 미측의 조만간 회담재개 시기 등 관련 세부사항 결정 예정 등
- 5.1 美 국무부 대변인(리처드 바우처), 프리처드특사 방북 관련 북미간 실무 접촉 착수 확인(정레브리핑)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0호>

2002.5.14~6.5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정부,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우리측 대표단 명단 통보
- 북한,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사전 통보
-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방북 관련동향

III. 기 타 동 향

-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연방제 주장 推移
- 美 국무부 「2001년도 年例 테리보고서」 주요내용

IV. 분 야 별 일 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내 동향 ▶

- 정부는 6.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 북측 대표단장 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시 합의(4.5)한 제2차 회담을 예정대로 6.11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 한편, 정부는 6.3 건설교통부장관 명의 북측 국토환경보호상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측의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통보(5.31) 관련 ▲ 방출일정과 수량 등 구체적 계획을 통보해 줄 것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간 공유하천의 수자원이용문제 등을 포함한 「경협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
- 국방부 대변인은 5.24 금년 5월말 발간예정인 「2002 국방백서」의 발간을 국민의 정부 국방업무 실적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문서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식 발표
- 韓赤 서영훈총재는 5.21 北赤 장재언위원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임동원 대통령 특사방북시 북측이 요청한 비료 20만톤 지원관련 최종항차(제25항차) 전달계획을 통보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제주도민 253명은 북측 「민화협」 초청(4.24)으로 5.10-15 평양을 방문하고 ▲전국체전(11.9-15)에 북측 시·도 체육단 초청 경기 개최 ▲북측 고인들 답사·촬영 ▲금년 가을 북측 「민화협」 관계자의 제주도 초청문제 등을 협의
-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북측 「민화협」의 초청에 따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5.11-14), 김정일위원장 및 김용순비서 등과 면담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
- 한국은행은 5.14 「2001년도 북한의 실질 GDP」가 당해연도 곡물수확량의 전년대비 8.2%증가, 제조업 생산 전년대비 3.5% 증가 등으로 총 3.7% 성장한 것으로 평가(2001 북한 국내총생산 추정결과)

◀ 북 한 동향 ▶

-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은 5.31 대남전통문을 통해 장마철을 앞두고 금강산댐 언제(堰堤)공사 수위조절계획에 따라 6.3부터 댐의 물을 방류한다고 사전 통보
 - * 동 전통문에서 북측은 ▲댐의 물을 방류하는 것이 댐의 안전성(건고성)과는 관계없음과 ▲우리측에 대한 사전통보조치는 어디까지나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서 취해진 것임을 강조, 한편 「아·태평화위」는 5.31 同 방류계획을 박근혜의원에게 통지

- 남북한 민간단체(남측 :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북측 :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는 5.31-6.2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 등 민간통일행사를 6.14-15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합의
 - * 남북해의 각 200명 참가, 개·폐막식, 단오기념 민속놀이, 부문·단체별 상봉모임 진행 등
- 조평통 대변인은 5.28 한나라당 이회창 大選 후보의 「6.15공동선언 제2항 관련발언」(5.22 관훈클럽 大選 후보 토론회)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동 발언은 “6.15공동선언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妄言”이라며 비난
- 5.17 중방 시사논평(主敵論은 대결론, 전쟁론이다)을 통해 국방부의 「2002 국방백서」의 주적론 명기와 관련, “주적론을 부르짖으며 그 누구와 화해 협력하겠다는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우롱이자 모독으로, 남조선 군사 당국자들은 主敵 표현을 더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5.21 「연례 국제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상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며, 예년과 달리 극렬한 대미비난을 자제
 - * 한편, 현재 美 「프리차드」 대사의 방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5.23 평방보도(통할 수 없는 兩面主義 정책)를 통해서도, 미국이 對話再開를 운운하면서 戰爭挑發을 시도 하는 양면정책을 실시한다고 비난하면서, 북·미 관계개선 및 대화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완화 등 태도변화를 촉구

◀ 주변국 동향 ▶

- 미 국무부는 5.21 「2001년도 연례 테러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란·이라크 등 7개국을 예년과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북한은 '87.11 KAL기 폭파사건으로 '88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현재까지 연속으로 15차례 재지정)
 - * 동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국가지원 테러리즘(State-sponsored Terrorism) 항목에서 ▲북한이 UN 안보리결의 1373호가 요구하고 있는 「테러자금 수색 및 차단노력」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있음과 ▲화테러리즘이 의제로 포함된 남북대화 재개 관련 한국측의 요청과 AF(제네바 합의)의 이행 제고를 위한 미국의 대화요청에도 긍정적으로 응해 오지 않았다고 명시
- 러시아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5.20-23 러시아를 공식방문한 백남순 외상과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TKR-TSR 연결 등 경협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고 ▲「2003-2004 북·러 외무성간 교류계획서」를 조인(5.21)

II. 주 요 동 향

1. 정부,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우리측 대표단 명단 통보

□ 개 요

- 정부는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 북측 대표단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시 합의(4.5)한 제2차 회담을 예정대로(6.11 금강산)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측 회담대표단 명단을 통보
- 조명균 통일부 국장(수석대표), 양성호 건설교통부 심의관(대표), 김찬 문화관광부 과장(대표)

□ 주 요 내 용

- 지난 4월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귀측 지역 방문시 남북 쌍방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측 대표 명단 3명을 다음과 같이 알림.(대표단 명단 : 생략)
- 이밖에 제1차 회담시와 마찬가지로 적정수의 수행원, 지원인원과 기자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보낼 것임. 대표단 왕래에 따르는 실무적인 절차문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하면 될 것임.
- 이번 회담에서는 제1차 회담에서 양측이 제안했던 방안들을 기초로 하여 보다 폭넓고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람.

2. 북한,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사전 통보

□ 개 요

-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은 5.31 대남전통문을 통해, ▲북측의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6.3부터 방류)을 사전통보하고 ▲댐의 방류가 댐의 안전성과는 관계없음과 동 사전통보조치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

□ 주 요 내 용(전통문 요지)

- 국토환경보호성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지하는 바임.
-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금강산발전소는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우리식의 주체적인 공법으로 일떠세운 만년대계의 창조물로서 그 안전성과 견고성이 확고히 담보되어 있음.
- 우리측은 장마철을 앞두고 언제(堰堤)공사 수위조절계획에 따라 임남 언제의 물을 오는 6월 3일부터 일정한 양을 뿜게 된다는 것을 귀측에 사전에 알리는 바임.
- 이번에 임남 언제의 물을 방출하는 문제는 언제의 견고성과는 관계 없으며, 우리의 이러한 사전통보 조치는 어디까지나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강조하게 됨.

□ 통일부 대변인 발표내용

- 북측은 5.31 16:00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를 통해 「장마철을 즈음한 금강산댐 수위조절 계획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에서 사전 통보한다」고 알려왔음.
- 금번 북측의 금강산댐 수위조절은 우리측 평화의댐 보강조치와 함께 그동안 금강산댐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우려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금강산댐 수위조절 문제는 우리측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북측과 협의하려고 했던 사안으로서
 - 북측이 홍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수위조절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 온 것은
 - 향후 수자원 협력을 비롯한 남북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교통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우리측 답신)

- 귀측이 5.31 임남댐의 물을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통지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방출일정과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기 바람.
- 아울러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남과 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 경험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을 기대함.

3.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방북 관련동향

□ 개 요

- 박근혜 의원은 북측 「민화협」 초청에 따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5.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용순 비서와 회담을 가진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
 - * 재단 소속 어린이 축구팀과 북측 어린이 축구팀과의 친선축구경기 개최 문제 등 협의가 당초 방북목적
 - * 同 財團 지동훈 이사장, 신희석 이사, 장자끄 그로하 수석이사장 동행

□ 주 요 내 용(김정일 면담 주요내용)

- 동해안 철도연결 관련사항
 - 한반도 물류기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남북간 철도 연결을 촉구, 김정일은 “같은 생각이다”고 언급
 - 동 문제 관련 유럽의 여러나라와 실무급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 김정일은 “적극 찬성이다”고 언급
-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관련사항
 - 김정일은 동해안 철도가 연결되면 동 육로를 따라 “적당한 곳에 상설면회소를 설치하겠다”고 언급
- 6.25 남북군인 생사확인 관련사항
 - 6.25 전쟁시 북측에서 싸우다 행방불명된 군인들의 생사확인관련 김정일은 “적십자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언급

○ 금강산 댐 관련사항

- 김정일은 우리측 보도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 남북전문가들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자고 제의, 김정일은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

○ 남북대화 재개 관련사항

- 남북간 회담을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남북 및 국제사회의 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김정일은 “약속은 지키겠다”고 언급

○ 김정일 답방 관련사항

- 김정일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

□ 참고 사항

○ 북측은 박근혜 의원을 △접촉인사의 格 △입출경 경로 및 수단 △체류 일정 △보도내용 등의 면에서 이례적으로 환대

- 접촉 인사 : 김정일 면담 및 환영만찬, 김용순과의 회담, 김기남·장성택·임동욱·김완수 등 대남관련 주요인물 면담
- 입출경 경로 및 수단 : 전용기 入北 및 판문점 귀환
- 체류일정 : 숙소(백화원 초대소), 숙소안내(김용순), 학생소년궁전 특별공연(어린이 1,000명 동원), 귀환시 개성 시내 참관(선죽교, 고려박물관) 등
- 보도내용 : 호칭(여사,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국회의원 등), 방북전 「예고보도」 등

- 북측은 박근혜 의원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라는 상징성과 次期大選 예비주자라는 정치적 비중 등을 감안하여 예우한 것으로 평가
- 또한 민간인 자격으로 방북한 박근혜 의원과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 현재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 회의의 무산 등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에 있으나,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어져 온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간접적 의사표명으로 평가

< 박근혜 의원 방북 주요일정 >

- ① 5. 11(토)
 - 베이징 경유 방북, 「민화협」 주최 연회
- ② 5. 12(일)
 - 김용순 비서와 회담, 각계 여성대표 접촉, 평양시내 참관
- ③ 5. 13(월)
 - 김정일 면담 및 만찬, 평양시내 참관
- ④ 5. 14(화)
 - 판문점 경유 귀환(11:30)

Ⅲ. 기 타 동 향

1.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연방제 주장 推移

□ 개 요

- 북한은 6.15 공동선언 ②항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할 것을 강조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함께 선전
 - 북과 남이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00.7.31, 당창건 55돌 즈음 「구호」 발표)
 - 우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도와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임('00.8.15, 「정부·정당·단체 연합대회」 공동결의문)

□ 주 요 내 용

① 「낮은 단계 연방제」 개념 최초 제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20주년 기념보고회('00.10.6,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 보고)를 통해 6.15 공동선언에 제시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개념·내용을 최초로 공식 제시
 -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것임.
 - '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 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방안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임.

② 以後 「연방제 통일」 실현을 강조

- 노동신문, 중·평방 등 보도매체를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함께 ②항의 합의에 대해 “연방제 통일 지향”이라고 주장
 - 북과 남이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임.(’00.10.29, 노동신문)
 - 북과 남은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온세상에 선포 하였음.(’00.12.26, 노동신문)
 - 북과 남이 공동선언에서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두개의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식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민족분열이래 처음으로 되는 획기적 성과임.(’01.3.7, 평방)

③ 한나라당 대선 후보 발언(5.22) 이후 반응

- 공동선언 ②항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보도
 - 6.15 공동선언의 핵심사항은 통일은 어디까지나 연방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과 방도임.(5.24, 중·평방)
 - 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북과 남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내용”(5.27, 중방)
 - * 이회창 후보 발언에 최초로 반응한 5.24 「민민전」에서는 “남북이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기초위에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가하는 연방제 밖에 다른 통일방안이 없다” 등 언급

- 한편, 「조평통」 대변인 규탄성명(5.28)에서는 ②항에 대해 「연방제 통일」 표현 없이 「평화통일 방도」 등을 언급(5.29, 중·평방)
 - ②항은 한반도 평화보장, 민족 공존·공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유일한 방도
 - ②항을 부정해 나선 것은 북과 남의 공존은 물론 교류협력도 반대하고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
- ※ 5.28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6.15 공동선언 ②항 관련 주로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였다”고 선전하던 과거와는 달리 「평화통일 방도」라고만 언급하는 등 중립적 자세를 취한 것은 ▲남한내부의 정치정세에 대한 고려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통일」의 의미도 담고 있는 ②항에 대한 남한내 부정적 입장 차단 등의 의도로 평가
- 또한 5.30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도 ②항이 남북간에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라고 주장

□ 참 고 사 항

- 북한은 6.15 공동선언 ②항과 관련하여
 - 「낮은 단계 연방제」의 개념·내용 설명보다는, 주로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였다”는 표현으로 선전하고 있는 점이 특징
- 그러나 「고려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표현은 6.15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91년 김일성 신년사 이후 '99년까지는 사용)
 - * 다만 「조국통일 3대헌장」 관련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과 함께,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언급
 - * 6.15 공동선언 이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애국애족의 통일헌장이며 유일한 평화통일 방도” 및 “또한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99.10.11, 동 방안 제시 19주년 즈음 평방보도)

2. 美 국무부 「2001년도 年例 테러보고서」 주요내용

□ 개 요

- 미 국무부(반테러 조정관실)는 5.21 연례 테러보고서(2001년도)를 발표하고, 동 보고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State-Sponsored Terrorism) 항목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쿠바·북한·수단 등 7개국을 예년과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
 - 북한과 관련하여는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에 대한 북한 반응은 실망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에 긍정적 반응이 없으며, 특히 후자는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 일본 적군파 여객기 납치범들에 대한 은신처 제공, 지난 1년간 테러집단들에게 소량의 소형화기 판매 가능성(약간의 증거) 등을 명시
- * 북한은 '87.11 KAL기 폭파사건으로 '88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래 금년까지 연속으로 15차례 지정됨.

□ 주 요 내 용

① 국가지원 테러리즘 개관

- 부시 대통령은 '01.9.20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모든 국가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천명함.
-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지금까지의 노선을 再考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떤 국가도 테러리즘과의 연계를 충분히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직 취하지는 않고 있음.

- 수단과 리비아는 테러관련 business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란, 북한, 시리아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국제사회의 對 테러 캠페인에 협력하기 위한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으나
- 이란과 시리아는 Al Qaida와 같은 일부 테러단체를 소탕하면서도, HAMAS, Hizballah 등 여타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했으며
- 북한의 초기 긍정적 움직임은 갑자기 중단됨.
- 테러를 지원하거나 용인하는 모든 국가들이 자의 또는 타의에 관계없이 테러지원을 종료할 때까지는 동 국가들은 계속 테러단체 및 이들의 테러작전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
- 비록 2001년에도 테러지원국이 전반적인 세계 테러위협외 배후 핵심세력(guiding force)에서 벗어나려는 느린 추세가 계속되었으나 테러지원국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테러 캠페인에 핵심적 장애가 되고 있음.

② 북한 관련사항 주요내용

- 국제적인 대테러전쟁 노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실망스러움.
- 북한은 9.11사태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테러 및 테러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정책을 재차 표명하였으며, 테러자금 조달억제 협의 및 인질 억류방지 협약에 서명하고 다른 5개 협약에도 서명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함.

- 그러나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UN안보리 결의안 이행상황 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 대테러전쟁 관련노력에 협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테러리즘 관련 협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음.
- 북한은 유엔 안보리결의안 1373호가 요구하고 있는 테러자금 수색 및 차단 노력에 대해 보고치 않았으며, 대테러리즘이 의제 중 하나인 남북대화 재개 관련 한국측의 요청 및 AF 이행 제고를 위한 미국의 대화요청에도 긍정적으로 응해오지 않았음.
- WMD와 테러리즘간의 위험한 연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상기 한미 양국의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의 不應은 북한의 핵개발 및 확산 관련 의혹(implication)과 더불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사건에 참가한 일본 공산주의 적군파에 대한 북한의 은신처 제공은 테러지원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 북한이 지난해 테러단체에 대해 제한된 양의 소형무기를 판매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증거도 있음.

□ 평 가

- 금년도 테러 보고서는 북한의 미진한 반테러 활동협력에 대해 작년 보고서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테러문제를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등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표출
- 북한은 동 보고서 발표 전날인 5.20 민민전 방송을 통해

- 북한의 일관된 반테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면서 ‘미국이 테러왕초’라고 강력히 비난하였으나
- 公式的으로는(5.24 외무성 대변인 KCNA 회견) “사실상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표현으로 예년과 달리 대미비난의 강도를 이례적으로 완화하였음.
- 이 같은 점과 북한도 금년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것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 동 보고서와 관련 일시적으로 대미비난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프리차드 특사의 방북수용 등 북미대화 재개의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

IV. 분야별 일지

국 내 등 향

- 5.11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방북(5.11-14) 및 김정일 면담
- 5.15 정세현 통일부장관, 정의선 등 남북철도연결공사 관련 북한에 침묵·레일 등 건설자재(300억-400억원 상당) 지원 용의 언급(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 5.15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등 제주도민(총 253명), 북한 「민화협」 초청으로 방북(5.10-15)
- 5.21 한적, 대북비료 20만톤 지원(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시 북측 요청 사항)관련 최종항차(제25항차) 수송계획 대북통보
- 5.24 국방부 대변인, 「2002년도 국방백서」 발간 연기 발표
- 6.3 건설교통부장관,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사전통보(5.31) 관련, 북한 국토환경보호상 앞 대북전통문
- 6.4 이동통신사업 관련 민간 및 정부(정보통신부) 관계자 8명, 북한의 관련 실태파악을 위해 방북(6.4-8)
- 6.5 정부,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우리측 회담대표단 명단 통보

북 한 등 향

- 5.18 조평통 대변인, 남측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위」의 반미친북세력 명단 작성·공개관련 규탄담화
 - * 친북좌익세력 명단공개는 예비역 대령연합회·베트남 참전 전우회 등 軍 관련 6개 단체가 금년 광복절을 기해 1차 명단 공개를 추진중
- 5.20 경수로사업 관련 북측 시찰단(단장 : 안영환 원자력총국 기술처장), 남북 직항로 개설 협의 관련 방한(5.20-24)
- 5.23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KCNA 회견

- 5.27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발족(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김영대 등 총11명)
- 5.28 조평통 대변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6.15 공동선언 ②항 관련 발언(5.22 관훈클럽 대선후보 토론)에 대한 비난성명
- 5.31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사전통보
- 6. 2 남북한 민간단체(북측 : 6.15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남측 : 2002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준비위원회), 6.15 공동선언 2주년 공동행사(6.14-15, 금강산) 개최 합의

주변국 동향

- 5.20 미 국무부, 「2001년도 연례 테러보고서」 발표 및 북한·이란·이라크 등 7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 5.21 북·러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2003-2004 북러 외무성간 교류계획서」 조인(5.20-23 백남순 외무상 러시아 공식방문)
- 5.28 국제사면위원회(AI), 「2002년도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 동 보고서는 ▲북한내 공개처형, 정치범들의 강제수용소 수감, 종교박해 등 심각한 인권유린 자행 ▲중국내 탈북자의 3/4 이상이 여성으로 대부분 강간·매춘 등 성적착취 ▲중국 길림성의 용정·도문지역, 요녕성의 단둥지역 등에서 탈북자들의 체포 및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사례 다수 발견 등을 지적
- 5.29 美 국무부 대변인(리처드 바우처), 탈북자의 미국망명요청 처리문제 관련 「미국영토 이외지역에서의 망명신청시 불인정」 발언(정례 브리핑)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1호>

2002.6.10~7.2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서해교전 관련동향
-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관련 대북서한 발송
- 남북한 민간단체,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 금강산관광 남북당국회담 남측대표단, 회담무산관련 성명 발표

III. 기 타 동 향

-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 IAEA 이사회 개최결과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김대중대통령은 서해교전사태(6.29)와 관련 ▲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과·책임자 처벌·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북한의 재도발시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경고(7.2 訪日 귀국보고)
 - 이와 함께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강조
- 정순택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은 6.21 북한의 조선올림픽위원회 박명철위원장 앞 대북서한을 통해 ▲북한의 동대회('02.9.29-10.14) 참가와▲백두산 채화 및 북측 예술단의 방문공연을 제의
-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6.14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 북측 대표단장 앞 서한을 통해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4.5 공동보도문」 합의사항들의 실천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
-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남측 대표단은 6.10 지난 4월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시 합의한 제2차 회담(6.11, 금강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성명을 발표하고, 「4.5 합의」 정신에 따라 북측의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
- 남북한 민간단체는 6.14-15간 금강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해외대표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하고, 공동호소문을 채택
 - * 한편, 대북지원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방북단(단장 : 최홍준 이사장) 297명은 6.14-18 그간 추진해 온 동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및 남북기독교도인의 연합예배를 위해 방북(남북연합예배는 북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무산)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6.26 「2001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을 통해, 북한의 '01년도 대외무역액이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9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6.29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퇴각을 요구하는 우리측 해군 함정에 선제기습사격을 감행, 쌍방간 교전으로 다수의 인명 및 선박 피해가 발생(우리측 :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19명, 해군 경비정 1척 침몰)
 - * 북측은 6.29 「중방보도」를 통해 우리측이 선제사격하였으며 이는 철저히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 도발행위라고 주장, 7.1 외무성대변인 KCNA회견을 통해서도 동사건이 미국이 북남관계에 쐐기를 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주장,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

- 북측은 7.1 조선축구협회위원장 이광근 명의 우리측 대한축구협회 정몽준회장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월드컵 4강진출」 등 성과를 축하
- 북한은 6.26 지난 6.3 시작한 임남댐(금강산댐) 방류를 종료
 - * 「평화의 댐」 유입량이 초당 190여톤(6.4) → 150여톤(6.21) → 100여톤(6.26 18:00)이었으나, 현재 28톤(6.27 07:00)으로 방류전 수준(20여톤)에 근접
- 북한은 6.23 당초 4.29-6.29간 공연예정이던 「아리랑 공연」을 7.15까지 연장했음을 발표(6.23, 중방·중앙TV)
- 한편, 6.25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아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용순(대남담당 비서), 이하일(당 군사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승광장」 등 평양각지에서 다양한 反美行事を 진행
 - * 6.25 노동신문 사설(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6.10 노동신문 사설(인민군대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따라 배우자) 등을 통해 반미투쟁과 함께 「북한 소주민의 혁명적 군인정신 무장」을 촉구

◀ 주변국 동향 ▶

- 美국무성 대변인(Richard Boucher)은 7.2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7.1 오후 북한 UN대표부에 미측이 평양으로부터 時宜的 回信을 받지 못해 미측 대표단의 방북(7.10)을 추진할 수 없음과 ▲서해에서의 무력 해상충돌은 미북대화를 수행하는데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공식통보하였음을 확인
- 美上院은 6.19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보장 ▲중국 당국의 탈북자 수색과 북한 강제송환의 즉각 중단 등을 촉구
- 한·미·일 3국은 6.17-18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개최, 「프리차드」 대사 방북문제와 국제사회의 탈북자 처리문제 등을 논의
 - *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IAEA핵사찰 전면이행의 촉구 ▲북한과 대화를 통한 국제사회로의 포용 ▲대북정책에 관한 3국간 계속적 협의와 조정 유지 ▲탈북자문제 처리의 인도적 해결 희망 등 발표
- EU 대표단은 6.15-18 평양을 방문, 북한측과 제5차 정치대화(Political Dialogue)를 개최, 남북관계·탈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를 협의
- IAEA이사회(6.14, 비엔나)는 의장요약을 통해 ▲北核 검증에 3-4년이 소요됨에 따라 ▲북측이 당장 IAEA 핵사찰계획에 협조할 것을 촉구

II. 주 요 동 향

1. 서해교전 관련동향

□ 개 요

- 북한은 6.29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퇴각을 요구하는 우리측 해군 경비정에 선제기습사격을 가해, 쌍방간 교전으로 다수의 인명 및 선박피해가 발생(우리측 :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19명, 해군 경비정 1척 침몰)
- 우리측은 6.29 국방부장관 명의 대북성명을 발표, 김대중대통령은 7.2 방일 귀국보고를 통해 ▲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과·책임자 처벌·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북한의 재도발시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경고

□ 주 요 내 용

< 우리측 관련동향 >

① 합동참모본부 발표내용(관련경과/6.29 합참 공보실)

- '02.6.29(토) 09:54분경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방 14마일과 7마일 해상에서 각각 NLL을 3마일과 1.8마일 침범하여 아 고속 정편대가 출동, 대응하자 10:25분경 북 경비정에서 사격을 해와 우리측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교전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후 10:46 북한 경비정이 퇴거할 때 까지 산발적으로 교전이 계속되다가 10:50경 북한 경비정은 NLL을 북상하였음.

-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피격된 우리측 고속정 1척이 교전 종료후 예인중 침몰 하였으며, 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으로 확인되었고 북측 경비정 1척도 화염발생과 함께 파손된 것으로 관측되었음.
- 군은 금번사태에 대해 이와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써 모든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예정임.

② 국가안전보장회의 발표문(6.29, 대통령 주재)

< 조치사항 >

- 첫째, 이번 사건은 「군사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군사정전위를 즉각 소집해 오늘 사건의 진상규명, 또 북한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기로 했음.
- 둘째, 북한 경비정의 무력도발과 관련,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성명을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표할 것임.
- 셋째,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음.

< 대통령 말씀 >

- 첫째, 북한 경비정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소중한 우리 해군장병들이 다수 희생된데 대해 우리 국민과 더불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조치를 취할 것임.

- 둘째, 북한 경비정이 오늘 선제기습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며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 당국이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셋째,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일어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군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임.

③ 국방부장관 성명 (6.29, 황의돈 대변인)

- 2002년 6월29일 오전 9시54분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 퇴거를 요구하는 우리 해군 경비정에 대해 악랄하게도 선제기습사격을 가해왔음. 이 과정에서 아측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북한군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노력기로 합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이러한 북한군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 행위의 증지를 거듭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임.

④ 대통령 訪日 귀국보고 요지 (7.2)

- 월드컵 3, 4위전이 열린 지난 29일, 북한 함정이 우리 함정을 기습 공격했음.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음. 그러나 북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음.

- 정부는 북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더욱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그리하여 어떤 도발에도 다시는 이런 손실을 입지 않도록 대비하겠음.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음. 그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임.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임. 우리는 확고한 군사적 대비 위에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와 EU 등 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함.
-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은 우리의 대책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고 대화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함. 우리는 확고하게 안보를 지킴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음.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가야함.

< 북한측 관련동향 >

① 「중방」 보도(6.29, 16:00)

-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29일 남조선 군이 서해해상에서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민군 해군경비함들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음.

- 10시 10분경 10여척의 어선들과 함께 연평도 서남쪽 우리측 영해 깊이까지 침입한 남조선 해군전투함선들의 행동을 저지시키려고 책동한 우리 해군경비함에 대하여 적 전투함선들은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가했음.
- 이에 대응하여 아군 함선은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쌍방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손실들이 있었음.
- 이번 사건은 철저히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임.
- 최근에 만도 남조선 군은 거의 매일과 같이 전투함선들과 어선들을 우리측 영해 깊숙히 침투시켰으며 우리 해군 경비함들이 출동하면 일단 물러나는 척 하면서 이 수역의 정세를 긴장시켜 왔음.
- 남조선 군 당국자들은 서해 해상에서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북남관계를 긴장, 격화시키려고 꾀했음.
- 남조선군 당국자들은 이번 무장도발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도발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함.

② 외무성 대변인, 7.1 KCNA 회견(7.2, 06:15 중방)

- 이 사건은 남조선군이 우리측 영해에 침범하여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함들에 먼저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한 무장충돌사건임.
- 사건의 진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군의 영해침범과 선제사격은 명백히 도발행위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사격은 자위적 조치이며 정당방위임.

-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함들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다고 떠들고 있는데 대해 말한다면 그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에도 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협정체결 이후 우리와의 그 어떤 합의도 없이 우리 수역에 제멋대로 그어 놓은 비법적인 유령선임.
- 남조선의 군 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 남조선군 전투함선들의 이러한 침범과 도발행위에 대해 모를리 없으며 미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
- 제반 사실은 이번 사건이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밑에 일어난 것으로서 원래부터 북남관계의 진전을 달가와하지 않고 제동을 걸어온 미국이 북남관계에 쐐기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3자들은 이번 사건의 내막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블리 이러쿵 저러쿵 하기에 앞서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에 정당한 주의를 돌려야 함.
- 대화는 대화이고 자주권은 자주권임.

2.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 관련 대북서한 발송

□ 개 요

-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6.14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에 즈음한 북측 대표단장 앞 서한을 통해,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4.5 공동보도문」 합의사항들의 실천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

□ 주 요 내 용(대북서한 요지)

- 6.15 공동선언은 지난 반세기의 불신과 대결구도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의 대장전임.
-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큰 물줄기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그러나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남과 북의 당국은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겨야 할 책임이 있음.
- 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서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귀측이 지난 5월 31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것은 내외의 우려를 해소하고 남북간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조치로 평가함.
- 이제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되살려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켜 나가야 하겠음.
- 그러기 위해서는 「4.5 공동보도문」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함.

3. 남북한 민간단체,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 개 요

- 남북의 민간단체는 6.14~15간 금강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맞아 남·북·해외대표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
 - 제1일(6.14) : 개막식, 공동사진전, 단오민속축전, 합동만찬 (북측 주최)
 - 제2일(6.15) : 부문별 모임, 예술공연, 폐막식, 합동공연, 공동산행
- * 남측 방북단(218명)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05명, 「7대종단」 36명, 「통일연대」 59명, 기자단 18명

□ 주 요 내 용

① 개 막 식

- 남북은 개막연설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민족통일을 앞당기자고 강조(공동사회 : 남측 김종수 「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공동대표, 북측 허혁필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 개막연설은 남북대표 각 3명, 해외대표 1명으로 배정
 - 남측 : 윤재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의장, 김철 「천도교」 교령,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 북측 :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염순길 「직총」 위원장, 이영희 「여맹」 부위원장
 - 해외 : 양동민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의장

- 「통일연대」 대표 한상렬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어 4월 남북특사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실천에 앞장서자」고 촉구
- 주석단은 남·북·해외 각 9석으로 구성
 - 북측 주요 참석자 : 안경호 「조평통」 부위원장, 여원구 「조국전선」의장, 김명철 「농근맹」 부위원장, 황병준 「종교인협의회」 상무위원, 김인호 「청년동맹」 부장, 이수호 「민족화해협의회」 상무위원

② 부문별 모임

- 민화협·노동·농민·청년학생 등 9개 분야 남북의 관련단체간 교류문제를 협의
 - 주로 우리측이 북측 의향을 타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 합의보다는 원칙적 의견접근에 가까웠으며
 - 남북간 협의된 내용은 추후 실무협의를 당국승인을 받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많은 인원 에 비해 모임시간이 짧아(1시간여) 대부분 참가자 상견례 및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 확인, 향후 교류사업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는 선에서 종료
 - 청년 : 「남북청년학생대회」(7.26~27, 금강산, 남측 300명) 개최합의
 - 여성 : 「남북여성통일대회」(9월, 금강산) 개최 잠정합의
 - 농민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통일쌀 1,000가마 지원의사 표명

- 노동 : 「통노회」 지속협의 공감, 북측은 8.15에 대표자회의를 갖자고 제의
- 언론 : 기자협회는 「남북기자토론회」(7.16, 금강산) 개최 등 제의
- 종교 : 천도교는 8.14 지일기념식 공동봉행, 원불교는 빵공장 대북지원, 민족종교는 개천절 공동행사(10월, 평양) 개최 제안
- 환경 :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 江 발원수 조사사업 등 제의
- 보건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은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제안

③ 체육·문화행사

- 남북혼성으로 「연대팀」과 「연합팀」을 편성, 줄다리기·널뛰기·씨름 등 민속경기와 6.15km구간 통일 마라톤대회 개최
- 전통음악 및 통일노래 중심의 합동문예공연 진행
 - 남측 : 통일춤(서울대 교수 이애주)·국악(국악인 임정자)·노래(노래패 '우리나라')
 - 북측 : 장고춤, 옥류금 연주, 노래(공훈배우 이용수)

④ 공동호소문 채택

-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더욱 높이고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함.
- 외세에 의한 전쟁위협을 배격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행위들을 반대함.

□ 평 가

- 금번 행사는 2002년 성사된 첫 민간남북공동행사로서 남북관계 소강상태에서도 남북민간이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統勞會」 개최 자제 등 정부방침을 준수하고 들출행동없이 행사를 원만히 진행, 한층 성숙된 교류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문제가 논의됨으로써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4. 금강산관광 남북당국회담 남측대표단, 회담무산관련 성명 발표

□ 개 요

- 남측 대표단은 6.10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시(4.5) 합의한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 회담이 예정(6.11, 금강산)대로 개최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 「4.5 공동보도문」의 합의정신에 따라 북측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

□ 주 요 내 용(성명 全文)

- 우리측은 지난 4월 대통령특사 방북시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제2차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
- 우리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특사방북 이후 조성된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남북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 4.5 합의의 정신에 맞게 북측이 이미 합의한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Ⅲ. 기 타 동 향

1.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 개 요

- 통일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에 즈음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02.6.11~6.12 전국의 만20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

□ 주 요 내 용

- 조사결과 국민의 대다수(73.0%)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였으며, 그 추진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64.5%)도 높게 나타나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기반은 확고한 것으로 평가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주목할만한 진전으로 이산가족상봉을 꼽는 의견(59.3%)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 남북대화 재개시 최우선 논의사항으로도 이산가족문제를 거론하는 경우(34.8%)가 가장 많아
 -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확인

-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2/3(66.1%)가 현재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 현재의 대북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현정부 임기내 대북정책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드는 의견(31.4%)이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22.6%),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20.2%) 등의 순서로 나타남.

2. IAEA 이사회 개최결과

□ 개 요

- IAEA 이사회가 6.10-14 비엔나에서 미·일·중·러시아 등 35개 이사국 참가하에 개최되어, 핵안전조치 추가의정서 발효문제 등을 논의하고 대북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한 후 폐막
 -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안전조치제도 강화 ▲IAEA 역할 확대 등에 공감대를 형성
 - 한편 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일 등 주요국들이 북한 핵물질 검증에 3-4년이 소요됨을 들어 북한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

□ 주 요 내 용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개막보고에서
 - 북한은 IAEA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북 제네바 핵합의(AF) 범위내에서만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북핵 검증에 3-4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할 때 IAEA가 제의한 사찰계획에 북한이 지금 협조를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 제18차 IAEA-북한간 기술협의회(6월중 개최)에서 IAEA에 제출한 북한측의 최초보고서 검증문제를 협의하는데 북한이 동의하였음을 확인

-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연설에서
 - 미국의 경우 IAEA의 과거 북한 핵활동 규명 노력이 1년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즉각적인 협력을 촉구한데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
 - 일본은 IAEA 사찰관 방북 등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경수로 핵심부품 이전은 북측의 안전조치이행과 결부되어 있다면서 조기 핵사찰 협력을 촉구
 - EU는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AEA가 2001.5 제의한 대북핵사찰 계획에 즉각 협력할 것을 요구
 - 캐나다·호주·스페인 등은 북핵 검증 완료에 3-4년이 소요된다면서 차기 IAEA-북한간 기술협의회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측의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
 - 중국은 IAEA의 핵관련 시설 방문 수용·KEDO와의 협상 재개·경수로 건설관련 남북한 직항노선 개설 협조 등 그간 북측의 협력자세를 부각시키면서 유관국들의 제네바합의 준수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강조
- 북핵 관련 「의장요약」은 IAEA-북한간 기술협의회(6월말 개최)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북한측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

□ 전 망

- IAEA가 북한측에 제시한 핵사찰 계획에 북한이 당장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 일·호주 등 주요 이사국들이 북한 핵물질 검증에 최소한 3-4년이 소요됨을 들어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특히 미국은 1년내 북핵 규명에 진전이 있어야함을 강조함으로써
 -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핵사찰 수용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IV. 분야별 일지

국 내 동 향

- 6.10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남측 대표단, 회담무산관련 성명
- 6.14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관련, 북측 대표단장 앞 서한
 - * 남북관계 원상회복 및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조속 개최 촉구
- 6.15 남북한 민간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6.14-15, 금강산) 개최 및 공동호소문 채택
- 6.18 한민족복지재단 방북단(단장 : 최홍준 이사장) 297명 방북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평가 실시
- 6.21 정순택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박명철 위원장 앞 서한
 - * 북한의 대회참가(2002.9.29-10.14)와 백두산 채화 및 북측 예술단 방문 제의
- 6.29 국방부장관, 「서해교전」 관련 대북성명 발표
- 7. 2 김대중대통령, 「서해교전」 관련, 북한의 재도발시 강력대응 경고 및 한반도 평화증진 노력 지속 강조(訪日 귀국보고)

북 한 동 향

- 6.14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대변인, 남측 당국의 이적단체(범민련) 조직원 방북불허조치 관련 규탄담화
- 6.18 북한, UN총회 제56차 전원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UN의 발전도상국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우선적 관심 표명」 주장
 - * UN총회 제56차 전원회의는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문제」를 토의
- 6.23 중방 및 중앙TV, 「아리랑 공연(4.29-6.29)」 7.15까지 연장사실 보도(6.20, 조선국가관광총국 결정)

- 6.25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등 反美行事 개최
- 6.26 북한, 임남댐(금강산댐) 방류 종료
- 6.29 북한, 「서해교전」 유발 및 남측의 계획적 도발 주장(6.29, 증방)
- 7. 1 조선축구협회위원장 이광근,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 축하」 관련 대한축구협회 정몽준회장 앞 서한

주변국 동향

- 6.13 서방 선진8개국(G8) 외무장관회의, 한반도문제 관련 성명
 - * 북한의 무기개발계획 중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문제 등에 관해 북한 당국의 건설적 대응 촉구
- 6.14 IAEA 이사회, 「의장요약」 발표 및 IAEA 핵사찰계획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전면적 이행 촉구
- 6.14 러시아 외무부,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 관련 성명
 - *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및 안정분위기 조성 등 남북관계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6.18 EU 대표단 방북(6.14-18) 및 북한과 「제5차 정치대화」 개최
 - * EU측은 현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콘데」 외무부 아주국장 등 6명이, 북측은 최수현 외무부상 등이 참석
- 6.18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 개최(6.17-18) 및 「프리차드」 대사 방북 및 탈북자 처리문제 협의
- 6.19 美 상원,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결의안」 채택
- 7. 2 美 국무부대변인(리차드 바우처), 미북대화 재개관련 북한 UN대표부에 미측 대표단 방북(7.10 예정) 철회 공식통보(7.1) 확인(대언론 브리핑)
 - * 이와 함께 북측에 대해 서해에서의 무력해상충돌(6.29)은 미북대화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통보한 사실도 공식확인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2호>

2002.7.4~7.18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서해교전 관련동향(2)
- 북한,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 관련 「조평통 성명」 발표

III. 기 타 동 향

- 상반기 대북지원 현황
- 상반기 남북교역 현황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 대표단 및 회담업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내 동향 ▶

- 김대중대통령은 7.15 서해교전 관련 ▲이를 북한의 불법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이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과 ▲북미 대화도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을 때 개최될 것임을 강조(기자간담회)
 - * 합동참모본부는 7.7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공식발표, 동 사건을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의도적인 선제공격」으로 규정
- 남북한 민간단체(남측 :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북측 : 민화협)는 7.15 「8.15 남북공동행사」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7.20-23, 평양) 개최에 합의
 - * 동 실무접촉에서는 「6.15 민족통일대축전」(6.14-15, 금강산)시 협의한 남북청년 학생대회(7.26-27, 금강산), 8.15 남북공동행사(8.13-18, 서울), 남북여성평화 대회(9월, 금강산) 등도 협의할 예정
- 한·일 외교장관(최성홍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장관)은 회담을 개최(7.13, 서울) ▲서해교전 이후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동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북한과 건설적 대화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 정부는 7.5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정부 방침과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유지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원칙 재확인

◀ 북한 동향 ▶

- 7.16 「중방」을 통해 “김정일장군이 「아리랑」 공연기일을 연장도록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 주셨다”고 보도, 「아리랑공연 재연장 조치」를 확인
 - * 북한은 6.23 「중방보도」를 통해 당초 4.29-6.29간 예정이던 「아리랑공연」을 7월 중순(7.15)까지 연장한다고 既보도
- 7.13 「중방」을 통해 평양 3대혁명전시관의 「인공지구위성관」을 소개하면서, “이곳에는 「광명성 1호」의 모조품과 함께 앞으로 개발하게 되는 한가지 종류의 인공지구위성모형이 전시되어 있다”고 보도,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추가개발을 공개적으로 시사
- 서해교전 관련,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회(7.4, 양형섭 보고), 7.5 KCNA 논평, 7.8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7.9 노동신문 논평, 7.7 및 7.10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등을 통해 ▲동 사건의 책임을 남측 軍당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NLL의 非法性を 지속 선전

- * 7.8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우리측 침몰 경비정의 인양작업시 작업날짜와 시간, 동원선박과 장비, 활동수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통보해야 한다고 주장
- * 7.5 KCNA 논평을 통해서도 럽스펠드 美국방장관의 「정전협정 위반」 언급(7.2)과 관련하여 “미국은 NLL이라는 유령선의 비법성부터 인정하고,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 관련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도 “남북 관계를 대결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북측의 「대화·협력 노력 지속」을 강조하는 등 二重의 態度를 시현

◀ 주변국 동향 ▶

- UN인도지원조정국은 7.11 인도적 대북지원현황 보고서(UNOCHA Bulletin 2002-6)를 통해, 유엔이 국제사회에 요청한 전체 지원목표액(2억5,800만불)이 6.30 현재 약 61%(1억6,000만불) 확보되었음을 발표
- 파월 미국무장관은 7.11 下院 「국토안보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및 확산과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과 관련하여 「악의 축」 국가인 북한·이라크·이란 등 특정국가들에 대해 심각한 관심과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 허바드 주미대사는 7.8 「ITV 특별대담」을 통해 ▲미국은 서해사태가 북한의 의도적 도발임을 확신하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 불변 ▲북미대화 재개 기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지속 등을 언급
 - * 이와관련,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은 7.9 정례브리핑을 통해 △허바드대사의 발언내용을 공식확인하고 △북미대화 재개시기 관련, 북한과의 실무자급접촉 계속 및 모든 관련 사안들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 결정 등을 확인
- 美 의회회계감사원(GAO)은 7.9 「식량원조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통해 ▲미 당국의 대북식량원조 운영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특히 대북원조 식량의 오용 방지 및 분배감시체계 강화를 요구
-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7.4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서해 교전이 현재 한반도정세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
-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은 7.11 자카르타를 공식방문(7.10-12)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 하고 ▲7월말 예정인 ARF에 북한 외무상의 파견을 요청(인도네시아 하산 위라유다 외무장관 공식발표)

II. 주 요 동 향

1. 서해교전 관련동향(2)

□ 개 요

- 북한은 서해교전(6.29) 관련, 7.5 KCNA 논평, 7.8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7.7 및 7.10 해군사령부 보도 등을 통해 동사건의 책임을 우리측 軍당국과 미국측에 전가하고 북방한계선(NLL)의 非法性을 지속적으로 주장, 북방한계선의 爭點化를 기도
 - 7.8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서는 우리측 침몰 경비정의 인양작업시 작업날짜·시간·동원선박 및 장비·활동수역 등 구체적 사항의 사전통보를 요구
 - 7.7 및 7.10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서서는 ▲남측이 해군함선 2척을 북측영해에 불법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이는 새로운 무장충돌을 야기하는 위협천만한 행위로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주장

□ 주 요 내 용

① 7.5 조선중앙통신(KCNA) 논평

- 7.2 美 국방장관 럽스펠드와 국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의 도발」이니, 「정전협정위반」이니 하는 흑백전도의 궤변을 늘어 놓았음.
- 이번 서해교전사건은 미국의 비호 밑에 남조선 해군함선들이 우리 인민군 경비함들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임.

- 북방한계선은 비법적 유령선이며 총참모부는 '99.9.2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으며, 해군사령부는 위임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하였음.
- 미국은 북방한계선의 비법성부터 인정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행위에 대하여 사죄해야 함.

② 7.7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 남조선군 해군은 오늘(7.7) 10시 30분경 전투함선 2척을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앞 우리측 영해에 불법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음.
- 지난 6월 29일에 있는 무장충돌사건의 여운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또다시 전투함선들을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킨 것은 이 수역에서의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임.
- 우리는 남조선군 전투함선들의 이러한 침입이 새로운 무장충돌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데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킴.

③ 7.8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우리는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이른바 북방한계선이 라는 것을 들고 나온데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북방한계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음.
- 첫째로, 북방한계선이란 1950년대에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이 우리와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제멋대로 그어놓고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우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있는 일방적인 선임.
- 둘째로, 북방한계선은 조선군사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비법적인 선임.

- 셋째로 미국과 남조선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법에 어긋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해에서 해상군사분계선을 명백히 협의 확정하자는 조선인민군측의 요구를 수십년 동안 집요하게 반대하여 왔음.
- 한편, 남조선측이 이번에 침몰된 함선을 인양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으나,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우리의 군사 통제수역이므로 인양작업 과정에 예견치 않은 새로운 충돌을 미리 막자면 작업날짜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과 장비 그리고 활동 수역 등 구체적 사항들을 미리 조선인민군측에 통보하여야 함.

④ 7.10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 남조선군 해군은 10일 10시 5분경과 10시 25분경에 강령반도 등산곶과 구월봉 남쪽 우리측 영해에 두 척의 전투함선을 침입 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음.
-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감행된 남조선군 전투함선들의 우리측 영해침범 행위는 6월 29일에 있던 무장충돌 사건이후 극도로 팽팽해진 이곳 수역에서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켜 새로운 불집을 터뜨리려는 계획적인 도발책동임.
- 우리는 남조선군 당국자들이 서해 우리측 영해에 전투함선들을 연이어 침범시켜 엄중한 군사적 충돌을 재발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책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킴.

2. 북한,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 관련 「조평통 성명」 발표

□ 개 요

- 북한은 동 성명(7.3)을 통해 서해교전 이후 대남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입장을 표명하고, “남북관계를 대결·전쟁이 아닌 대화·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 주 요 내 용(성명 요지)

- 7.4 공동성명은 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밝힌 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6.15 공동선언」 발표로 그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음.
- 북한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여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함.
- 남조선 당국과 호전세력들은 북남대화와 접촉에 합의하고는 돌아 앉아 그에 배치되는 언동을 하거나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우리는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북남 쌍방이 합의한대로 대화와 협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평 가

- 이번 북한의 조평통 성명은 서해교전 이후 대남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입장 표명임에도 불구하고 동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 우리측에 대해 「남북관계 긴장조성행위 중지」를 촉구하면서 북측의 「대화·협력 노력 지속」을 강조
-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최근의 당국대화 중단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한편, 서해사건과 관계없이 남북화해·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

Ⅲ. 기 타 동 향

1. 상반기 대북지원 현황

□ 개 요

- 상반기(2002.1~6.30)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총 1,123억원 (8,573만불)으로, 국제사회지원 총액 2억6,053만불(한국포함)의 32.9%를 차지

□ 주 요 내 용

① 정부차원 지원

- 식량지원, 농업생산성 향상 및 보건의료 분야 등 861억원 지원
 - 옥수수(WFP) 10만톤 235억원, 말라리아 방역(WHO) 8억원, 비료 20만톤 618억원
- * 전년 동기 908억원 대비 5.2% 감소

② 민간차원 지원

- 한적 및 21개 지원단체에서 262억원 지원
 - 결핵퇴치, 심장병 치료 등 의료지원, 국수·제빵공장, 농·목장 운영 등 협력사업 형태의 지원도 병행
- * 전년 동기 488억원 대비 46.3% 감소

③ 국제사회 지원

- 기간중 국제사회 지원 총액은 1억 7,480만불
 - UN기구 1억 4,227만불, 개별국가 2,311만불, 국제NGO 942만불
 - * 전년동기 1억 8,808만불 대비 7.1% 감소

2. 상반기 남북교역 현황

□ 개 요

- 금년도 상반기 남북교역현황은 ▲남북간 교역액이 214,936천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9% ▲위탁가공 교역액은 52,973천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3% 각각 증가

□ 주 요 내 용

① 교역 전반

- 금년도 상반기 전체 남북교역액은 214,936천달러로 전년 동기 197,290천달러 대비 8.9% 증가
 - 반입액은 96,010천달러로 전년동기 63,266천달러 대비 51.8% 증가한 반면, 반출액은 118,927천달러로 전년동기 134,024천달러 대비 11.3% 감소
-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214개(위탁가공업체 63개)이며, 품목수는 447(위탁가공교역 품목 194개)

② 거래성 교역

- 상반기 거래성교역은 118,21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1.9% 증가
 - 이중 반입은 95,82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한 반면, 반출은 22,390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6% 감소

- 위탁가공교역은 52,973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3% 증가, 전체교역액의 24.6%, 거래성교역액의 44.8%를 차지
 - 반입은 32,841천달러로 전년동기 23,494천달러 대비 39.6% 증가하고, 반출은 20,132천달러로 전년동기 21,658천달러 대비 7.0% 감소
- 상업적 매매거래는 65,241천달러로 전년동기 44,484천달러 대비 46.7%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5.1%를 차지
 - 반입은 62,983천달러로 전년동기 39,608천달러 대비 59.0% 증가하고, 반출은 2,258천달러로 전년동기 4,876천달러 대비 53.7% 감소

③ 비거래성 교역

- 상반기 비거래성교역은 96,722천달러로 전년동기 107,655천달러 대비 10.2%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45.0%를 차지
 - 반입이 186천달러로 전년동기 164천달러 대비 13.4% 증가한 반면 반출은 96,537천달러로 전년동기 107,491천달러 대비 10.2% 감소
- 협력사업용 물자교역은 34,874천달러로 전년동기 20,466천달러 대비 70.4%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16.3%, 비거래성 교역액의 36.1% 점유
 - 경수로사업 물자는 28,083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2.9%, 금강산관광사업 물자는 3,009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4.3% 각각 증가, 기타 협력사업 물자는 3,782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1% 감소

- 대북지원물품의 반출은 59,807천 달러로 전년동기 83,731천달러의 61.8%에 해당대비 28.6% 감소(전체교역액의 27.8%)
 - 주요 지원품목은 비료·의약품 등 화학공업제품이 48,600천달러, 과일·곡류 등 농림수산물이 2,610천달러, 내의·의류 등 섬유류제품이 5,510천달러, 의료기기 등 기계류제품이 1,399천달러, 전기·전자제품이 589천달러, KEDO 중유지원 반출이 2,041천달러 등

□ 평가 및 전망

- 금년 상반기 남북교역액은 전반적인 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입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
 - 철강금속제품, 전자 및 전기제품, 섬유류, 농림수산품의 반입이 각각 41.9%, 40.2%, 58.4%, 47.2% 증가
- 위탁가공교역은 반입의 경우 섬유류(57.1%)와 전기전자제품(31.6%)이, 반출의 경우 농림수산물(17.9%) 및 화학공업제품(12.4%)의 증가가 위탁가공교역의 상승을 주도
 - 상업적 매매거래는 반입에서는 농림수산물(54.7%), 광산물(18.9%), 화학공업제품(96.7%) 등이, 반출의 경우 섬유류(17.6%)의 증가가 상업적 거래의 상승을 주도
- 비거래성교역이 전년동기 10.2% 감소한 것은 KEDO 중유 및 대북지원 등 지원성 물자의 감소에 기인
 - KEDO 중유는 전년동기 대비 41.0%, 대북지원은 28.6%, 기타 협력사업은 21.1% 각각 감소
- 6월중 거래성교역의 전월대비 증가율은 12.2% 증가, 이러한 거래성교역의 상승추세는 7월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월대비 증가율이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

IV. 분야별 일지

국내 동향

- 7.5 NSC 상임위, 서해교전관련 정부입장 정리
 - *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기존 정부방침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기초 유지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원칙 재확인
- 7.7 합동참모본부, 서해교전 조사결과 발표
 - * 동사건을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의도적인 선제공격으로 규정
- 7.14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서울, 최성홍 장관/가와구치 요리코 장관) 및 서해교전 이후 대북정책 공조방안 논의
 - * 서해교전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 북한과 건설적 대화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에 합의
- 7.15 남북한 민간단체(남: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북:민화협), 「8.15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7.20-23, 평양) 합의

북한 동향

- 7.4 북한,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 관련 「조평룡 대변인 성명」 발표
 - *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협력의 지속추진 입장표명
- 7.8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서해교전관련 담화 발표
 - * 동사건의 책임을 남측 군사당국과 미국에 전가, 남측의 침몰경비정 인양시 날짜·시간·동원선박 및 장비·활동수역 등 구체적 사항의 사전통보 주장
- 7.1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인도네시아(7.10-12) 방문
- 7.13 중방, 평양 3대 혁명전시관의 「인공지구위성관」 소개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사
 - * “이곳에는 광명1호의 모조품과 함께 앞으로 개발하게 되는 한가지 종류의 인공 지구위성이 전시되어 있다”고 보도

주변국 동향

- 7.8 허바드 주한미국대사,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 및 북미대화 재개 기대 표명
- 7.9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허바드 대사 발언(7.8) 및 북한과의 실무접촉 계속 입장확인
- 7.9 美 의회회계감사원(GAO), 「식량원조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발표 및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체제 강화 필요성 지적
- 7.11 파월 미국무장관, 대량파괴무기 개발 및 확산과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해, 북한 등 「악의 축」 국가에 대한 심각한 관심과 우려 필요성 강조(하원 「국토안보특별위원회」 증언)
- 7.11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 북한 김영남에게 남북대화 재개 촉구 및 7월말 개최 예정 ARF에 북한 외무상 파견 요청(인도네시아 외무장관 공식발표)
- 7.11 UN 인도지원조정국, 인도적 대북지원현황 보고서(UNOCHA Bulletin 2002-6) 발표

* 6.30 현재 대북지원 목표액(2억5,800만불)의 61%(1억6,000만불) 확보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3호>

2002.7.19~7.25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북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제의
- 북한, 정전협정체결 50주년 관련 「외무성 대변인담화」 발표

III. 기 타 동 향

- 남북한 민간단체,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합의
- 상반기 북한의 외교활동 평가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내 동향 ▶

-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민화협 조성우 집행위원장 등 15명)는 7.20-23 평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8.15 남북공동행사」를 8.15-16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
- 남북한은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관련, 금년 1월 KEDO-북한간 항공로 개설 합의에 따라, 7.20 양양-선덕(915km, 1시간 25분)간 「동해 직항로 첫비행」을 실시

◀ 북한 동향 ▶

-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김령성은 7.25 남측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 대남전통문을 통해, 특사방북시 합의사항문제 등을 협의키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8월초, 금강산) 개최를 제의
- 외무성대변인은 7.24 정전협정체결 50주년 관련 담화(7.25, 중/평방)를 통해 ▲서해교전(6.29)은 미국이 NLL을 비법적으로 조작, 철회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한반도의 항시적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UN군사령부의 조속한 해체를 주장

◀ 주변국 동향 ▶

- 미국은 미군유해공동발굴사업 관련 북미실무회담(6.7-6.9, 방콕) 합의에 따라, 7.20 제1차 발굴작업(7.20-8.20) 실시를 위한 미국측 관계인원(28명)을 북한에 파견
 - * 미국과 북한은 방콕 실무회담에서 ▲금년도에 총 3회의 유해발굴작업(1차 : 7.20-8.20, 2차 : 8.24-9.24, 3차 : 9.28-10.29, 실시지역 : 평안남도 운산군 및 함경남도 장진군) 실시 ▲유해발굴 보상금 총 313만 달러 지급 등에 합의
- WFP는 최근 「WFP EMERGENCY REPORT 2002-28」을 통해 6.22-7.2 실시한 북한 곡물작황평가조사 결과 ▲겨울밀과 보리의 작황이 작년보다 양호(지난 3-4년 평균치 초과)하며 ▲6월부터 성인 1인 기준 1일 식량배급량이 5월보다 100g 많은 350g으로 증가했다고 발표

Ⅱ. 주 요 동 향

1. 북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제의

□ 개 요

-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7.25 남측 정세현 수석 대표 앞 전통문을 통해 ▲서해교전사건(6.29)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및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 등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8월초, 금강산) 개최를 제의

□ 주 요 내 용(전통문 요지)

- 얼마전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함.
- 중단된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며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족공동이익에 맞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풀어 나갈데 대한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인정함.
- 이러한 입장에서 서울에서 제7차 북남상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합의한 철도연결, 이산가족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의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하여 8월초 금강산에서 북남상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가질 것을 제의함.

2. 북한, 정전협정체결 50주년 관련 「외무성 대변인담화」 발표

□ 개 요

-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담화(7.24)를 통해 ▲서해교전사건(6.29) 등 정전협정 무실화의 책임을 미국측에 전가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UN군사령부의 지체없는 해체를 주장

□ 주 요 내 용(담화 요지)

- 정전협정체결 이래 미국은 줄곧 이 협정을 체제적으로 위반·파괴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켜 왔음.
- 특히, 현 미행정부는 우리 체제에 대한 극단적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노골적인 대조선 강경적대시정책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음.
- 미국이 북남관계문제를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복종시키려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도 엄중한 곡절을 겪고 있음.
- '99년에 이어 또다시 서해에서 무장충돌사건이 발생하고 앞으로 보다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정전협정에도 없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비법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데 있음.
- 제반사실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종식되어야 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의 비법성을 가리우는데 이용하고 있는 UN군사령부가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하며, 문제해결을 바란다면 미국이 해야할 바를 먼저 해야할 것임.

Ⅲ. 기 타 동 향

1. 남북한 민간단체,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합의

□ 개 요

-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7.20-23 평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8.15 남북공동행사」를 8.15-16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 개·폐막식, 예술공연, 미술·사진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9월 초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9월중순 「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 관련협조 등

□ 주 요 내 용(합의서 요지, 7.25 중방)

- 북남대표들은 6.15공동선언이 어떤 정세 속에서도 반드시 고수·이행되어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당면한 대책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음.
- 북남대표들은 6.15공동선언을 고수, 그 이행을 추동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족통일운동을 적극 추진시켜 나갈 일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음.
 1. 쌍방은 오는 8.15 광복절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로 8.15 민족통일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북측은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음.

2. 쌍방은 8.15 통일행사를 8.15-16 이틀간에 걸쳐 진행하되 민족단합대회, 북남예술공연, 북남미술전시회와 사진 전시회 등을 하기로 하였음.
3.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은 8.14-17까지 서울을 방문하며 내왕경로는 직항로로 하기로 하였음.
4. 8.15 민족통일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남측은 서울을 방문하는 북측 대표단을 따듯이 마중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5. 쌍방은 8.15 민족공동행사의 성과와 경험을 살려 금강산에서 9월 초순에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가, 9월 중순에 북남여성통일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도와 주기로 하였음.

2002년 7월 23 평양

2. 상반기 북한의 외교활동 평가

□ 개 요

- 상반기 북한은 「대아시아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고 김정일의 외국인사 접견이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가운데 「러시아에 집중」함으로써 대러 유대강화에 주력
 - 대외적으로 대북경제지원과 경제협력·투자에 주력하면서 노후화된 기간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대외협력에 주력

□ 주 요 내 용

- 상반기 북한은 활발한 「대아시아 정상외교」와 함께 「김정일의 외국인사 접견」이 급증
 -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3월)·르엉 베트남 주석(5월)·분양 라오스 총리(5월) 초청과 김영남의 태국·말레이시아(3월) 순방을 통해 경제협력증진을 도모
 - 김정일의 외국인사 접견이 전년동기에 비해 3배(18회) 증가한 가운데 러시아에 집중(12회)됨으로서 대러 긴밀 관계 과시
- 초청·방문외교는 전년동기에 비해 초청활동이 46% 증가한 반면, 방문활동은 16% 감소
 - 초청활동이 증가(240→351건)한 것은 김부자 생일행사와 아리랑공연에 기인(초청중 문화분야가 75%)

- 대북경제지원·투자유도에 주안을 둔 가운데, 노후한 기간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 확보에 주력
 - 태국과는 쌀 30만톤 수입계약을, 베트남과는 쌀 5,000톤의 무상원조를 성사시키고, EU측에는 식량·비료 등의 원조를 요청
 - 러시아와는 구소련이 지원·건설한 전력·제철·정유산업 현대화와 극동지역과의 임업·어업·광산개발 협력사업 등 추진
 - * 북-러간 평양·동평양 화력발전소 현대화 의정서(3.15), 북한-연해주·바츨스크·아무르州간 무역·경제협력 의정서(4.9)등 각종 경제협정체결
 - 이탈리아로부터는 산업설비 현대화 차관 도입을, 유럽 투자은행으로부터는 경제개발자금 대부를 적극 타진
- 대외협정 체결은 총 41건으로서 년동기(43건)와 비슷한 수준
 - 총 41건 협정중 역·투자보장·과학기술협조협정 등이 30건으로 대부분(73%)을 차지
- 금년 상반기중 북한은 「정상외교」의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제기반 조성과 대북투자 유도 등 「경제실리외교」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

IV. 분야별 일지

남북한 관련동향

- 7.20 남북한,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관련 「동해직항로」(양양-선덕 : 915km, 1시간 25분) 첫비행 실시
- 7.23 남북한 민간단체(남측 :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북측 : 민족화해협의회), 「8.15 남북공동행사」(8.15-16, 서울) 개최 합의
- 7.24 북한 외무성대변인, 정전협정체결 50주년 관련 담화 발표
 - * 동 담화에서 ▲서해교전(6.29) 등 정전협정무실화 책임을 미국측에 전가 및 NLL 철회 ▲주한미군 철수 및 UN군사령부 해체 등 주장
- 7.25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김령성, 남측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 대남전통문을 통해, 특사방북시 합의사항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8월초, 금강산) 제의

주변국 관련동향

- 7.20 미국, 금년도 제1차 미군유해발굴작업(7.20-8.20, 평남 운산군 및 함남 장진군) 관련, 미측 관계인원(28명) 방북 파견
- 7.25 UNC- 북한, 서해교전(6.29) 관련 「군사정전위 비서장접촉」 개최
 - * 북측은 남측의 침몰 경비정 인양작업계획 등을 토의하자면서, 인양작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UNC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NLL 무효화에 주력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4호>

2002.7.26~8.5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개최
- 북한, NLL 관련 「조평통 서기국 백서」 발표

III. 기 타 동 향

- 북·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국교정상화 관련 공동보도문 채택
- FAO/WFP, 「2001/02 북한 곡물작황 평가보고서」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8.2-8.4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고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일정(8.12-14, 서울)과 의제,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북한참가 등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
- 통일부 대변인은 7.30 최근 「대북 쌀 30-50만톤 지원」 언론보도 관련, 현재까지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 바 없음과 식량지원문제는 향후 남북간 협상과정 및 국민적 여론을 토대로 결정될 것임을 지적
- 통일부는 「2002년도 상반기 남북간 선박운항 및 물동량 현황」을 통해, 상반기 선박운항 횟수 및 물동량이 전년동기 대비 22.5%와 9.7%로 각각 감소했음을 발표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8.2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이찬복 상장) 명의 UNC 부참모장(제임스 N. 솔리건) 앞 서한을 통해, 서해상 긴장완화문제 관련 「장성급회담」 개최 동의 및 회담일정(8.6)을 제의(동 회담은 7.25 UNC 측에서 제의)
- 조평통 서기국은 8.1 「백서」를 발표, 「NLL의 비법성과 무조건적 철회」를 강변하면서, NLL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미대화를 통한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합의」를 주장

◀ 주 변 국 동 향 ▶

-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7.31 제9차 ARF 각료회의(브루나이)에 참석한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북미대화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
 - * 미국은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을 제의하고 「WMD 확산·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남북한 군사력 균형(북한의 재래식 무력)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 북측은 특사방북을 환영하고 「시기는 미측이 결정·통보하되, 회담의제는 특사방북시 구체화할 것」 등을 제의

- * 이와관련 ▲북한은 7.26 외무성대변인 KCNA회견을 통해 미국의 특사파견 수용 및 북미대화재개 용의를 표명 ▲8.1 중·평방을 통해 “파월 국무장관과 북미대화 재개를 논의하고 미국의 대북특사파견 제의를 환영했다”고 보도
- 일본은 7.31 북한과 외무장관회담(브루나이 ARF)을 개최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 관련 적십자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
 - * 북한은 7.26 외무성대변인 KCNA회견을 통해 “요도호 관계자들의 귀국문제는 철저히 그들 자신이 결심할 문제로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다”며 요도호 납치범들의 귀환조치를 시사
- 러시아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7.26-29 남북한을 동시방문(방한 7.26-28, 방북 7.28-29)하고, 북한 방문시는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 한반도상황을 논의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방한시 김대중 대통령 접견)
 - * 한편, 이바노프장관은 7.31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언급
- EU 집행위원회는 8.1 성명을 통해, 북한내 1만명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의약품·의료장비지원 등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총 417만 유로 (406만불)의 대북지원 결정을 발표
- ARF는 7.31 「의장성명」을 통해 한반도문제와 관련 ▲서해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재발방지보장 필요성 강조 ▲남북간 신뢰구축조치 증진의 중요성 지적 및 화해협력 증진의 진전 희망 ▲4.5 합의사항의 원만한 이행 ▲제네바합의 이행의 중요성 강조 및 북미대화 재개 기대 표명 ▲북일적십자회담 개최 환영 등의 입장을 발표

II. 주 요 동 향

1.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개최

□ 개 요

- 남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8.2-8.4 금강산)을 개최하고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8.12-14, 서울)과 의제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8.15 서울 민족 통일대회」 및 9월 「남북축구경기대회」 개최 등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

* 동 실무대표접촉은 북측이 7.25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명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제의, 7.30 우리측의 회담개최 동의 및 실무대표 접촉 일정(8.2-4) 제의, 7.30 이에대한 북측의 동의로 성사

□ 주 요 내 용

① 공동보도문(全文)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200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음.
 - 접촉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쌍방은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2. 쌍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하였음.
3. 쌍방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음.
 - ① 이미 합의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문제, 남북군사당국자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문제
 - ②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쌍방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5. 쌍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하였음.

2002년 8월 4일 금강산

② 보도 참고자료(全文)

< 이번 접촉의 의의 >

-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우리측의 명확한 입장 전달 및 북측의 합당한 조치 촉구
 - 우리측은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
 - 북측은 전체회의 기초발언을 통해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
- ※ 북한은 8.2 중앙통신을 통해서도 “유감표명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반영된 것임”을 강조
- 제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4.5 공동보도문 이행을 위한 일정을 확정하자는데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기합의사항들을 실천에 옮길 의지를 확고히 함.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등 남북간 주요경제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문제 본격협의 가능
-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 상봉을 정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면회소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서신교환, 생사·주소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남북간 주요행사를 남과 북이 협력하여 치름으로써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고양
 -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이 참가하면 한반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의미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또한 민간차원에서 9.8 축구대회와 8.15 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면 남북교류협력의 폭이 체육·문화분야로 넓어지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

< 합의 배경 >

- 남북간의 수많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나가는 것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올바른 자세이며, 남북 관계 진전의 첩경이라는 우리측의 지속적인 설득을 북한이 수용
 - 한편, 북-미, 북-일 대화를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태도변화는 우선적으로 남북당국간 대화복원의 환경적 배경으로 작용
-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개선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외부자본·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식

< 이번 접촉의 특징 >

- 이번 접촉은 북측의 ▲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 북일 외무장관회담 ▲대내 경제관리방식 전환조치 ▲장성급 회담 제의 등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개최되었음.

- 이번 접촉은 실무접촉의 성격에 맞게 철저하게 실무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목표한 결과를 도출
 - 북측도 역시 이번 실무대표접촉을 진행하는 동안 「논쟁과 선전」보다는 「실리와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음.
- 북한의 협상자세가 적극적이었음.
 - 4.5 공동보도문 뿐만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축구대회 등 최근 남북간에 거론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임.
 - 또한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음.

< 향 후 과 제 >

- 서울에서 곧 개최되는 제7차 장관급회담을 착실하게 준비
 - 이번 합의사항이 실천에 곧 옮겨질 수 있도록 경협사업 및 민간차원의 행사들에 대한 철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 미·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남북관계는 물론 북일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도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2. 북한, NLL 관련 「조평통 서기국 백서」 발표

□ 개 요

- 북한은 8.1 「조평통 서기국 백서」를 통해 ▲서해교전(6.29) 책임을 미국과 우리측에 전가하고 ▲NLL이 서해해상경계선이 아님과 ▲서해해상경계선 확정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협의·합의 해야 한다고 주장(8.2 중방)

□ 주 요 내 용(백서 요지)

-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서해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나르고 있음. 북방한계선의 정체를 명백히 밝히고 그 허황성을 상기 하여 이 백서를 냄.
- 첫째, 북방한계선은 서해해상경계선이 아님.
- 오늘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더욱이 미국과 우리는 교전쌍방임. 그러므로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 하자면 응당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함.
-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위반 하고 있으며,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철저히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함.
- 그것은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가 1950년 조선전쟁의 후과로 산생된 문제로서, 오직 조선정전협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임.

- 둘째, 북방한계선은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화근임.
-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해에 전투함선들과 어선들을 불법 침입시켰으며, 남조선군은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함정들에 불질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았음.
- 미국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에 대한 우리와의 협상을 회피하는 조건에서, 우리의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99.9.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였음.
- 우리측은 서해해상경계선을 철저히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입각하여 설정하였음.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철회하여야 함.

□ 평 가

- 이번 백서는 시기적으로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직전 및 ▲북미대화 재개(미국 특사방북)를 합의한 시점에서 발표한 점이 특징인 바,
 - 이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비롯, 제7차 장관급 회담 개최시 서해교전 관련 우리측 공세를 사전차단하는 한편
 - 향후 북미대화 재개 등의 경우 협상력 제고 목적과 함께 미국 측의 핵·미사일 등의 의제에 대응, 「북미평화협정 체결문제 제기」 등을 의도한 것으로 평가
- ※ 북한은 8.2 판문점대표부 대표(이찬복 상장) 명의 UNC 솔리전 부참모장 앞 서한을 통해, “서해상 긴장완화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한 「장성급회담」 개최에 동의하고 회담일정(8.6)을 제의

Ⅲ. 기 타 동 향

1. 북·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국교정상화 관련 「공동 보도문」 채택

□ 개 요

- 북한과 일본은 7.31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외무장관회담(북한 : 백남순, 일본 : 가와구찌 요리코)을 개최하고 북·일 국교정상화 관련 4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 북한은 7.25 및 7.26 각각 외무성대변인 KCNA회견을 통해 ▲북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사실 발표와 함께 ▲미국이 “특사를 다시 보내줬다면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이라며, 미북대화 재개 용의를 표명

□ 주 요 내 용(공동보도문全文, 7.31 중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남순 외무상과 일본국 가와구찌 요리코 외무상은 2002년 7월 31일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회담을 진행하였음.

1. 쌍방은 조일관계를 개선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교정상화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시키며, 이를 위해 과거 청산문제와 조일사이의 제반문제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음. 이와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현안문제들에 성의있게 대응하며 될수록 조기에 해결하기로 하였음.

2. 쌍방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유관측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쌍방은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제반문제들과 호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8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4. 쌍방은 인도주의적 문제들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일 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다음 회담을 8월중에 개최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음.

2002년 7월 31일 반다르 세리 베가완

2. FAO/WFP, 「2001/02 북한 곡물작황 평가보고서」 발표

□ 개 요

- FAO/WFP 곡물작황평가단은 6.22-7.3 방북, 7.29 「2001/02 양곡회계년도('01.11-'02.10) 북한 곡물작황평가 보고서」를 발표
- 금번 양곡년도 중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지난해 가을작황 322만톤, 금년 봄 작황 44만톤으로 총 366만톤
 - 이는 FAO/WFP의 지난 연말 추정치(354만톤)보다 3% 증가한 것이며, 겨울-봄 기간 중 기상 조건 양호로 봄작물 수확이 증가한데 기인
- 향후 10월말까지 예상부족량은 약 38만톤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식량사정이 다소 개선(지난해 부족량 56만톤)
 - * FAO/WFP는 곡물작황을 양곡회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난해 가을 및 금년 봄 작황을 01/02 양곡년도 곡물 생산량으로 추정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전년도만을 기준으로 곡물 생산량 추정('01년 생산량 395만톤)

□ 주 요 내 용

① 금년도 영농환경

- 기후 : 수확기 일부지역 홍수에도 불구하고, 겨울~봄 기간중 온화한 기온, 고른 강우로 전반적 기상조건 양호
- 비료 : '01.9~'02.6 기간중 생산 1.4만톤, 수입 2.3만톤, 지원 13.1만톤 등 총 16.8만톤 공급(북한 농업성 자료)

- 농약 : 같은 기간중 농약 자체생산은 전무, 수입 및 인도적 지원에 의해 6.1만톤 공급(북한 농업성 자료)

② 2001/02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평가

- 곡물수요량은 총 495.7만톤으로, 식용 385만톤 · 사료용 30만톤 · 종자용 14.4만톤 기타 65.8만톤으로 구성

* 식용 385만톤은 연간 1인당 쌀 100kg, 옥수수 67kg 공급기준(457g/일)으로서 우리정부 추정 감량배급기준(482g/일)과 유사

- 2001/02년도 곡물 생산량은 365.6만톤으로, 지난해 10월의 354.4만톤보다 3% 증가)

- 이는 겨울~봄 기간중 양호한 기후 조건으로 겨울밀, 봄보리 등 봄작황이 증가한데 기인

- 금년 봄작황은 44.1만톤으로 전년도 17.2만톤의 2.5배

< 2001/02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 >

(단위 : 만톤)

곡 물	'01.10 평가	'02.6 평가	증 감
쌀	133.9	133.9	-
옥수수	148.2	148.2	-
감자	47.1	56.7	△9.6
맥류	17.8	19.4	△1.6
기타	7.4	7.4	-
합계	354.4	365.6	△11.2

* WFP의 곡물작황은 ▲곡물수확량에서 두류 제외 ▲정곡환산율을 65%로 낮게 책정(우리정부는 75%) ▲곡물작황 평가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 추정치(395만톤)와 차이 발생

- 외부도입량은, 국제사회 지원확정분 81.9만톤, 자체수입 10만톤 등 외부도입량 총 91.9만톤 추정

- 국제사회 지원 81.9만톤 중 6월말 현재 38.7만톤 지원 완료

* 6월말 현재 북한의 자체 수입량은 약 4.1만톤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WFP의 북한 자체수입 추정치는 다소 과대평가

- 금년도 예상부족량 총 38.2만톤

- 수요량(495.7만톤) - 공급량(457.5만톤) = 부족량(38.2만톤)

* 공급량(457.5만톤) = 생산량(365.6만톤) + 외부도입(91.9만톤)

< 2001/02년도 북한의 곡물수급사정 >

구 분	규 모(단위:만톤)
공 급 량	457.5
생 산 량	365.6
지 원 량	81.9
수 입 량(추정)	10.0
수 요 량	495.7
부 족 량	38.2

* 자체수입량이 과대평가된 것을 고려할 때, 실제 부족량은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

③ 2002년 가을작황 전망

- 모내기는 적기에 실시되었으나 봄~초여름의 저온현상으로 작물발육이 예년에 비해 부진

- 평안남북도 일부지역은 관개용수 부족으로 모내기 곤란

- 가을작황은 7~8월중 강수량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필수 비료 및 농기계설비 부족으로 예전에 비해 다소 감소 전망

④ 식량배급실태 및 기타 방북동향

- 식량 배급량은 일인당 292g/일으로 지난해(197g/일)에 비해 48% 증가하였으며
 - 농장원들에 대한 할당량도 219kg/년으로 지난해(210kg/년)에 비해 4.3% 증가
- 북한 정부 관계자는 대표단에게 최근의 물가, 임금인상조치에 대해 간략히 언급
 - WFP는 북한 주재 UN, NG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최근 북한의 경제변화조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 진행

⑤ 종합 평가

- 2001/02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금년 봄작물 수확 증가(전년대비 2.5배) 및 배급량 증대(48%)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 여전히 최소 40~50만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
- 금년 가을작황은 봄~초여름의 저온현상과 관개시설 미비, 비료공급 지연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IV. 분야별 일지

남한 관련동향

- 7.30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개최 동의 및 회담일정(8.2-4, 금강산)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 8.1 韓赤, 2002년도 제5차 대북지원물자(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탁 의류 1억 4000만원 상당) 전달계획 대북통보
- 8.2 남북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개최(8.2-4, 금강산)

북한 관련동향

- 7.26 외무성 대변인, 「요도호 납치범」 귀국 의사표명 관련 KCNA 회견(7.27, 평방)
 - * 귀국문제는 철저히 그들 자신이 결심할 문제로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음.
- 7.26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수용 및 북미대화 재개용의 표명(KCNA 회견, 7.26 중·평방)
- 7.30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김령성, 장관급회담 일정(8.2-4, 금강산) 동의 대남전통문
- 7.31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남측 전투함선의 서해상 북측 영해 침범 및 계획적 도발 주장(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7.31 중·평방)
- 7.31 백남순 외무상, 제9차 ARF 각료회의 참석 및 미북대화 재개 용의 표명
 - *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조건없는 대화를 희망한다면 이에 호응할 것임.(각료회의 기조연설)
 - * 한편, 동일 각료회의에 제출한 「연례 안보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재래식무기 감축문제와 관련, “재래식무기는 자위를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이전에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 8.1 조평통 서기국, NLL관련 「백서」 발표 및 「북미대화를 통한 새로운 서해해상경계선 합의」 주장
- 8.2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이찬복, 「장성급회담」 개최 동의 및 회담일정(8.6, 군정위회의실) 제의 관련 UNC 부참모장(제임스 N. 솔리건) 앞 서한

주변국 관련동향

- 7.28 러시아 이바노프 외무장관, 남북한 동시방문(방한 7.26-28, 방북 7.28-29) 및 남북한 정상 접견
 - * 訪韓時 러시아측의 한국경협차관 지불문제·양국간 첨단기술문제·군수공업분야 협력문제 등 협의, 訪北時 김정일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 전달 및 한반도상황 협의
- 7.31 미·북한, 비공식 외무장관접촉(파월 국무장관·백남순 외무상 : 브루나이 제9차 ARF) 및 북미대화 재개 합의
 - *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대북특사 파견」 등 합의
- 7.31 일·북한, 외무장관회담(백남순 외무상·가와구치 요리코 외상 : 브루나이 제9차 ARF) 개최 및 국교정상화 관련 「공동보도문」 발표
- 7.31 제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브루나이), 한반도문제 관련 「의장성명」 발표
 - * 의장성명은 ▲서해사태관련 우려표명 및 재발방지 보장 필요성 ▲4.5 합의사항의 원만한 이해 ▲제네바합의 이행의 중요성 강조 및 북미대화 재개 기대표명 등 입장 표명
- 8.1 EU, 417만 유로(406만불) 상당 대북지원 결정(집행위원회 성명)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5호>

2002.8.6~8.31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관련 실무접촉 결과

III. 기 타 동 향

- 김정일 방러 및 「북러정상회담」 개최 동향
- 美 국무부 「존 볼튼」 차관 訪韓 발언내용
-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 결과
-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 개최 결과

IV. 분 야 별 일 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8.12-8.14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8.26-8.29, 서울)를 비롯, 「4.5 공동보도문」 이행 일정 합의 등 10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 남북한 민간단체(남 :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북 : 민화협)는 8.15 - 16 서울(위커히호텔)에서 「8.15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고 ▲민족단합대회 「공동호소문」(8.15) ▲독도 관련 「특별호소문」(8.16) 등을 채택
 - * 동 대회의 서울개최는 △지난 해 우리측의 「8.15 방북단」에 대한 답례성격으로 △분단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 대규모 민간행사임.(남: 민화협·통일연대·7대 종단 등 3개단체 대표단 400여명, 북: 「민화협」 등 사회 각계 대표 116명)
- 남북한(남 : 유럽코리아재단·대한축구협회, 북 : 조선축구협회)은 8.17-19 금강산에서 「남북친선축구경기 관련 실무협약」을 갖고 친선경기 명칭·경기 및 관련 행사일정 등에 합의
 - * 주요 합의사항 △대회명칭 :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 △대회일시 및 장소 : 9.7 17시 30분 - 21시 45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북측 대표단 방한기간 : 9.5-9.8 △방한인원 : 이광근 단장(무역상 겸 조선축구협회장) 등 총 49명 △방한경로 : 평양-인천 남북직항로 등
- 남북한(남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북 : 조선올림픽위)은 금강산에서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문제」 관련 2차례의 실무접촉(1차 : 8.17-19, 2차 : 8.26-28)을 개최, 참가종목·선수단 규모·개/폐회식 입장 등 1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8.27-8.30 서울에서 진행되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경협 4개 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주요 경협추진일정 및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

◀ 북 한 동 향 ▶

- 8.6 「인민문화궁전」에서 당비서 최태복 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성 연석회의」 40주년 토론회를 개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지방공장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독려

* 「창성 연석회의」는 '62.8 평북 창성군에서 개최된 「당·경제일군 연석회의」로, “郡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중점 육성할 것을 제시,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해 왔으며, 매 5·10주기 마다 기념토론회를 개최

- 의무성대변인은 제9차 ARF시 백남순 - 파월 접촉(북미대화 재개 원칙적 합의)에 대한 美 언론보도와 관련 ▲미국특사의 방북문제는 미측이 대화 재개 입장설명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미국에 사정이 있다면 특사를 안 보내도 좋으며 ▲또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지하지 않으면 대화가 열려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8.8 KCNA회견)

* 미국과 북한은 7.31 제9차 ARF 각료회의시 「비공식접촉」을 갖고 북미대화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 이와관련 8.1 WP紙는 “김정일이 미국의 핵사찰요구 등을 받아들이면 대화가 재개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파월-백남순간 커피회동」은 단순한 만남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도

- 8.13 의무성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최근 미국의 IAEA 조기핵사찰 수용요구에 대한 거부를 시사 ▲미국에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주장하는 한편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파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위협 (8.17 중방 시사논평, 8.18 노동신문 논평, 8.19 KCNA 논평 등)

* 美 「프리차드」 KEDO 집행이사는 8.7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본체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 참가, “이제 북한이 IAEA의 요구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

- 8.15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김정일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랑공연 폐막식 및 폐막공연」을 개최

* 동 공연은 당초 4.29-6.29간 진행예정이었으나, 韓·日 월드컵(5.31-6.30)으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김정일 지시로 외국인 및 지방주민 관람 등을 위해 두차례(6.22, 7.16) 연장한 후, 금번 「8.15」 57주년을 계기로 폐막

- 한·미 연합 「을지포커스렌즈 연습」(8.19-30) 관련 ▲북침전쟁연습, 북남 회담에 엄중한 후과 초래 등으로 한·미 당국을 비난하면서 ▲우리측의 「군사연습 중지」를 지속 촉구(8.17 민주조선, 8.20 의무성대변인 기자회견 및 KCNA 논평, 8.21/8.26 조평통서기국 보도 등)

* 특히, 8.20 KCNA논평을 통해서 “이번 전쟁연습은 향후 조미대화과 軍

당국자 회담 등 여러차례의 남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임”을 주장(⇒북측은 2000.8 「을지포커스렌즈연습」시 8.19 조평통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간 모든 대화가 정체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위협했으나, 8.29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 호응한 前例)

◀ 주변국 동향 ▶

- UNC는 8.6 판문점 군정위 본회의실에서 북한과 「제13차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고 서해교전문제를 협의(⇒동 회담은 2000.11.17 제12차 회담 이후 1년 9개월만에 개최)
 - * 회담에서 ▲UNC측은 서해사태 재발방지대책과 상호 긴장완화방안 등을 제시 ▲북측은 서해사건이 명백한 해상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북 장성급회담을 통한 「서해 해상경계선문제」 논의를 주장 ▲이에대해 UNC측은 서해 해상경계선은 「북측과 한국정부간에 논의할 사항」임을 지적
- KEDO는 8.7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현장에서 한·미·일·EU 등 각국 KEDO집행이사들과 북측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수로 본체 콘크리트 타설식」을 개최하고, 북한에 대해 IAEA 핵사찰의 전면수용을 촉구
 - * 美 「프리차드」 집행이사는 △기념식 연설을 통해, 북한의 조기핵사찰 거부시 경수로 건설 지연을 경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임스 켈리」 美 특사(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하게 되면 함께 수행하여 북미대화 재개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언급
- 찰스 카트먼 KEDO사무총장은 8.9 ▲IAEA 특별사찰이 2-3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조속히 특별사찰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수로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訪韓時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면담)
- 존 볼튼 美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8.29 ▲북한을 「악의 축」으로 재지명하면서 ▲제네바합의를 즉각 이행치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IAEA사찰 즉각 수용이 경수로를 신속히 건설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 (서울 힐튼호텔, 韓美協會 주최 강연회)
 - * 이와관련, 美 국무부 「필립 리커」 대변인은 8.22 정례브리핑을 통해 “ 訪韓時 예상되는 「볼튼」차관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임” 을 강조
- 일본과 북한은 8.18-19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일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북송 일본인처 방일사업 10월중 실시 ▲상호 행불조사·통보 계속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8.25-26 평양에서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을 개최, ▲북일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문제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활동 협력 등 「6개항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8.30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일북 국교정상화문제 등 양측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9.17 평양을 방문, 김정일위원장과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
 - *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8.30 KCNA회견을 통해 “북일정상회담에서 역사적 문제와 현안문제들이 토의될 예정이며, 일본총리의 방북이 북일관계정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언급
- 러시아와 북한은 8.23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김정일간 「북러정상회담」을 개최 ▲TKR-TSR 연결 등 경제협력문제를 비롯한 쌍무협조 방안 ▲남북 및 북미관계 등 양측의 공동관심사인 「국제문제」 등을 협의
 - * 동 정상회담은 푸틴이 김정일의 러시아 극동지역방문(8.20-24 하산·아무르·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등)을 초청하여 성사, 푸틴 대통령은 회담기간 중(8.23) 블라디보스톡 지방관리들과의 면담에서 「TKR-TSR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김정일을 초청한 것임”을 언급
- 국제적십자사(IFRC)는 8.9 ▲북한의 홍수피해(8.3-5)로 평남·황남·개성 등지에서 22,500명(4,703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과 ▲약 60만불의 구호자금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을 호소
- WFP는 8.26 긴급구호활동 보고서 2002-34호(WFP EMERGENCY REPORT 2002-34)를 통해, 금년도 4/4분기 북한의 식량지원활동을 위해서는 총 10만 8,615톤의 추가식량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II. 주 요 동 향

1.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개 요

- 남북한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8.14, 서울 신라호텔)을 개최하고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제2차 경추위 회의 개최 일정과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남북간 현안의 실천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10개항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10.19-22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

□ 주 요 내 용(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 공동보도문과 그밖의 상호 관심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26-29 서울에서 개최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그 밖의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
- 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
- 3. 임남댐 공동조사를 실시, 이를 위한 관계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4.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9.4-6 금강산에서 개최
 -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등을 협의
 - 이와함께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
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9.10-12 금강산에서 개최
6.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북측 참가와 성화 봉송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17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실무협의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
7. 9.6-8 서울에서 진행되는 남북축구경기에 적극 협력
8. 태권도 시범단 교환
 -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 평양 방문,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 서울 방문
 - 관계단체들간의 실무협의 주선
9.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측 지역 방문
10. 제8차 장관급회담을 10.19-22 평양에서 개최

□ 평가 및 의의

①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일정 구체화

- 남북은 8.4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합의사항을 토대로 4.5 공동보도문 이행 및 남북대화 일정을 확정
 - 제2차 경험추진위원회, 제4차 적십자회담, 제2차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8차 장관급회담 등
 - 특히 쌍방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적십자회담에 합의,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의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는 제2차 경추위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합의
- 하반기 남북대화 및 후속조치 시간표를 작성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② 남북관계 복원

- 이번 회담을 통해 특사방북 이후 지난 4개월간의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남북화해협력관계를 복원
 - 6.15 공동선언의 바탕위에서 제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을 확보
 - 북측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남북축구대회의 성공적 추진은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아가 북미대화, 북일대화의 재개 및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게 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③ 서해교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전달

- 우리측은 서해교전과 관련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북측에 전달
 - 이와함께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향후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무력충돌 방지, 긴장완화, 신뢰 구축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

④ 화해협력의 지속기반 마련

- 이번 회담을 통해 당국간 대화,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향후에도 남북화해협력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시화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을 이어가는 계기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개 요

- 남북한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8.27-30, 서울 그랜드힐튼호텔)를 개최하고, 남북 철도·도로연결, 경협 4개 합의서 발효,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일정에 합의

□ 주 요 내 용(합의문 요지)

- 남과 북은 2002.8.27-30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동시 병행 실현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 9.18 동시 착공
 - * 경의선 철도는 금년말, 도로는 '03년 봄, 동해선 철도·도로는 1차적으로 1년 목표,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는 금년 11월말까지 연결
- 남측은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
- 군사적 보장조치를 9.18전까지 선행하여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 개최
-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9.13-15, 금강산)

2.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년내 착공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공포,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

-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10월중, 개성)
- 3. 임진강 수해방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 북측은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자료 등을 통보하고,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제공
 -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10월중, 개성)
- 4. 임남댐공동조사 금년내 실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9.16-18, 금강산)
- 5.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개 경험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 각기 해당한 법적절차를 밟아 발효
 -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험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경추위 산하에 구성·운영
-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식량차관 40만톤 및 비료 10만톤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지원
- 7. 북측 경제시찰단 10.26부터 남측 방문
- 8. 경추위 제3차회의 개최(11.6-9, 평양)

□ 평가 및 의의

① 남북간 주요 경제협력사업의 본격 실천단계 진입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주요 경제협력 과제의 추진일정 및 방안에 합의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의 구체적 실천 시간표를 작성
 - 이외 임남댐공동조사 등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시기·방법 등을 확정
- 특히 남북 쌍방 모두 「합의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추진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강한 실천력을 확보
 - 그동안 경제협력사업 추진의 지연요인이 되어왔던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일정을 확정

②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남북·동서 양측을 연결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경협 여건 개선
 - 장기적으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발전하고,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청산결제 등 후속조치가 마련될 경우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안정적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이번 합의를 계기로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제반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는 남북간 실질협력관계가 제도화되어 간다는데 의미

* 남북관계가 「정치적·사실적」 단계에서 「법적·제도적」 단계로 발전됨을 반영

- 경추위 정례화 및 산하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수시가동 등을 통해 남북간 경제분야 현안해결의 「대화틀」 정립
- 향후 장관급회담 - 경추위,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 등이 상호 유기적 연계하에 진행

③ 한반도 평화정착 및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 마련

-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6.15 공동선언으로 형성된 평화와 화해협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
- 특히 경의선·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 금강산 육로개설사업은 모두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사업으로서
-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증진은 북미·북일관계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3.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관련 실무접촉 결과

□ 개 요

-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북한 올림픽위원회간 제2차 실무접촉이 2002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

* 제1차 실무접촉은 8.17-19 「금강산」에서 개최

- 동 회의에서 남북한 양측은 북측 참가 종목·선수단 규모, 개·폐회식 입장, 성화채화 등 1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발표

□ 주 요 내 용(합의서 요지)

- ① 북측 선수·올림픽위원회 위원·심판원 등 305명 규모 선수단 파견
- ② 8.30까지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 제출
- ③ 선수단은 9.23, 9.27 2차에 걸쳐 북측 항공기를 이용, 남측 방문 및 귀환
- ④ 개·폐회식 행사에 공동입장, 시드니올림픽 전례 적용
- ⑤ 각각 경기 출전, 시상식때 각각 국기계양 및 국가연주 등
- ⑥ 취주악대·예술인 등 355명 규모 응원단 파견, 응원단은 「만경봉 92호」를 타고 원산을 출발하여 9.28 부산항에 오며, 배에서 숙식

- ⑦ 북측 9.5 백두산 성화 채화, 9.6 금강산에서 조직위측에 인제, 10여명의 남측 인원에게 녹화 및 참관 편의제공
- ⑧ 남측은 북측 선수단·응원단에 체류기간 신변안전 보장
- ⑨ 남측은 북측 선수단 체류 제반경비 부담, 응원단 체류경비는 방문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편의제공
- ⑩ 북측 국기계양은 OCA현장과 국제관례에 따름
- ⑪ 북측 선수단·응원단은 남측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응원시 스포츠 정신에 입각
- ⑫ 남측은 국제전화 2회선, 남북직통전화 10회선 보장
- ⑬ 제반문제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으로 협의·해결
- ⑭ 추후 실무절차문제는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 진행

□ 의의 및 주요사안별 입장

- 아시아경기대회 사상 최초로 쏘회원국 참가 기록
 -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43개 OCA 전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화합의 아시아드」, 「평화의 아시아드」를 구현
- 남북한 체육·인적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 우리측 주최 국제대회에 분단이후 가장 큰 규모인 305명의 북한 체육인과 355명의 응원단이 참석, 함께 경기와 응원에 참여함으로써 남북간 체육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① 개·폐회식 입장 방법

- 남북화해협력 증진을 위해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에 합의
 - 공동입장 방법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 선수단이 단일 복장으로 함께 입장(2000년 시드니 올림픽 방식 적용)
- 우리측은 대회 주최국으로서의 입장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개폐회식에서 개별입장과 공동입장을 놓고 고심하였으나,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과 북측의 적극적 요청, 시드니 올림픽 선례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입장에서 공동입장방식으로 최종 합의
- 개·폐회식 공동입장 관련, 경기장내에서 태극기 게양이나 응원시 태극기 사용은 제한되지 않음.

② 백두산 성화 채화

-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의 성화채화계획은 43개 OCA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성화를 채화하여 부산으로 가져와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올림으로써 아시아가 하나가 되자는 취지
- 우리측은 9.5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를 9.6 금강산에서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아 9.7 통일동산에서 한라산 채화 성화와 「합화행사」를 갖고 전국방송에 들어갈 계획

③ 북측 선수단 경비부담의 이유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모든 OCA참가국에 대해 30명(임원6, 선수24)까지는 참가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
- 북측이 이번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키로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체제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일
 - * 그동안 북한은 국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 경우가 별로 없음.

- 이번 대회는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43개 OCA 준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화합의 아시아드」, 남북간 화해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평화의 아시아드」를 구현하는 성공적 아시안게임이 될 것으로 확신
- 따라서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일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

④ 북측의 인공기 사용문제

- 우리측의 OCA현장과 국제관례에 따라 북측 인공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에 북측도 동의
- 북측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응원문제는 우리측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소형 수기에 국한하며 제한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
- 북측 선박은 우리 영해 진입시 북측 인공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게양
- 우리측에서 구성될 북한 서포터즈는 인공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사용토록 유도할 계획

⑤ 북측 응원단의 활동과 비용부담 문제

- 북측은 취주악대, 농악대 등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된 350명 내외의 응원단을 파견할 계획
- 북측 응원단은 만경봉호를 타고 9.28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만경봉호에서 숙식하며 응원활동에 참가
- 북측 응원단의 참가경비는 원칙적으로 북측이 부담
- 우리측은 북측 응원단의 체류기간 동안 수송 등 편의를 제공

- 응원단이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북측이 원하는 경우 대회기간 중 일부 문화예술 행사에도 참여시킬 계획

⑥ 북한 참가종목

- 북한은 총 16개 종목에 임원·선수 등 305명이 참가할 예정
 - 축구(남, 여), 핸드볼(남, 여), 탁구(남, 여), 소프트볼(남, 여), 권투(남), 역도(남), 레슬링(자유형, 그레코로망), 유도(남, 여), 육상, 체조(남, 여), 다이빙(남, 여), 카누(남), 사격(남, 여), 양궁(여), 골프

Ⅲ. 기 타 동 향

1. 김정일 방러 및 「북러정상회담」 개최 동향

□ 개 요

- 김정일은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쉰권代表 「폴리콥스키」의 초청으로 8.20-24 러시아 극동지역을 비공식 방문하고, 8.23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TKR-TSR 연결사업과 러시아의 대북 전력지원문제 등 경협확대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 * 양측은 2001.7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개최, 「북러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TKR-TSR 연결사업 실현과 북한의 電力부문 기업소 재건 등에 합의

□ 주 요 내 용(방러일정 및 정상회담 내용)

- 8.20 전용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 러시아 하산역 도착
 - *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당비서 김용순·당 제1부부장 장성택 등 수행
- 8.21 러시아 극동도시 콤소몰스크에 도착, 수호이 항공기 생산공장과 조선소 등 참관
- 8.22 하바롭스크 도착, 제약회사 및 극동 군관구 사령부 등 방문

- 오후에는 「극동군관구사령부」를 방문하고 「야쿠보프」 사령관 주최 연회에 참석
- 8.23 블라디보스톡 도착, 태평양 함대 소속 함선에 승선, 훈련을 참관한 데 이어, 연해주 정부 영빈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 양측은 TKR과 TSR 연결사업과 러시아의 대북 전력지원 문제 등 정협확대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 이밖에 북·러 우호증진, 북한의 대리차관 상황, 군사·기술 분야 협력, 농·임·수산업 분야 협력,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인력교류 확대 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조율
- 남북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증진 방안을 논의, 남북대화 진전을 위해 공동노력 합의
- ※ 8.23 블라디보스톡 지방관리들과 면담시 「푸틴」 발언내용 : 한반도와 유럽이 러시아의 철도를 매개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 - 유럽철도는 중국을 통해 연결될 것임. 철도연결계획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임. 이것이 내가 김 위원장을 여기로 초청한 이유임.
- 8.24 오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 북한으로 귀환

□ 평 가

- 김정일의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은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全權代表 「폴리콥스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비공식 방문으로
- 지리적 인접성 및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갖는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 정상회담을 통해 TKR-TSR 연결사업 실현과 대북 전력지원 등 북·러간 경제협력 확대에 협의함으로써
- 철도·전력 등 경협분야에서의 지원확대를 유도하고 남북대화 및 대미입장을 조율하는 등 러시아측의 지지를 재확인,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주력한 것으로 평가
- ※ 대통령 全權代表 : 대통령의 정책 이행실태를 관리·감독, 연방·지방정부간 정책조율, 관할지구의 각종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

2. 美 국무부 「존 볼튼」 차관 訪韓 발언내용

□ 개 요

-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대북 핵사찰 등 WMD 비확산문제 및 북미대화 추진과 관련하여 8.28-30 방한(방일, 8.24-28)
 - 訪韓發言을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재지명하고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즉각 이행치 않을 경우 제네바합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북한의 IAEA사찰 즉각 수용이 경수로를 신속히 건설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
 - * 미 국무부 「필립 리커」 대변인은 8.22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한시에 예상되는 「볼튼」 차관의 발언은 美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

□ 주 요 내 용(8.29 韓美協會 주최 강연회 발언, 힐튼호텔)

-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의 미래는 심각한 우려에 빠질 것임.
-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즉각 받아야 하며, 지난 '92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해야 함.
-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핵개발 기술 획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영속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거의 없음.
- 북한이 숨길 것이 없다면 IAEA 사찰을 즉각 받아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경수로를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방법임.

- 북한이 IAEA 사찰을 늦출 때마다 경수로 완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자초한 지연에 대해 미국이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 관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수출토록 용납치 않을 것이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생산·배치하고 관련기술을 계속 수출한다는 증거는 충분하고 확실함.
 - (북한의 생화학 무기실태 관련)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수주일내에 충분한 생물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 관련)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방한시 밝혔던 것처럼, 미국은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 그러나 이란·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수사학이 아닌 사실적인 것이며, 이들 3국은 모두 국민보다 지도자가 중요한 지도체제를 갖고 있고, 위험한 무기와 기술이 상호 유통되는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
 -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 관련) 북한이 가격자유화와 민간시장을 인정하는 초기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요함.
- ※ 불튼 차관은 8.29 최성훈 외교부장관과 임성준 외교안보 수석 면담시에도 상기내용과 동일한 발언

3.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 결과

□ 개 요

- 북한과 일본은 8.18-19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 「북송 일본인처 방일사업 10월중 실시, 상호 행불자 조사·통보 계속」 등에 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 북측에서는 리호림 적십자회 중앙위 부서기장 등 10명, 일측에서는 「히가시우라」 적십자사 국제부장 등 9명 참가

□ 주 요 내 용(공동보도문 요지)

- ① 북측은 일본인 행불자 조사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중 6명의 소식을 일측에 통보하였으며, 일측은 관계기관(인민보안성·인민위원회)과도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음.
- ② 일측은 45년 이전의 조선인 행불자중 3명의 행방을 통보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함.
- ③ 북측은 앞으로 조사를 촉진시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측에 신속히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④ 이번에 제출된 명단에 기초하여 제4차 북송 일본인처 방일 사업을 10월말에 실시하기로 함.
- ⑤ 쌍방은 필요에 따라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번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 조속히 확정하기로 함.

□ 평 가

- 동 회담에서는 쌍방이 전후 실종자 문제에 대해 확인결과를 구체적으로 교환하고 일본인처 4차 방일에 합의
- 북·일간 최대현안인 「일본인 납북의혹」에 대해서는 북측이 구체적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북측의 「인민보안성」과 「평양시인민위원회」측이 조사진행상황을 설명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인데 의의

□ 참 고 사 항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사업, 행불자 조사문제)

- '99.12 및 2000.3 양측 「적십자회담」을 北京에서 개최,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 재개·행방불명된 일본인 발견시 일본에 통보, 1945년 이전 행방불명된 조선인 피해자(259명)의 소재 확인,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등에 합의
- 2002.4.29-30간 북경에서 개최한 「북·일 적십자회담」에서는 “제4차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 금년중 실시·상호 행불자 조사 충실히 실시·통보” 등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
- * 북한과 일본은 '97.9 「북·일 적십자연락협의회」를 개최,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그간 3차('97.11 15명, '98.1 12명, 2000.9 16명)에 걸쳐 총 43명이 방일

4.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 개최 결과

□ 개 요

- 8.26 북한은 일본과의 외무성 국장급회담(8.25-26, 평양 인민문화궁전)회담을 개최하고 쌍방 합의결과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북한은 마철수 아주국장 등 8명, 일본은 「다나카」 아태국장 등 8명이 참가

□ 주 요 내 용(공동보도문 요지)

- ① 쌍방은 국교정상화 및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② 쌍방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관계국들과의 대화추진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노력을 하기로 함.
- ③ 쌍방 정부는 인도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성의를 가지고 대처하며 적십자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④ 쌍방은 재북 被爆者문제와 관련 재외 피폭자 전반에 대한 일측의 지원방식에 유의하면서, 향후 실무자급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함.
- ⑤ 쌍방은 국교정상화 문제 등 제반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기 재개 가능성에 대해 1개월내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해 가기로 함.

□ 평 가

- 동 회담은 제11차 수교회담(2000.10, 북경) 이후 최초로 개최된 외교당국자간 회담으로서
 - 주요현안인 「납치문제」와 「과거청산」 등을 정치적 결단에 의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점과
 -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안정을 위해 남북 및 북미대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
 - * 일본은 남북한 및 미·일·중·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창설을 제안(8.26 「일본경제신문」)
 - 수교회담 재개 여부 결정을 위해 1개월간 교섭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점 등에 의의
 - 이와함께, 쌍방간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지속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 특히,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 동 회담에서 일본측은 북측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의 방북 및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

IV. 분야별 일지

남한 관련동향

- 8.12 남북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14, 서울 신라호텔) 개최 및 4.15 공동보도문 이행일정 등 합의
- 8.15 남북한 민간단체(남 :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위, 북 : 민화협), 「8.15 민족통일대회」(8.15-16, 서울 워커히호텔) 개최 및 민족단합대회 「공동호소문」, 독도 관련 「특별호소문」 채택
- 8.17 남북한(남 : 유럽코리아재단·대한축구협회, 북 : 조선축구협회), 남북 친선축구경기 관련 실무협의(8.17-19, 금강산) 개최 및 「2002 남북통일 축구대회」 개최 관련 실무문제 합의
- 8.26 남북한(남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북 : 조선올림픽위),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문제」 관련 제2차 실무접촉(8.26 - 28, 금강산) 개최 및 관련 실무문제 합의
 - * 제1차 실무접촉은 8.17-19, 「금강산」에서 개최
- 8.27 남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27-8.30,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개최 및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경험 4개 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주요 경험추진일정 합의

북한 관련동향

- 8. 6 「창성 연석회의」 40주년 토론회 개최 및 「지방경제 활성화·지방공장 자율권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독려
- 8. 6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조미 군부 장령급회담 진행정형에 관한 보도」 발표
 - * 북측은 동 보도를 통해 서해교전문제와 관련 8.6 개최된 UNC-북한간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명백한 해상경계선의 합의·설정문제가 협의되었다”고 왜곡, 북·미간 서해 해상경계선 협의·설정을 기정사실화

- 8.13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조기 핵사찰 요구 거부 시사 및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보상 주장관련 담화 발표
- 8.15 「아리랑공연 폐막식 및 폐막공연」(평양 능라도 「5.1 경기장」) 개최
- 8.20 외무성대변인, 한·미 연합 「을지포커스렌즈연습」 비난 KCNA 기자회견(동일 KCNA논평, 8.21 조평통서기국 보도 등 발표)
- 8.21 北赤 장재연위원장, 탈북 선박(대두 8003호) 기관장(리경성) 북한 송환 요구 관련 韓赤 서영훈 총재 앞 대남전통문
 - * 북측은 동 전통문을 통해 ▲8.18 서해상으로 탈북한 순통범(船長)씨 일가 등 21명이 탈북주민임을 인정하면서 ▲기관장 리경성을 본인의사 존중 및 인도적 견지에서 송환해 줄 것을 요구, 이에 우리측은 리경성의 본인의사에 따라 8.21 북한으로 송환
- 8.26 조평통, 남측의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실천 방해행위 철회 주장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23호)
 - * 동 보도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실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문제 등 실무협의를에서 인위적 장애조성 ▲8.15 민족통일대회시 광범한 군중참가 봉쇄 및 북측 대표단의 남측 주민접촉 제한 ▲기합의된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및 여성 통일대회(8.26 예정) 개최 지연 등을 거론

주변국 관련동향

- 8. 6 UNC-북한, 서해교전문제 관련 「제13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
- 8. 7 KEDO, 대북 경수로 본체 콘크리트 타설식 개최(신포시 금호지구)
 - * 한·미·일·EU 등 각국 집행이사 및 회원국 대표, 각국 기자단, 북한 대표단(26명) 및 현장 근로자 등 총 750여명 참석
- 8. 9 국제적십자사(IFRC), 북한의 홍수피해(8.3-5) 관련 국제사회에 약 60만불의 긴급구호자금 지원 호소
- 8. 9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 북한에 대한 조속한 IAEA 특별사찰 필요성 및 북한의 거부시 경수로지원 중단 강조(방한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면담)
- 8.15 美 국방부, 「2002년도 국방보고서」 의회 제출

- * 동 보고서는 ▲새로운 안보위협 대처와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전력개편방향으로 원거리 및 신속대응능력 강화 등과 함께 ▲대미위험해소를 위해 「예방적 조치」와 「선제공격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적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사적 가용 수단 사용」(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시 ▲한편, 동 보고서는 9월중 발표예정인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안보정책방향」을 예고
- * 한편, 일본 방위청은 8.2 「2002년도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북한은 김정일 통치 체제가 일정경도에 올랐으나, 폐쇄체제 유지에 따른 동향과악 곤란· 과거 「벼랑끝 전술」 등 감안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 및 대규모 특수부대 등 비정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역내 안보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을 명시
- 8.18 일·북한, 북일적십자회담 개최(8.18-19, 평양 인민문화궁전) 및 4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8.23 러시아·북한, 북러정상회담(김정일-푸틴, 블라디보스톡) 개최 및 TKR-TSR 연결, 남북관계 등 국제문제 협의
 - * 김정일은 푸틴 대통령의 방러 초청으로, 8.20-24간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 경제발전상을 시찰
- 8.25 일·북한,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8.25-26, 평양) 개최 및 6개항 공동 보도문 발표
 - * 일본측은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
- 8.26 WFP, 대북 긴급구호활동 보고서(WFP EMERGENCY REPORT 2002-34) 발표 및 4/4분기 대북구호활동 관련 총 10만 8,615톤 식량의 추가지원 필요 발표
- 8.28 존 볼튼 美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대북 핵사찰 등 WMD 비확산문제 및 북미대화 추진 관련 방한(8.28-30) 및 방일(8.24-28)
 - * 볼튼은 ▲방한시 8.29 서울 힐튼호텔 「한미협회」 주최 강연회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재지명하고 ▲북한의 제네바합의 불이행시 제네바합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8.27 방일시는 북한을 포함 12개국 이상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언 ▲한편, 8.22 「필립 리커」 美 국무부대변인은 정래브리핑을 통해 방한·방일시 예상되는 「볼튼」 차관의 발언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
- 8.30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 북일국교정상화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방북 및 「북일정상회담」 개최(9.17) 발표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6호>

2002.9.1~9.30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제2차 「경추위」 이후 9월중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 현황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政令 발표

III. 기 타 동 향

- 「북·일 정상회담」 개최 결과
- IAEA 대북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관련동향

IV. 분 야 별 일 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14, 서울)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27-30, 서울)의 합의에 따라, 경제·군사·적십자 등 각종 분야별 후속회담을 개최
 - 쌍방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9.6-8, 금강산), 제2차 금강산관광당국회담(9.10-12, 금강산),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9.13-17, 금강산) 제1차 임남담공동조사실무접촉(9.16-18, 금강산), 제6·7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4-15, 9.17, 판문점) 개최를 통해
 - 철도·도로연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이미 합의되었으나 그 이행이 지연되던 핵심사안들의 이행일정을 재조정하고, 관련 합의서들을 채택(⇒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실천단계로 진입)
 - 이와함께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9.5-8, 서울) 개최 ▲남측 태권도시범단 방북(9.14-17, 총 50명)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북측 대표단 참가(북측 참가인원 : 총 705명, 선수단/357명, 응원단 /280명, 만경봉호 선원 등/68명) 등을 합의대로 진행
- 「제5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9.6-8, 금강산)의 합의에 따라, 9.13-18 금강산에서 실시
 - ▲상봉기간 및 장소 : 9.13-15(1회차), 9.16-18(2회차), 금강산 ▲상봉규모 : 총 875명(1회차 : 북측 이산가족 100명/남측 가족 455명, 2회차 : 남측 이산가족 99명/ 북측 가족 221명)
 - * 현재까지 남북이산가족 상봉인원은 1차(1,170명), 2차(1,220명), 3차(1,240명), 4차(850명)을 포함하여 총 5,355명
- 남북한은 9.18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9.13-17, 금강산)의 합의에 따라, 각기 자기측 지역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거행

- 이와함께, 제7차 군사실무회담(9.17, 판문점)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교환·발효됨에 따라, 9.19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을 동시 착수

* 제6·7차 남북군사회담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 및 교환·발효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회의를 합의한 “9.18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의 남북한 동시착공”을 실천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모두 완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27-30, 서울)의 합의에 따라 ▲대북 비료10만톤 무상지원 관련 제1항차 수송선박(9.13)과 ▲대북 쌀 40만톤 차관지원 관련 1항차 수송선박(9.19)이 각각 출항

◀ 북 한 동 향 ▶

○ 외무성대변인은 9.4 「미군의 한반도 주둔」(45.9.8) 57주년 관련 담화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의 보장과 자주적 북남관계의 진전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9.6 중방 논평/민민전 등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 등 「적극적 반미투쟁」을 선동)

○ 북한은 9.8 정권창건 54주년(9.9) 관련 「중앙보고대회」를 개최, 김정일의 先軍政治(先軍領導) 업적을 집중 선전

- 홍성남 총리 보고를 통해 ▲선군정치와 김정일 방위 및 북러관계의 전환적 계기 마련 등 김정일의 업적을 집중 선전하는 한편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외세배격 및 남북관계의 화해협력관계로의 발전을 강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내각 총리 홍성남(보고),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등 당·정·군 고위간부 참석(김정일은 예년과 같이 불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12 政令을 발표,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9.19, KCNA)

○ 외무성 부상 최수현은 9.17 제57차 UN총회(9.10-12월 하순, 뉴욕)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우선폐기를 촉구하고

▲북러 및 북일정상회담 성과 부각 등 적극적인 대외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백히 표명

- 또한 9.30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에서 북한대표 안명훈(외무성 UN과장)은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및 제네바기본합의 이행시 핵문제 자동해결 ▲2003년 경수로 완공 이행 ▲북한의 「核軍縮 주장」 이행을 위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완전제거 및 외국군대 전면철수 등을 강조

- 9.22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국제대권도연맹(ITF) 특별총회(총 46개국 대표 참석)를 개최, 최홍희 사망('02.6.15)으로 공식중인 총재에 북한 IOC 위원 장웅(64세, 체육지도위 제1부위원장)을 선출

◀ 주변국 동향 ▶

- UNC와 북한은 9.12 판문점(군정위 본회의실)에서 제14차 장성급회담을 개최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동해지역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과 ▲이의 남북한 관리구역 지정 및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의 남북군사당국간 협의·처리에 합의

- 일본과 북한은 9.17 평양(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간 「북일정상회담」을 개최, ▲10월중 수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미사일 모라토리엄 연장 등 양측간 주요현안을 토의한 후 ▲「북일공동선언」(북일평양선언)을 발표

- IAEA는 9.20 제46차 정기총회(9.16-20,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안전 조치협정 전면이행 촉구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북한이 과거 핵이력 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지체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

- 이와관련 ▲9.12 정기이사회(9.9-12, 오스트리아 빈, 총 35개 이사국 참가)에서는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議長要約을 채택 ▲동 이사회에서 미국은, 핵사찰에 3-4년이 소요되고, 원자로의 상당부분이 2005.4 완공된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개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1년내 사찰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

- 미국 「부시 행정부」는 9.20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테러·WMD 위협 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공세적 대응전략을 제시

II. 주 요 동 향

1. 제2차 「경추위」 이후 9월중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 현황

□ 개 요

- 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과 「경추위 제2차 회의」(8.27-30, 서울)의 합의에 따라, 경제·군사·적십자 등 각종 분야별 후속회담을 개최하고 관련 합의서를 채택,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본격적 실천단계로 진입

□ 주 요 내 용(분야별 회담 경과 및 평가)

①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9.6-9.8, 금강산)

- 면회소 설치·운영 및 면회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이산 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발판 마련
 - 면회소 개시일자,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의 규모 등은 10월중 개최되는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음.
- 국군포로 생사·주소확인을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키로 한 것은 괄목한 만한 성과로 평가

② 제2차 금강산관광당국회담(9.10-9.12, 금강산)

- 11월중 육로관광 개시,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 그러나 쌍방 사업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당국간 협력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서 미채택

- 북측은 회담 종료후 부정적 논평없이 회담진행내용만 간략히 보도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 차원에서 신중한 태도 시현

③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9.13-9.17, 금강산)

- 남과 북은 이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시종 진지하고 실무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
- 철도는 경의선·동해선 모두 단선으로, 도로는 경의선·동해선 각각 4차선·2차선으로 연결하되, 동해선 도로는 12월초 차량통행에 합의
- 연결공사에 필요한 1차분 자재·장비는 9월안에, 나머지는 공정에 맞추어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

④ 제6·7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4-15, 9.17, 판문점)

- 쌍방은 적극적 태도로 신속한 합의서 타결에 주력
-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발효
 - 남북관리구역 설정, 군사실무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 분단이후 최초로 군당국이 적극적인 긴장완화조치를 취하는 계기
 - 남북이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거두어내고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과정을 대내외에 시현

⑤ 제1차 임남댐공동조사실무접촉(9.16-9.18, 금강산)

- 우리측은 공동조사를 통해 임남댐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북한강 수계의 남북공동이용을 위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입장
- 그러나 북측은 공동조사에 앞서 임남댐을 부정적으로 평가(수공용, 부실공사)한 데 대한 사과·보상과 공동조사 대가를 요구
- 쌍방의 상이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추후 협의키로 한다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

□ 평 가(제7차 장관급회담 이후 9.30 현재까지)

- 최근 남북대화(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경추위 제2차 회의를 포함한 9월중 개최된 분야별 후속회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로 인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함.
- 전반적으로, 회담에서 북측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화해 협력의 기초를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
- 이러한 북측의 전향적 자세는 회담진행 과정(의제 협상과정)에서는 「명분」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 요컨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경추위, 군사실무회담, 철도·도로실무협의회)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비교적 체제에 부담이 되는 분야(금강산 관광회담, 임남댐조사 실무접촉, 적십자회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냄.

2.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政令 발표

□ 개 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12 政令을 발표,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9.19, KCNA)
 - 이어, 9.23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 국제무역회사」간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조인(김용술 위원장, 양빈 총재)
 - 9.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개최, 政令을 통해 「양빈」을 특구장관으로 임명하는 후속조치를 단행

□ 주 요 내 용

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政令(9.12, 要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함.
-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49개 洞중 43개 洞)와 의주군(3개 里)·염주군(2개 里)·철산군(2개 里) 등을 관할함.
-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시킴.
- * 政令 :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가 채택하고 공포하는 법 문건

②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概要)

- 동 기본법은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 기구, 제6장 區章(區를 표시하는 휘장)· 區旗(區를 상징하는 기)등 총 101조로 구성
- 신의주 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 부여, 특구의 법률제도 향후 50년간 불개정, 외교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분에 불간섭
- 旅券 자체 발급,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 과학·오락·관광지구 조성
- 2052.12.31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 부여, 투자장려 및 기업 경제활동 여건 보장
- 특구에 「입법의회」 별도 설치, 장관의 입법회의 결정 및 특구 지시 공포권, 행정부 성원과 검찰소장 임명·해임권 등 규정

③ 歐·亞 국제무역회사와 「특별행정구」 개발합의서 체결

- 9.23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용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과 楊斌 유럽·아시아국제무역회사 총재간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관리운영에 관한 기본합의서 조인
 - 동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상이나, 「구·아 국제무역회사」에 행정구의 개발·관리운영 권한 부여 및 개발계획·유치업종·외자유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

④ 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장관 임명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장관으로 楊斌을 임명하는 政令을 발표(9.24 중앙통신)

-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77조, “장관은 특구주민으로 사업 능력이 있고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으며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 한다”고 규정
-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39세)은
 - 중국 南京 출신의 네덜란드 국적 화교재벌, 90년 중국에 「구·아그룹」을 설립, 심양시에 荷蘭村(농공복합단지, 2억불 규모)을 건설하고 있으며
 - 현재 외국인 신분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추천시 「주민」이 될 수 있다는 「특구기본법」(42조)에 따라 장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

Ⅲ. 기 타 동 향

1. 「북·일 정상회담」 개최 결과

□ 개 요

- 일본 고이즈미총리는 9.17 평양을 방문, 김정일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일 공동선언」(북일 평양선언)을 발표
 - 양측은 ▲10월중 북일 수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본인 납치문제 ▲핵·미사일 등 안전문제(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 연장) 등 양측간 주요 현안을 협의

□ 주 요 내 용

①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 양측간 국교정상화 회담을 10월부터 재개기로 합의('00.10 중단 이후 2년만에 재개)

② 일본인 납치문제

-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 * (김정일 발언내용) :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특수기관 일부에 망동주의자가 영웅주의로 달려 이런 것을 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음. 솔직하게 사과하고 싶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일측이 요청한 8건 11명 외에 유럽 등에서 실종된 3명 등 총 14명의 안부를 제공하고 생존자 면담주선(8명 사망, 5명 생존, 1명 미확인)

③ 식민지배 사죄 · 보상문제

- 식민지배 사과 관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 前 일본 총리 「무라야마」 담화(95.8) 수준에서 타협
 - * 95.8.15 「무라야마」는 종전 50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통해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배를 통해 손해와 고통을 한국에 끼쳤으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과거사죄문제를 피력
- 식민지배 보상 관련, 양측이 재산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일측이 수교후 무상자금협력, 저리 장기차관 제공 등의 경제 협력을 제공, 구체적 보상규모는 향후 수교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④ 핵 · 미사일 등 안전보장문제

-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관계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
-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기로 약속

⑤ 기 타 사 항

- 북측은 ▲남북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미측에 대화의지 전달을 요청 ▲怪船舶 事件은 군부일각의 소행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

2. IAEA 대북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관련동향

□ 개 요

- IAEA는 9.20 제46차 정기총회(9.16-20, 오스트리아 빈)를 개최하고,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 전면이행 촉구 대북결의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 9.12 정기이사회(9.9-12, 오스트리아 빈, 총 35개 이사국 참석)에서는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議長要約을 채택

□ 주 요 내 용

① 제46차 정기총회 관련동향(결의안 요약)

-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재강조하며, 북한은 동 협정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 * IAEA 안전조치국장(치툼보)는 9.25 핵안전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이 오는 11월중에 「기술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
- 북한은 IAEA가 2001.5 과거 핵규명을 위해 제의한 구체적 조치를 더 이상 지체없이 수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IAEA는 2001.5 북한과의 제16차 기술협의회 ▲영변 동위원소 생산실험실의 활동 조사와 ▲5메가와트 흑연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8,000여개)에 대한 「플루토늄 함량측정」을 제의

- 북한의 과거 핵규명에 최소 3-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은 IAEA와 즉시 협조할 것을 촉구함.

※ 제46차 총회의 결의안은 “북한 과거 핵규명에 3-4년 소요” “더이상 지체없는 핵사찰수용” 등의 내용을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대북 조기핵사찰 촉구 水위가 예년보다 강화

② 정기이사회 (9.12) 관련동향

- 「엘바라데이」사무총장은, 북한과의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사찰문제에 가시적 진전이 없었다면서, 경수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북한이 즉각 핵사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은, 대북사찰에 3-4년이 소요되고 원자로의 상당부분이 2005.4 완공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찰이 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1년내 사찰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 일본은, 최근 일·북간 관계개선 움직임 등 동북아 정세 진전이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EU·캐나다 등은, 북한이 핵관련시설을 신고(92.5)한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핵물질 전용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핵사찰 수용을 촉구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오고 있다면서 당사국이 미·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참 고 사 항

- 북한은 74.9 IAEA 및 85.12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데 이어 92.1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
- 93.3.12 IAEA 이사회의 특별사찰 요구와 우리의 팀스피리트 (T/S) 훈련 재개에 반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93.6.1 동 조약 탈퇴를 유보
- 94.6.13에는 IAEA의 “대북 기술지원 중단 및 UN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에 반발, IAEA를 탈퇴
- 이후 미국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여 94.10.21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채택, “NPT 회원국으로 잔류하고 전면사찰 허용 등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수락”기로 합의
- 그러나, 현재까지 IAEA의 단순사찰만 허용하고 과거 핵이력 규명을 위한 「정보보존 전면사찰」 요구는 계속 거부

IV. 분야별 일지

남북한 관련동향

- 9. 4 북한 의무성대변인, 「미군의 한반도 주둔」(45.9.8) 관련 담화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9. 5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9.5-8, 서울) 개최
- 9. 8 북한, 정권창권 54주년(9.9) 관련 중앙보고대회 개최(*세부내용 본문참조)
- 9. 8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9.6-8, 금강산), 상설면회소 설치·서신교환 확대·행불자 생사확인 문제협의 등 「6개항 합의서」 채택
- 9.12 제2차 금강산관광당국회담 개최(9.10-12, 금강산, 합의서 미채택)
- 9.12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政令 발표
- 9.13 제5차 남북이산가족상봉 실시(9.13-18, 금강산, *세부내용 본문참조)
- 9.13 대북 비료10만톤 무상지원 관련 「제1항차 수송선박」 출항
- 9.14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 관련, 남측 시범단 방북(9.14-17, 대한태권도협회 구천서회장 등 50명)
- 9.15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4-15, 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철도·도로연결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
- 9.17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9.13-17, 금강산),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1차 합의서」(7개항) 및 「자재·장비 제공 합의서」(11개항) 채택
- 9.17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7, 판문점 통일각), 「남북철도·도로연결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교환·발효

- 9.18 남북한,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 착공식」 거행
- 9.18 제1차 임남담공동조사실무접촉 개최(9.16-18, 금강산, 합의서 미채택)
- 9.19 대북 쌀40만톤 차관지원 관련 「제1항차 수송선박」 출항
- 9.19 남북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작업」 동시착수 실시(제6차 군사실무회담 합의사항, *세부내용 본문참조)
- 9.22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특별총회 개최 및 신임 「장웅총재」 선출(*세부내용 본문참조)
- 9.29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북한 대표단 참가(북측 참가인원 : 총 705명, 선수단/357명, 응원단/280명, 만경봉호 선원 등/68명)

주변국 관련동향

- 9.12 UNC-북한, 제14차 장성급회담(판문점 군정위 본회의실) 개최 및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과 남북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군사합의서」 채택
- 9.12 IAEA 정기이사회(9.9-12, 오스트리아 빈), 대북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의장요약」 채택(*세부내용 본문참조)
- 9.17 일본-북한, 「북일 정상회담」(고이즈미총리/김정일위원장, 평양 백화원 초대소) 개최 및 「북일 공동선언」(북일 평양선언) 발표
- 9.20 IAEA 제46차 정기총회(9.16-20, 오스트리아 빈),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세부내용 본문참조)
- 9.20 미국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 및 북한을 「WMD개발 불량국」 지정(*세부내용 본문참조)

- 9.24 미국-북한, 2002년도 제2차 미군유해공동발굴작업 실시 및 발굴 유해 8구 미측 인도(*세부내용 본문참조)

- 9.26 미 국무부, 북미대화 재개 관련 「제임스 켈리」 대통령특사(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 담당 차관보) 평양 방문(10.3-5) 발표(*세부 내용 본문참조)

- 9.27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바르샤바총회(9.21-27, 한·미·일 등 총 33개국 참가), 북한을 「주요 미사일확산국」 지정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7호>

2002.10.1 ~ 10.15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개최
-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 5주년 및 노동당 창건 57주년
관련동향

III. 기 타 동 향

- 「제임스 켈리」 미특사 방북 관련동향
- 美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우리측은 10.1 판문점 연락관접촉을 통해 「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9.13-17, 금강산)의 합의에 따라, 「철도 및 도로 자재·장비 차관 계약서」 최종서명본 원본 및 서명권한 위임관련 위임장을 북측에 전달
- 윤진식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은 10.5 북측 박창련 위원장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2차회의(10.12-15, 평양),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10.25-27, 개성),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10.28-30, 개성) 등 「경제분야 실무협의회」 개최를 제의
 - * 이와관련, 북측은 10.9 대남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의 회담개최일자에 동의, 다만,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회의와 관련하여는 접촉형식을 「실무접촉」으로,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수정 제의
- 韓赤 서영훈총재는 10.8 北赤 장재언위원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10.16-18, 금강산)을 제의
 - * 이와관련 북측은 10.9 대남전통문을 통해, 10.30경 「적십자실무접촉」(금강산) 개최를 수정 제의
- 남북한은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회의(9.13-17,금강산)의 합의에 따라 10.12-13 금강산에서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개최하고 「1차분 자재 장비 제공품목 및 수량」과 「자재·장비 인도인수철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10.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53.10.1) 49주년과 관련, 동 조약을 ‘자주통일의 기본장애물’ 및 ‘침략문건’으로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철폐」를 강도 높게 주장(평방)
 - * 이와관련, 10.9 民民戰 방송을 통해서 「현정국과 국민의 자세」 제하 남한주민에 대한 「당면투쟁과제」를 제시하고, 「강력한 반미투쟁단체 결성과 다채로운 투쟁방식 창출·구사」를 촉구
- 제57차 UN총회 참석 북한대표단은 10.2 제6위원회 연설을 통해 ▲

개도국의 지속개발을 위한 선진국과의 경제교류협력 강화 ▲UN 중심의 반테러투쟁 진행 및 반테러구실로 일방적인 군사공격 반대 입장 등을 강조

- 10.3 단군릉(강동군 소재)에서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등 「단군민족 통일협의회」 대표들과 남·북·해외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천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단군제」를 개최하고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 * 동 남북공동행사에는 ▲남측 대표단(단장 : 한양원)100명 외에 10.2 대북지원식량 분배모니터링을 위해 방북한 천주교 정의의구현사제단 일행도 참석 ▲한편,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역사학자들의 「공동학술토론회」(10.3, 인민문화궁전)를 개최, 「공동보도문」을 발표
- 외무성대변인은 10.7 KCNA회견을 통해 「제임스 켈리」 미특사의 방북(10.3-5) 관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의 대조선 강경압살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先軍政治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할 것임”을 강조
- 10.8 김영남 위원장과 당비서 전병호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97.10.8) 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 ▲김정일 업적찬양과 함께 ▲선군사상 및 선군혁명에 의한 성과와 ▲특히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업(혁신적 안목의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
- 10.10 노동당 창건(45.10.10) 57주년과 관련 ▲고위간부들의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각종 경축공연 등 기념행사를 개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노선으로 강조하는 한편 ▲모든 분야에서 새 세기의 관점에 맞는 참신하고 새로운 관점 및 창조와 혁신을 강력히 촉구
 - * 북한은 9.30/10.5 노동신문 논설 등을 통해 先軍政治(思想)를 강조하고, 최근 획기적인 대내외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기존 이념과 노선에는 변화가 없음을 지속 강조

◀ 주변국 동향 ▶

- 「제임스 켈리」 미특사(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 담당 차관보)는 10.3-5 평양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김계관 부상 등과 회담하고 북미회담 재개관련 미측 입장을 전달

- * 켈리특사는 방북결과 설명을 위해 최성홍 외교부장관을 예방한 후 공식기자회견 (10.5)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핵·미사일개발, 재래식병력위협, 인권 유린상황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노력이 있어야 북미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음을 발표
- 미국무부는 10.7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미얀마·중국·쿠바·라오스·베트남 등 6개국을 「종교탄압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북한은 2001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 일본 오기 치카게(扇千景) 국토교통상은 10.4 기자회견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인양(9.11)한 괴선박을 「북한 공작선」으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선박의 활동목적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방침임을 언급
- * 이의 근거로, 괴선박에서 소형 잠수정과 김일성 배지, 미사일발사장치 등 다수 (100여점)의 무기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언급
- 일본 후쿠다 관방장관은 10.9 공식언론회견을 통해,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을 10.29-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다고 발표(10.10 중/평방 보도)
- * 이와관련, 회담에 임하는 방침으로 ▲납치문제의 최우선 과제 상정 ▲납치 문제와 함께 안전보장문제의 거론 ▲북한의 성의를 보면서 회담에 신중히 임한다는 입장 등을 언급
- 중국 외교부대변인(章啓月)은 10.8 양빈 신의주특구장관을 불법 기업활동 혐의와 관련하여 공안관련법에 따라 가택연금한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양빈사건과 신의주특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언급
- 러시아는 북한과 「북러 국경철도회의」(9.30-10.5, 하바롭스크)를 개최하고 ▲북한철도 현대화 및 TSR연결문제 ▲이를 위한 남·북·러 3자회담 개최 문제 등을 협의(북한 대표단장 조창범 청진철도국 참모장 기자회견)
- * 남·북·러간 「3자 철도회담」은 러시아가 2000.12 북한측에 최초 제의

II. 주 요 동 향

1.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개최

□ 개 요

- 남북한은 10.12~13간 금강산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개최하고 「1차분 자재·장비 제공품목 및 수량」과 「자재·장비 인도인수절차」에 합의

□ 주 요 내 용

①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확정

- 자재 : 33개(공여), 장비 45개(공여 : 20, 임대: 25)
 - 굴착기(1.5㎡ → 1.0㎡) 등 일부 품목 및 수량·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 폭약, 뇌관, 도화선 등 예민한 품목 등 제외

② 인도·인수절차 합의

- 표지 관련사항
 - 2조 1항의 '제공측의 표식을 한다'는 조항에 의거 자재 및 장비 제공의 경우 대한민국이란 표지를 사용키로 합의
- 첫 자재·장비 제공 전달일정 합의

- 문건교환 이후 5일 안에 장전항과 해주항을 통하여 동시에 북측에 전달하기로 합의

○ 수송경로 관련문제

- 4조 1항에서 동해선 연결공사에 제공되는 자재·장비의 경우 「장전항 이용」이 가능토록 명문화

○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

- 인수 및 사용결과를 인수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문건으로 통보
-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 허용

③ 기타 협의사항

○ 공동측량 실시문제

- 우리측은 10월말경 공동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사 실무회담에서 정식의제로 제기하겠다고 제시
- 북측은 비무장지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동측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응답

○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일정 문제

- 제3차 경추위에서 협의하기로 합의

□ 평 가

- 1차분 자재·장비 제공문제를 마무리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추진 여건 조성
 -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 확정과 제공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공사추진 가능

- 자재·장비 제공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장비 제공시 대한민국 표지와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에 합의함으로써 자재·장비 사용의 검증수단 확보

- 공동측량, 공사설계서, 공사일정 상호교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시 협의사항 사전 조율
 - 공사추진에 대한 상호의지 확인 및 제2차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필요성 및 협의사항 공감

- 철도·도로 실무접촉을 통해 실무적 문제해결 창구 확보
 -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남북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주의적 대화체제 구축

2.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5주년 및 노동당 창건 57주년 관련동향

□ 개 요

- 북한은 10.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5주년과 10.10 노동당 창건 57주년을 맞아 「중앙보고대회」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 김정일·김일성 부자의 당창건 및 발전업적을 집중 선전
 - 이와함께 ▲선군혁명노선을 혁명의 영원한 지도노선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노선으로 강조하고 ▲모든 분야에서 새 세기의 관점에 맞는 참신하고 새로운 관점 및 창조와 혁신을 강력히 촉구

□ 주 요 내 용

①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5주년 「중앙보고대회」 관련동향

- 보고(당비서 전병호)를 통해, ▲先軍思想 및 先軍革命에 의한 성과를 강조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업을 제시
- 선군정치 성과와 관련,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이념 아래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전개하였음과
 -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북러친선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조일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강조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업과 관련,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임을 제시하고
 -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따지고 모든 일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전개해 나감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함을 강조

② 노동당 창건 57주년 관련동향

- 노동신문 기념사설 및 방송보도를 통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당 창건 및 발전 업적을 집중 찬양하는 가운데
 - 선군혁명노선을 혁명의 영원한 지도노선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강조하는 한편
 - 모든 분야에서 새 세기에 맞는 참신하고 새로운 관점 및 창조와 혁신을 강력히 촉구

※ 금번 당 창건 57주년 기념행사는 올해가 평주년으로 특별한 동향 없이 연례적인 수준에서 치러졌으며, 특히 시기적으로 김정일의 黨 총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과 겹치기 때문에 각종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

□ 평 가

- 금번 2개행사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없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찬양 및 先軍政治 등 기존의 정치적 구호와 정책노선을 되풀이하면서
 - 김정일의 선군사상 기치하에 사회주의 수호 및 강성대국 건설의 새 시대를 개척하였음과
 - 통일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적 지위 향상 및 국제적 연대성이 확대·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 경제부문에서 새 세기에 맞게 혁신적 안목을 갖고 주어진 방침과 정책을 대담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한 것이 특징
- 특히, 경제부문에서 혁신적 안목으로 정책수행을 강조한 것은 최근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과 관련, 주민들에게 당의 각종 경제정책노선을 충실히 따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

Ⅲ. 기 타 동 향

1. 「제임스 켈리」 미특사 방북 관련동향

□ 개 요

- 「제임스 켈리」 미특사(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 담당 차관보)는 10.3-5 평양을 방문, 북미회담 재개관련 미측 입장을 전달
- * 켈리 특사는 방북기간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부상 김계관 등과 회담후, 10.5 방한하여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방북결과를 설명
- * 켈리 방북시 대북교섭담당 대사 「프리차드」, NSC 아시아담당국장 「그린」, 합동참모본부 소장 「던」 등이 동행

□ 주 요 내 용

① 최성홍 외교부장관 예방후 공식기자회견(10.5) 요지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및 핵·미사일 개발, 재래식병력 위협, 인권유린 상황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대량살상무기 및 핵·미사일 개발에 대하여는 중단할 것을 요구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북미관계 개선 가능

- 미국과 북한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할 때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평가
- 향후 대북정책은 오랜 관행에 따라 TCOG을 통해 한·미·일 3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
- 방북기간중 김영남과 한 차례, 외교부와 세 차례 협의 등 4차례의 협의를 진행
 - 미국 대표단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일원들로 구성
- 추후대화에 관하여는 합의된 바 없으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우려를 해소하자는 의사는 표시했으며, 회의결과를 검토한 후, 한·미·일 협의 후에 추후대책을 결정할 계획임.

② 북한 외무성대변인 KCNA회견(10.7) 요지

-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조미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사를 맞이하여 그의 말을 들어 보았음.
- 그런데 그는 우려사항이라는 것을 내들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가 해결하여야 조미관계는 물론 조일관계와 북남관계도 풀릴 것이라며 심히 압력적이고 오만하게 나왔음.
-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인 강경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확정된 이상, 우리도 특사에게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똑똑히 밝혔음.

-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강경압살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당성이 실증된 先軍政治에 따라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떠밀어 주는 것으로 되고 있음.

③ 기타 관련 동향

- 10.9 한성렬 북한 駐UN 차석대사는, 일본 교도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켈리 특사와 북한간의 대화가 결국 교착상태로 끝났으며 특사가 북한의 핵·미사일·인권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 “우리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단한다면 「우려사항」을 대화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압박을 느낀다”고 언급
- 10.8 파월 미국무장관은, “지난주 켈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보여준 진솔한 협상전략에 북한이 모욕감을 느낀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고 하고
 - “이는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말로 이야기할 때 북한측으로부터 받게 되는 반응유형이며, 우리는 현재 북한측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언급
- 아난 UN 사무총장은, 10.7 성명을 통하여 “미특사인 켈리 차관보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 사이의 회담이 양측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고
 -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아무리 심각한 차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발언

2. 美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 발표

□. 개 요

- 미국무부는 10.7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미얀마·중국·쿠바·라오스·베트남 등 6개국을 「종교탄압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

□ 주 요 내 용(보고서 북한 관련부분 요지)

- 종교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유형에는 5가지가 있는 바, 가장 문제시되는 유형이 종교를 포함,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체·권위주의 정권으로서 미얀마·중국·쿠바·라오스·북한·베트남이 있음.
- 북한은 정부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 이외의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지하교회 신도들이 폭행·체포·살해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투옥된 죄인들은 일반 수감자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해외종교·인권단체들의 보고·증언이 다수 존재하는 한편
 - 개종자 혹은 중국 국경을 통해 해외종교단체와 연계된 자들이 체포,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요하는 주체사상이 종교처럼 되어 있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됨.

- * 남북정상회담(2000. 6)이후 남북간 민간교류가 활발해졌으나 이에 따른 북한 종교자유 의 신장여부는 불분명함.

□ 참 고 사 항

- 미국 의회는 '98년 「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종교의 자유 수호와 종교적 탄압의 제거를 「미국 대외정책 목표」의 하나로 규정
 - 국무부내의 「국제종교자유실」로 하여금 매년 전세계 모든 나라의 종교적 자유와 종교적 탄압실태를 조사케 하고 그 결과를 종교보고서로 제출
 - * 「종교자유법」은 특별우려국가들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경제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특별우려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미얀마,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등이며, 북한도 '01년도에 특별우려 국가로 지정
- 이번 보고서의 종교탄압국 유형 및 내용은 지난 해와 유사하나, 중국과 이슬람권의 종교탄압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고 북한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

IV. 분야별 일지

남한 관련동향

- 10.1 우리측, 「철도 및 도로 자재·장비 차관계약서」 최종서명본 원본 및 서명권한 위임장 대북전달
- 10.2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단장 : 김병상 신부), 대북지원식량 분배 모니터링 관련 방북(10.2-9) 및 「단군제」 행사 참석
- 10.5 윤진식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경제분야 실무협의회」 개최 제의(*세부내용 본문참조)
- 10.8 한적,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10.16-18, 금강산) 개최 제의(*세부내용 본문참조)
- 10.9 정세현 통일부장관, 우리측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 관련, 10.6 현재 경의선 30%, 동해선 37% 진행 확인(통일미래연구원 초청 강연)
- 10.13 남북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개최(10.12-13) 및 「1차분 자재·장비 제공품목 및 수량」·「자재장비 인도인수절차」 합의서 채택

북한 관련동향

- 10.2 제57차 UN총회 참석 북한대표단, 철저한 UN중심의 반테러투쟁 진행 및 반테러관련 일방적 군사공격 반대입장 표명(제6위원회 연설)
- 10.3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남북한 및 해외대표참가 「단군제」 개최 및 「7천만계례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세부내용 본문참조)
 - * 동 행사는 「최초의 남북공동 개최절 행사」임.
- 10.7 외무성대변인, 「켈리」특사 방북결과 관련,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강력 비난(KCNA 회전)

- 10.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先軍思想 및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업(혁신적 안목의 경제정책 추진) 이행 촉구
- 10.9 民民戰, “현정세와 국민의 자세” 제하 「당면 투쟁과제」로 반미투쟁 단체 결성 및 다양한 투쟁방식 창출·구사 촉구
- 10.10 노동당 창건(45.10.10) 57주년 관련, 각종 대내외 기념행사 개최 (*세부내용 본문참조)
- 10.11 조선종교인협회 대변인, 미국무부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 (10.7) 발표 및 북한의 「종교탄압특별우려국」 지정 관련 비난 성명
 - * 동 성명은 “미국이 (켈리)특사파견을 통해 저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종교탄압을 꾸며내어 우리를 공격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

주변국 관련동향

- 10.1 미국 정부, 테러지원국 중 북한·쿠바를 제외한 5개국(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및 사우디·예멘·파키스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방문객에 대한 입국 및 체류 규제를 위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 실시
- 10.3 「제임스 켈리」 미대통령특사 방북 및 북미회담 재개 관련 미측 입장 전달
 - * 켈리특사는 ▲대량살상무기 및 핵·미사일개발, 재래식병력위협, 인권유린 상황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상기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노력이 있어야 북미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미측 입장을 전달
- 10.4 일본 국토교통상(扇千景), 東中國海 인양(9.11) 괴선박 관련, 「북한 공작선」으로 규정(*세부내용 본문참조)
- 10.5 러시아, 「북러 국경철도회의」(9.30-10.5, 하바롭스크) 개최 ▲북한 철도 현대화 및 TSR연결문제 ▲관련협의를 위한 남·북·러 3자 회담 개최 문제 등 논의
- 10.7 미국무부,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북한·중국·미얀마·쿠바·라오스·베트남 등 6개국을 「종교탄압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 10.8 중국외교부 대변인(章啓月), 양빈 북한 신의주특구장관의 중국내 불법기업활동 관련 중국공안당국의 가택연금 사실 공식확인
- 10.9 일본 후쿠다 관방장관, 북일국교정상화 교섭 일정(10.29-30, 쿠알라룸푸르) 발표(10.10 북한 중/평방 보도)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8호>

2002.10.16~10.29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남북청년학생·여성통일대회 관련동향

III. 기 타 동 향

- 「북한의 핵개발계획 是認」 관련동향
- 북한 철도성대변인, 「남·북·러 3자회담」 관련 담화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정부는 10.17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켈리 미 대통령특사 방북시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과 관련, ‘동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을 재확인
- 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을 개최하고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비롯 ▲남북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건설 착공·해운합의서 및 통행합의서 채택·동해어장 이용·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 등 8개항의 관련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우리측은 10.2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27-30, 서울) 합의에 따른 대북 비료10만톤 지원사업을 완료(9.13-10.21, 총 12개항차)
- 한적 서영훈총재는 10.24 북적 장재언위원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수정제의(10.9) 관련, 10.31-11.2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를 제의(⇒ 이에 북측은 10.26 남북연락관접촉을 통해 동의)
- 남북한은 10.2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통문을 교환,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장소·일정 변경에 합의(당초 10.25-27/10.28-30/개성 ⇒ 변경 10.30-11.2/평양, 동시개최)
 - * 이와함께, 동일 대남전통문(10.24자)을 통해 북측은 「국토환경보호성 김병칠 국장」을 새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단장으로 임명함을 통보
- 대한올림픽위원회 이연택위원장은 10.26 북한올림픽위원회 박명철 위원장 앞 대북서한을 통해, 제83회 전국체육대회(2002.11.9-11.15, 제주도)에 북측 체육관계자들을 초청

◀ 북한 동향 ▶

- 노동신문(10.16) 政論(승리의 길, 번영의 길)을 통해 ▲先軍政治로 북한이 죽음의 나락에서 강성대국으로 변하고 ▲북한에 적대적이던 서방국가들이 화해를 시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압살자세도 '붕괴론에서 연착륙론과 체제인정론으로' 바뀌었다고 주장 ▲先軍政治의 정당성을 강조
- 남북한 및 해외의 청년학생대표단 및 여성대표단은 10.12-17 금강산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10.12-14)와 남북여성통일대회(10.15-17)를 개최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과 ▲한반도 전쟁방지 및 평화수호노력 전개 등을 강조한 「공동호소문 및 결의문」을 채택
- 철도성대변인은 10.18 TKR-TSR연결 관련, 러시아의 「남·북·러 3자회담」 제의에 대한 지지담화를 발표
-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북측 위원장은 10.23 남측 윤진식위원장 앞 대남전통문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비료10만톤 무상지원(경추위 제2차 회의 합의사항) 수송완료에 대한 사의를 표명
-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집행 결과와 4/4분기 대책 ▲전력·석탄 등의 생산증대 및 과학기술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의(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 보고, 10.21 KCNA)
 -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사회주의헌법 제121·122조에 따라 「행정경제사업」의 주요계기시 개최, 특히 매년 「신년공동사설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경제 과업 수행을 위한 대책들을 토의, 금번 회의는 최근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
- 외무성대변인은 10.25 미국의 「켈리특사 방북시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시인 사실」 공개(10.17)와 관련한 담화를 통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용의를 표명
- 북측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대로 ▲북측 태권도시법단(단장 : 황봉영 조선태권도위원장, 총 41명, 10.23-26)과 ▲북측 경제시찰단(단장 :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총 18명, 10.26-11.3)을 서울에 파견(*남측 태권도시법단 방북 : 9.14-17, 대한태권도협회 구천서회장 등 50명)

◀ 주변국 동향 ▶

- 한·미 양국은 10.17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 방북시(10.3-5) 북한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중단키로 한 핵개발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해 온 사실을 인정했음”을 공식 발표
 - * 미측은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대변인 성명」 및 손 매코맥 백악관대변인 공식브리핑으로, 한국측은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성명」 및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공식브리핑으로 동시 발표
-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은 10.23 정기보고서를 통해, WFP·UN-ICEF를 비롯한 NGO 등 14개 기관(단체)의 대북지원 모금실적을 10.8 현재 UN 인도지원조정국의 금년도 모금목표액(2억5천800만달러)의 81.5% (2억100만달러)로 집계
- 일본 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10.24 「공식언론회견」을 통해 ▲일시 귀국한 납치일본인생존자 5명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을 것임과 ▲북한에 남아 있는 이들 가족들의 일본송환을 북한측에 요구키로 결정했음을 발표
- 한·미·일 3국 정상(김대중대통령·부시대통령·고이즈미총리)은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 관련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신속·검증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최근 「북일 평양선언」(9.17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
(10.26, 제10차 APEC 정상회의, 로스 코보스/멕시코)
 - * 이와관련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과, 북미관계변화를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 ▲고이즈미총리는 「북일평양선언」의 완전한 준수, 특히 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 관한 완전한 이행」 없이는 북일수교회담이 완료될 수 없음을 강조
- 제10차 APEC 정상회의(10.26-27, 멕시코)는 10.27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한 APEC 정상성명」을 발표 ▲북한에 대해 핵개발계획 포기 약속의 명시적 준수를 촉구 ▲이 경우 북한의 「경제적 혜택」에 주목함을 지적하고 ▲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APEC 정상들의 의지를 표명

II. 주 요 동 향

1.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개 요

- 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을 개최하여 제임스 켈리 미특사 방북(10.3-5) 및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합의하고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착공·해운합의서 및 통행 합의서 채택·동해어장 이용·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8개항의 합의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주 요 내 용(공동보도문 全文)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 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함.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함.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방향으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 시킴.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함.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 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함.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 합의서 채택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하기로 함.
6. 남과 북은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함.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 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함.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함.

□ 평가 및 의의

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경주

- 우리측은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한 조기해결, 핵관련 제반 협정 준수·이행을 촉구
 - 우리측은 기초발언, 대표접촉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
 - 특히, 우리측은 수석대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을 통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
- 이러한 협의결과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
-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

② 남북합의사항의 이행 및 활용방안 구체화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재확인
 -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는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임시도로는 금강산지역에 연결하도록 합의
- 개성공단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성공단 12월중 착공 등 실무적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데 합의
- 개성지역에 「남측 사무소 설치」 등에 합의

③ 남북화해협력의 제도적 장치 확충

- 해운합의서, 통행합의서 등 교류협력 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우리측 어민들의 북측 「동해어장 이용문제」 협의 등에 합의

2. 남북청년학생·여성통일대회 관련동향

□ 개 요

- 남북한 및 해외 청년학생대표단 500여명과 남북·해외의 여성 대표 700여명은 10.12-14과 10.15-17 금강산에서 각각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와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하고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과, 전쟁방지 및 평화수호노력 전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호소문 및 공동결의문」을 채택
 - * 동 행사들은 ‘모두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해외의 청년학생 및 여성대표들의 공동개최가 실현된 것임.

□ 주 요 내 용

①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 참석단체 및 주요인사(총 500여명)
 - 남측 :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철 교령·손장래 「민화협」 공동의장 등 229명(대표단 150, 참관단 79) 참가
 - 북측 : 허혁필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홍일천 김형직 사범대학장 등 270명 참가
- 공동호소문(要旨)
 - 6.15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힘차게 앞장서 나갈.

-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의 안녕과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길에 앞장 섬.
- 청년학생들의 연대·연합을 폭넓게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 나감.

② 남북여성통일대회

○ 참석단체 및 주요인사(총 700여명)

- 남측 : 이현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 은방희 「여협」 회장 등 357명(대표단 170, 참관단 187)이 참가
- 북측 : 박순희 「여맹」 위원장 · 노성실 평양시 위원장 등 300명이 참가
- 해외 : 김소자 在日 「여맹」 중앙위원장 등 50명이 참가

○ 공동결의문(要旨)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
- 이 땅에서 새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연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임.
- 남녀가 평등한 통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평 가

- 금번 「남북청년학생·여성통일대회」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해외의 민간단체대표들이 공동개최한 민간행사로
 -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문제 등을 논의, 현시점에서의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하였으며
 - 남북한 민간단체들이 「8.15 민족통일대회」(8.15-16, 서울)에 이어 이번에도 별다른 물의없이 대규모 행사를 원만히 진행한 것은 성숙된 민간교류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Ⅲ. 기 타 동 향

1. 「북한의 핵개발계획 是認」 관련 동향

□ 개 요

- 한·미 양국은 10.17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특사 방북 (10.3-5)시 ‘북한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중단기로 한 핵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사실’을 발표

* 미국측은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우리측은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성명」 형식으로 발표

□ 주 요 내 용

①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대변인 성명(10.17, 全文/비공식번역문)

- 미국 고위관계자들이 이달초 제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함.
- 제임스 켈리 국무부차관보가 이끈 특사단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에 전했다.
- 북한 관계자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음. (acknowledged that they have such a program)

-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 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한 (nullified)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음.
-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수년 전 핵무기개발 계획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음.
- 지난 여름 부시 대통령은 우방과의 협의를 거쳐 대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과감한 접근법**」을 개발했음.
-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및 수출, 주변국에 대한 위협, 테러지원, 북한주민에 대한 비참한 처우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극적으로(dramatically) 바꾼다면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조치를 제안하려 했음.
-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이같이 접근법을 계속 추구할 수 없음.**
- 북한의 「**비밀 핵무기계획**」은 제네바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합의, 남북공동의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
- 미 행정부는 의회 주요인사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지속할 것임.
- 존 볼튼 국무부차관과 켈리 국무부차관보가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방문할 것임.
-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in a verifiable manner)으로 핵무기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 미국은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

- 북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 핵무기계획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평화적인 국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음.
- 이번 사건은 북한 주변의 평화애호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임.

②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성명(10.17, 全文)

- 우리 정부는 미 특사 방북시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관하여 통보 받고 한·미·일 3국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합의, 비확산 협정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함.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
-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제기할 것임.

③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과(10.17, 통일부대변인 발표/奎文)

- 금일 오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제208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핵개발문제를 논의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며 ▲새롭게 제기된 핵개발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위해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동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이에 따라, 오는 10.19부터 개최 예정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APEC 정상회의 기간중 한·미·일 정상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였음.

④ 「제임스 켈리」 訪韓 공식기자회견(10.19, 要旨/비공식번역문)

- 본인이 북한을 방문한 직후 한국에 왔을 때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
-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질문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먼저 「짧은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음.
- 10.3-5까지의 방북 당시 북한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정책요점을 설명했음. 저는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돕는 노력을 미국은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본인은 개인적으로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믿어 왔음.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만든 「과감한 접근법」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음.
- 이 「과감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우방국과 동맹국과의 협의하에 만든 접근법임.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태도를 극적으로 바꾼다면 미국은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
- 그러나, 본인이 북한측에 설명했듯이 최근 미국이 입수한 정보로 인해서 이러한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 북한이 제네바협정과 다른 핵무기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정보를 미국이 최근 입수하게 되었기 때문임.
- 본인은 북한측에 즉각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이 「비밀 핵무기 계획」을 중단하라고 했음. 처음에는 부인하던 북한 관계자들도 그런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단호히 인정했음. 또 북측은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은 이 상황을 최근 미국의 정책책임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본인은 그런 주장이 북한이 몇 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우리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음.
- 북한의 「비밀 핵무기계획」은 중대한 우려사안이며 제네바기본 합의,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북한의 약속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임.

-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조치, 즉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핵무기계획을 버리고 국제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음.
- 미국은 현재 동맹국과 우방국과 협의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음. 우리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하기 원함.
- 우리는 한국, 일본 다른 관련국가들과 계속해서 협력하여 북한의 핵무기계획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해체되도록 요구할 것임. 오늘 한미 양국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다음 조치에 대해 협의했음.
- 오늘 있었던 대화는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의 10.26 멕시코 로스 코보스에서 있을 APEC 정상회담의 사전준비작업으로서 특히 유용했음.

⑤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10.25, 要旨)

- 미 특사는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목적으로 농축우라늄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조일, 북남 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음.
- 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기본 합의문 4개항 중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음.

<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조미기본합의문」 위반근거 >

제1조 : 경수로발전소 2003년 완공 ⇒ 기초구덩이 판데 불과
(8.7 최초 콘크리트타설식 진행)

제2조 : 정치·경제관계 정상화 ⇒ 적대정책·경제제제 지속,
「악의 축」으로 공격

제3조 : 핵무기 불사용 담보 ⇒ 핵선제공격 대상에 포함

제4조 : 터빈과 발전기 등 납입후 핵사찰 ⇒ 즉각사찰 일방주장

-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 핵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기본합의문」과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임.
- 우리는 미 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 주었음.
-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 줄 필요가 없으며 그럴 의무는 더욱 없음.
-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첫째,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음.
- 우리는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함.
-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음.

-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협상도 있을 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前者를 바라고 있음.

⑥ 한·미·일 3국 정상 공동발표문(10.26, 로스 코보스/멕시코, 全文)

- 금일 조지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및 고이즈미 총리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3국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프로그램」이 미북 기본합의문(AF), 비확산협약(NPT), 북한의 IAEA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 하였음.
- 3국 정상들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최근 「일북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맞게 모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3국 정상들은 다음에 취할 조치와 관련하여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3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3국간 긴밀한 협의 및 전세계 모든 관심국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 하였음.
- 3국 정상들은 남북대화 및 일·북 수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하였음.

- 김대통령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측에게 핵문제의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국교정상화가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촉진시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평양선언의 완전한 준수, 특히 핵문제 및 납치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관한 부분의 완전한 이행이 없이는 일·북 수교회담이 완료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자신은 미·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음.
- 3국 정상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하였음.
- 그러나 3국 정상들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이제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북측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여부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하였음.
- 지역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3국 정상들은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의 지속이 북한에 대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긴요함을 재확인하였음.

⑦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한 APEC 정상성명

(10.27, 로스 코보스/멕시코, 全文)

- 우리는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아태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주목함.
- 그러한 전망은 핵위기 없는 한반도를 전제로 함. 우리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함.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역내 모든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됨을 확인함.
-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한 약속을 「명시적으로 준수」하기를 촉구하며, 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함.

2. 북한 철도성대변인, 「남·북·러 3자회담」 관련 담화

□ 개 요

- 북한 철도성대변인은 10.18 TKR-TSR 연결 관련, 러시아의 「남·북·러 3자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
- * 남·북·러간 「3자 철도회담」은 러시아가 2000.12 북한측에 최초로 제의,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국경철도회의」(9.30-10.5, 하바롭스크)를 개최하고, 북한철도 현대화 및 TSR연결문제, 이를 위한 남·북·러 3자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

□ 주 요 내 용(要旨)

- 최근 조선의 북남철도와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유관 각측의 노력이 국제적 관심속에서 심화되고 있음.
- 북러 철도연결사업은 북러 두 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와 협력을 대폭 확대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중요한 사업임.
- 우리는 북러 사이의 철도연결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참여한 군사분계선의 일부 지역을 개방하고 북남철도 연결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러시아측도 자기 구간의 철도 현대화사업을 적극 진척시키고 있음.
- 얼마 전 러시아는 조선반도와 시베리아철도 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남조선 철도 관계자들 사이의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음.

- 우리는 러시아의 이 제안이 북러 모스크바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러철도연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간주하면서 이를 지지함.
- 우리와 러시아, 남조선이 참가하는 철도관계자들의 3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조선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긍정적인 결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참 고 사 항

- TKR/TSR 연결 관련, ▲현재 러시아는 철도연결에 대비 시베리아철도 개·보수작업을 계획중 ▲남북간 철도연결사업도 착공식(9.18)을 계기로 공사가 본격화 ▲그러나, 북한지역 철도 현대화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같은 점에서, 동 담화는 북한이 러시아가 제의한 남·북·러 3자회담 지지를 통해 「TKR 북측 구간 개·보수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

IV. 분야별 일지

남한 관련동향

- 10.17 NSC 상임위원회 개최 및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 관련,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입장' 정리(*세부내용 본문참조)
- 10.19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철도 도로연결·개성공단 건설 착공 등 남북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8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10.21 대북 비료10만톤 지원사업 종료(9.13-10.21, 총 12개항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사항)
- 10.24 한적 서영훈총재, 「남북적십자실무접촉」(10.31-11.2, 금강산) 제의 대북 전통문(⇒10.26 북측 동의, 판문점 남북연락관접촉)
- 10.25 남북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및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관련, 회담일정 및 장소변경 합의(*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6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장, 제83회 전국체육대회(2002.11.9-11.15, 제주도) 북측 체육관계자 초청 관련, 북한올림픽위원장 박명철 앞 대북서한

북한 관련동향

- 10.12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10.12-14, 금강산) 및 남북여성통일대회(10.15-17, 금강산) 개최 및 ▲6.15 공동선언 실천노력과 ▲한반도 전쟁방지노력 전개 촉구 등 「공동호소문 및 공동결의문」 채택
- 10.15 북한대표단 訪中(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 13명, 10.15-19, *정치·경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 10.18 철도성대변인, TKR-TSR연결 관련 「남·북·러 3자회담」 지지담화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1 조선중앙통신,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및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집행결과 및 4/4분기 대책 등 토의 보도(*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2 국가관광총국 대표단(단장 : 여승철 총국장), 제38차 세계관광기구(WTO)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10.22-24, 일본) 참가
- 10.23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북측 위원장, 남측의 대북 비료10만톤 지원 수송완료 관련 謝意 표명(대남전통문)
- 10.23 태권도시범단(단장 : 황봉영 조선태권도위원장, 총 41명, 10.23-26) 서울 방문(*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5 외무성대변인, 「북한의 핵개발계획 추진」 및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관련 담화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6 북한 경제시찰단(단장 :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총 41명, 10.26-11.3) 방한(*세부내용 본문참조)

주변국 관련동향

- 10.12 일·러시아, 고이즈미 총리 러시아 방문시(2003.1) 「일·러 행동계획 채택」 관련 외무장관회담(모스크바) 개최
 - * 동회담에서 ▲러시아는 TKR-TSR연결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협조와 ▲일본이 미국에 대해 북미대화 재개 및 관계개선을 요청해 줄 것을 기대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문제 협의 긴밀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6자회담 추진」 등을 행동계획에 명문화시키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합의
- 10.17 한·미 양국, 「켈리 미대통령특사 방북시(10.3-5) 북한의 핵개발 계획 추진 시인 사실」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0.17 미국 「도널드 럽즈펠드」 국방장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언론회견
 - * 럽즈펠드 장관은 “CIA는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북한이 '90년대초 이후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했으며, 나는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

- 10.21 미국 부시대통령,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 관련 언론회견
 - * 부시대통령은 “나는 이번 사태를 이 지역의 우방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위협한 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세력을 규합하고, 또한 김정인에게 무장해제를 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
- 10.23 UNOCHA, 10.8 현재 대북지원 모금실적(금년도 목표액의 81.5%)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4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일시귀국한 납치일본인 생존자(5명) 대북 불송환 방침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6 한·미·일 3국정상, 「북한의 비밀 핵개발계획 시인」 관련 공동발표문 발표(로스 코보스/멕시코, *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7 제10차 APEC 정상회의,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APEC 정상성명」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0.29 북한·일본, 「북일 국교정상화회담」(10.29-30, 쿠알라룸푸르) 개최 (*세부내용 「제49호 남북관계동향」 수록 예정)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49호>

2002.11.1 ~ 11.15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제3차 경추위」 등 최근 남북회담 개최 결과

III. 기 타 동 향

- KEDO 집행이사회/Bush 미 대통령, 대북성명 발표
-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개최 결과
- FAO/WFP, 「2003년도 북한 식량수급전망」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의 합의에 따라, 「정추위 제3차 회의」 등 경제분야 후속회담과 적십자실무접촉을 개최
 - 쌍방은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10.30-11.2, 평양), 임진강수해 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10.30-11.2, 평양),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31-11.2, 금강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11.6-9, 평양)를 개최하고 관련합의서를 채택
- 한적 서영훈총재는 11.7 북적 장재언위원장 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금년도 제10차 대북지원계획(학용품·이유식 등 총 1억2,500만원 상당)을 통보
- 통일부는 11.13 금년도 1-10월간 남북교역규모가 총 4억 4,102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라고 발표

◀ 북 한 동 향 ▶

- 외무성대변인은 11.2 KCNA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측의 「先 핵포기 後대화」 입장과 관련, “이는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 강도적 야심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 10.31 KCNA 보도, 11.1 駐中 북한대사 내외신기자회견, 11.2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서도 “미국의 선택포기 주장은 허위와 기만” 이라고 비난
- 11.5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10.29-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결렬 관련, 국교정상화회담이 성과없이 장기화될 경우 「미사일발사 연장조치의 재검토」를 시사
- 11.5-6 「4.25 문화회관」에서 김영남·조명록·홍성남 등 당·정·군 고위인사 참석하에 「전국 援軍美風 열성자대회」를 전국규모대회로 개최, “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전인민적·전사회적 운동으로 전개” 할 것을 집중 선전
 - 10.29 조평통대변인 담화, 11.3 노동신문 논설, 11.5 노동신문 사설, 11.5 평방

보도 등을 통해 ▲미제의 핵침략책동에 대해 先軍政治 옹호 및 대단결 ▲先軍政治가 미제의 핵침략책동에 대한 남조선까지 포괄한 全民族的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는 애국애족정치를 선언

- * 11.7 「민민전」 중앙위 선전국 명의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민족공조로 분쇄 ▲전민족 차원의 선군정치 지지 등 남조선 각계각층에 대한 「14개항 당면투쟁구호」 발표(이와 관련, 11.6 「민민전」 상무위 비상확대회의 개최)

◀ 주변국 동향 ▶

- 러시아와 북한은 11.2 TKR-TSR 연결관련 평양에서 「북러 철도장관 회담」(10.29-11.2, 김용삼 철도상/젠나니 파데예프 철도장관)을 개최, 「철도공동위」(10.23-28, 평양) 합의사항을 추인하고 「양해각서」를 조인
- 미국 「그레그」 前 주한미국대사는 11.2-5 평양을 방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과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
 - * 「그레그」 전대사는 11.6 訪韓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방북기간 중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NCND정책을 견지함과 ▲위태로운 상태에 있기는 하나 제네바합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불가침조약 체결 등 북한의 대미요구사항과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 해소의 동시이행 주장 및 ▲미국의 공격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안보불안 등을 표명했다고 발표
- KEDO는 11.14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과 관련 「KEDO 집행이사회 대북성명」을 채택, 대북중유공급이 12월분부터 중단될 예정임을 경고
 - * 이와관련, Bush 미국 대통령은 11.15 KEDO의 대북성명을 지지하는 대통령성명 (Statement by the President)을 발표 ▲북한의 국제약속 위반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완전히, 그리고 가시적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
 - * 「더글라스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대북관계 설정시 여타 다양한 분야(국가)와 균형을 유지해야 함과 ▲북한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11.7, 訪韓 내외신기자회견)

II. 주 요 동 향

1. 「제3차 경추위」 등 최근 남북회담 개최 결과

□ 개 요

- 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의 합의에 따라, 「경추위 제3차 회의」 등 경제분야 후속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개최
 - 쌍방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10.30-11.2, 평양),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10.30-11.2, 평양), 남북 적십자실무접촉(10.31-11.2, 금강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11.6-9, 평양) 개최를 통해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해운합의서, 4개 경험합의서 등 기존합의사항의 점검·확인과의 구체적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채택

□ 주 요 내 용

①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10.30-11.2, 평양)

< 합의서 全文 >

남과 북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오는 12월중에 하며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함.
2.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함.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는 규정, 세칙들을 빠른 시일안에 제정 공포하도록 함.
3.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남측은 전력, 통신, 용수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함.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측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공급자와 북측 관계부문 실무자간 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함.

4.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개성공단건설에 따르는 통행·통관·검역·통신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쌍방 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협의·확정하도록 함.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함.
6.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를 2002년 12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7. 쌍방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추진하기로 함.

2002년 11월 2일

< 회담경과 및 평가 >

- 우리측은 공단개발사업 추진의지 표명과 공단건설을 위한 쌍방 당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조율 및 착공식 관련 실무적 문제들은 사업자간 협의사항임을 강조
 - 이에따라 당국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개성지구법, 규정·세칙 문제와 외부기반시설 건설 및 통관·통행·검역·통신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관해 구체적 진전을 추구
- 북측도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함.
 -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토지임대료 및 지장물 철거비용의 북측 부담 등 우리측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
 - 다만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당국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견지하여 합의과정상 어려움으로 작용
- 금번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은 탄력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북측의 기본법과 하위규정 제정·시행, 남북간 제도적 장치 마련, 외부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자·북측간 협의 등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예정
- * 1단계 개발시 대체로 150-200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2만명 내외의 북측 노동인력의 고용을 예상
- 남북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당국 및 사업자의 적합한 역할모델 제시

- 우리측 개발사업자와 북측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되, 당국과 민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민간 협력사업에서 정부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②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10.30-11.2, 평양)

< 공동보도문 全文 >

-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를 진행하였음.
- 쌍방은 임진강지역의 수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임진강 유역과 한강 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 설치,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음.
- 남과 북은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대화와 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회의를 2003년 1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회 담 경 과 >

- 우리측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반복되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과 북이 공유하천의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범을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 우선 임진강 유역에 대한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이를 위한 자료교환문제 등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
- 그 결과 쌍방은 조사단 구성, 조사기간 및 범위, 홍수예보 시설 설치, 북측의 기상수문자료 제공 등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접근
- 다만, 북측이 임진강 상류의 산림조성을 위한 묘목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묘목생산·운반에 필요한 설비·자재지원)을 제기함에 따라
- 이에대한 우리측의 검토가 필요,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유보
- 쌍방은 내년 1월 서울에서 제3차 실무접촉을 갖고 상기문제들을 계속 토의할 예정

③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31-11.2, 금강산)

< 회담경과 및 평가 >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전쟁중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등을 논의
- 우리측은 ▲금강산면회소 설치 ▲기존건물을 이용한 면회 정례화 ▲전쟁중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등 주요의제 타결을 목표로 설정
- 금강산면회소를 조속히 건설한다는 입장하에, 금강산면회소 설치 이전에라도 기존건물을 이용한 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강조

- * 첫 면회를 12.3-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며, 형식 및 절차는 제5차 이산가족상봉단의 전례를 준용할 것을 제안(우리측은 북측이 제시한 온정리 조포마을 부근 「면회소 후보지」를 답사)
- 또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와 함께 전쟁 이후 납북자의 생사·주소확인문제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
- 아울러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던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
- * 우리측은 면회소 건설은 물론 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존건물을 이용한 면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또한 전쟁시기 등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북측은,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 타결에 주력하면서, 기존건물을 이용한 면회 정례화와 전쟁시기 및 전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에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
- 기존건물을 이용한 면회 정례화 문제에 대해 금강산면회소 완공 후에 면회를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
- * 상봉형식의 첫 면회를 12월 3일부터 추진하는 것은 계절적 문제, 금강산호텔 개보수 작업으로 인한 숙박시설 문제 등을 들어 불가능함을 강조
- 전쟁시기 납북자·국군포로 생사주소확인은 시범적 생사주소 확인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향후 협의·추진하자는 진일보된 입장 표명
- * 그러나, 전쟁이후의 납북자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은 문제를 거론한다고 강력하게 반발

- 이번 접촉에서는 ▲면회소 건설 및 생사·주소확인 사업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기존건물을 이용한 면회의 정례화문제, 전쟁전후의 남북자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11월과 12월에 남북 각기 100명씩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실시하자는데 대한 북측의 동의를 유도하고
- 12월 10일부터 2차 접촉을 개최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계속 협의키로 함으로써, 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모멘텀 유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④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11.6-11.9, 평양)

< 합의서 全文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회담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 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감.

- 이를 위해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는데 따라 11월중에 공동측량을 하여 정하되 일자와 진행절차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며, 공사일정표를 교환하고 필요한 공사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함.

- 쌍방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함.

2.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함.

-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며, 남측은 빠른 시일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함.

3.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확정되는 빠른 시일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함.

4. 남과 북은 빠른시일 안에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함.

쌍방은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를 1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고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5.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함.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진행함.

2002년 11월 9일

< 회담경과 및 평가 >

-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의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촉구하는 통로로 활용
 -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남북대화와 경협을 위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을 설득
 - 남북대화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로 활용한다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반영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내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 * 북측은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의식하고, 우리측 메시지를 청취하고 전달의도와 주체를 재확인하는 등 진지한 자세
- 회담의 주된 의제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경협제도실무협의회 가동 등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주력

-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등을 중심으로 경협관련 남북간 합의 사항들의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
- 새로운 합의보다는 기존합의를 다져 남북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에 주력
- 2차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점검, 8차 장관급회담 합의 내용 이행일정을 도출함으로써, 남북경협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상황악화 방지의 중요한 기재로서 남북대화의 기능을 유지
- 금번 회담은 남북간 경제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12월중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에서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 확충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
 -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합의서 등은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 및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

Ⅲ. 기 타 동 향

1. KEDO 집행이사회/Bush 미 대통령, 대북성명 발표

□ 개 요

- KEDO는 11.14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개최,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한 「KEDO 집행이사회 대북성명」을 발표
 - 동 성명은 ▲대북 중유공급이 12월분부터 중단될 예정임과 ▲향후 중유공급 여부 및 여타 KEDO 활동은, 북한이 핵개발계획의 완전 폐기를 위한 구체적·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재검토)될 것임을 강조
 - 이와관련, Bush 미 대통령은 11.15 KEDO의 대북성명을 지지하는 대통령 성명(Statement by the President)을 발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가시적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

□ 주 요 내 용

① KEDO 집행이사회 대북성명(11.14, 성명 全文, 비공식 번역본)

- KEDO 집행이사회는 금일 뉴욕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인한데 따른 영향에 대해 협의함. 한·미·일·EU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추구는 제네바합의, NPT,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서 이를 규탄함.
-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은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도전(a shared challenge)임.
- 동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NPT에 기초한 국제적 비확산체제를 훼손하는 것임.
-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하여야 함.
- 남북한, 일·북한 및 EU·북한간 대화는 양자 및 국제적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 핵무기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가시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채널임. 북한의 KEDO 및 KEDO 집행이사국과의 향후관계 및 상호활동은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에 달려 있음.
- 중유공급은 12월분부터 중단될 예정임.(Heavy fuel oil deliveries will be suspended beginning with the December shipment.) 금후 공급여부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완전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과의 여타 KEDO활동도 재검토 될 예정임.
- 집행이사회는 KEDO의 금후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에 취할 조치들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

② Bush 미 대통령 성명(11.15, 성명 全文, 비공식 번역본)

- 나는 KEDO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제거할 필요성에 관해 어제 발표한 강력한 성명과 북한에 대한 추가 중유공급을 12월부터 중단한다는 KEDO의 결정을 환영함. 우리는 KEDO의 동반자들 및 세계의 우방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공동의 도전(this shared challenge)을 다루고 있음.
- 북한은 농축우라늄에 기초한 핵무기프로그램을 적극 추구하고 있음을 인정했음. 이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안보와 국제적인 핵비확산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북한은 또한 북미기본합의서, NPT, IAEA안전조치협정, 한반도비핵지대화 남북공동선언 등을 직접적으로 위반했음. **북한의 이같은 명백한 국제약속 위반은 묵과되지 않을 것임.**(North Korea's clear violation of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will not be ignored.)
- 미국은 북한과 다른 미래를 갖기를 희망함. 내가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밝힌 것처럼,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of invading North Korea.)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임. 미국은 북한 주민들과 우호를 추구함.
- 우리는 2001년 6월 북한과 포괄적인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제의했음. 우리는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을 전개했으며 그것은 북한이 우리의 오랜 우려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주민의 생활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음. 북한의 은밀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이 접근을 추구할 수 없음.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에 하나의 도전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만장일치로 합의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은 이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해체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
우리는 단합해서 이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음.
우리는 이 상황을 다루는 단 한가지 선택방안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는 결의로 단합돼 있음.(We are also united in our resolve that the only option for addressing this situation is for North Korea to completely and visivly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2.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개최 결과

□ 개 요

- 북한과 일본은 10.29-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2차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하고 ▲11월중 「북일 안전보장 협의회」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핵개발 중지·납치 일본인 송환·식민지배 보상문제(경협) 등에 대한 異見으로 차기회담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

□ 주 요 내 용

① 수교협상 방향

- 일측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및 북한 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한 후 과거보상과 관련한 경협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
- 북측은 과거보상을 수교회담의 핵심의제로 협의하면서 납치·안보문제 등 여타 현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

② 북한 핵문제

- 일본측은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계획은 국제합의 위반으로 일본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핵개발 즉각 중지 및 핵사찰 전면수용을 촉구
- 북측은 핵문제에 대해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며 대미대화 의지만을 강조

- 양측은 11월중 수교회담과 별도로 국장급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협의회」를 개최,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③ 일본인 납치문제

- 일측은 현재 일본측이 귀환시키지 않고 있는 납치생존자 5명과 재북가족 9명의 영주귀국을 요청하고 사망자 8명의 사인에 대한 성의있는 재조사를 촉구
- 북측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조사입장을 밝히면서도 생존자 영주귀국 문제는 일단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낸 후 재협상할 것을 주장, 합의 도출에 실패

□ 참 고 사 항(북한 외무성대변인 KCNA회견, 11.5/중·평방)

- 회담에서 실제적인 문제 토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음.
- 우리는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합의 함으로써 조일관계의 근본적인 계산과 현안문제들의 원만한 해결로 이어짐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토의방식을 제기하였음.
- 그러나 일본측은 평양선언에서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약하고도 핵문제와 납치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문제 토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일본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핵문제를 토의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대변지역이나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만을 불러 일으킬 뿐임.

- 남치문제에서도, 일본측은 약속을 처음부터 뒤집음으로서 신의를 깨고 모처럼 마련되었던 협조분위기를 망쳐버렸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나라들 사이의 쌍무적인 합의와 약속들은 철저히 호상성에 기초하고 있는 바, 일방이 의무이행을 중지하면 타방도 자기의무를 계속 이행하기 힘들게 됨.
- 특히, 우리 해당부문에서는 조일 국교정상화회담이 이번처럼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장기화될 경우, 「미사일발사 연장조치」를 재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는 새로 조성되고 있는 사태를 엄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음.

3. FAO/WFP, 「2003년도 북한 식량수급전망」 발표

□ 개 요

- FAO와 WFP는 10.28 「합동조사단」의 방북(9.24-10.5)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한 「2003년 양곡회계년도(2002.11-2003.10) 북한 식량수급전망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북한은 금년도 곡물생산량이 1996년 이래 최고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식량부족(55만8,000톤 상당)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 요 내 용(보고서 요약)

- 북한의 금년도 곡물 생산 및 내년 하곡 예상생산량은 383만 7,000톤으로 충분한 강수량, 외국의 適期 종자·비료·농약 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4.9% 증가, 지난 96년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 2002년도(2001.11-2002.10) 곡물생산량은 365만 6,000톤
- 내년도 곡물수요량은 492만 1,000톤으로 생산량보다 108만 4,000톤 초과하여 기확보된 원조·예상수입·차입규모(총 52만6,000톤)를 감안시 55만8,000톤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이같은 만성적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식량원조와 함께 농업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농업개발 지원이 불가결한 상황
 - *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취약계층(640만명)에 대한 내년도 식량지원 규모를 51만 2,000톤으로 권고

IV. 분야별 일지

남북한 관련동향

- 11.2 남북한,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10.30-11.2, 평양) 및 7개항 합의서 채택
- 11.2 남북한,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10.30-11.2, 평양) 및 공동보도문 채택
- 11.2 남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10.31-11.2, 합의서 미채택)
- 11.5 북한 외무성대변인,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관련 담화 발표 (회담공전 장기화시 「미사일발사 유예조치 연장 재검토」 시사)
- 11.6 북한, 「전국 援軍美風 열성자대회」(11.5-6, 평양, 4.25 문화회관) 개최 및 “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의 전인민적·전사회적 전개” 촉구(전국대회 규모로 최초 개최)
- 11.7 북한 「민민전」 중앙위 선전국,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대한 민족공조 대처 등 「남조선 각계각층에 대한 14개항 당면투쟁구호」 발표(11.6, 민민전 상무위 비상화대회의 개최)
- 11.9 남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1.6-9, 평양) 및 빠른 시일내 「경협 4개합의서」 동시발효, 12월 중순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서울 개최 등 6개항 합의서 채택

주변국 관련동향

- 11.2 러시아·북한, TKR-TSR 연결관련, 북러 철도장관회담 개최(10.29-11.2, 평양, 김용삼 철도상/젠나니 파데예프 철도장관)
- 11.4 제8차 ASEAN 10개국 정상회의(11.14-15, 캄보디아) 북한 핵문제 협의 및 「대테러 공동선언」 채택

- * 동일(11.4) **ASEN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 ▲ APEC 정상회의시 채택한 대북성명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 11.5 미국 「그레그」 前 주한미국대사 방북(김계관 외무성 부상 초청,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과 최근 북한 핵문제 및 북미관계 협의)
- 11.7 EU의회,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시인관련 「대북 결의안」 채택 및 북한에 대해 즉각적·검증가능한 방법에 따른 핵개발(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진상 조사 요구
- 11.11 한·러 국방장관회담(모스크바) 개최
 - * 양국은 ▲상호 위협한 군사행동 자제 ▲유사시 즉각 군사통신 개설 및 해당국 군당국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 ▲협정이행 및 보장을 위한 양국 합동참모 본부간 정례협의체 운영 등 합의
- 11.14 KEDO 집행이사회,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시인 관련 「대북성명」 발표 및 2002.12월분부터 대북중유공급 중단 경고
- 11.15 Bush 미 대통령, KEDO 대북성명 지지 「대통령성명」 발표 및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계획의 완전·가시적 제거 촉구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50호>

2002.11.18 ~ 12.3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 및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개성공업지구법」 채택

III. 기 타 동 향

- 북한 외무성대변인, KEDO 대북중유공급 중단 관련 답화
- 「조국전선」 중앙위, 핵문제 관련 「전민족 호소문」 발표
- 북한 핵문제 관련 제57차 UN총회 동향
- UNOCHA, 「2003년도 UN 합동지원계획」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11.18-20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사항)과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각각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과 「관련합의서」(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를 채택
- 韓赤 서영훈총재는 11.21 北赤 장재언위원장 앞 대북통지문을 통해 금년도 제11차 대북지원계획(한적 의약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겨울이불·아동복 등 총 9억 4,000만원 상당)을 통보
- 남북한은 「제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의 공동측량(동해선 : 11.26, 경의선 : 11.27-29)을 실시(당초 합의는 경의선 11.29-30, 동해선 11.26-27)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11.27 언론브리핑을 통해 '02.9.17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시 우리측이 제의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관련, 최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회담일정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온 사실을 발표
 - * 남북한은 '02.10월초 판문점에서 DMZ공사 관련 군사실무대표접촉시 이 문제의 논의를 시작, 그간 몇차례의 협의를 통해 10.25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바 있음. 이와 관련, 쌍방은 '00.9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합의하였으나, 그동안 북측이 「주적개념 포기」를 요구하면서 회담개최를 지연시켜 왔음.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장광일 군비통제차장)은 11.27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대남전통문(11.27)을 통해 그간 중단되었던 DMZ 지뢰제거작업 관련, 「검증과 관계없이 지뢰제거작업을 재개」하자는 우리측 제의(11.25)에 동의해 온 사실을 발표
 - * 이와관련, 우리측은 11.22 쌍방 지뢰제거검증인원들의 MDL 통과절차와 관련한 우리측안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DMZ지뢰제거 남북상호검증」이 무산(11.6)되면서 지뢰제거작업은 중단됨. 그간 국방부와 UNC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이 지뢰제거 검증절차로 지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DMZ 출입과 MDL 월경에 관하여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측 案(쌍방 검증단의 명단 및 방문일정 등을 남과 북이 직접 협의·통보하되, UNC의 승인사항을 우리측이 받아 북측에 첨부/통보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거부함.(以上 11.25 국방부 대변인실 발표)

* 12.1 국방부(장광일 군비통제 차장)는, 국방부와 UNC가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객들의 DMZ와 MDL 통과절차를 기존관례에 따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

○ 남북한은 12.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11.6-9, 평양)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6-8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합의(11.29 회담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및 12.2 북측 동의전통문 접수)

◀ 북 한 동 향 ▶

○ 북한 「경제시찰단」(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등 총 18명)은 11.13-1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산업시찰 및 경제장관 등 면담을 통해 「경협확대방안」을 논의(11.17 중방보도, 동 시찰단은 10.26- 11.3 방한)

○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11.21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11.14)과 관련 담화를 통해 ▲이는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의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행위임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을 재주장

○ 「해군사령부」는 11.21 서해 NLL을 침범한 북측 경비정에 대한 우리측 해군의 경고사격(11.20)과 관련,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이를 우리측의 도발행위로 왜곡하고

- 이는 ▲미국의 핵소동에 따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 책동임과 ▲ 미국에 추종하는 이같은 도발행위는 “새로운 교전의 불씨가 되어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11.22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12.1부터 국내 외화결제의 기본수단으로 미국달러를 포기하고 「유로화」로 넘어갈 것이라고 조선무역은행이 (외교사절 및 기업 등에) 통보했음을 보도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는 11.23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핵소동 분쇄와 전민족적 반미항전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
- 11.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23)을 통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지정(10.23) 및 관련법 채택을 발표하고, 이어 11.27에는 역시 최고상임위 정령(11.13)을 통한 「개성공업지구」의 지정(11.13) 및 관련법 채택(11.20)을 발표
- 최근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작업에 대한 남북상호검증인원 등의 DMZ 출입 및 MDL월경과 관련한 정전협정상의 「군정위 허가문제」 및 이와 관련한 UNC측의 입장표명 등과 관련하여
 - KCNA 논평(11.16), 철도성대변인 성명(11.16),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담화(11.17), 「경추위」 북측 위원장 담화(11.18),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북측 단장 담화(12.1)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 미군이 DMZ 지뢰제거에 「군정위 허가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미 장관급회담의 합의내용을 무시하는 행위며 ▲미국의 철도·도로연결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족은 철도·도로연결을 비롯 북남사이에 합의한 모든 사항을 끝까지 이행 것임을 강조

◀ 주변국 동향 ▶

- WFP 「제임스 모리스」 사무총장은 ▲금년말 및 내년도 북한 식량사정 조사를 위해 방북(11.12-16)하고 ▲11.16 방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북한 주민 640만명과 북한 아동 400만명이 기아상태에 있음을 언급
 - * WFP 평양 주재관 「코르시노」는 11.17 ▲WFP는 이미 식량배급대상 640만명 중 약 300만명에 대해 지원을 중단했으며 ▲내년 1월에는 배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입장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1/4분기 소요량 10만톤을 비롯, 전체적으로 약 50만톤 규모의 지원확보가 필요함을 언급(AFP통신 회견)
 - * WFP는 10.28 FAO와의 합동조사단 방북(9.24-10.5)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의 2003년도(2002.11-2003.10) 식량수급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55만 8,000톤으로 추정, 취약계층에 대한 내년도 식량지원 규모를 51만 2,000톤으로 권고

- EU는 11.18-19 브뤼셀에서 「EU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議長國인 덴마크 「페르 스티그 밀러」 외무장관의 「내외신 공식기자회견」(11.19)을 통해 ▲북한이 즉각 핵개발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EU-북한 관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발표하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 동인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북한과 관련된 EU의 활동」을 재검토 할 것임과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향후 EU와 북한과의 관계발전이 위협 받게 될 것임을 강조
- 미국 CIA는 11.21 북한의 핵개발 관련사항에 대해 미측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제출
 - * 동 보고서는 ▲북한이 既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핵무기 외에도 추가로 몇 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충분히 확보·보관 하고 있음과 ▲북한이 현재 빠르면 5년내 완전가동이 가능한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중임과 ▲이미 약 2년전부터 농축우라늄에 기초한 핵폭탄 제조작업에 착수했음을 명시
- 미북장성급회담 UNC측 대표 「제임스 솔리건」소장은 11.28 DMZ 군사분계선 월선과 관련, 남북한 인원의 DMZ출입 및 MDL월경은 반드시 UNC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정전협정상에 기초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 (출입기자 간담회)
 - * 동인은 북측이 UNC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려 든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임을 경고, 이와관련 12.1 국방부(장관일 군비통제 차장)는 국방부와 UNC가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객들의 DMZ와 MDL 통과절차를 기존관례에 따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
- IAEA는 11.29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이사회를 개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계획의 즉각 포기」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 동 결의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밝힌 것에 개탄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동 결의안은 IAEA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요구한 최초의 문건
-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2.2 北京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및 미국과 북한에 대해 「제네바 합의」 준수를 촉구

- * 동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 확산 방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함과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북한이 건설적이고 평등한 대화로 상호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II. 주 요 동 향

1.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및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 개 요

- 남북한은 11.18-20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및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개최하고, 각각 「합의서」(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와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을 채택
- 제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는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실무적 사항들에 대해 협의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차량운행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상호교환,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
-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는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문제 등 남북간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

□ 주 요 내 용

<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①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 제3차 경추위와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구간의 접속지점과 계획고를 확정하기 위한 공동측량 절차·방법을 부록으로 합의

< 합의서 요지 >

- 공동측량구간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 길이와 철도·도로연결 남북관리구역 폭으로 함.
- 공동측량기간 : 동해선은 11.26-27, 경의선은 11.29-30에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
- 공동측량인원 : 철도 및 도로전문가 각각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
* 쌍방은 공동측량인원 명단을 측량 하루전에 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
- 공동측량결과 : 측량후 최단기간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 통보·확정

② 차량운행합의서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

-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에 따른 남북간 차량의 운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기본원칙, 운행절차와 방법, 사고처리 등)에 대한 의견접근을 갖고
 - 차후 관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차량운행합의서를 확정키로 함.
- 남북은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운행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
-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의 교통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운행목적, 교통질서를 심하게 위반하는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예정

-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간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
-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손해배상, 차량고장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

<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

① 협 의 내 용

- 남북 쌍방은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대 지정·운영, 해상재난시 상호협력, 선박의 통신보장, 해상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문제 등에 대해 의견접근
 - 민족내부항로에서는 일반항로와는 달리 외국선박이 취항할 수 없고 남북한의 국적선 및 남북의 업자들이 임차한 선박만이 통항 가능
 - 이는 해운수입이 외국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 * 남과 북이 남북해상항로의 첫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의미
-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12월중에 금강산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추후 개최되는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간에 해운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 남북간의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②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해운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등 남북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 협의하였음.
-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제2차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음.
- 쌍방은 남북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중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2002년 11월 20일 금강산

③ 평가 및 의의

- 당국간 해운실무자간 최초의 공식만남이었다는 데 의의
 -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등을 당국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계기 제공
 - * 현재 남북을 오가는 인원 및 물자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상황임에도 공식항로가 없다는 점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해운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남북간 공감대 구축한 것으로 평가
 - 항로개설, 항로대 지정 및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 해운협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협의하고 대부분 사항에 의견 접근

2.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개성공업지구법」 채택

□ 개 요

- 북한은 11.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의 지정(10.23) 및 관련법 채택(11.13)을 발표한데 이어, 11.27에는 「개성공업지구」의 지정(11.13) 및 관련법 채택(11.20) 사실을 발표
 -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운영체제, 개발사업자의 권리 등 장·절 구분없이 29조와 3개항의 부칙으로 구성
 -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 및 관리, 기업창설·운영 등을 5장 46조와 부칙 3개항으로 규정

□ 주 요 내 용

< 금강산관광지구법 >

① 성 격

-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며 북한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

② 지 역

-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온정리·성북리 일부, 삼일포·해금강, 통천군 일부

③ 적용범위

-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

④ 운영체제

- 중앙관광지도기관 : 북측 독립행정기관, 구성 등은 미정
 - 관광지구관리기관 및 개발사업 지도, 관광지구법규의 시행세칙 작성과 관광지구 세무관리 등 담당
- 관광지구관리기관 : 개발사업자와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추천 인사로 구성
 - 관광계획 작성·관광운영과 투자유치 및 기업창설 승인·등록·영업허가, 남측 출입인원·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과 수수료·입장료 징수 등 담당
- 개발업자 : 관광지구의 개발

⑤ 개발업자의 권한

- 개발업자는 토지이용증을 받고, 일정기간 관광지구 개발 및 관광사업 (*북측 국토환경보호성이 현대측에 2052.11.13까지의 토지이용증 발급)
- 개발업자의 개발·영업활동 세금 면제, 사업권의 양도·임대 허용
-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총계획」 수립, 중앙관광지도기관은 1개월내 심의

⑥ 관광객 출입절차·준수사항

- 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관광객·수송수단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출입증명서로 사증없이 출입(*다른 지역에서의 출입절차 별도규정)
- 금강산관광지구내 단독 또는 단체로 자동차·도보 등의 자율통행 보장
- 관광객 휴대금지품목, 준수사항 규정(*기존의 관광세칙과 유사)

⑦ 투자자의 권리 · 기타

-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허용 및 투자재산 보호
- 관광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투자허용, 관광업 관련된 하부구조 건설 부문 투자장려, 환경훼손산업 투자금지
-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 관광 가능
- 전환성 외화 사용 허용(유통화폐 추후 협의) 및 외화의 반출입 보장
- 분쟁발생시 협의해결 원칙,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 및 재판절차 해결

⑧ 평 가

- 기존 사업자간 합의를 북측 당국이 법제화함으로써, 금강산관광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
 - 현대 · 아태간 기합의사항이 북측 법령으로 확인되면서, 관광지구내 일반 관광객 · 투자자로 적용범위가 확대
- 북측 당국과 사업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관광지구의 자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되, 개발업자의 참여가 보장된 「관광지구관리기관」을 구성, 지구운영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성 부여
 - 북측 기관, 기업소 등이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할 경우 「중앙관광지도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북측 당국의 일방적 개입 가능성 완화

- 시장경제요소의 부분적 도입으로 관광·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 되었으며
- 토지·사업권 임대·양도, 투자자산 보호, 송금자유 등을 보장함으로써 관광지구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

< 개성공업지구법 >

① 총 칙

- 투자당사자 : 남측·해외동포·외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 투자자 권리보호 : 재산 및 상속권 보호, 국유화 금지
- 신변안전 : 법에 근거없이 체포·수색 금지

②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 개발자 지정 :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지정
- 토지이용 기간 : 임대증 발급 후 50년, 신청에 따라 계속 이용 가능
- 개발총계획 작성 : 개발자가 작성, 중앙위 심의(30일 이내)
- 지장물 철거 :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책임(비용은 개발업자 부담)
- 하부구조 : 개발업자 건설, 공동 건설, 양도·위탁방법 가능
- 분양 : 개발업자가 하부구조 건설 후 총계획에 따라 투자기업 배치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

- 관리운영 :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지도하에 공업지구관리기관 설치
- 중앙지도기관 임무 : 개발업자 지정, 관리기관 지도, 시행세칙 작성,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용수·물자보장 등
- 관리기관 구성 : 개발자 추천으로 구성(중앙지도기관도 추천 가능)
- 관리기관 임무 : 투자조건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창설 승인 등
- 지구 출입절차 : 관리기관 발급 출입증명서 소지 무사증출입
- 생활보장 : 생활상 편의보장, 통신수단 자유이용
- 관광 : 개성 관광 가능
- 반출입 : 신고제, 지구 반입 및 남측·외국으로의 반출에는 무관세

④ 기업 창설 운영 등

- 노력 채용 : 북측 노동력 채용 원칙(제3국 인원 채용 가능)
- 가격 :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간 합의
- 유통화폐 : 전환성 외화(신용카드 사용 가능)
- 세율 : 기업소득세율 14%(하부구조, 첨단산업 등 장려 부문은 10%)
- 외화 반출입 :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 가능, 이윤·소득 송금 가능

- 분쟁해결 : 당사자간 협의, 남북간 상사분쟁 해결절차, 중재, 재판
- 합의서 효력 : 지구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합의서 내용은 지구법과 동일 효력

⑤ 평 가

- 이번 「개성공업지구법」에서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 추진의 안정성 제고
 - 동 법은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 등과 같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
- 한편, 북측 당국과 사업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단 개발·운영의 자율성 제고
 -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되, 개발사업자 추천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구성, 공단 관리운영을 관장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부여
 - *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승인, 건설허가, 인원출입 및 물품 반출입 승인, 사업준칙 작성 등 대부분의 행정사무를 처리
- 또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 자유 보장, 투자자 재산 및 상속권 보호, 토지임대·양도 허용 등을 규정하여 개성공단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
- 이번에 북한이 지정한 「개성공업지구」는 지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행된 이후 잇따라 개방지구를 지정, 개방함으로써 경제개방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

Ⅲ. 기 타 동 향

1. 북한 외무성대변인, KEDO 대북중유공급 중단 관련 담화

□ 개 요

- 북한은 11.21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결정(11.14)과 관련 “미국이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 의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불가침조약 체결」이야말로 핵문제 해결에 유일한 현실적 방도라며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호응을 재촉구(중방·평방 및 KCNA, 중앙TV 보도)

□ 주 요 내 용(담화요지)

- 미국은 KEDO 성원국들의 집체적 의사인 것처럼 감투를 씌웠지만 먼저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조미 기본합의문」의 당사자도 못되는 KEDO에 내리 먹였다는 것을 감출 수 없었음.
- 미국이 「조미 기본합의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는 「조미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함.
- 미국이 우리더러 무장을 놓으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제도를 내놓으라는 것이며 이것은 지난 16일 미국 대통령의 성명으로 더욱 뚜렷이 입증되었음.

- 우리는 어떻게 하나 「북미 기본합의문」이 깨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하여 지난 10.25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핵문제 해결의 방도로 제안했으나 미국은 중유제공의 중단 결정으로 대답하였음.
- 미국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국자들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음.
-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이야말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임.

□ 평 가

- 이번 외무성 담화는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이후 6일만에 보인 최초의 공식반응
 -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 노력을 강조하면서 동 합의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
 - 그러나 「북미 기본합의문 파기」 또는 「핵동결 해제 선언」 등 극단적인 대응은 자제
 - 「부시」 대통령의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대북성명(11.15)을 「불가침조약」 체결의 당위성과 연계시켜 동 조약 체결의 호응을 촉구
- 전반적으로, 10.25 외무성대변인 담화의 연장선상에서 「제네바 합의 파기」 등 대미 강경대응 및 정면대결을 자제하면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

2. 「조국전선」 중앙위, 핵문제 관련 「전민족 호소문」 발표

□ 개 요

- 11.23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핵문제와 관련 전민족에게 「반미항전」을 촉구하는 호소문(11.22字)을 발표(중방, KCNA)

□ 주 요 내 용(호소문 요지)

- 미국은 핵문제를 걸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최근 북남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꾀방을 놓다 못해 북남 철도·도로 연결공사까지 방해하고 있음.
- 미국이 핵문제를 걸고 벌이는 대결소동은 북남 전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에 대한 문제이며, 북이 재난을 당하면 남도 재난을 피할 수 없음.
- 온 민족이 떨쳐나 애국의 先軍政治를 적극 옹호하는 것이 오늘 우리겨레가 들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구호임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단합하여 ▲미국의 핵소동 분쇄와 전민족적 반미항전 ▲조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거족적 투쟁 ▲미군철수를 위한 반미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함.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대남문제와 관련한 당과 내각의 입장을 옹호·관철하기 위해 설립('46.7)한 선전기구로 현재 24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되었으며, 금번 호소문 발표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대남선전 전위단체」를 동원

3. 북한 핵문제 관련 제57차 UN총회 동향

□ 개 요

- 제57차 UN 총회(9.10 개막, 12월 하순 폐막 예정)는 9.30-10.29 총회 제1위원회(군축)를 개최, WMD 확산방지(테러조직의 WMD 사용 저지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 북한 핵문제 관련 작년에 이어 북한의 핵안전조치 전면이행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11.11)하고,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제기(이와관련, 북한은 동 내용을 11.19 언론보도)

□ 주 요 내 용(북한 관련 협의사항)

- 북한 핵문제 관련 IAEA사무총장 보고(11.11)를 청취하고 북한의 핵안전조치 전면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 11.19 북한은 상기 제57차 UN총회 전원회의 안전으로 상정된 「국제 원자력기구 보고서」 토의시 북한대표가 연설한 내용을 보도
- IAEA 사무총장(엘바라데이)은,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 최근 북측에 우라늄 농축계획 확인 및 동 문제 관련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아직 응신이 없다고 설명
- 미국과 EU는, 북한이 NPT, IAEA 안전조치협정, 제네바합의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했음을 지적, 핵개발 프로그램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제거시켜야 함을 강조
- 일본은, 북일 수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IAEA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문제는 UN이나 IAEA가 다룰 사안이 아니며,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
- 한편 미국은, 제3위원회 토의시 북한인권문제 관련, 최근 북한인권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인권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주민들에 대한 야만·박탈행위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 북한 당국의 주민탄압과 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상황 및 표현·결사·신념의 억압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실태를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인권존중·평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4. UNOCHA, 「2003년도 UN 합동지원계획」 발표

□ 개 요

- UNOCHA(유엔인도지원조정국)은 11.19 북한 등 전세계 인도 지원대상국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
 - 대북지원계획 관련 ▲2003년도 UN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규모는 약 2억2,500만불 ▲WFP의 2003년도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51.2만톤(약 1억9,500만불)

□ 주 요 내 용(대북지원계획 관련사항)

① 2003년도 UN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규모는 약 2억 2,500만불

- 식량지원 87.5% ▲보건·영양 7.5% ▲농업 2.2% ▲식수·위생 2.0% ▲교육 0.5%, 사업조정 0.3%의 순서
 - UN기구 2억 2천만불(97.5%), NGO 500만불(2.5%)로 구성
- 이는 2002년도 대북지원 목표 2.6억불의 86% 수준으로서
 - 지난해 분야별 비율 식량안보 90.1%, 보건 7.4%, 식수·위생 1.9%, 사업조정 0.4%, 교육 0.2% 등과 비교하면 식량지원 및 농업의 비율 감소
- 식량지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이는 식량지원 등 긴급구호 사업만으로는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보건·식수·위생 등 중장기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

② WFP의 2003년도 대북식량지원 규모는 51.2만톤(약 1억 9,500만불)

- 지원품목은 곡물 43만톤, 식용기름 1.5만톤, 콩 2.9만톤, 설탕 0.8만톤, 탈지분유 0.9만톤, 혼합곡물 2.1만톤 등으로 구성

- 지난 해 61만톤의 83.6% 수준

- ※ 이러한 UN기구의 대북지원규모 감소는 금년도 북한의 수확량 증대 및 식량사정 완화와 최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

IV. 분야별 일지

남북한 관련동향

- 11.14 북한 「경제시찰단」,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순방 및 경협확대방안 논의(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등 18명, 11.13-16)
- 11.20 남북한,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및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 개최(11.18-20, 금강산)
- 11.21 한적, 2002년도 제11차 대북지원계획(의류 등 9억 4,000만원 상당) 통보
- 11.21 북한 외무성 대변인, KEDO의 대북중유공급 중단 결정(11.14) 관련 담화 발표(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 기존입장 재확인)
- 11.21 북한, 서해 NLL 침범 북측경비정에 대한 우리측 해군의 경고사격(11.20) 관련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발표
- 11.22 「러시아의 소리」 방송, 12.1부터 북한의 「유로화 사용」(외화결제의 기본수단) 보도
- 11.2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북한 핵문제관련 ▲전민족적 반미항전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촉구 「호소문」 발표
- 11.25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및 개성공업지구 지정 발표(11.25/11.27)
- 11.26 남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공동측량 실시(동해선 11.26. 경의선 11.27-29)
- 11.27 국방부 대변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무기연기 발표
- 11.27 국방부(장광일 군비통제차장), DMZ 지뢰제거작업 재개 북측 同意 사실 발표
- 12. 1 북한, 남북한 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월경에 대한 「군정위 허가문제」 관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북측 단장 담화 발표

- * 이와관련, 북한은 KCNA 논평(11.16), 천도성 대변인 성명(11.16),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담화(11.17), 「경추위」 북측 위원장 담화(11.18) 등 발표

○12. 2 남북한,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12.6-8, 금강산) 합의

주변국 관련동향

- 11.16 WFP 「제임스 모리스」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 방문 및 대북식량지원 호소 (세부내용 본문참조)
- 11.19 EU 외무장관회의(11.18-19, 브뤼셀), 북한의 핵개발계획 불포기시 EU-북한간 관계 재검토 경고(EU 의장국 덴마크 외무장관 「페르 스티그 밀러 공식기자회견)
- 11.21 미국 CIA, 북한의 핵개발 관련 보고서 의회 제출(세부내용 본문참조)
- 11.28 「제임스 솔리전」 미북 장성급회담 UNC측 대표(소장), 남북한 인원의 DMZ 출입 및 MDL 월경 관련, 정전협정에 의거한 「군정위 허가방침」 재확인
- 11.29 IAEA이사회,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 촉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12. 2 중·러 정상회담(강택민 주석-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경 인민대회당), 북한의 핵개발 포기 및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 준수 촉구 「공동선언」 발표

<끝>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51호>

2002.12.8~12.31

< 목 차 >

I. 개 황

II. 주 요 동 향

- 2002년 12월중 남북회담 개최 현황

III. 기 타 동 향

- 최근 북한 핵문제 관련 국제사회 주요동향
- 한·미 국방장관, 「제34차 SCM 공동성명」 발표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남북회담대표단 및 회담업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非公開 參考資料입니다.

I. 개 황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과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1.6-9, 평양)의 합의에 따라 12월중 총 6회의 후속회담을 개최
 -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12.6-8, 금강산)은 “12.26-30 개성공단 착공식 진행” 등을 포함한 「공동보도문」과 통신·통관·검역 등 3개 합의서 채택
 -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12.11-13, 서울)는 “통행·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제·상사중재위 구성·운영” 등 경험후속조치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없이 종료
 -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15-17, 금강산)은 “신호·통신·전력·궤도분야의 자재 및 장비 제공방안과 경의선 임시도로 개설”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 채택
 -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2.15-17, 금강산)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문제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 「공동보도문」 채택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12.23, 판문점 평화의 집)은 “동·서해 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에 관한 절차와 안전문제”에 대한 쌍방 입장차이로 합의서 미채택
 -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12.25-28, 평양)은 “항로개설·선박의 안전 운항·해상구난 등 남북간 선박운항의 제도적 보장문제”에 대해 협의, 해운협력 관련 15개항의 구체적 사항에 합의하고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가서명
- 우리측은 12.15 경의선과 동해선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경의선(12.24)·동해선(12.4)의 임시도로공사를 완료
 - * 북측도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완료하고 12.27 현재 철도노반공사가 진행중으로,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통행관련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될 경우 즉각 연결·운영 가능

◀ 북한 동향 ▶

- 12.11 총리 홍성남(당중앙위 축하문 전달), 당비서 계응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양형섭(보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전국 법무일꾼대회」를 개최, 사회주의 법무생활 및 법질서 강화를 강력히 촉구
 - 양형섭은 보고를 통해, 법무일꾼들은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수들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으로 어떤 환경속에서도 법을 준수·집행해야 함을 강조(축하문을 통해서, “전국의 법무일꾼들은 김정일을 절대 숭배·결사옹위하여 사소한 비사회주의적 현상도 제때 뿌리 뽑을 것”을 강조)

- 외무성 대변인은 12.12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조치(11.14) 관련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취했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키로 하였다”며 「핵동결 해제」를 선언
 - 이어 ▲북한은 동일(12.12) IAEA에 핵시설 감시장치 제거를 요구하는 원자력총국장 리재선 명의 서한을 발송 ▲이에 대해 IAEA는 12.12 북한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명의 답신을 발송
 - * 북한은 IAEA 이사회의 대북결의안(11.29)을 거부하는 백남순외상 명의 서한(12.2자) 발송을 통해 ▲동 IAEA결의는 미국을 대변하는 결의로써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제기구의 신뢰를 저버린 「핵문제해결에의 엄중한 난관조성행위」로 ▲북한은 동 결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할 수 없음과 ▲특히 핵문제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
 - * 한편, 12.15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동결 해제선언」이 “미국이 중유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생겨난 전력손실 보상과 인민생활안정을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 및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남조선에 그 어떤 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

- 「조평통」 대변인은 12.12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12.5 워싱턴)와 관련한 담화를 통해 ▲SCM 공동성명 ⑤항과 관련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남쪽이라고 해서 참화를 면할 수 없고 大洋건너 있다고 해서 무사할 수 없다”고 위협

- * 제34차 SCM 공동성명 ⑤항 : ~ (전략) “한·미 양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간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 외무성대변인은 12.13 담화를 통해 ▲북한 화물선 「서산호」 나포사건(12.10)과 관련, 이는 미국의 용납못할 해적행위라고 비난하고 ▲정신적·물질적 손상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은 12.15 담화를 통해,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12.11-13, 서울)의 결렬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의 남조선 당국에 대한 강압과 남북관계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 때문”이라며 미측에 전가(12.12 북측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
- 외무성 대변인은 12.16 KCNA회견을 통해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등을 핵문제와 연관시키는 것과 관련 ▲“정치적 부대조건이 붙는 협조는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조건의 대북지원 거부 입장」을 발표
- 북한은 12.22 언론매체를 통해, 「핵동결 해제선언」(12.12)의 후속조치로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작업 개시」를 공식 보도(KCNA/중방/조선중앙TV)
- * 이와관련 ▲12.25 IAEA 안전조치국장(치툼보)은 “북한이 5MW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장비점검과 함께, 핵연료봉을 이동하고 있음”과 ▲12.26에는 “북한이 5MW 원자로를 1개월내 재가동할 것임을 통보해 왔음”을 확인
- * 이후, 12.27 북한측의 IAEA 감시요원 추방 결정(원자력총국장 리재선의 IAEA 사무총장 앞 서한)에 따라, 북한에 체류중이던 IAEA 핵동결 감시요원(총3명)은 12.28(1명) 및 12.31(2명) 등 2회에 걸쳐 소위 북한에서 쫓겨
-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 최성익은 12.24 「조선신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금년도 남북관계를 긍정 평가하고 ▲내년도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12.24, KCNA)
- * 최성익은 ▲올해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획기적 진전을 이룩한 역사적 해이며, 남북대화가 하반기에 들어와 원상회복되어 실지로 훌륭한 결실을 낳고 있으며 ▲향후 제9차 상급회담과 경추위 4차회의 및 그 산하 분과회의, 이산가족상봉, 적십자실무접촉, 육로관광 등 경험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된 것이며 ▲내년도에는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가 잘 풀려 나갈 것으로 보며 협력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최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1돌 기념 「중앙보고대회」(12.24, 「4.25 문화회관」, 보고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와 사회주의헌법 제정 3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12.26, 인민문화궁전, 보고 : 김영남)를 개최하고
- 김정일의 先軍業績을 찬양하면서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을 강조(“만약 미국이 핵전쟁을 터트린다면 미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임”) ▲남북관계와 관련, 6.15 공동선언에 따른 민족의 단합 및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 주변국 동향 ▶

- 한·미 양국은 12.5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워싱턴, 이준/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관료 참석)을 개최
- 북한의 핵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간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함에 합의(공동성명 ⑤항) 하는 등 총 12개항의 「SCM 공동성명」을 발표
- 미국은 12.10 스페인 해군의 협조하에 북한제 스커드미사일(15기)을 선적하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예멘 인근 인도양 공해상에서 나포(서산호는 국적기를 게양치 않고 선박명도 삭제한 채 운항)
- 미 백악관 대변인(애리 플라이셔)은 12.12 북한의 「핵동결 해제선언」(12.12) 관련 ▲미국은 위협이나 깨진 약속에 응하여 대화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은 북한이 서명한 조약이나 합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협상을 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先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포기, 後 북미대화 재개원칙」 재확인
- * 12.13 부시대통령은 김대중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비핵화를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과 이같은 메시지를 김정일위원장이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美·日是 12.17 「외교·방위 각료급 안보협의회」(워싱턴)를 개최, 「대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계획의 포기 ▲탄도미사일 관련 제반활동의 중단 등을 촉구하고 ▲핵·생화학무기 등 WMD를 사용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

- * 미측에서는 「과월」, 국무장관과 「윌포워츠」, 국방부 부장관이, 일측에서는 「가와 구치」,외상과 「이시바」, 방위청장관 등이 참석
- 美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12.23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동시전쟁 수행능력과 관련 ▲미국은 이를 수행할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함과 ▲북한이 이라크에 대한 세계의 관심때문에 대담해졌다는 주장은 믿을 이유가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북한의 실수라고 언급
- * 12.24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12.22)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의무 사항 위반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며 ▲기존 「先 북한의 핵개발계획 포기, 後 북미대화 재개 입장」 재확인 (정레브리핑)
- IAEA는 북한이 12.23-24간 영변의 3개 핵시설(5MW원자로 및 사용후 연료봉 저장수조, 핵연료 재처리시설, 연료봉 제조공장)에서 대부분의 봉인 제거 및 감시장비 작동중지조치를 취했다고 발표(12.24, IAEA 언론 발표문)
- * 12.26 IAEA는 ▲북한 기술자들이 원자로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핵연료봉 장전을 위한 연료봉 이동작업)을 시작했음과 ▲IAEA 사무총장은 내년초 IAEA 이사회에 IAEA는 북한과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감독이나, 핵물질이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장치들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과 ▲1993년 이래 북한의 모든 핵물질이 IAEA의 안전규정에 맞게 신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할 것임을 발표 (12.26, IAEA 언론발표문)
- 북한에 체류중인 IAEA 핵동결 감시요원(총 3명)은 북한의 추방결정(12.27 원자력총국장 리재선의 IAEA사무총장 앞 서한)에 따라, 12.28(1명) 및 12.31 (2명) 등 2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쏘員 철수
- 국제적십자사(IFRC)는 12.12 총 1,337萬 스위스프랑(약 916만불) 규모의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을 발표
- * 2004년 잠정지원예산으로 963만불을 책정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은 지난해 예산(753만불)보다 21% 증액되어 보건·의료지원 강화에 중점 ▲이는 최근 북한 내 결핵·말라리아 등 전염병 피해 확대와 유아·임산부 사망률 급증과 관련하여 보건체제 개선이 중요한 점을 반영
- *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방콕 주재 지역사무소가 남북적십자간 기술자문역과 중립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 재회를 아·태지역의 민간부문 인도지원사업으로 추진·장려할 계획(12.10, ICRC 「2003년도 인도지원 추진계획 및 재정지원에 관한 보고서」)

○ 최근(12.3-20) 러시아 교통성 기술조사단(총 35명)은 북한 철도성과 원산-금강산간(120km) 철도구조물에 대한 공동조사사업을 완료

* 이와관련 ▲북한은 동사업이 북러 모스크바선언('01.8) 이행을 위한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교통성 사이의 「동해선 철도 개건 및 현대화 양해문」('02.11)에 따라 시작 되었음을 강조 ▲12.23에는 북한 철도성 대표단(단장 : 김용강 철도성 부상)을 러시아에 파견

II. 주 요 동 향

1. 2002년 12월중 남북회담 개최 현황

□ 개 요

- 남북한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2, 평양)과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1.6-9, 평양)의 합의에 따라, 12월중 경제·군사·적십자분야 등 총 6회의 회담을 개최, 관련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을 채택
 -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등 4개회담은 합의서(공동보도문) 채택
 -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와 DMZ 남북관리구역 내 통행에 관한 절차와 안전문제를 협의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은 합의서(공동보도문) 미채택

□ 주 요 내 용

<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12.6-8, 금강산 >

① 개 요

-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2002.12.6-8 금강산에서 개최
 - 쌍방은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한 착공일자, 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보장문제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 개성공단건설을 12.26-30 사이에 개발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착공하고, 통신·통관·검역 합의를 채택하며, 경의선 임시 통행로 개통 등 3개 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
- 통신·통관·검역 합의서도 타결, 발효절차는 문서교환 방식으로하기로 합의

② 주요 합의내용

- 개성공단건설을 12.26-30 사이에 착공토록 하며, 구체적 날짜는 사업자간에 합의토록 함.
 - 지난 3차 경추위에서 12월 하순으로 합의한 개성공단 건설 착공일자를 보다 구체화
- 개성공단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착공 이전에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개통하여 운행함.
 - 개성공단의 조기착공을 위한 공사인원과 자재의 왕래를 위해서는 임시 통행도로가 개통될 필요
 - 임시도로 개통으로 기존 해로를 이용한 철도·도로, 자재·장비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약 가능
 - 동해안 지역에 이어 서해안지역에도 임시도로를 개통, 해로·항공로에 이어 사실상 육로도 연결되는 상황에 진입
-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 협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개성공단건설의 성공적 추진 및 향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에 우리측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북측은 노동, 세금 등 필수적 하위규정들을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착공전에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
- 개성공단 통신, 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빠른 시일내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함.
- 개성공단 관련 「통신·통관·검역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공단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③ 공동보도문(전문)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2월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을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하기로 함.

이를 위하여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기로 함.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시키기로 함.
3.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함.

2002년 12월 8일 금강산

④ 평가 및 의의

-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사전조치를 협의
 - 인원·물자의 이동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합의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등을 남측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
-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설에 합의
-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상시 협의체제로 운영
 - 추후 당국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합의

<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 12.11-13, 서울 >

① 개 요

- 남북한은 동회담에서 통행·원산지확인·상사분쟁 및 청산결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

- 차기 회담은 2003년 1월중 개최하기로 구두합의

② 진행경과

- 우리측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경협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합의서 및 원산지확인합의서 타결에 주력

- 북측은 원산지확인 합의서에 대해서는 우리측(안)을 골격으로 한 북측(안)을 제시하였으며, 청산결제 은행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렀으나, 기타사항은 추후 연구·검토하기로 유보

- 이번 실무협의회가 구체적인 합의없이 종료되었지만 쌍방간에 경협관련 제도 및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성 확보

- 쟁점사항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

- 현재 진행중인 경협사업들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급하다는 데 의견 일치

- 이와 함께 청산결제은행 선정, 원산지확인합의서 채택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차기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의 토대를 마련
- * 통행합의서와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

<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12.15-17, 금강산 >

① 개 요

- 남북은 동 회담을 통해 신호·통신·전력·궤도분야의 자재 및 장비 제공방안과 경의선 임시도로 개설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

② 공동보도문(전문)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실무접촉이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음. 남과 북은 철도·도로연결공사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그와 관련한 실무적 대책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음.

1.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이 합의된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경의선 임시도로 개설과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부문에 각기 제기하기로 하였음.

3. 남과 북은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하였으며,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 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음.
4.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003년 1월중순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2002년 12월 17일 금강산

③ 평 가

-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레일·침목 등 궤도부설 관련 2차분 자재·장비 품목 수량 협의와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마무리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문제 등을 합의하는데 주력
- 이에 대해 북측은 통신·신호·궤도 등 전체분 자재·장비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수량 확정에 역점
- 임시도로 개통 및 신호, 통신전력 및 궤도분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철도·도로연결공사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공사 추진의지 재확인
 - 개성공단건설 착공전 개통 임시도로 접속지점과 계획고를 확정함으로써, 철도·도로연결공사 및 개성공단착공식에 필요한 수송로 확보
 - 궤도, 신호·통신·전력계통 분야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및 제공방법 등을 협의함으로써,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해결

* 교량상판 및 신호·통신·전력계통자재·장비는 우리측 설계도면에 의한 제작 및 제공, 북측은 시공을 담당키로 합의

- 차량·열차운행합의서의 추후 문서교환을 통한 협의·타결에 합의 함으로써 연결후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12.15-17, 금강산 >

① 회담경과

- 우리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면회소 완공전 지속적 상봉 실시 △전쟁시기 등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등 이산가족교류의 정례화·제도화 방안을 제기하고 협의를 진행
 - 우리측은 금강산면회소를 조속히 건설하되, 면회소 완공 이전에는 기존 방식에 따라 상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조속히 실시하고,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
 - 아울러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
- * 우리측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뿐 아니라 이산가족교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

- 북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에 주력하면서,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등 그 외의 이산가족교류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
 - 금강산면회소 건설 규모에 있어 북측은 대규모 시설을 상정하고 있어 우리측과 입장차이를 노정
 -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되, 생사·주소 확인을 계속하는 문제는 차기접촉에서 협의·추진할 것을 주장
 - 그러나 6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
- 이번 접촉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및 면회소 건설전 상봉의 지속적 추진에는 서로 공감하고, 제6차 상봉 추진에도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 낸 만큼, 앞으로 접촉을 재개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
 - 우리측은 한번의 상봉보다는 이산가족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이산가족교류를 정례화·제도화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
- 제3차 실무접촉은 2003년 1월 중 개최될 예정

② 공동보도문(전문)

1. 남과 북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을 진행하였음.

2. 이번 접촉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음력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음.
3. 그러나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접촉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4. 남과 북은 금번 접촉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3년 1월 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2002년 12월 17일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 12.23, 평화의 집 >

- 남과 북은 2002년 12월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동·서해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개최
- 동 접촉에서 쌍방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서해지구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들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각측의 입장을 확인
- 양측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 문안에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에 관한 절차와 안전문제」에 대해 정전협정을 따를 것을 주장한 우리측 요구를 북측이 거부함으로써 합의서 미타결

-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합의서 관련, 정전협정 관련 1개 조항을 제외한 전문 및 4개 항에 합의
-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향후 팩스를 이용하여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고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 접근

<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 12.25-28, 평양 >

① 개 요

- 남과 북은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11.18-20, 금강산)에서 합의한 데 따라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2.12.25-28간 평양에서 개최
- 쌍방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등 남북간의 선박 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
- 남북 사이의 해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15개 항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
- 2003년 3월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종료

② 주요 합의내용

- 남북 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 일방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

-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 해양사고시 상호 협력
 - 일방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및 인명·재난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 조치
 -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실시
- 남북간 운항선박이 일방의 해역에서 사고발생시 구조·구난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난 및 방제가 가능하여 인명 손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
- 선박의 통신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필요한 통신 및 해양사고 발생시 등에 필요한 긴급통신수단 사용 가능(북측은 우리측 선박이 북측 해역에서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함.)
 - * 남북간 운항선박에서의 직교신 체제보장(현재는 간접교신)으로 경비절감은 물론 긴급시 신속한 대처와 선박운송의 효율 증가
-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 통신망 구성·운영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③ 평가 및 의의

- 남북 당국간에 해운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
 - 안전운항, 항로개설, 해상구난 등에 대한 합의도출로 남북간 해상운송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현행 민간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당국차원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남북간 해상운항의 안정화 도모
 -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은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현재 남북간 인원 및 물자 이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교통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남북간 해운협력의 제도화는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의 본격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남북간 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항로로 규정하여 외화유출 방지에도 일조
 - 남북간 교역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Cabotage)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교역에 따른 해상운송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
 - 국내 해운업의 육성·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2001년 남북간 운항선박 중 우리 國籍船 운항은 16%에 불과

Ⅲ. 기 타 동 향

1. 최근 북한 핵문제 관련 국제사회 주요동향

○ 10. 3~5 제임스 켈리 美 대통령특사 방북결과 브리핑(외교통상부)

-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계획, 미사일 수출, 위협적인 재래식 군비 태세, 인권문제, 비참한 인도적 상황 등 미국의 우려사안 전반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음.
- 북한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

○ 10. 7 북한 외무성 대변인, 美 특사방북 관련 KCNA회견

- 특사는 무슨 ‘우려사안’이라는 것을 내들면서 핵 및 미사일과 상용무력, 인권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여야 조미 관계는 물론 조일 관계와 북남관계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심히 압력적이고 오만하게 나왔음.
- 부시 행정부가 계속 견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악의 축’ 결의와 우리를 저들의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철회하지 않고 일방적인 강경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우리도 특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똑똑히 밝혀 보겠음.

○ 10.17 한·미·일, 북한의 「핵개발 시인 사실」 공동발표

- 켈리 차관보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 관련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했으며,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음.

* 주 요 반 응

〈한국〉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미국〉 “평화적 해결 추구”(손 매코맥 백악관 대변인)

〈일본〉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거론할 것”(고이즈미 일본 총리)

○ 10.19~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

○ 10.19 제임스 켈리 美 국무부 차관보 訪韓聲明

- 북한측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비밀 핵무기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 처음에 부인하던 북한 관계자들은 그런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중대한 우려사안이며 제네바기본협정, 핵확산 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북한의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임.
- 미국은 현재 우방 및 동맹국과의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음.

○ 10.21 부시 대통령-조지 로버트슨 NATO 사무총장 회담

- 평화적으로 이 위협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음.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다나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협의(서울)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공감

○ 10.23 김대중 대통령, 대선후보들과 간담회

-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

이준 국방부장관 국회 예결위 답변

- 8월에 와서 고농축 우라늄탄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것이라는 첩보를 받았지만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핵무기로서의 기능발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10.25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미 불가침조약 제의」 담화

-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음.

멕시코 美 백악관 대변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 일축

- 북한이 자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해제해야 함.

부시 미 대통령-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 10.26 한-미-일 3국 정상회담(멕시코 로스카보스) 공동성명

-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최근 북-일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맞게 모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
- 남북대화 및 북-일 수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자신은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 10.28 APEC,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APEC 정상성명」 채택

-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한 약속을 명시적으로 준수하기를 촉구하며,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

한-중 정상회담(멕시코 로스카보스)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

○ 10.29 에리 플라이셔 美 백악관 대변인, 정례브리핑

-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추호의 변화가 없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함.
- 한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먼저 핵계획을 폐기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임.

○ 10.30 국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

- 핵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노력에도 반대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북한의 어떠한 시도와 계획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10.31 가와구치 일본외상-파월 美 국무장관, 전화통화

- 일본은 수교회담에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계획을 폐기하지 않는한 일-북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음.

○ 11. 1 최진수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 내외신 기자회견

-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해주면 우리는 미국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해줄 수가 있음.
- 미국의 요구대로 핵포기를 먼저 선언할 생각은 없음.

필립 리커 美 국무부 부대변인 기자회견

- 북한이 서명한 국제합의들에 따라 지키게 되어 있는 기존의 약속들을 실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에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흥정하지는 않을 것

○ 11. 2 정부,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 개최

- 북한이 조속히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도록 남북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할 것

○ 11. 2~5 그레그 前 주한 미국대사 방북

- 북한은 핵문제, 특히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정책임을 밝혔다.

○ 11. 3 에리 플라이서 美 백악관 대변인, 「先 핵포기 後 대화」 재천명

-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행동의 문제임.

○ 11. 4 ASEAN +3 정상회의, 「의장발표문」 채택

-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

○ 11. 7 부시 대통령, 기자회견

- 북한의 인접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세계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키려 하고 있음.

○ 11. 8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다나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협의(도쿄)

- 제네바 합의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공감

○ 11. 9 TCOG 개최(도쿄),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 북한의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미 기본합의문, NPT,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
- 동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
- 남북대화 및 북일대화가 양측간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북한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 11.10 파월 美 국무장관 CNN 회견

-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러한 방침은 바뀌지 않았음.

○ 11.14 KEDO 집행이사회(뉴욕) 성명

-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을 12월분부터 중단
- 앞으로 공급여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음.

○ 11.16 부시 대통령 대북성명

- 미국은 북한과 다른 미래를 가지기를 희망하며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
- 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제거 촉구

- 11.21 북한 외무성 대변인, KEDO 중유공급 중단결정 관련성명
 - 이 결정은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대용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한다는 조-미 기본합의문에 대한 여지없는 기만임.
 -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이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본합의문이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함.

 - 11.22 정세현 통일부장관-가와구치 일본외상 회담(도쿄)
 -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대, 외교 압력을 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 11.29 IAEA 정기이사회 결의문
 - 북한은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를 위해 IAEA와 협력할 것
 -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IAEA 사무국의 해명 요구에 신속하고 건설적으로 응할 것
 - 모든 관련 핵시설에 대해 즉각적으로 IAEA의 사찰과 안전조치를 받을 것
 -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 12. 2 중-러 정상회담(베이징), 공동성명 발표
 -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지속 촉구
 - 미국과 북한은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비롯한 양국간 합의들을 준수해야 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함.
- 백남순 외무상, IAEA 사무총장 앞 서한**
-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2002.11.29부 결의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접수할 수 없음.
- 12.12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동결 해제」 관련 담화

- 우리에게 대한 중유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 중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었음.
- 미국이 이러한 의무를 실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되었음.
- 조성된 상황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부득불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t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음.
- 핵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음.

이재선 북한 원자력총국장, IAEA 사무총장 앞 편지

-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된 우리의 모든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최단 시일내에 전부 걷어내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12.13 김대중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

-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냉정히 대응

애리 플라이서 美 백악관 대변인, 공군 1호기 기자회견

- 미국은 위협이나 깨진 약속에 응하여 대화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서명한 조약이나 합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협상을 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지도 않을 것

* 주 요 반 응

〈일 본〉 “대단히 유감”(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중 국〉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깊이 우려함”(외무부 성명)

〈유 엔〉 “IAEA의 임무수행을 방해할 일방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 12.14 이재선 북한 원자력총국장, IAEA 사무총장 앞 편지

- 만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김대중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와 전화통화

-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철폐함과 동시에 핵시설의 동결해제 등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CNN 회견

- 북한이 봉인이나 감시 카메라를 제거할 경우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야할 것

○ 12.15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전력생산을 위한 핵시설 가동과 건설의 재개 조치는 남조선에 그 어떤 위협으로도 되지 않음.
- 이번에 우리가 전력생산을 위해 핵동결 해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음.

○ 12.16 김대중 대통령,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강조(군 관계자 초청 오찬)

- 우리의 입장은 핵을 반대하되 전쟁을 통해서나 냉전체제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는 것임.

2+2 안보협의회의(워싱턴) 공동성명 (美 : 파월 국무장관, 윌포위츠 국무부 부장관, 日 : 가와구치 외상, 이시바 방위청 장관)

- 북한에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 12.17 토마스 파고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상하이 푸단대학 연설

- 중국은 한반도 위기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강력하고 순기능적인 지원을 기대

○ 12.18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가와구치 요리코 일본외상 회담(도쿄)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인

파월 美 국무장관-크리스 패튼 EU 대외담당 집행위원 회담(미 국무부)

- 북한의 대미, 대EU 관계는 북한이 계속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12.19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안데르센 포그 라스무센 네덜란드 (EU 의장국)총리, 로마노 포르티 EU집행위원장, 공동성명 발표

- 우리들의 관계의 장래는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는데 좌우될 것

○ 12.20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내외신 기자회견(국회 의원회관)

-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 나가겠음.

존 볼튼 美 국무부차관 요미우리신문 회견

- 이제 미 의회에서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지지는 없으며, 경수로가 건설될 전망은 완전히 없음.

○ 12.21 IAEA 성명

- 북한이 21일 영변의 5MWe급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 대부분을 제거하고 감시장비의 작동을 방해했음.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리재선 북한 원자력총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필요한 봉인 및 감독조치들을 IAEA 사찰관들이 취하는 것을 즉각 허용할 것과 필요한 안전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원자로를 가동치 말도록 요청

루이스 핀터 美 국무부대변인 성명

- 5MWe급 원자로를 포함해 동결된 핵시설을 재가동하지 말 것과 IAEA가 북한이 손상시킨 봉인과 카메라를 재설치 또는 복구하도록 허락할 것을 촉구

노동신문 논평

- 핵동결해제 조치는 미국이 떠들어대는 핵개발계획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립적 핵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은 나라의 동력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목적

○ 12.22 북한 조선중앙통신,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발표

-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작업을 즉시 개시하게 되었음.

IAEA 성명

- 북한이 영변의 5MWe급 원자로에서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설치된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 12.23 도널드 럽즈펠드 美 국방장관, 국방부 기자회견

- 미국은 2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일을 완벽히 해낼 수 있음.

필립 리커 美 국무부대변인 기자 브리핑

- 북한이 자신이 서명한 조약 및 합의에 따르도록 흥정하거나 유인책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외교통상부 대변인, 공식논평

-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조치의 즉각 원상회복 촉구

* 주요 반응

- <일 본>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려하 않을 수 없음”(다카시마 외무성 대변인)
- <중 국> “당사국들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기대”(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
- <러시아>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기를 희망”(외무부 성명)

○ 12.24 필립 리커 美 국무부대변인 성명

-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
- 북한의 의무사항 위반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발짝도 나갈 수 없음.

○ 12.26 마크 고보즈데키 IAEA 대변인, 핵연료봉 장전 발표

-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 새 핵연료봉을 계속 옮기고 있으며, 오늘까지 1천개의 새 핵연료봉을 장전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12.27 이재선 북한 원자력총국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앞 편지

- 중단하였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완공하게 되며 이 발전소들이 운영되는 때에 나오게 될 수많은 폐연료봉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실도 가동시키게 될 것임.
- 사찰원들이 더 이상 우리 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

IAEA 성명

- 사찰요원들이 영변에 남아 필요한 봉인과 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

클레어 버컨 美 백악관 대변인 기자 브리핑

- 미국은 위협이나 파기된 약속에 응해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

정부, NSC 상임위 개최 및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 엄중히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

○ 12.28 엘리사 플래밍 IAEA 부대변인, 「사찰요원 북한 철수」 발표

- 북한이 영변 핵시설 주재 사찰관들에게 직접 오는 31일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 IAEA가 철수를 결정

북한에 상주하던 IAEA 사찰관 3명 중 1명 북한 철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평양시 군중집회 연설

- 핵동결 해제조치는 남한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음.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 전화통화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의견 일치

○ 12.29 북한 외무성대변인, 「NPT 탈퇴 시사」 담화

- 뉴욕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효력을 임시정지시켰음. 하지만 미국이 기본합의문까지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이 특수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음.

파월 美 국무장관, 폭스TV 회견

- 미국은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위기감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

○ 12.3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핵 관련 언급(3군 참모총장 합동 업무보고)

-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하지 않은 다양한 대응도 해 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한다는 전제 위에서임.

국회,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

○ 12.31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 「NPT 의무 이행불가」 언급

-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이같은 환경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미보유국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하는 NPT를 이행할 수 없음.

부시 美 대통령, 북핵관련 공식언급

-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외교적 대결이라 생각
- 이 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IAEA 사찰관 2명 소환, 북한 철수

멜리사 플래밍 IAEA 대변인, 독일 라디오방송 인터뷰

- 북한의 IAEA 사찰단 추방 조치는 NPT에 대한 명백한 위반

○ 1. 2 부시 미 대통령, 북핵관련 언급(텍사스 크로포드)

-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함.
- 우리는 역내 우방 및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그들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회담(베이징)

○ 1. 3 최진수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 내외신 기자회견

- 한반도의 안정과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열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미국에 대해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하고 북한의 전제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해야 함.

2. 한·미 국방장관, 「제34차 SCM 공동성명」 발표

□ 개 요

- 한·미 양국은 2002.12.5 워싱턴에서 제34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제34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
 -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과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간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는 등 총 12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

□ 주 요 내 용(SCM 공동성명 요지)

1. 이준 장관은 「항구적 자유작전」과 「세계적인 대테러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계속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2. 럽스펠드 장관은 지난 6월 2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슬픔과 유감을 표하고, 훈련중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거듭 다짐하였음.
3. 양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및 주변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럽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한국방위공약과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였음.
4. 양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은 지역 및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며,

이는 미북기본합의(AF),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음.

- 양국 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대처 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였음.

-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간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 하다는데 합의하였음.

5. 양 장관은 북한이 한미 공동이익에 대해 어디에서나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합의하였음.

- 럽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따라 포병을 대량 집중 배치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 재래식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6. 양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시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음.

- 이준 장관과 럽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화생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7. 양 장관은 남북간의 화해를 위한 일관된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음.

- 양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정전협정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음.

8. 이준 장관과 럽스펠드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성에 합의하였음.

-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양국 국방부는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차원의 협의를 실시할 것임.
9. 럽스펠드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구조를 지속시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합하는 목표를 재확인하였음.
- 양 장관은 주한미군을 서울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합의하였음.

IV. 분야별 일지

남북한 관련동향

- 12. 2 북한 외무상 백남순, 「IAEA 대북 핵개발 폐기 촉구 결의안」(11.29) 채택의 부당성 및 수용거부 관련, IAEA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
- 12. 4 우리측, 동해선 임시도로공사 완료
- 12. 4 「범민련」 북측본부, 북한 핵문제 관련 「전민족 반미투쟁 촉구 5개항 결의문」 채택
- 12. 8 남북한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12.6-8, 금강산), 개최 및 「통신·통관·검역 합의서」 채택
- 12.11 북한, 「전국법무일꾼대회」(인민문화궁전) 개최 및 사회주의 법무생활 및 법질서 강화 촉구
- 12.12 북한 외무성대변인, 미국의 대북중유공급중단조치(11.14)관련 「핵동결 해제선언」 담화
 - * 同日 ▲북한은 「핵시설 감시장치 제거」를 요구하는 IAEA 사무총장 앞 원자력총국장 이재선 명의 서한 발송 ▲ IAEA는 북한의 자제를 요청하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명의 원자력총국장 이재선 앞 서한 발송
- 12.12 북한 조평통대변인, 「제34차 한·미 SCM 공동성명」(12.5) 관련 규탄담화 (세부내용 본문참조)
- 12.13 북한 외무성대변인, “미국의 「서산호 나포」(12.10) 관련 대미 정신적·물질적 손상에 대한 사죄 및 보상요구” 관련 담화
- 12.13 남북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12.11-13, 서울) 개최 및 경험후속조치 협의(합의서 미채택)
- 12.15 우리측, 경의선·동해선의 DMZ 지뢰제거작업 완료
 - * 북측도 DMZ 지뢰제거작업 완료, 12.27 현재 철도노반공사 진행중
- 12.15 북한 조평통대변인, “북한의 「핵동결해제선언」(12.12)의 남조선 불위협 강조” 관련 담화

- 12.15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북측 위원장,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12.11-13, 서울) 결렬 관련 대미비난 담화
 - *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의 결렬 책임을 미측에 전가
- 12.16 북한 외무성대변인, 「정치적 조건의 대북지원 거부 입장」 발표(KCNA 회견)
- 12.17 남북한,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15-17, 금강산) 개최 및 정의선 임시도로 개설 등 합의(공동보도문 발표)
- 12.17 남북한,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2.15-17, 금강산) 개최 및 공동 보도문 발표
- 12.22 북한, 「핵동결해제선언」(12.12)의 후속조치 관련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작업 개시」 발표(KCNA, 중방/조선중앙TV 보도)
- 12.23 남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 및 DMZ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에 관한 절차와 안전문제 협의(합의서 미채택)
- 12.24 우리측, 정의선 임시도로공사 완료
- 12.24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 최성익, “금년도 남북관계 긍정평가 및 내년도 남북관계 낙관” 관련 KCNA 회견(세부내용 본문참조)
- 12.24 북한,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1돌 기념 「중앙보고대회」(4.25 문화회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보고) 개최(세부내용 본문참조)
- 12.26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 3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인민문화궁전, 양형섭 보고) 개최(세부내용 본문참조)
- 12.27 북한 원자력총국장 이재선, 「IAEA 핵동결감시요원 북한 철수 요구」 관련 IAEA사무총장 앞 서한
- 12.28 남북한,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12.25-28, 평양) 개최 및 「남북해운합의서」 채택·가서명
- 12.29 북한 외무성대변인, 「NPT 탈퇴 시사」 관련 담화(세부내용 본문참조)

주변국 관련동향

- 12. 2 駐북한 영국초대대사 「슬린」(43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에게 신임장 제정
- 12. 5 한·미 국방장관,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워싱턴, 이준/럼스펠드 국방장관)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2.10 미국, 북한 「서산호」 나포(세부내용 본문참조)
- 12.10 ICRC(국제적십자위원회/赤半月會), 남북이산가족사업의 아태지역 민간부문 인도지원사업으로의 추진계획 발표(ICRC 2003년도 인도지원 추진계획 및 재정지원에 관한 보고서, 세부내용 본문참조)
- 12.11 美 백악관, 「WMD 대응전략」 발표 및 “모든 수단 동원 및 압도적 군사력 사용 대응” 천명
 - * 동 보고서는 「국가안보전략」(9.20)에서 밝힌 「선제공격전략」을 적용, WMD 위협 대응 관련 ▲선제공격·억지·차단·보복조치 등 강력한 對확산(Counterproliferation) ▲외교·수출통제·다자군축체제 강화 등 非확산(Nonproliferation) ▲WMD 피격시 대책 마련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시
- 12.12 미국, 북한의 「핵동결해제선언」(12.12)관련, 「先 북한의 핵개발계획 포기, 後 북미대화 재개 입장」 재확인(애리 프라이셔 백악관대변인 정례브리핑, 세부내용 본문참조)
- 12.12 IFRC(국제적십자연맹),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 발표(세부내용 본문참조)
- 12.20 러시아 교통성 기술지도단(총 35명), 북한 철도성과 원산-금강산간 철도구조물 공동조사 완료(12.3-20, 세부내용 본문참조)
- 12.20 제57차 UN총회(9.10-12.20) 폐막
 - * 북한 핵문제 관련 핵안전조치 전면이행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11.11)
- 12.23 美 럽스펠드 국방장관,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2개 전쟁 동시수행 능력 가능」 언급(내외신기자회견, 세부내용 본문참조)
- 12.24 미국, 북한의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개시」(12.22) 관련 「先 핵개발계획 포기, 後 북미대화재개 원칙」 재확인(세부내용 본문참조)

- 12.24 IAEA, 북한의 영변 3개 핵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봉인 제거 및 감시장비 작동중단조치(12.23-24) 실행 확인(IAEA 언론발표문)
- 12.26 IAEA, 북한의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12.22) 관련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감독, 핵물질이 핵무기 및 여타 핵폭발장치에의 전용여부 등의 검증 불가능 상황에 대한 2003-1차 IAEA 이사회 보고예정 사실” 발표(IAEA 언론 발표문)
- 12.31 IAEA 핵동결감시요원, 북한 철수 완료(12.28/1명), 12.31/2명)

<끝>

2002 남북관계동향

발행일 : 2003년 1월 17일

인쇄처 : 웃고문화사

발행처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